
「식품안전관리」

'15년 추진실적 및 '16년 시행계획

2016. 4.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
환
관

육
경
세

부
부
청

법
해

양

무
수

산

부

목 차

I. '15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1
II. '16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방향	6
III. '16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7
IV. 향후계획	17

※ 별첨 1. '15년 추진실적 세부사항

※ 별첨 2. '16년 시행계획 세부사항

I. '15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1 총괄

□ (시행계획) 4대 분야 124개 세부과제를 추진

- ▶ 위해요소 사전예방 : 34개 ▶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 21개
-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48개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21개
- * 식약처 70, 농식품부 27, 해수부 18, 교육부 3,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

□ (추진실적) 124개 과제 중 122개 과제 정상추진, 2개 과제 지연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실적 부진,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미흡

*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요소를 생산~유통단계까지 안전관리하는 제도

세부과제명(소관부처)	지연내용·사유 및 대책
1-1-1-①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연내용) '15년 GAP 인증비율 목표달성 미흡(목표 10%, 달성 3.9%) *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인식전환 및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 ○(지연사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도 저조, GAP 농산물 판로 부족,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로 기대수준에 미흡 ○(향후대책)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GAP 인증 확대 추진 -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통한 GAP 인증농산물 유통확대
4-3-1-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연내용) 백수오 사건발생 이후 처벌강화대책 이외 정책이나 법령반영 미흡 ○(지연사유)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는 계획 대비 정상 추진 되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은 다소 미흡 ○(향후대책) 안전성·기능성 확보를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화, 재평가 제도 도입 등 개선 추진 *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관리 단계를 표준화하는 제도

1 추진성과

< 주요 성과 >

◆ 범정부 협력을 통한 집중단속으로 위생불량업소 발생률 감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로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 획기적 감소

* 위생불량업소 발생률: ('13) 6.9% → ('14) 3.3% → ('15) 3.2%

** 학교급식 식중독: ('14년) 51건 4,135명 → ('15년) 40건 1,944명(↓53%)

◆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 지속 상승

* 식품안전 체감도: ('13) 72.2% → ('14) 73.2% → ('15) 79.6%

□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 적용대상 및 범위확대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HACCP 적용업체수(개소) : ('14) 12,024 → ('15) 13,991(전년대비 16% 증)

** HACCP 적용업소 10,958개를 점검, 미흡 542개소 중 534개소 개선조치, 중요항목을 위반한 8개소에 대해서는 인증취소('One-strike out'제 적용)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로 위해발생 시 신속대응기반 마련
- (식품)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확대(2단계*)

* 2단계('16.6월까지): 연매출액 10억 이상 제조·수입업체, 500㎡ 이상 판매업소
(1단계 : 50억 이상, 1000㎡ 이상 업체에 대해 '14.12월까지 의무화)

** 등록업소(개소, 누계): ('13) 65 → ('14) 1,282 → ('15) 3,287(전년대비 156% 증)

- (축산물)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소·쇠고기에서 돼지·돼지고기까지 확대('14.12월)

* 등록업소(개소, 누계): ('13) 1,537 → ('14) 2,747 → ('15) 3,205(전년대비 16.7% 증)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확대 및 이력추적제 참여율 증가

* 대상품목: ('14) 24개 → ('15) 30개 (멸치, 김, 다시마 등 6 품목 추가)

** 참여업체(개소, 누계): ('13) 813 → ('14) 678 → ('15) 786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제정('15.2월, 시행 '16.2월)을 통해 국내 수입 이전 해외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기반 마련

□ 생산·제조 및 소비·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생산단계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출하 제한 등 신속한 유통차단

- 국민 다소비 품목, 부적합 사례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한 집중 조사

* ('15년) 생산단계 농·축·수산물 478,150건 조사 (부적합 3,023건, 0.63%)

○ 유통단계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가공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회수·폐기 등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 조치

* ('15년) 유통단계 농·축·수산물·가공식품 215,910건 조사 (부적합 1,422건, 0.66%)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범정부 협업(29개 기관) 추진

-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다소비 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실시**(13회)

* (점검) 10,203개소 → (위반) 800개소(7.8%)

- 불량식품 발생 차단을 위해 업체의 **품질검사 주기 강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신속 보고 및 회수조치 강화**

* 검사 주기 강화(품목별 1~6개월→ 1~3개월)

- 불량식품 '안만들기', '안사먹기' 대국민 **교육*·홍보** 추진

* 교육 : ('13) 21,233명 → ('14) 22,504명 → ('15) 38,619명

□ 위기대응 역량 및 소통 강화

○ 식품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현실화*** 및 실무자 **교육·역량 강화****

* 방사능 누출사고 등 새로운 사고유형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15.12월)

**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5, 11월)

- 국민·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로 알권리 보장 및 신뢰확보
 - (농식품부) 소비자단체 간담회·포럼 등 소통채널 확대를 통하여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 * 전국 5대 광역시 소비자 1,200명 대상 : ('14) 61.7% → ('15) 66.0%
 - (해수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에 국민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와의 소통채널을 확대
 - (식약처)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한 소비자 의견수렴 채널구축 및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육 등 맞춤형 정보제공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1일 나트륨 섭취량 저감화 목표('17년 3,900mg) 조기 달성
 - * 섭취량(mg) : ('11) 4,831 → ('12) 4,583 → ('13) 4,027 → ('14) 3,890
-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제' 운영, 학교급식 현장의 모범사례 발굴·보급 등을 통해 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 학생·학부모 등 1만명 대상 만족도 조사 : ('14) 83.6점 → ('15) 86.3점
- 영양사가 없는(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 * 지원센터 설치 확대(개소) : ('14) 142개소 → ('15) 190개소
 - ** 어린이 수혜율(%) : ('14) 37 → ('15) 50
-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가 쉽도록 슈퍼 판매허용('15.3월) 및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원료인정 신청자 범위 확대*('15.5월)
 -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학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연구소

2 과제

□ 학교주변 판매음식 및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여전

-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상승('14년 73.2→'15년 79.6) 하였으나, 학교주변 판매음식, 수입식품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학교주변 안전체감도(%) : ('13) 43.0 → ('14) 49.7 → ('15) 51.5

* 수입식품 안전체감도(%) : ('13) 52.9 → ('14) 51.8 → ('15) 56.6

☞ (시사점) 국민 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필요

□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있어 HACCP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계란, 순대 등의 HACCP 적용은 저조한 상황

☞ (시사점)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HACCP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식품 사례 근절대책 필요

- 불량건고추, 불량계란 등 생산단계 이후 공급단계 및 수집상 등 법적 사각지대에서의 불법행위 빈발

☞ (시사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단속 등 관리 강화 필요

□ 국민이 공감하는 소통과 정책홍보 필요

-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제공되는 허위·과대 광고와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시사점) 국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계층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기준·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필요

☞ (조치) '16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안전관리 강화 추진

II. '16년 식품안전관리 추진방향



< 세부구성 >

◆ '16년도 시행계획은 4대 분야 60개 과제 122개 세부과제로 구성

- ▶ 위해요소 사전예방 : 33개
 - ▶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 21개
 -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47개
 -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21개
- * 식약처 68, 농식품부 27, 해수부 18, 교육부 3,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

Ⅲ. '16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1 위해요소 사전예방

①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강화

-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급식업체 등에 우수농산물(GAP)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확대 추진
 - (GAP) 농업인 및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GAP 기반확산*, 대형 유통업체(2개소)와의 MOU를 통한 우수농산물(GAP) 취급확대 유도
 - *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용 지원(4만여건), 1지자체 1GAP 작목반 조성, GAP시범단지(15개소) 조성 등
 - ** 기존 MOU 체결된 2개소(홈플러스 30개 품목, 올가홀푸드 14개 품목)를 활용하여 우수농산물 유통, 소비 확대
 - (친환경 농산물) 다양한 유통·소비 형태 지원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확대
 - * 친환경농식품 생산자(단체)와 전문 판매점과의 직거래 연계 지원
 - ** 생산자에게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수확된 농산물을 제공받는 새로운 직거래 방식(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용 소비자 확대 ('15) 4백명 → ('16) 50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및 자율인증 확대 추진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HACCP 적용을 확대*
 - * HACCP 적용업체수(개소, 누계) : ('15) 13,991 → ('16 목표) 15,801
 - 국민 간식(계란·떡·순대) 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 추진 및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및 시설자금지원**
 - * ('16) 목표 174개소 : 계란 47, 떡 44, 순대 83
 - ** 시설개선 자금(업체당 1천4백만원), 컨설팅 비용(업체당 3백20만원) 지원

- 축산물 판매·운반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식자재 납품업소에 대해 자율인증 확대 추진

* 농협·축협 운영마트, 축산물 대량 운반업소 등

** 적용업체수(개소, 누계) : ('15) 709 → ('16) 760

○ 위해식품 발견시 소비자 구매이전에 자동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매장을 7만여개까지 확대**

* 부적합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판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자동 판매차단

** 설치 매장(누계) : ('15) 6만4천개소 → ('16) 7만개소(전국 매장 약14만개)

○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이력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력추적제 확대 및 정착유도

- (수산물) 다소비 어종, 원산지 위반 우려품목 위주로 수산물 이력
표시제 중점관리품목 지정 확대* 및 이력제 활성화** 추진

* 중점관리 품목(개, 누계) : ('15) 12 → ('16) 17 (홍어, 뱀장어, 송어, 멍게, 꽃게)

** 국가 식자재 납품시 참여업체에 우선권 부여로 이력제 활성화 유도

- (가공식품) 영유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영유아 식품 : 매출액 1억 이상 제조·수입업소, 판매업소: 매장면적 300㎡이상

건강기능식품 : 매출액 10억 이상 제조·수입업소

- (축산물) 이력추적제 조기정착*을 위해 사육농가, 유통업체 지원**

* 쇠고기 이력제('09.2월 시행), 돼지고기 이력제('14.12월 시행)

** 사육농가 : 귀표구입비 및 부착비(65억원), 도축장 및 유통업자 : 이력번호
표시스티커(7.6억원)

②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화
 -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약 55,000개소)에 대해 업체 관련정보*의 등록을 완료('16.8월까지)
 - * 업체 소재지, 생산품목, HACCP 적용여부 등
- 등록된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 취약업체* 위주로 현지실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현지실사 결과 문제가 있거나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입 잠정중단 등 조치
 - * (가공식품) 부적합 이력 및 수입물량이 많은 해외제조업체(10개국 80개소)
(축산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외작업장(13개국 80개소)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가 및 부산물 가공시설(6개국 55개소)

③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 강화

- 12개부처 협업으로 구축('15.5)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종합적 분석 및 효율적 활용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빅데이터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지원으로 불법행위 근절
 - * 불량식품 제조업소 선별적 집중관리, 유형별로 검사항목 중점관리 등
- 국민이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전국 식중독 발생현황, 식품위생점검 결과 등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16.4월~)
 - * 소비자들이 주변 음식점 등의 식중독 발생, 처분 등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지도형식으로 제공(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내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주의 정보방'*('16.1월) 개설
 - * 해외 위해식품 정보(사례) 제공, 안전한 구매요령 등 홍보

④ 농·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강화 (과학적 연구 기반조성)

-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

* 작물별 생산가이드라인(개, 누계) : ('15) 20 → ('16) 25 (파, 마늘 등 5종)

** 작물별 GAP 세부실천지침(개, 누계) : ('15) 14 → ('16) 46 (사과·배·감귤 등 32종)

농산물 수확 후 위생관리지침 (개, 누계) : ('15) 6 → ('16) 8 (복분자 등 2종)

- 신규 등록 및 재등록(등록후 10년 경과) 신청 농약에 대해 안전성 종합평가 지속 추진을 통해 농약의 안전성 확보

* 독성, 재배환경에 대한 영향 등 안전성 종합평가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기준설정 변경 또는 사용금지 조치

- 축·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반 연구* 지속 추진

* 알가공품 열처리 동등성(멸균·살균과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수산물 중 인체유해 기생충 감염실태조사 등

< 기대효과 >

◆ HACCP 인증 확대를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 확대

* HACCP 적용제품 생산비율(%): ('15) 53.9 → ('16) 63.9

◆ 국내 생산·유통은 물론 수입식품 제조국 현지와 인터넷 구매 식품까지 위해식품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해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

* 소비자 안심쇼핑 수혜율(%): ('14) 84.2 → ('15) 92.6 → ('16) 96

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 다소비·부적합 다발 품목, 학교급식, 오염우려지역 등 위주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조치
 - * ('16) 계획 : 농산물 75천건, 축산물 311천건, 수산물 12천건
- 취약분야에 대한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 (대상선정)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 업체의 법령위반·부적합 이력 및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우선점검업소 선정
 - 시기별 집중적인 지도·점검 실시
 - 산후조리원·요양병원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은 하절기
 - 김장철 식품은 성수기
 - 설, 추석 등 명절
- 먹는 샘물의 안전관리 강화
 - 먹는 샘물의 모니터링 항목을 포름알데히드, 안티몬에서 바륨, 니켈, 몰리브덴까지 확대 검토('16.12월)
 - * 위해도, 검출농도, 주요 선진국의 수질기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강화

-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 부적합 이력, 다소비 품목,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집중 수거·검사 및 전국 도매시장내 현장검사소의 신속검사로 부적합품 사전차단
 - * ('16) 계획 : 가공식품 62천건, 농·축·수산물 83천건

-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
 -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설* 및 특송화물 일부에 시행(‘15년)한 식품검사 시범사업을 국제항공우편물로도 확대**
 - * ‘16. 8월까지 영업자 등록을 통해 해외직접구매 식품 검사 강화
 - ** 식약처·관세청 협업으로 추진, 검사실적 : (‘15) 505건 → (‘16) 3,000건
-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 * (홍보)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사전피해예방 교육·홍보 실시
 - **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 : (‘15) 552 → (‘16) 400

③ 불량식품 근절 강화

-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선별적 집중 감시
 -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불량건고추, 불량계란, 비위생적 제조 짓갈, 멧다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처협업을 통한 집중 반복감시(2월~)
 - 위해정도를 DB화하여 재발가능성이 높은 업체·품목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 * 집중단속 대상 자동 선별 시스템 구축(12월)
- 엄정한 범집행으로 위반행위 근절 지속 추진
 - 유해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도입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적극 적용 및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 대해서도 형량하한제 도입 추진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4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 환경오염, 기후변화,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농약·첨가물·오염물질·미생물의 기준·규격·재평가 지속 실시
 - (농약) 과거 외국기준을 준용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재평가(40건)
 - (첨가물) 안전성 검토 및 섭취량 평가를 통한 기준·규격 재평가(16건)
 - (오염물질) 곰팡이 독소 8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8종)
 - (미생물) 식중독균(9건), 수산물의 위생지표균(77건) 규격 제·개정
- 기후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해양독소(수산물 중 마비성 패독 기기분석), 자연독소(식품 중 아트로핀 및 스코폴라민), 중금속(해조류 및 과일음료류 중 무기비소) 시험법 마련(12월)

< 기대효과 >

◆ 상시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농·축·수산물 유해식품 유통 차단율 향상

* 생산·유통단계 유해식품 조사 : ('16) 377천건

◆ 시기별, 대상별 위생관리를 위한 선제적 지도·점검,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활동 전개 및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량식품 유통 근절

* 3년내 재 위반율(%) : ('15) 11.0% → ('16) 10.0

3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1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식품 테러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신규제정('16.8월)
 - 식품에 화학물질, 방사능 물질 등을 의도적으로 투입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긴급사태에 대비 안전처,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 마련
- 정부·지자체·산업체의 위기대응 역량강화
 - *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5월), 실습·토론 중심의 참여형 교육실시(4월)

2 미래대비 선제 대응

- 기후변화 대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품목별, 위해요인별, 계절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취약 식품 관리방안 마련 및 유통기준 개선('16.8월)
 - * 온난화 현상 심화에 따른 적정 유통온도 기준을 마련
-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남아있는 경우 모든 원재료에 대해 유전자변형식품을 표시하도록 규정(표시기준 고시) 개정('16.10월)
 - * (종전) 원재료 함량이 많은 5순위 안에 있는 경우만 유전자변형 표시
 - (개정) 모든 원재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표시

3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 조사분석 결과 공개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
 -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정보를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16.4.1~)
 - * 품목, 재배양식(일반/친환경), 생산자, 생산지, 유해물질, 분석결과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

-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표시판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표시방법 개선('16.2월)
 -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총 20개 품목)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강화
 - 통신판매업체(G마켓, 홈쇼핑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시 관련기관 홈페이지(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위반사항 공개 추진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으로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국가간 분쟁 방지
 - * 「식품의약품검사법」 개정('16.4월)
-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역량강화를 위해 숙련도 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 * 시험·검사기관 관리지침 마련(1월), 실태점검(2월)

< 기대효과 >

- ◆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 환경변화(기후, 환경오염 등)에 대비한 사전안전관리 체계 정비로 위기대응 역량 향상
- ◆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선제적인 의사소통으로 소비자의 안심확보 및 인식격차 해소

1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20명 이하) 위생·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 ('15) 190개소 → ('16) 193개소

** 가정어린이집 지원율(%) : ('15) 6,300개소(27%) → ('16) 10,000개소(43%)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16.2월~)을 통해 표준식단,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각 센터에 제공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환경 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의무화 추진

* 8품목 : 어육소시지, 과자,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국수·유당면류, 즉석 섭취식품

- 개학, 특정일 등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및 위생상태 점검

* 개학(3, 8월), 어린이날(5월), 막대과자(11월)

- 학부모, 어린이가 함께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 운영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 1,300여명(학생 1,000명, 학부모 300명) 위촉,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캠페인 및 모니터링 등 실시

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 지자체와 협력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사업 추진(1~12월)

* 모범음식점,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등 대상으로 실시

○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 학교급식에 HACCP 등 국가인증 식재료 사용,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 및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철저한 검수 실시
 - *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교육부 지침, '16.1월)
-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 및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강화
 - * 입찰참가 제한 기간 : (현행) 3개월 → 6개월

③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및 경쟁력 강화**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규정** 마련 및 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이력추적관리 제도*** 의무화
 - * 2단계('16.6월까지): 연매출액 10억 이상 제조·수입업체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건강기능식품법」 개정('16.12월) 추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방안 검토

< 기대효과 >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관리를 통해 **위생·영양수준 제고**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수혜율 : ('15) 50% → ('16): 55%
-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으로 **식중독 환자 발생 감소 및 학교주변 식품안전 향상**

V.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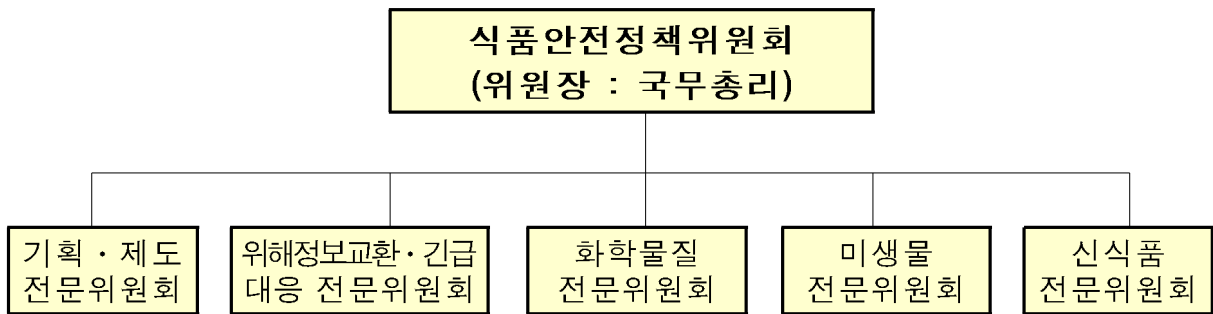
- 식품안전관리 '15년 추진실적 및 '16년 시행계획 관계부처 통보
- '16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현장점검(민간위원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 추진배경

-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수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추진체계

- (근거)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
 - * 정부 : 기재부·교육부·법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장관, 식약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 * 민간 : 김연화(소비자 공익네트워크), 김학수(서강대), 박인구(동원 그룹), 오상석(이화여대), 이해선(CJ제일제당), 이향기(한국소비자연맹), 정덕화(경상대), 정진호(서울대), 정하숙(덕성여대), 조영제(부경대)



* 전문위원회는 5개 분과별 15명으로 구성

- (주요기능)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 정책, 식품안전 법령 등 제·개정,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종합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2016. 4.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목 차

I. '15년 추진실적 총평	1
II. '15년 추진상황 요약	2
III. 분야별 추진실적	8
1. 위해요소 사전예방	8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8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54
1-3.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 강화	70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81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105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105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110
2-3. 국민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123
2-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150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165
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165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226
3-3. 불량식품 근절	259
3-4.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275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291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291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315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339

I

‘15년 추진실적 총평

□ 4개 분야, 124개 세부과제 중 정상추진 122개, 일부지연 2개

<추진실적>

- ◆ 위해요소 사전예방 : 34 과제(정상추진 33개, 일부지연 1개)
 - ◆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 21 과제(정상추진 21개)
 -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48 과제(정상추진 48개)
 -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21 과제(정상추진 20개, 일부지연 1개)
- ※ 식약처 70, 농식품부 27, 해수부 18, 교육부 3,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

○ 지연과제

세부과제명(소관부처)	지연내용·사유 및 대책
1-1-1-①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연내용) ‘15년 GAP 인증비율 목표달성 미흡(목표 10%, 달성 3.9%) *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인식전환 및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 ○(지연사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도 저조, GAP 농산물 판로 부족,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로 기대수준에 미흡 ○(향후대책)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GAP 인증 확대 추진 -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통한 GAP 인증농산물 유통확대
4-3-1-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연내용) 백수오 사건발생 이후 처벌강화대책 이외 정책이나 법령반영 미흡 ○(지연사유)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는 계획 대비 정상 추진 되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은 다소 미흡 ○(향후대책) 안전성·기능성 확보를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의무화, 재평가 제도 도입 등 개선 추진 *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관리 단계를 표준화하는 제도

II

'15년 추진상황 요약

구 분	세 부 과 제 명	추진부처 (협조부처)	추진상황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1-1-1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농식품부	일부지연
1-1-2	친환경농업 및 양식어업시스템구축	①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정상추진
		② 친환경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해수부	정상추진
1-1-3	안전관리인증(HACCP)확대	① 식품 HACCP 적용업체 인증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② HACCP 적용업체 재정·기술지원 확대	식약처	정상추진
		③ 축산물 HACCP 활성화 대책 추진	식약처	정상추진
		④ 축산물 HACCP 적용업체 사후관리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⑤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신규)	농식품부	정상추진
		⑥ 양식장 HACCP 확대	해수부	정상추진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① 식품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식약처	정상추진
		② 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방안	농식품부	정상추진
		③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활성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④ 수산물 이력제 확대	해수부	정상추진
		⑤ 국산 천일염 이력관리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1-1-5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① 주류 안전기준 재정비 및 주류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사전안전관리	식약처	정상추진
		② 주류 제조업체 기술지원 및 안전관리 체계 정비	식약처	정상추진
1-1-6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① 위해식품 회수 체계의 선진화	식약처	정상추진

구 분	세 부 과 제 명	추진부처 (협조부처)	추진상황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1-2-1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	① 수입 전(前) 해외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② 축산물 수출신청국에 대한 위생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식약처	정상추진
1-2-2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책임 강화	①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및 우수 수입업소 등록 확대	식약처	정상추진
		② 수입 축산물 해외 수출국 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식약처	정상추진
		③ 수입 수산물 현지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 식약처	정상추진
1-2-3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책임 강화	①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입식품 수입	식약처	정상추진
1-3.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 강화				
1-3-1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구축	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식약처	정상추진
1-3-2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 석 강화	①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1-3-3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①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1-4-1	농산물 유해물질 안 전성연구 강화	① 분석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② 농산물중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③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안전성 연구 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1-4-2	농약 안전성 평가및 연구 강화	①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1-4-3	축·수산물 유해 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① 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화	식약처	정상추진
		② 수산물의 과학적·효율적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③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 연구·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④ 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구 분	세 부 과 제 명	추진부처 (협조부처)	추진상황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2-1-1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및 지속 정비	① 식품안전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식약처	정상추진
2-1-2	위기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① 위기대응 역량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2-2-1	유전자변형식품 등 산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②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식약처	정상추진
		③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2-2-2	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①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	식약처	정상추진
2-2-3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식약처	정상추진
2-3.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 확대	① 대국민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	식약처	정상추진
		② 소비자 정보 교류 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③ 수산물 위해정보 소통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2-3-2	식품등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①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2-3-3	원산지표시 제도개선 및 단속 효율화	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② 수산물 원산지제도 관리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① 농산물 인증·표시제도 개선	농식품부	정상추진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농식품부	정상추진
		③ 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해수부	정상추진
2-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2-4-1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 체계 구축	① 시험·검사능력 선진화 단계 진입	식약처	정상추진
		② 시험 검사기관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2-4-2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①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식약처	정상추진
		② 한아세안 위생협력	식약처	정상추진
2-4-3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①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식약처	정상추진

구 분	세 부 과 제 명	추진부처 (협조부처)	추진상황	
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3-1-1	농축산물안전관리 강화	① 농산물 유해물질 실태조사	농식품부	정상추진
		② 오염우려 농산물 사전 차단 안전관리	식약처	정상추진
		③ 재배환경 오염 실태조사	농식품부	정상추진
		④ 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농식품부	정상추진
		⑤ 가축사육환경 개선	농식품부	정상추진
		⑥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3-1-2	수산물안전 관리 강화	①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② 수산물 생산해역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③ 국내 생산 천일염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④ 수산물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식약처	정상추진
3-1-3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① 축산물 유통 전(前)단계 안전성 검사 지속 관리	식약처	정상추진
		② 위생취약분야 선제적 지도·점검	식약처	정상추진
		③ 단순가공 농·수산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위생수준 개선	식약처	정상추진
3-1-4	제조단계 이물 등 위생관리 강화	① 제조단계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 지원	식약처	정상추진
3-1-5	농약안전관리 강화	①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 및 교육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② 농약직권등록 및 직권그룹화 적용방안	농식품부	정상추진
		③ 농약 위해성 재평가	농식품부	정상추진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② 우수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농식품부	정상추진
		③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정상추진
3-1-7	사료 안전 관리 강화	① 사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② 친환경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 연구	해수부	정상추진
3-1-8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	① 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②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감시	환경부	정상추진
		③ 먹는샘물 수질 안전성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구 분	세 부 과 제 명	추진부처 (협조부처)	추진상황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3-2-1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① 유통단계 가공식품 및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②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 신속 검사 체계 구축	식약처	정상추진
		③ 농수산물식품 선제적 안전관리	식약처	정상추진
		④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강화 및 정보공개	식약처	정상추진
3-2-2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①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3-2-3	위해식품회수체계 강화	① 위해식품 회수제도 개선	식약처	정상추진
3-2-4	수입식품통관단계검사강화	①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②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축수산물 정밀검사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③ 해외 원전사고에 의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식약처	정상추진
		④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위해우려 식품 검사	식약처	정상추진
		⑤ 수입식품 사전 반입차단을 위한 통관전 반입금지	관세청	정상추진
		⑥ 수입식품의 원산지 조작행위 차단	관세청	정상추진
3-3. 불량식품 근절				
3-3-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지속강화	①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3-3-2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및 제도개선	①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식약처	정상추진
3-3-3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	① 불량식품 과학적 감시체계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3-3-4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	①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② 식품위해사범 단속	법무부	정상추진
3-4.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3-4-1	농약·중금속·미생물·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평가	① 농약·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정상추진
		② 중금속·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정상추진
3-4-2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①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정상추진
3-4-3	인체모니터링 기반 통합위해평가	① 유해물질 노출 수준 확인 및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식약처	정상추진
3-4-4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연구	①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공전 간 조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식약처	정상추진

구 분	세 부 과 제 명	추진부처 (협조부처)	추진상황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4-1-1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 식품관리	①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및 환자용 영양식품 수요조사	식약처	정상추진
4-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4-1-3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① 영양표시 실태조사 및 외식 자율영양표시 확대	식약처	정상추진
4-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환경 개선	식약처	정상추진
		② 초·중·고등학생 대상별 식생활 안전·영양 교육 지원 확대	식약처	정상추진
		③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공표	식약처	정상추진
4-1-5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농식품부	정상추진
4-1-6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①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 관리				
4-2-1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시스템 구축	①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식약처	정상추진
		②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③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강화	식약처	정상추진
		④ 식중독균 추적관리	식약처	정상추진
4-2-2	음식점 주방 문화개선	① 주방문화 개선	식약처	정상추진
4-2-3	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저감화 추진	① 국민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확대	식약처	정상추진
		② 당류 섭취 저감화 추진	식약처	정상추진
4-2-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① 학교급식 점검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	교육부	정상추진
		② 식재료 납품전 안전성 조사체계 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4-2-5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①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교육부	정상추진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4-3-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①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식약처	일부지연
		②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식약처	정상추진
4-3-2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① 기능성평가센터 건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농식품부	정상추진
총 124개			정상추진 122	
식약처 70, 농식품부 27, 해수부 18, 교육부 3,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			일부지연 2	

Ⅲ. 분야별 추진실적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1. 위해식품 사전 관리체계 구축

[1-1-1]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지성훈 서기관, T.044-201-2280)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 상황	일부지연
-------	-------	------	------	-------	------

1. 과제내용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인 GAP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
- 농업인, 소비자 지향적 제도·교육·홍보를 통해 GAP 인증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소비자 신뢰제고

2. 추진계획

- GAP 교육 훈련 5개년 계획 수립(2월)
 - 농업인, 공무원, 전문지도관, 인증심사원 등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 정부·생산자·유통업체 간 민관 추진협의체 운영(3~12월)
 - 중앙정부, 생산자, 유통업체 간에 상생협력체계와 소통채널 구축 운영
- '15년도 GAP 시설보완사업 추진(1~12월)
 - APC, RPC 등에 GAP인증을 받기 위한 위생시설 보완사업 실시

3. 추진실적

□ GAP 교육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 GAP 교육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1.14.), 교육훈련 계획수립(2~3월), 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2월~)
- GAP 전문인력양성사업(농식품부) 신규사업 추진으로 7,629명 교육수료 등

□ 중앙정부, 생산자,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협의체 구축(2~6월)

- 민·관 추진협의체, 유통 상생협의회, 지자체 GAP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확대 협약체결*
* 주)삼성홈플러스(9월), 주)올가홀푸드(11월)

□ '15년 GAP 시설보완사업 선정(26개소) 추진

- 사업접수 및 사업성 진단(9월), 사업대상 교육(3월), 합동현장점검 등(연중)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GAP 인증비율 10% (총 경지면적 대비)

◇ 추진실적 : 3.87%(‘08년도 이후 GAP 인증면적 증가율 최고, 6,648ha ↑)

□ 성과

- GAP 확산을 위한 교육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농업인 등 자발적 참여 유도
* 생산여건조성 컨설팅(179개 단체 5,651농가), 전문인력양성(7,629명), 농업인 기본교육(42,155명), 소비자(220회 16,597명), 유통업자(115회 3,368명) 등
- 상생협력 협의체 구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 GAP 농산물 취급확대*
* 주)삼성 홈플러스(‘14) 0품목→(‘15) 14, 주)올가홀푸드(‘14) 0품목→(‘15) 6
- '15년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 대비 44% 초과달성(18개소→26)
- GAP 농산물의 주 고객인 소비자·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소비자 GAP 인지도: '11) 22% → '12) 35 → '13) 43 → '14) 57 → '15) 61

□ 문제점

- 일부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GAP 확대를 위한 인증·생산·유통 단계별 제약요건이 해소되지 않아 성과지표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

* GAP 인증 농가비율(%): '12) 3.4 → '13) 4 → '14) 4.1 → '15) 4.8

* GAP 인증 재배면적(%): '12) 3.2 → '13) 3.4 → '14) 3.4 → '15) 3.9

- 농업인은 판로부족, 비용증가, 가격차별화 미흡 등을 이유로 GAP 인증에 아직까지 소극적
- 소비자의 경우 구입처 부족,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GAP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해도도 낮은 수준

□ 개선대책

- 인증·생산·유통 현장별 GAP 저변 확대, 맞춤형 교육·컨설팅·홍보 강화를 통한 GAP 제도 정착 및 보편적 확산 추진

-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신규사업* 및 GAP 시설보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GAP 인증 확대 생산기반 조성 강화

* '16년부터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120억원(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 단체급식·대형유통업체 GAP 취급확대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 지자체·농업인·소비자 대상 GAP제도 인식 제고 추진제고

5. 향후 추진계획

- 현행 GAP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로 현실화

- 「'16년도 GAP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GAP 기반 강화 및 확산 추진

- 농업인의 원활한 GAP 인증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지원강화
- 단체급식, 대형유통업체 위주 GAP 농산물 유통·소비 확대
-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여 GAP 농산물의 시장 차별화 유도
- 집단 인증 단체 및 품목 특화 교육, 규모화된 단지 중심의 컨설팅으로 농업인의 GAP 인증 취득 지원

[1-1-2] 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①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철호 사무관, T.044-201-2443)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사무관, T.044-201-189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지속가능한 전문화·집단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추진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속 공급으로 지력 증진 및 농산물 품질제고

2. 추진계획

- 시·군단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계속 지원(4개소, 70억원)
- 우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사업 지원(1개소, 4억원)
- 마을단위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선정·지원(신규 20개소, 41억원)
-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34억원)
- 유기질비료의 품질제고 및 안정적 공급(320만톤, 1,600억원)
-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석회질비료 공급(683만톤, 642억원)

3. 추진실적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지원 등
 - 시·군단위 지원(4개소, 24억), 인센티브 사업지원(3개소, 17억)
- 마을단위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선정·지원(신규 18개소, 43억)
-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 및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
 - 유기질비료 305만톤, 1,600억원, 토양개량제(규산석회) 682만톤, 642억원
 -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33억)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친환경 인증비율 12.0%(총 경지면적 대비)
- ◇ 추진실적 : 4.5%(무농약 이상)

□ 성과

- 우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사업 및 친환경농업지구선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기여
 - 시·군단위 지원(4개소), 인센티브 사업지원(3개소), 마을단위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신규 18개소) 지원
 - 기반구축사업(광역단지·지구)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기여
 - * 사업지역 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인증 면적비율 30.1%(전체 인증 비율4.9%)
-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토양 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
 - * 토양의 적정환경(유기물함량 2~3%, 논 유효규산 157ppm, 발토양 산도 6.5) 유지

□ 문제점

-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감소
 - 저농약 인증제도는 '10년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15년까지 인증 갱신만 이루어졌으나, '16년부터 인증제도를 폐지
 - * 저농약 인증제도는 친환경 농업 비율향상과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친환경인증 인식제고·확산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운영
- 부실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증제도 내실화
 - '13~'14년 언론보도 등에 따라 부실인증 문제 부각으로 인증취소 건수 증가(12,603건)

□ 개선대책

- 친환경인증면적 성과지표 하향조정
 -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인증면적 비율 목표치 하향 조정
 - '16년 이후 친환경인증면적은 무농약이상(무농약·유기재배 농산물)에 대하여만 집계토록 조정
 - * 성과지표 조정을 위해 '15년부터 무농약인증 이상으로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산출
- 부실인증 감소로 친환경 인증제도 내실화
 - 소비자 신뢰제고 및 친환경인증 내실화 차원에서 친환경인증제도를 개선·발전시킬 계획임
 - * 부실인증 방지대책 추진으로 최근에는 부실인증 건수 급감·내실화('14.12 : 6,411건 취소 → '15.12 : 3,126, △51.2%)

5. 향후 추진계획

- '16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성과지표(인증면적 비율) 현실화
- 통합친환경농업지구사업(200ha 이상 광역단지·10ha 지구)을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15년부터 5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연 20개소 이상 선정·지원
-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속적 확대 공급

[1-1-2] 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② 친환경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김승룡 사무관, T.044-200-563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양식어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양식업 보급 및 확대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환경친화적인 양식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 확대 등으로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유도

2. 추진계획

□ 친환경적인 양식기술 및 대규모 양식시스템 도입 등 신개념 생산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매년)

- 대규모 양식단지(양식섬) 조성('15, 해삼섬 2개소)
- 전복신품종보급센터 건립 추진('15, 1개소)
- 전기분해 등을 이용한 폐사율저감시스템(사육수정화시스템) 확충('15, 6개소)
-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이 도입된 넙치양식시설 구축('15, 1개소)
 - * 여과장치를 통해 양식수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친환경 양식기술
-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친환경 새우양식시설 조성('15~'16, 4개소)
 - * 미생물을 활용, 사육수 내 오염물질을 유기물로 전환하여 정화시키는 친환경 양식기술

3. 추진실적

□ 먹을거리 안전성이 보장된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신개념 생산시스템 구축 추진

- 대규모 양식단지(양식섬) 2개소(인천 옹진, 전북 군산) 조성완료
- 육상어류 양식장 폐사율 저감시스템(사육수정화시스템) 확충 완료('15, 6개소)

- 전복신품종보급센터 건립 추진('15, 1개소)
-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이 도입된 넙치양식시설 구축('15, 1개소)
-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친환경 새우양식시설 3개소 준공 및 대규모 양식단지 1개소 조성 추진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신개념 생산시스템 구축률 89%
- ◇ 추진실적 : 육상어류 친환경 양식장 등 생산시스템을 89.5% 구축
 - * 목표(19개소) : ('13~'15년까지) 17개소 구축 완료 → ('16~'18년까지) 2개소 추가 구축
 - * 구축현황(17개소) : ('13) 1개소(수산종자보급센터) → ('14) 8개소(바이오플락양식시설 3, 전복·해삼 양식단지 5) → ('15) 8개소(폐사저감시설 6, 해삼양식단지 2)

□ 성과

- 바이오플락 양식시설 확대를 통해 국내 새우 양식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대하였으며, 친환경 새우의 생산·공급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
 - * 새우 생산량(톤) : ('14) 4,488 → ('15) 5,515 / '14~'15 새우 양식 면적(허가)은 동일

□ 문제점

-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친환경 양식시스템의 도입은 사업 부지, 실시 설계, 착공 등 구축에 따른 사업추진 여건 어려움 상시 발생 가능

□ 개선대책

- 신규 양식장 조성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 발굴 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적인 양식기술·시스템 발굴 및 도입을 통한 안전한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 육상 어류 양식장 용수 정화시스템 추가 도입 추진('16, 1개소)
-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 계속('15~'16, 1개소)

[1-1-3]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

① 식품 HACCP적용업체 인증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강승극 사무관, T.043-719-2854)

과제 분류	정책 사항/ 법령 개정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과자·캔디류 등 의무적용 확대품목 2단계(~'16) 및 자율적용 업체 HACCP 적용 유도로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 마련
- HACCP 적용업체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정기평가 부적합 재평가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수시평가 강화
-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믿고 구매하도록 홍보 강화

2. 추진계획

- HACCP 의무적용 및 자율업체 인증 확대 지속 추진(연중)
 - 어린이기호식품·다소비식품 8개 품목(6,797개소), 매출액 100억 이상 업체(230개소) 대상 단계적(4단계) 의무적용
 - * '15년 목표: 전체 식품업체수 대비 14.4%, 생산량 대비 47.6% HACCP 적용
-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강화
 - 기존 차등관리를 개선하여 '우수(95점이상)' 등급의 '양호(90점이상)' 등급 신설로 업체의 자율관리 기회 확대(1월)
 - * (현행) 우수, 보통, 보완, 미흡 → (개선) 우수, 양호, 보통, 보완, 미흡
 - 다만, 정기조사·평가 결과 60점미만 등 HACCP 운영이 부실한 업체는 1차에 “즉시인증취소”하여 사후관리 내실화 병행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모든 HACCP 업체로 특별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업체에 우선하여 정기조사·평가 실시(3월)

- HACCP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교육 등 강화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대상 지방청별 연1회 이상 특별교육 실시
 - 행정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HACCP 교육 도입

□ 대국민 HACCP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TV, 라디오), 다중이용시설(영화관, 마트) 활용 홍보(연중)

- 전문 언론·협회·소비자단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추진(연중)
- 식품업체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홍보(3~10월)

3. 추진실적

- 업체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현장기술지원(1,037개소), 전문상담(724회), 찾아가는 종사자교육(6,631명) 등 실시로 **인증을 성과목표 초과 달성**
 - 인증업체수(누계) : 3,734개소(목표 3,629개소 대비 103% 초과 달성)
 - * 연도별 인증업체수 현황(누계) : '13년 2,408→'14년 3,029개소→'15년 **3,734개소**
- 인증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및 법 위반업체 수시평가 실시
 - 전년도 정기평가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로 업무 효율화
 - * 차등관리 : 우수업체(자체평가), 보완·미흡업체(기술지원 강화)
 - * 당해 평가결과 부적합 : 276개소(인증취소4, 시정개선179, 진행중93. '15.11기준)
 - 주요안전조항 또는 평가결과 60점미만 업체 즉시인증취소 시행(8.18)
 - * 원료검수(검사), 작업장세척·소독, 지하수살균·소독, 중요관리점 관리 등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정기평가 외 추가 수시평가 실시(160개소)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특별교육 실시(464개소, 611명)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7회, 214명)
- 소비자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TV 12회, 케이블 838회, 라디오 602회, 일간지·전문지 29회 등 홍보 실시

- 소비자단체, 관련협회와 연계한 민관 협업 교육·홍보(6~11월)
 - 소비자 대상 HACCP 바로알기(한국소비자연맹) : 12회, 959명
 - 어린이 HACCP 바로알기 교육·홍보(녹색소비자연대) : 17회, 905명
 - 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교육·홍보(한국식품산업협회) : 507명
- 찾아가는 맞춤형 HACCP 교육·홍보(7~12월) : 537개소, 6,631명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HACCP 업체 인증율 14.4%
- ◇ 추진실적 : HACCP 업체 인증율 14.8%로 목표 초과 달성

□ 성과

- 의무적용 품목 확대 및 적극적인 자율적용 유도로 목표 초과달성
 - * 3,734개소(인증율 14.8%, 25,191개소 대비) / 목표 3,629개소(14.4%)
- '즉시인증취소' 규정 도입 및 HACCP 운영미흡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정기조사·평가 부적합율이 감소함
 - * 정기평가 부적합율(%) : ('14) 11.1 → ('15.11) 10.9

□ 문제점

- HACCP 인증에 유효기간이 없어 부실업체 퇴출 곤란
- 정기평가 결과 우수(양호)업체에 대해 다음해 정기평가를 1~2년 면제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도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

□ 개선대책

- 인증유효기간 부여 및 3년주기 재심사, 법 위반시 정기평가 면제 취소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지속
- 인증 재심사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후관리 내실화

[1-1-3]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

② HACCP 적용업체 재정·기술지원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강승극 사무관, T.043-719-2854)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HACCP 적용 희망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기술 및 재정지원 지속
 - HACCP 도입이 어려운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HACCP 적용 유도함으로써, 식품업체 전반의 위생수준 향상 필요
 - 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기술 및 재정지원 지속 확대

2. 추진계획

-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연중)
 - 의무적용 확대품목 3~4단계 중 231개소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 개·보수 없이 인증 신청이 가능한 업체는 기술지원 실시
 - * '13년 250개소(25억원) → '14년 231개소(23.1억원) → '15년 231개소(23.1억원)
- 맞춤형 전문 기술지원 강화(연중)
 - 현장기술지도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집중 지원하고, 전문기술상담, 표준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지속 추진
 - * '13년 889개소 → '14년 956개소 → '15년 1,000개소

3. 추진실적

-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연중)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등 의무적용 확대품목 총 231개소 지원 완료
 - * '15년 예산 23.1억(231개소) 중 23.1억원(231개소), 100% 집행

○ 맞춤형 전문 기술지원(연중)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실시

* '15년 실적 : 1,037개소(달성율 103%, 계획 1,000개소 대비)

○ HACC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업체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기술지원 및 유형별 표준기준서 개발 보급

* '13년 889개소 → '14년 956개소 → '15년 1,037개소보급

* 알기쉬운 HACCP관리 700부, 순대·맥주·약주 표준기준서 각 500부 배포(11.17)

4. 자체평가

□ 성과

- 과자, 빵류·떡류 등 HACCP을 의무적용 해야 하는 영세업체* 대상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으로 HACCP 적용 확대에 기여함

* 연매출 5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21인 미만

** 업체당 1천만원(2천만원×50%, 자비 50%)

- 인증업체수(누계) : 3,734개소(목표 3,629개소 대비 103% 초과 달성)

* 연도별 인증업체수 현황(누계): '13년 2,408→'14년 3,029개소→'15년 3,734개소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순대, 떡볶이떡 등 생활밀착형 식품을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추가 및 조기적용을 위한 집중 재정·기술지원 추진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10)

* 일대일 매칭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보조율 확대 추진(50 → 70%)

[1-1-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확대

③ 축산물 HACCP 활성화 대책 추진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문성심 사무관, T. 043-719-3242)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 내용

-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
 - 축산물 HACCP 의무화 작업장에 대한 사전인증 등 적용준비
 -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개소당 800만원, 국고 40%)
 - 중소형 업소 HACCP 표준 모델 개발
 - HACCP 실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현장 기술지도·상담

2. 추진 계획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지침 시달(1월)
- 집유장, 유가공업 대상 HACCP 의무 적용 및 기술 지원
 - 전담 기술지원팀 운영 및 HACCP 실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연중)
- '15년 축산물 HACCP 인증·교육기관 정기감독(2회)
- HACCP 표준모델 개발(12월)
- 중소형 업소에 대한 현장 기술상담 실시(연중)

3. 추진 실적

- '1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지침 시달('14.12.31)
 - 17개 시·도별 컨설팅 사업물량 배정(총 100개소) 및 컨설팅 비용지원

□ HACCP 의무화 대상 작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

- HACCP 의무작업장 기술지원 확대를 통한 사전인증

* '16년 대상 집유장 36개 중 22개, 유가공업 50개 중 32개 인증(미인증업소는 기술지원중)

- HACCP 사전인증 유도를 위한 업무설명회·기술지도 실시

* 업무설명회 : 4회(9.1~9.22), 기술지도 15회, HACCP 교육(10.21)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관리·감독(3회)

- 상반기 업무점검(6.29~30), 중간점검(10.1), 하반기 보조금 점검(12.21)

□ 소규모 영세업체용 HACCP 간소화 기준서 개발·보급(5개업종)

- 알가공업(12.23), 식육가공업·축산물운반업·보관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12.28)

□ 중소형 업소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107회)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축산물 HACCP 인증율 12.6%

◇ 추진실적 : 축산물 HACCP 인증율 12.5%로 목표 대비 0.1% 미달성

□ 성과

- 농장~판매까지 HACCP 시스템 적용을 통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 HACCP 인증업체 : ('14) 8,995개소 → ('15) 10,257개소(1,262개소 순증)

* 축산물 HACCP 인증률(%) : ('14) 10.9% → ('15) 12.5%(목표 12.6%)

□ 문제점

- '14년부터 집중 발생한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농장 등 생산단계의 HACCP 인증을 진행할 수 없었고,

- 더불어 유통·판매업소 영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참여도가 저조

* 전체 영업장의 95% 이상(식육판매점의 경우 99%이상)이 10인 미만 영세업체

- 영세업체를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HACCP 인증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평균 인증률이 하락(1.6→1.4%) 추세에 있어 '16년 이후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함

□ 개선대책

- 소규모 영세업소용 HACCP 간소화 기준서 개발·보급 및 전문 컨설팅*(현장 기술지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 증액
 - * 컨설팅 비용(8백만원)의 70% 지원 확대('15년 320백만원⇒'16년 438백만원)
- HACCP 의무화 영업장을 중심으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6년 예산 신규 확보
 - * '16년 시설자금 신규 확보 : 658백만원

5. 향후 추진계획

- 축산물작업장 HACCP 활성화 대책 추진(지속)
 - 소규모 영세업소를 중심으로 전문 컨설팅·현장 기술지도 강화 및 시설자금 지속 지원

[1-1-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확대

④ 축산물 HACCP 적용업체 사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문성심 사무관, T. 043-719-324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HACCP 인증업체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전체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조사·평가 실시(연 1회 이상)
 - * 선행요건 및 HACCP기준 적용 운영 상황 점검
- 기준 운영 미흡 업체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2. 추진계획

□ HACCP 인증업소에 대해 HACCP 운영실태 점검(연중)

-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 조사평가 : ('12) 3,557개소 → ('13) 4,704 → ('14) 5,239 → ('15) 6,620

□ HACCP 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기준 적정성 여부 및 실행성 등을 검증, 미흡사항은 제도개선
- 검증계획 수립(1월) 및 정부 검증(2~11월)

□ HACCP 기준 미흡 업소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3. 추진실적

□ HACCP 인증업소 전체에 대해 HACCP 운영실태 점검(연중)

- * 연 1회 조사·평가 : 총 6,316개소 점검(농장 4,371, 작업장·업소 1,945)

□ HACCP 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축산물HACCP 검증계획 수립('15.1.9)
- HACCP 평가관 교육 실시('15.1.7, 지방청 9명 참석)
- 축산물HACCP 정부검증 실시('15.2~12, 100개소)

□ HACCP 기준 미흡농장·업소 특별교육 실시(연중)

- 생산단계(가축사육농장) 355개소, 가공·유통단계 120개소 교육

4. 자체평가

□ 성과

- HACCP 실행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및 검증을 통해 영업자 위생관리 수준제고
 - 조사·평가 : 6,316개소 점검, 미흡업소는 시정명령으로 개선조치 완료
 - 정부검증 : 100개소(가공 59, 식포 24, 축산물판매 13, 운반 4)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HACCP 조사평가 및 정부검증 실시(계속)
- HACCP 기준 미흡농장·업소 특별교육 실시

[1-1-3] 안전관리인증(HACCP)확대

⑤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장재홍서기관, T. 044-201-2281)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HACCP 인증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집유업 HACCP 의무적용 제도시행에 따른 인증대상 집유장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2. 추진계획

- HACCP 인증희망 농가대상 컨설팅 사업 추진(2월~) 및 인증이후 사후관리 미흡농가 대상 기술지도 사업 추진(3월~)
 - 컨설팅 업체는 농식품부 등록 업체 중 지자체별 경쟁 입찰로 선정
- '16.1월 의무화대상 집유장 중 HACCP 미인증 업체 인증 준비사항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 인증 준비사항 관계기관(집유장, 시도, 인증원 등) 사전 점검회의(10월)
 - 의무적용 대상 집유장별 기술지원 전담자(2명, 검역본부·인증원 각 1명) 지정, 현장 기술지원 실시
- 농가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HACCP 표준모델 개발·보급
 - 표준 기준서 보급 : ('14) 돼지 농가 → ('15) 젓소 농가

3. 추진실적

-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도 실시(2월~12월)

- 인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추진(495농가)
- 인증 이후 사후관리 미흡농가 대상 기술지도 추진(355농가)
 - * 컨설팅 업체는 농식품부 등록 업체 중 지자체별 경쟁 입찰로 선정

□ '16.1월 의무화대상 집유장에 대한 HACCP 인증 기술지원

- 인증 준비사항 관계기관(집유장, 시도, 인증원 등) 사전 점검회의(8월)
- 의무적용 대상 집유장별 기술지원 전담자(2명, 검역본부·인증원 각 1명) 지정, 현장 기술지원 실시(총 13개소)
- 총 35개소 중 31개소 인증 완료, 4개소 폐업

□ 농가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HACCP 표준모델 개발·보급

- 젓소 농가에 대한 표준 기준서 개발·보급 완료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생산단계(농장) HACCP 인증 7,632개소
- ◇ 추진실적 : 생산단계(농장) HACCP 인증 6,675개소

□ 성과

-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해 HACCP 인증농가 확대를 통한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수준 제고
 - * 인증농가 : ('11) 2,846 → ('12) 4,079 → ('13) 5,310 → ('14) 5,977 → ('15) 6,675
- '16년 HACCP 의무 적용 집유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총 35개소 중 31개소 인증 완료(4개소는 폐업)를 통해 위생수준 제고기반 마련
- 젓소 농가에 대한 표준 기준서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의 편의성 도모

□ 문제점

- 일부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사업수주로 사업추진 지연

- '14~'15년 국내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HACCP 인증심사 가능지역이 제한되었으며, 사업대상 농가의 사업포기 및 농가의 컨설팅 업체 방문자제 요청 등으로 컨설팅 지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 '14.9.24~'15.6.10, 162건, '15.9.19~11.15, 17건

□ 개선대책

- 컨설팅 업체에 대한 등록요건 및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고, 업체별·컨설턴트별 사업량을 제한하여 내실화 도모
- 컨설팅업체 등록 및 수행업체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등을 조기에 실시하여 사업추진 지연 방지

5. 향후 추진계획

- HACCP 컨설팅 지원대상을 확대(준전업농 → 전체 축산농가)하여 HACCP 확산 기반 마련

[1-1-3]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

⑥ 양식장 HACCP 확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종섭 사무관, T.044-200-562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육상양식 수산물의 잠재적 위해요소(항생제, 사료,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상시 관리 필요

- 양식 어류의 항생제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일부 거부감 불식

2. 추진계획

□ HACCP 도입·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뱀장어 등 양식장 80여 개소)

- 양식장 HACCP 등록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5.1)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15.3) 및 컨설팅 실시('15.3~)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현장점검(수시)
- 양식장 HACCP 워크숍 개최('15. 상·하 각 1회)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중간('15.7)·최종보고회 개최('15.12)

3. 추진실적

□ 양식장 HACCP 도입 확대를 위한 컨설팅 실시(84개소)

- '15년도 양식장 HACCP 추진계획 수립('15.1.14)
- '15년도 양식장 HACCP 컨설팅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실시('15.3~)
 - * 참여희망 수요조사('15.1.22)를 통해 컨설팅 대상 양식장 확정('15.3)
-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15.12.2)
 - *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관련 사업 추진상황 실태점검('15.4.2~4.27)

- 양식장 HACCP 품종별 워크숍 개최('15.9~10월)
 - * 품종·지역별로 실시(①송어 9.15, 제천 / ②뱀장어 10.20, 광주 / ③넙치 10.22, 제주)
-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중간('15.8)·최종보고 개최('15.12)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양식장 HACCP 등록수 51개소(누계)
- ◇ 추진실적 : '15년까지 총 78개소 등록('15년 35개소)으로 목표 대비 153% 초과 달성

□ 성과

- '15년까지 총 78개소 양식장 HACCP 등록으로 전년 43개소 등록 대비 181% 증가, 항생제·용수 등 위해요소 상시 관리체계 지속 강화
 - * 총 78개소 등록(누계개소) : ('05~'13) 24 → ('14) 43 → ('15.12) 78

□ 문제점

- 출하 수산물에 대해 가격우대 등 시장 경쟁력 부족
- 등록 이행 양식장 정부정책 지원 등 참여 유인책에 한계
- 정책 등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수준

□ 개선대책

- 판로기반 확보를 위한 수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
- 양식장 위생관리를 통한 안정적 생산 여건 마련
- 참여희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지속
- (성과지표 개선)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매년 30개소 이상 등록 추진)
 - * (당초) 양식장 HACCP 등록수(개소) → (개선) 양식장 HACCP 등록수(누계)

5. 향후 추진계획

- '16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16.2)
 - 컨설팅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실시('16.3~)
 - * 워크숍·설명회 및 착수·최종보고회 등 개최
- '16년도 육상양식장 위생관리 실태조사 실시('16.3~)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① 식품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기반 조성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박상은 사무관, T.043-719-2855)

농축수산물정책과 김철희 사무관, T.043-719-3204)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개요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도입에 따른 원활한 적용을 위한 운영 지원
 - 의무화 적용업체에 대한 교육 및 현장지원 등 실시
- 식품이력추적관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생산·가공·판매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반 조성

2. 추진계획

-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2단계) 의무화 제품 등록 추진(연중)
- 축산물가공품 중 조제유류 이력관리 등록 의무화 도입 추진
- 식품이력추적시스템 확대를 위한 무상 컨설팅 및 현장평가(연중)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교육, 현장지원 및 소비자 홍보 등 실시(연중)
-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2회/년)

3. 추진실적

-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2단계) 의무화 제품 등록 추진 완료
 - (2단계)영·유아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및 수입업자 및 기타 식품판매 업소에 대하여 이력추적등록을 차질 없이 추진

- 식품이력추적 등록(2,016개소), 성과목표(1,710개소) 대비 118% 달성
-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누적) : ('13)65 → ('14)1,282 → ('15.12)3,287개소
- * 품목등록수(기타업소 제외) : ('13)223 → ('14)1,446 → ('15.12)2,192품목

□ **축산물가공품 중 조제유류 이력관리 등록 의무화 도입 추진**

- 축산물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국회 통과, '15.12.30)

□ **식품이력추적시스템 확대를 위한 무상 컨설팅 및 현장평가(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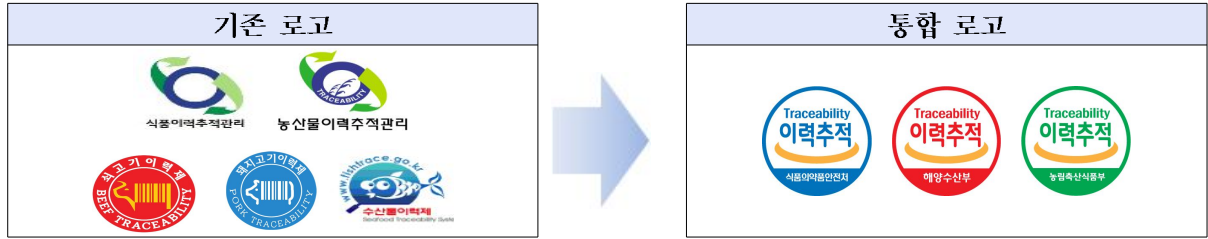
- 업체 맞춤형 현장컨설팅(기술지원, 2,542회)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교육, 현장지원 및 소비자 홍보 등 실시(연중)**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대상 설명회(37회, 1,602업소, 총 1,926명 참석)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대국민 홍보(7회)
 - * 국제건강산업박람회(4.23~25), 정부 3.0 체험마당(4.30~5.3), 식품안전의 날(5.9), 서울식품산업대전(5.12~15), 한국영양사학술대회(7.23~24), 한국식품영양과학회(8.24~26), 국제식품소재기술전(9.2~4)
- 전문교육장을 활용한 사용자 전문교육 54회(346업소, 795명)
- e-러닝 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30회

□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2회/년)**

- 식품의 전 단계(Farm to table) 이력추적관리 연계를 위한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4회)
 - 부처간 시스템 연계, 정보공유, 범부처 공동 홍보추진 등 논의
 - * 식약처(식품이력시스템), 농식품부(농산물·축산물이력시스템), 해수부(수산물이력시스템)
- 연구사업 및 부처협의를 통한 식품 및 농·축·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로고 통합 확정('15.11)



* 부처별, 제품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력추적로고의 통합으로 소비자에게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고 있는 하나의 영업자의 경우 통합로고로 인하여 비용절감 효과 등 기대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식품이력추적등록 업소수 1,710개소
- ◇ 추진실적 : '15년도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수 2,016개소로서, 성과목표(1,710개소) 대비 118% 달성 완료

□ 성과

- '15년도 목표치(의무등록 대상업체 1,710개소) 대비 2,016업소 등록 완료로 로드맵상의 2단계 의무화 성공적 수행(목표달성도 118%)

* 산식(%) : '15년도 식품이력추적 등록수/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업체 등록건수(업체수)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3단계 시행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
 - 의무 및 자율업소(중간 유통업 포함)를 대상으로 제도의 도입효과 설명, 전산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 추진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관리 연계추진
 - 식품, 농·축·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책 전략 수립 연구사업 추진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② 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방안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최재웅 사무관, T.044-201-2362)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돼지고기 이력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축산물 거래내역 전산 신고 확대 등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강화 추진

- 이력관리대상을 기존 소·쇠고기(수입산 포함)에서 돼지·돼지고기 (국내산에 한함)까지 확대 시행으로 축산물 먹을거리 안전망 강화

2. 추진계획

□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 유도

- 농가, 영세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도관련 홍보·교육 강화(상반기)
- 위반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강화(하반기)
 - *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위반 등 과태료 처분 시행(6.28~)
- 돼지고기 이력정보 활용률 제고를 위한 이력정보 조회방법 소비 홍보 강화(연중)

□ 거래내역 전산신고 대상자 확대를 통한 이력정보 활용도 향상

- 개정법령에 따라 확대된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교육***추진(3~6월)
 - * (소, 돼지)기타식품판매업소(300㎡ 이상) 내 판매업소 종업원 5인이상 또는 영업장면적 50㎡이상 판매업소·종업원이 5명이상인 돼지고기식육포장처리업
 - ** 신규 업소의 전산신고 시행('15.6.28)이전에 현장 밀착 교육·홍보
 - *** 영세업소 등에서 거래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산신고 프로그램 개선 등('15.1~5월)

3. 추진실적

□ 돼지농가 및 영세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1월~)

- (농가) 한돈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업하여 전산망 연계(한돈팜스) 및 신고방법* 다각화(팩스, 전화 등)로 쉽게 이력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1:1접점 홍보·교육 추진

* 신고방법 : 이력지원실 전화 外 축평원 10개 지원, 유선(팩스)외 + 인터넷, 모바일 신고

- (유통업소) 식육판매업소 밀집지역(재래시장, 축산물시장 등)에 “식육판매 표지판” 30만여개(3만개소)를 배부하여 이력번호 표시 지원

□ 축산물이력제 유통업소 월별 이행실태 점검(4~10월)

- 시·도 결과 통보, 점검업소(3,699개소), 미준수 업소 우편통보(245개소)

□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계도 및 집중단속 실시(6~7월, 9월)

- 유통단계 의무시행 및 명절대비 시·도, 농관원, 검역본부 합동 단속*

* 계도 5,177개소, 단속업소 10,169개소, 위반업소 74개소 적발

□ 거래내역 전산신고 대상자 확대를 통한 이력정보 활용도 제고(1월~)

- 거래내역 전산신고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판매업소(1,675개소) 등으로 확대 및 신고방법 안내 우편발송(5월)

- 이력정보 조회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2~12월)

* 유통업소 전산신고 제고를 위한 관련업체(6개소) 실무협의회 실시(2월)

** 판매업소 대상 전단지(30천부), 포스트 잇(200천부) 배부 및 언론홍보 TV(3회), 라디오(1), 서울역 영상광고(1), 일간지등 기고(37) 등

- 제도이행 대상자의 전산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1월~)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개편, 스마트 폰 앱 통합 등 시스템 개선(1월)

- QR코드 조회 도입(5월)

- 매입실적신고 조회 및 일괄등록 기능 보완(7월)

- 홈페이지 등 공개사항에 도체중량 및 개월령 추가(9월)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 증가율 33.7%
- ◇ 추진실적 : 조회건수 증가율 41.3% (목표 대비 7.6%p 증가)
- * 조회건수: ('12) 12,909천건 → ('13) 13,917 → ('14) 21,266 → ('15) <목표> 28,434 <실적> 30,057

□ 성과

-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먹을거리 안전망 확대 및 유통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 '15년도 국내산 쇠고기 신뢰도 조사결과: 61.8% ('14년 대비 6.9%p 증가,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조사)
 -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로 소비자는 이력조회를 통해 원산지 구분은 물론 수입육과의 둔갑판매 방지 효과
 - 원산지, 사육자, 가축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 및 유통의 투명성 제고
- 이력관리 위반업소(연 2회 이상)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이력제, 한국소비자원, 네이버 등 홈페이지에 공개(7월)
-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이력정보 활용도** 증가
 - * (기존)포장처리업소(5인 이상) ⇒ (확대)기존 + 대형판매업소, 16.7%p 상승)

구 분	'13년	'14년	'15년
전산등록 업소 수	1,537 ^{개소}	2,747	3,205

** 이력정보 조회건수 대폭 증가('14년 대비 41.3%p 상승)

구 분	'13년	'14년	'15년
이력정보 조회건수	13,917,114	21,266,899	30,056,899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부정축산물 사전차단을 위한 이력시스템 가동 확대로 소비자 신뢰제고
- 대국민 이력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 TV·미디어·기획기사 등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캠페인 실시 등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③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활성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축질병상황실 이동희 사무관 T: 054-912-038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 영업장 관리를 통한 제도 정착
 - 전자적 거래신고, 이력번호 표시 등 제도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인지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사업자·소비자 교육 및 홍보

2. 추진계획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대상 영업장 지도·점검(1,000개소, 연중)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소비자 교육 및 홍보(연중)
 - 유통이력제 적용 사업자 교육 12회
 - 소비자 현장체험 행사 3회
 - 인터넷·대중매체 홍보 2회 등

3. 추진실적

- 유통이력제 적용 영업장 지도·점검(2월, 9월)
 - 설 대비 특별점검(101개소), 추석 대비 특별점검(159개소) 등 1,566개소 점검
- 제도 정착을 위한 이행 대상 사업자·소비자 교육 및 홍보(4~12월)

- 인터넷 키워드 검색(4월), 버스 모니터 동영상(4~7월), 지하철 동영상(7~9월) 및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PDP(9~12월) 홍보
- 영업자 대상 전국 권역별 순회 교육(12회, 1,919명)
- 신규 및 위반영업장 등에 대한 방문 교육(270개소)
- 수입쇠고기 주 구매층인 주부 대상 소비자 현장체험 행사(4회)

4. 자체평가

□ 성과

- 영업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정착 및 대국민 인지도 향상에 기여

□ 문제점

- 제도 도입('10.12.22) 이후 다각적인 교육·홍보에도 소형마트 등 취약 업소에서 위반사례 지속 발생* 및 제도 인식 미흡

* 위반율(점검/위반) : ('14)1,612/118, 7.3%→('15)1,566/34, 2.2%

□ 개선대책

- 소형마트 등 취약업소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제도 안정화 도모

5. 향후 추진계획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 영업장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지속 추진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④ 수산물 이력제 확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수정 사무관, T.044-200-5449)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산물 정보기록·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 등 공중보건 확보 필요

-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방사능 등에 대한 과도한 소비자 반응 완화
- 천일염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토양 등의 위해요소 차단

2. 추진계획

□ 참여업체 지원, 교육·컨설팅, 정책홍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이력추적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 수산물이력제사업 추진계획 수립('15.2)
 - * 대상품목 확대 계획 : ('13) 9개 품목 → ('15) 12개 품목
- 수산물이력제사업 참여업체 대상 교육·홍보 실시(수시)
- 수산물이력제사업 워크숍 개최(매년 1회 이상)
- 이력제사업 소비자, 참여업체 모니터링(설문) 조사 실시(매년 1회 이상)
- 수산물이력제사업 중간('15.7)·최종보고회 개최('15.12)

3. 추진실적

□ 참여업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력추적제 참여율을 확대

- 수산물이력제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중점관리품목 확대 적용('15.2.16)

'14년 품목(7개)	품목(12개)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넙치,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넙치, 멸치, 미역, 굴, 김, 다시마, 오징어, 옥돔

-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대상 교육 및 이력제 홍보사업 진행
 - (교육)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대상 강의 및 교육 총 12회 진행
 - (컨설팅) 이력제 등록 희망업체 컨설팅 총 292회(유선 177, 방문 115)
 - (홍보) 대형마트를 통한 이력수산물 판촉행사(26데이), 월간지·일간지를 통한 홍보물 배포, 파워블로거 운영, 이베이코리아 등 온라인 판매처와 연계한 이력제수산물 판매전 등 진행
- 수산물이력제 실무진 워크숍 개최('15.10.15~16)
 -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장애 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및 만족도 모니터링 조사 실시('15.10.26~11.13)
 - 수산물이력제 인식 실태와 인지도 등을 조사하여 '15년 이력제사업 평가자료 및 '16년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수산물이력제 중간보고 제출('15.7) 및 최종보고회 개최('15.12.17)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수산물이력제 참여 업체 실적 100%
- ◇ 추진실적 : '15년 참여업체 수는 786개 업체로 최근 3년간('12~'14) 평균참여업체 수(606) 대비 129.7% 초과 달성
- * 최근 5년간 참여 업체수 : ('11)272 → ('12)328 → ('13)813 → ('14)678 → ('15)786

□ 성과

- '15년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은 컨설팅 및 홍보 강화, 사업참여 독려 등을 통하여 목표(100%)대비 129.7% 초과 달성
- 이력제 참여품목 수 및 업체 참여율은 지속 증가 중임
 - (참여품목 수) '14년 24개 품목 → '15년 30개 품목, 전년 대비 25% ↑

- (업체 참여율) '14년 9.8% → '15년 12.9%, 전년 대비 31.6% ↑

□ 문제점

- 자율참여 방식 및 복잡한 수산물 유통구조로 참여율 제고에 한계
- 이력표시 상품의 가격 차별이 거의 없어 이력제 참여 비용 대비 수익이 크지 않아 이력제 참여 기피

□ 개선대책

- (중점품목 추가) 대중성,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5년 12개*인 중점추진품목을 '16년에는 17개로 확대할 계획
 - *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멸치, 미역, 굴, 김, 다시마, 오징어, 옥돔, 넙치
- (유통업체 협력)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3사, 농·수협)와 공동 판촉·홍보행사* 지속 추진
 - * 이력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특판행사(26데이) 등을 공동 진행 예정
- (인증제 연계) 이력제 참여를 수산물 품질인증의 선결조건으로 삼아 간접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추진
 - * 연구용역 결과('15.12 완료)를 바탕으로 '16년 인증제도 개편시 반영 추진
- (성과지표 개선) 계획대비 단순 100% 실적달성의 목표치와 측정산식을 점진적 향상수준으로 변경
 - * (당초) 최근 3년 평균 참여업체(등록업체) 대비 당해연도 참여업체(등록업체) 수 → (개선) 총 이력제 대상업체 수 대비 당해연도 참여업체 수

5. 향후 추진계획

- '16년 수산물이력제사업 추진계획 수립('16.2)
 - * 중점관리품목 확대 계획 : ('15) 12개 품목 → ('16) 17개 품목
- 이력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업체와의 협력 행사 개최('15.6월 이후, 3회 이상)
- 수산물이력제사업 참여업체 대상 교육·홍보 실시(수시)
- 수산물이력제사업 워크숍 개최(매년 1회 이상)
- 이력제사업 소비자, 참여업체 모니터링(설문) 조사 실시(매년 1회 이상)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⑤ 국산 천일염 이력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수정 사무관, T.044-200-5449)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천일염의 생산,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천일염 이력제 확충

-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값싼 수입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 천일염 생산자 보호
-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선택권 보장

2. 추진계획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 운영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지침 수립 및 공고('15.2)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자 선정('15.2~3)
- 이력관리제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15.3~)
- 이력관리제 참여업체 대상 교육·홍보 실시('15.3~)
- 천일염이력관리협의체 운영('15.3~)
- 참여업체 모니터링(설문) 조사 실시('15.8)
- 이력관리제 실적 중간점검 및 분기별 회의 개최('15 매 분기말)
- 이력관리제 최종보고회 개최('15.12)
- 이력관리제 우수참여자 대상 워크숍 개최('15.12)

3. 추진실적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 추진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지침 수립('15.2.9)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자(4개 분야) 선정 공고('15.3.19)
- (총괄) 사업자 선정 재공고(염업조합 단독입찰 유찰) 실시('15.3.30)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자 선정 완료('15.4.24) 및 착수보고회 개최('15.4.27)
- 이력관리제 참여대상자(조합원) 교육 및 설명회 개최('15.5.22~29)
- 천일염 대량 소비처 대상 이력관리제 천일염 소비촉진 행사('15.6.11~21)
- 사업수행자 중간보고회(분기별) 개최(2분기-7/2, 3분기-10/19)
- 박람회 및 지역축제 참여로 천일염이력관리제 홍보('15.8월~11월)
 - 박람회 : 귀어·귀촌박람회(8/7~8/9), 소금박람회(8/26~8/29)
 - 지역축제 등 : 식품안전의날(5월), 영광갯벌축제(8월), 강화도새우 축제(10월), 남도음식문화축제(11월)
- 이력관리제 참여업체 모니터링(설문) 조사 실시('15.8.20.~12.20.)
- 천일염이력관리제 협의체 및 유통업자 워크숍 개최('15.9.2)
- 천일염이력관리제 정보시스템(전자정부 프레임 적용) 재구축('15.4월~12월)
- 천일염이력관리제 대국민 홍보 실시('15.4월~12월)
 - 온라인 : 온라인 매체(블로그, 페이스북) 운영, 구전홍보(파워블로거) 운영, 키워드·브랜드 검색광고, 유튜브브광고 등
 - 오프라인 : 지하철·KTX 광고, 마트(카트, DID)광고, 케이블TV 등
- 이력관리제 보조사업자 협의체 워크숍 개최('15.12.3)
- 이력관리제 우수 참여자 대상 워크숍(한마음 큰잔치) 개최('15.12.14)
- 이력관리제 사업자 최종보고회 개최('15.12.22)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천일염 이력제 구축율 70%
- ◇ 추진실적 : 천일염 이력제 구축률 66.17%로 95% 달성 수준
 - * 최근 소금가격하락에 따른 천일염생산량의 감소 추세와 천일염이력제 사업참여조건 강화(재봉포장 의무화)에 따른 참여물량 감소로 목표 일부 미달성

□ 성과

- 천일염이력관리제 생산목표(220천톤) 초과 달성('15.12.31 현재 234천톤)
- 홍보 전문가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실시
 - 천일염 위생논란 발생시 온라인(댓글) 대응 및 구전활동 실시
- 천일염이력관리제 라벨 도용방지를 위한 디지털 보안기술 도입
 - 디지털 암호 내장된 정품인증 마크 개발 적용

□ 문제점

- 천일염 생산자의 고령화로 이력관리제 인지도 제고의 어려움
- 2015년 천일염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자 의욕저하
- 천일염 위생논란 대두로 천일염이력관리제 홍보효과 감소
- 천일염이력관리제 총괄사업자인 대한염업조합의 역량부족
 - * 대한염업조합 인적구성 : 직원 10여명, 이력제 검사원 10명
- 산지 소금가격하락에 따른 천일염생산량의 감소와 천일염이력제 사업참여 조건 강화(재봉포장 의무화)에 따른 참여물량 감소
 - * 소금가격 추이(원/kg) : '12) 391 → '13) 294 → '14) 263 → '15) 195

□ 개선대책

- 천일염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천일염 생산자 대표조직인 대한염업조합의 역량 강화
- 천일염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성과지표 개선)** 소금가격하락 및 천일염생산량의 감소 추세와 천일염이력제 사업참여조건 강화(재봉포장 의무화)에 따른 참여물량 감소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
 - * (당초) '16년 천일염이력제 구축률 75% → (개선) '16년 천일염이력제 구축률 70%

5. 향후 추진계획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 추진(연중)
- 이력관리제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16.2)
- 법령상 천일염 이력관리제 근거규정 마련('16.3)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16.3.28)에 맞춰 진행

[1-1-5]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① 주류 안전기준 재정비 및 주류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사전안전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김성근 사무관, T.043-719-605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주류의 위해요소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준·규격 재정비 추진
 - 주종별(주정, 탁주, 맥주, 과실주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관리가 필요한 항목 기준 설정
 - 연구사업 등을 통한 주류의 과학적 시험법 개선 추진
- 주류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사전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맥주 등 대한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수거·검사 실시
 - 계절별·시기별 소비가 많은 주류, 새로운 소비행태의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섭취주의사항 등 소비자 홍보

2. 추진계획

- 주정의 식품유형 신설 및 기준·규격 제정 추진(11월)
 - 「주세법」에 따라 관리되는 주정의 규격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퓨젤유 등 검사항목 기준 신설(식품공전에 식품유형 신설) 추진
 - 주류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선 추진(12월)
 - 현행 비색법·적정법* 등 시험법(총산, 알데히드 등)에 대한 과학적 기기분석법(GC·HPLC) 개발 추진
- *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을 색의 변화 등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의존

□ 맥주 소비가 많은 하절기 대비 소규모 맥주 보관 관리 실태조사 및 수거·검사(6~8월)

- 외부 유통·판매가 허용된 소규모 맥주의 제조, 운송 및 보관 중 위생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수거·검사 실시
- * 옥외 외부 적재에 따른 벌레 등 이물혼입, 직사광선 노출 보관에 따른 이취 등 조사

□ 에너지폭탄주 등 주류 섭취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콘텐츠 개발

- * 매실주(봄), 자가맥주·생맥주(여름), 에너지폭탄주(연말) 등 홍보

3. 추진실적

□ 주정 제조업체 안전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주정 기준·규격 신설 추진

- 주정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9월 행정예고)
 - 과실주 숙성에 사용하는 고가의 오크통 대체물질인 오크칩 사용 허용으로 영세 주류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 * 오크칩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의견 제출(9.21) 및 행정예고(10.15)

□ 색변화 등으로 결과를 판정하던 기존의 총산 시험법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pH미터 사용 및 전처리 방법 개선 등 신뢰성 확보

- * pH측정기를 사용하여 색변화만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모호함을 개선하고, 탁주 등을 위한 전처리 방법(여과, 탄산제거 등) 추가
- ** 총산 시험법 등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15.2~11월) 및 결과검토 등으로 시험법 개선안 마련(9월)

□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실태조사 실시

- 위생관리 및 시설부분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8월)
- * 소규모 맥주제조업체 39개소 점검, 38개 제품 수거검사 적합

□ 안전한 주류 제조 및 건강한 주류 소비를 위한 홍보 강화

- 주류제조업체 교육용 콘텐츠*와 계절·시기별 주류소비형태 등에 따른 소비자 대상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확산

* “서류관리, 종사자관리, 시설관리, 생산관리, 제품관리”로 구분하여 총 5편 제작

** 매실주, 자가소비맥주, 술잔돌리지 않기, 커피맥주 관련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 생활밀착형 주류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확장*과 국민 참여이벤트** 실시

* 모바일 및 PC 홈페이지 메뉴구조 개편, 배경색 교체 등

** 안전한 음주를 실천하는 술자리 뽐내기 UCC 동영상 공모 및 술래잡기 112초 OX 퀴즈

4. 자체평가

□ 성과

- 주정 식품유형 신설, 과실주의 오크칩 사용 허용, 주류의 총산 시험법 개선으로 과학적 분석 및 안전기준 마련
- 시기·계절별 주류 소비형태에 따른 생활밀착형 주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건강한 주류 소비·섭취문화 확산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주류 기준·규격 신설·개정 등 안전기준 지속 재평가와 주류 소비·섭취 변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1-1-5]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② 주류 제조업체 기술지원 및 안전관리 체계정비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김성근 사무관, T.043-719-605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전통방식의 주류 제조 등 주류 특성에 맞는 표시기준 등 법령 정비
- 우수제조업체(HACCP지정업체) 현장 견학 및 기초교육 실시
- 주류 안전관리 및 기준·규격 등 분석기술 무상지원
- 지도·점검 방식을 시설 중심으로 관리하는 차등관리제에서 위해 요소 중심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등급제*로 전환

* 시설·제품 관리(49개 항목) → 제조용수·원료·제조공정 상의 위해요소 관리(62개 항목)

2. 추진계획

- 주류표시 및 시설기준 등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협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1·2·6월, 3회) 및 업체 대상 교육 실시(4월)
- 맥주·소주 업체 위주의 이물저감화 간담회를 탁주, 약주 등 모든 주류제조업체로 확대 시행(4·10월, 2회)
- HACCP 의무화 대비 HACCP 적용업체 견학(5·7·9·11월, 4회) 및 주종별(맥주 등) 표준 기준서 개발·보급
- 3개 권역별(중부·영남·호남) '주류 분석·기술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영세 주류업체(140개소) 맞춤형 분석기술 지원(6~11월)
 - 주류 안전관리 교육, 애로사항 컨설팅, 에탄올 등 기준·규격 분석 등 지원

* 지원 대상업체 : 종업원 10인 이하 또는 연매출 10억 이하 140개소

□ **업체 위생수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 관리^{*}하는 위생관리등급제를 도입하고 중점관리 업체 집중 관리(연중)**

* 자율관리 : 2년간 업체 자율점검, 일반관리 : 2년간 1회 지도점검 및 1회 업체 자율점검, 중점관리 : 2년간 매년 지도점검

3. 추진실적

□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교육 실시**

- 전통주 시설기준 개선 협의(1월, 농식품부), 주류관련 법령의 조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3·7월, 기재부, 국세청)
- 정책방향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주류관련 협회(1월), 주정 제조업체 등 간담회(4월) 및 업체 대상 법령 설명회 개최(3·10월)

□ **주류 제조업체 이물 혼입 저감화를 위한 간담회를 맥주·소주 업체 및 탁주, 약주 제조업체까지 확대 개최(4·10월, 2회)**

- 이물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주류업체 견학 실시

□ **HACCP 주류제조업체 견학(6·7·9·11월), 맥주·약주 표준기준서 개발(11월)**

□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영세 주류제조업체가 주류 기준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위주의 기술 지원(158개소, 6월~11월)**

□ **주류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관리업체로 구분하고 차등 관리하는 위생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한 지도·점검**

- 자율 60개, 일반 779개, 중점 106개 등 총 1,115개소 위생등급관리
- 중점관리업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 : ('14) 85.5% → ('15) 87%

* 중점관리업체 점검결과 중요 위반항목 감소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중점관리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86%
- ◇ 추진실적 : 중점관리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87%(목표대비 101% 초과 달성)

□ 성과

- 위생관리가 미흡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 및 기술지원으로 위생관리 준수율 1.5%p 향상 : ('14) 85.5% → ('15) 87.0%
 - 지속적인 교육·지도로 법령 준수에 대한 영업자 인식 제고
- 권역별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화된 주류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애로사항 적극 해결
- 주류업체 HACCP 적용확대 및 기준서(맥주, 약주) 개발·보급과 이물 혼입방지매뉴얼 제작·보급 등 안전한 주류 제조·유통기반 확대

□ 문제점

- 제조규모별 위생관리 수준에 큰 차이가 있고, 일부는 시설의 노후화 및 영업자의 고령화로 주류업체 안전관리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 주류업체는 여전히 세원중심의 관리개념에 고착되어 HACCP 적용 확대 및 이물저감화 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저하

□ 개선대책

- 위생수준에 따른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및 분석지원 사업 지속
- 세원 중심에서 안전관리 중심으로 영업자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5. 향후 추진계획

- 주류 업체 위생관리준수율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등급제 지속 운영과 HACCP 적용확대 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소통 강화

[1-1-6]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① 위해식품 회수 체계의 선진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성준현 연구관, T.043-719-205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소비자 구매시점에서 위해식품을 자동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을 매년 1만개소 씩 도입 확대(계속)

* '14년 기준 설치 업소(누계) : 52,966개소

2. 추진계획

□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가입 지속 확대(연중)

- 대형 식품유통업체 자율적 참여유도(연중)
 - 본사 방문설명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자율설치 독려
- 중·소규모 식품판매점 무상설치 지원(연중)
 - 식약처 예산 지원을 통한 무상설치 위탁사업
 - 지자체 식품진흥기금 등 활용 무상설치

3. 추진실적

□ '15년도 대형 식품 유통·판매업체 등 총 11,094개소(대형업체 8,594개, 중·소판매점 2,500개소)에 시스템 추가 설치 완료

- 업무협약, 간담회 등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등 대형 식품 유통·판매업체 8,594개 매장 자율 설치
 - 대한상공회의소(2.24.) 및 한국체인스토어협회(4.30.)와 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협약내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 협조 및 안정적 운영
- 대형 식품 유통·판매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2회, 1.23., 9.18.)
- 무상설치 지원을 통한 **중·소 식품판매점 2,500개소 추가 설치 완료**
 - 중·소매장 무상설치 위탁사업[예산: 425백만원] 수행(3월~11월)
 - 지자체별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대상 시스템 설치 확대 추진(연중)
 - * 지자체 중·소규모 식품판매점 설치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4.23)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 수 60,000개소(누계)
- ◇ 추진실적 : '15년도 11,094개소 시스템 추가 설치로 누계 64,060개소 설치 달성

□ 성과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적용 매장 확대로 소비자에게 안심쇼핑 환경 확산
 - * 시스템 설치 업소수(누계): ('13) 42,134개 → ('14) 52,966개 → ('15) 64,060개
('15년 누적 6만개 설치 목표 대비 107% 초과 달성)
 - * 시스템을 통해 **298건의 부적합 식품 등 판매 차단**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17년까지 식품판매장 80,000개소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1-2-1]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

① 수입 전(前) 해외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조태용 연구관, T.043-719-2159)

과제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15.2.3) 후속조치 추진
 - 해외 제조업체 사전 등록 등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성을 관리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스템 구축
 - 해외 제조업체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마련

2. 추진계획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하위 규정 입법 추진(12월)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45건) 입법으로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
 - * 대통령령(11건), 총리령(27건), 고시(7건)
 - 등록항목(HACCP, GMP 등), 등록주체(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체), 재등록 등 세부 등록 절차 마련
- 해외 제조업체 온라인 등록시스템 마련(12월)
 - 해외 제조업체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마련
 - 해외 제조업체의 정보(HACCP, GMP 적용 등), 과거 수입이력 등을 분석하여 3등급(우수, 일반, 특별관리) 분류

3. 추진실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하위 규정(안) 마련('16.2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 입법예고(5.26~7.7), WTO/SPS 통보·회람(6.1~7.31), 규제심사(11.2)
 - 재입법예고(10.7~10.19) 등 추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포('16. 1.22, 24)

□ 해외제조업체 온라인 등록시스템 마련 및 구축

- 「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선진화」 사업('15.3.3 시행)으로 식품행정통합 시스템에 해외제조업체 등록시스템 구축('15.12.18)
 -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국문 및 영문으로 입력 및 열람 가능 시스템으로 개발

4. 자체평가

□ 성과

- 해외제조업체 등록항목 및 등록주체의 명확한 법적 내용 마련
 - 등록항목에 명칭, 소재지 등 기본항목 외 품질관리 정보(HACCP, GMP 등)도 등록되게 함으로써 업체 구분 관리 근거 마련
 -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체가 등록 가능토록 함으로써 등록 편의성 및 실효성 확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 이전 하위법령 마련 및 해외제조업체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법 본격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수입신고 업무 수행 가능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해외제조업체 등록시스템의 수입식품검사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1-2-1]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

② 축산물 수출신청국에 대한 위생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송성옥 사무관, T.043-719-3245)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조태용 연구관, T.043-719-2159)

과제 분류	정책 사항/ 법령 개정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수입 전 축산물 수출신청국에 대한 위생평가를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강화
 -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갖춘 국가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실시

2. 추진계획

- 현 진행 중인 수출신청국에 대해 차질 없이 위험평가 절차 진행(연중)
 - * 2014.10월 현재 27개국 39개 축산물에 대해 수입위험평가 절차 진행 중(농식품부(검역분야)와 식약처(위생분야) 협업으로 추진)
- 수입식품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제정(12월)
 - 수출국 위생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등 세부 사항 제정
 - * 「축산물가공품 공통 수입위생요건」 등

3. 추진실적

- 2015년도에 미국 등 8개국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서 송부(3개국) : 미국 산양 및 면양육, 우크라이나 가금육, 뉴질랜드 가금육 및 그 생산물 ✓ 답변서 분석(5개국) : EU 쇠고기(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리투아니아 가금육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에 위생평가규정 마련(16.2.4 시행)
 -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등 세부진행사항 관련 규정(안) 마련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안) 마련

4. 자체평가

□ 성과

- 수입위생평가 법적 근거마련 및 수행 세부절차 수립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차질 없는 수입위생평가 업무 수행

[1-2-2] 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

①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및 우수 수입업소 등록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김은정 연구관, T.043-719-221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수입 전 단계 현지실사 강화를 통한 위해 수입식품 사전 차단

- 수출국 제조시설과 제품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부적합·수입건수 상위 제조업체 및 해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지 위생관리 강화

2. 추진계획

□ '15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계획 수립(1월)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및 우수수입업소 등록·관리 등
* ('14) 16개국 71개소 → ('15) 10개국 78개소

□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 MOU 체결국(중국, 인니 등)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및 수입량 상위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실시
* 중국(3, 9월), 베트남(4월), 인도네시아
- 식품사고, 위해정보, 부적합 발생 업체에 대해 필요시 현지실사 추진(상시)
* 위해우려 가능성 국가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관련부서 협조)
- 수출국 수출입식품 관련 공무원 및 제조업체 대상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3, 9월)

-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 양성
- 수출국 현지실사 실무과정 위탁교육 실시(4, 10월)

□ 우수수입업체 등록에 따른 현지실사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 우수수입업체 수입증가 유도를 위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맞춤 홍보 실시 및 설명회 개최(2월, 9월)
 - * 우수수입업체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목표 : ('14) 1.53%→('15) 1.67%
 -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민원 설명회 개최 및 안내문 발송(년 2회이상)
- 준수사항 미이행 여부에 따른 행정처분 및 등록취소(3, 9월)
- 국내 제조업체 위생관리 형평성을 고려한 평가표 고시개정(4월)

3. 추진실적

□ '15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계획(1.9) 및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확대계획 수립(10.2)

□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 MOU 체결국(중국, 인니 등)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및 수입량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실시
 - * 중국(4월 5개소, 10월 5개소), 베트남(3월 12개소)
- 식품사고, 위해정보, 부적합 발생 업체에 대해 필요시 현지실사 실시
 - * 정밀검사 생략, 자사제조용 식품제조업체 등 29개소 점검
- 수출국 수출입식품 관련 공무원 및 제조업체 대상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4, 10월)
-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수행을 위한 직원 대상 전문가 교육
 - * 수입식품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대상(2회, 67명)

□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에 따른 현지실사 및 사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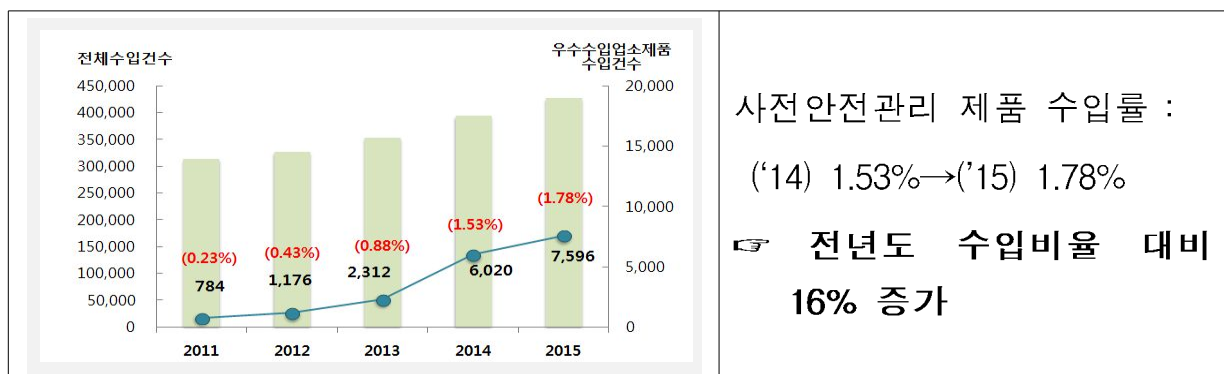
- 우수수입업소 수입증가 유도를 위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맞춤 홍보 실시 및 설명회 개최(2월, 7월)
 -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민원 설명회 개최(3회) 및 안내문 발송(4회)
-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를 통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 우수수입업소 12개소 등록(12개 제조업체 116제품)
 - * 우수수입업소 등록현황(누계) : 148개소(156개 제조업체 1,296제품)
 - *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목표 : ('14) 1.53%→('15.11) 1.78%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사후 위생점검 강화(24개 제조업체 실사)
 - 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이행 제고(미이행 업소 3개소 시정명령 등)
- 국내 제조업체 위생관리와 형평성을 고려한 위생관리 점검기준 고시개정(5월)
 - 국내제조업체 위생점검 항목 반영 및 평가방식의 점수제 도입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1.67%
- ◇ 추진실적 :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1.78%(106.6% 초과 달성)

□ 성과

- 우수수입업소 관련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로 사전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량 증가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 수입식품 안전정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추진
- 사전안전관리제도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등 판매업자'의 책임감 고취 유도

[1-2-2] 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

② 수입 축산물 해외 수출국 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전세회사무관, T.043-719-2220)

과제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수출국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축산물 사전 안전관리로 위해 우려 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
 - 사전에 안전관리 수준이 확인·등록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수입 유도로 안전성 제고
 - 위생 취약 작업장의 축산물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통해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2. 추진계획

- 수입 축산물 해외 수출국 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연중)
 - 부적합 발생이력 및 수출물량이 많은 작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현지실사 확대
 -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수출작업장 시설기준 및 작업장 위생관리 수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사(11개국 70개소) 실시
 -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지적사항 보완 후 승인 등 조치
- 해외작업장 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15. 상반기)
 - 도축장 등에서 현장 참여식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 강화(년 25명)
- '해외작업장 등록·변경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고시('15. 하반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후속조치로 해외작업장 관리방안 사전 마련

3. 추진실적

□ 해외작업장 등록제 및 현지실사 관련 법령 마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공포 '15.2.3.)에 **해외작업장 등록제 및 현지실사 근거 규정 마련**(법 제12조 및 제13조)
 - 해외작업장 등록제 등 새로운 사전 안전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수입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 * (현행) 농식품부 소관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협업(가축질병 중심) → ('16년) 식약처 주도로 축산물 위생·안전 중심의 현지실사로 전환

□ 수입 축산물 해외 수출국 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 해외 축산물작업장 승인·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농식품부 협업)
 - 9개국 71개소 현지실사 결과 불합격 14개소(승인보류 7, 보완 7개소)

<2015년 축산물 해외작업장 신규승인 및 사후관리 위생점검 실적>

국가	신규 승인		사후 관리		국가	신규 승인		사후 관리	
	점검	부적합	점검	부적합		점검	부적합	점검	부적합
총 계	37	7	34	7	아르헨티나	2	0	2	0
독 일	4	1	8	0	오스트리아	2	2	3	2
스페인	16	3	1	1	미 국	0	0	9	1
프랑스	0	0	3	3	중 국	13	1	0	0
핀란드	0	0	4	0	이탈리아	0	0	4	0

□ 해외작업장 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입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교육과정 운영('15.5.18.~5.20.)
 - 포유류 도축장, 닭 도축장, 유가공장 현장 실습 및 중요관리점(CCP) 점검방법에 대한 현장 참여 교육 실시(23명)

□ '해외작업장 등록·변경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고시 제정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정 ('16.2.4.)
 - 현행 '해외 수출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농식품부 예규) 중 축산물 위생분야에 대한 점검항목 및 판정기준을 대체

4. 자체평가

□ 성과

-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으로 부적합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는 보완, 미승인 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함으로써 사전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만 수입

* '15년 점검목표(70개소) 100% 달성(71개소), 점검결과 부적합 14개소에 대해 승인보류(미승인 3, 보완후 승인 4) 또는 보완요청(7개소)

□ 문제점

- 식육 등 일부 품목의 현지실사 중복(농식품부), 축산물가공품 신규 등록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대응방안 마련·시행 필요

□ 개선대책

- 특별법에 따른 사전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주한외국대사관 및 영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로 제도 시행 초기 혼선 방지

* 식육 등 공통품목은 현행과 같이 협업, 축산물 가공품은 식약처 단독 실사 추진

* 축산물가공품 작업장은 서류검토, 국가간 협의된 방법 등 신속 등록절차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합동 점검 등 타 부처 협업방안 마련('16.2월)
- 해외작업장 등록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실시(연중, 80개소)
- 해외작업장 현지 실사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용역(상반기)
- 도축장 등 현장 중심의 실사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연2회, 상·하반기)

[1-2-2] 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

③ 수입 수산물 현지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하지은 사무관, T.044-200-5618,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송상길사무관, T.043-719-2230)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수출국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로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 필요
 - 사전에 안전관리 수준이 확인·등록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 유도로 안전성 제고
 - 주요 교역국과 수산물 위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2. 추진계획

- 수입 수산물 해외 수출국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식약처, 해수부)
 -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가의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 위생 점검으로 수입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 * 위생약정 체결국가 :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에콰도르
 - * 수산물 가공업소 점검 ('14) 57개소 → ('16) 65개소 → ('17) 70개소
- 수산부산물 수출국 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식약처)
 - 한국으로의 수산부산물 수출 실적이 많은 국가 생산시설이나 신규 등록 위한 생산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2개국이상)
 - 반기별 1개국이상 수산부산물 생산시설에 대한 점검

3. 추진실적

□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 가공시설 현지 위생점검 실시(해수부·식약처)

- 6개국(에콰도르, 태국,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62개소 현지 위생 점검 실시

□ 수산부산물 수출국 생산시설 현지점검 실시(식약처)

- 2개국(러시아, 뉴질랜드) 5개소

<수산물 및 수산부산물 수출국 시설 위생점검 실적>

국 가	점검기간	점 검 지 역	인원	점 검 시설수	비고
7개국	-	27개 지역	23명	67개소	
에콰도르	4.4~4.13 (10일간)	과야킬, 듀란	2	5	수산물
중 국	5.17~5.23 (7일간)	북건성(장주, 동산, 북청, 녕덕), 절강성(주산, 태주, 향주)	4	14	수산물
태 국	6.21~6.27 (7일간)	방콕, 샴사콘	3	6	수산물
러 시 아	9.6~9.13 (8일간)	캄차카주	2	4 2	수산물 부산물
베 트 남	11.8~11.14 (7일간)	호치민, 까마우, 깐토, 끼엔장	4	11	수산물
뉴질랜드	11.14~11.21 (8일간)	넬슨, 리틀턴	2	3	부산물
중 국	11.29~12.5 (7일간)	싼야, 윈창, 하이커우, 진저우, 푸란덴, 좡허, 둥강	4	16	수산물
인도네시아	12.6~12.12 (7일간)	마카사르, 마나도	2	6	수산물

□ 약정 국가와의 실무회의 실시 및 약정 개정안에 대한 서명

- 위생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위생약정국 실무회의 대비 협의회 등 5회 개최(4월, 9월, 10월, 11월 2회)
-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 협력회의 실시('15.9.14)
 - 대중국 신규 수출 수산물 검사검역 진입절차 등 양국간 수산물 위생관리 현안 및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의

- 한·중 활수생동물 검사검역 위생약정 협력회의 실시('15.11.24)
 - 한·중 활수생동물 검사·검역항목 기준에 대한 검토 등 양국간 활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질병전파 방지 및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의
- 한·중 활수생동물 검사검역 위생약정 개정 서명('15.10.31)
 -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협의된 약정 내용 수정 사항에 대해 서명
 - * 주요개정내용 : 검사·검역 항목 및 기준이 신설될 경우 상대국에 사전 통보, 유해물질 또는 질병 검출시 통보내용 구체화 및 통보내용 평가기간 설정,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 등

4. 자체평가

□ 성과

-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수출국 가공시설 위생관리 강화 및 수입수산물 사전 안전성 확보
- 약정 체결국 가공시설의 현지 위생점검 및 협력회의 실시 등으로 부적합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됨
 - * 수입수산물 부적합 현황 : ('13) 0.30% → ('14) 0.16% → ('15) 0.11%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위생약정 해수부-식약처간 협업 운영(연중)
- 수산물 및 수산부산물 수출국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연중)

[1-2-3]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 책임 강화

①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입식품 수입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김광수 사무관, 조태용 연구관 T.043-719-2159)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수입신고 성실정도를 평가하여 수입식품 검사에 반영

- 수입자의 수입신고 내용을 평가·분석한 결과를 사전예측수입식품 검사시스템(OPERA)에 반영하여 차등 관리

2. 추진계획

수입신고 성실정도를 평가하여 수입식품 검사에 반영

-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인 성실신고 평가프로그램」 개선(수시)
 - 「성실신고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분석한 최종등급을 OPERA 반영
 - 성실신고 평가항목 배점 조정 및 결과 공유(2월)
- 「수입식품 열린토론회」 등의 민원설명회 개최 시 교육 및 홍보(수시)
-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인 성실신고 평가프로그램」 모니터링(수시)
 - 현재 운용 중인 수입식품포탈 사이트를 통해 성실신고 현황 지속 모니터링

3. 추진실적

수입신고 성실정도를 평가하여 수입식품 검사에 반영

- 성실신고 평가항목 배점 조정 및 결과 공유(15.2.25)
 - 「성실신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14년도 접수·처리된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최종 결정된 성실신고 등급을 사전예측수입검사 시스템(OPERA)에 반영(15.2.25)

-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인 성실신고 평가프로그램」 모니터링(상시)
-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실시(22회 서울14회 부산8회)
 - 식품안전 교육명령 기관 재평가(1.28.) 및 추가 강사 평가(10.1.)
 - 식품안전 교육명령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준수율 점검(2.5.9.11월)
 - * 교육 20회 실시 : 교육대상 806명 중 576명 교육 실시(71%)
 - 수입자 책임강화 및 수입신고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입 신고대행자’ 교육 실시(2회·8·11월)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부적합 수입자 교육명령 22회
- ◇ 추진실적 : 부적합 수입자 교육명령 22회로 목표 달성
 - *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 「성실신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성실신고 등급을 오페라 (OPERA, 사전예측수입검사시스템)에 반영하여 수입식품 검사 강화
 - * 총 4,581건 중 39건(0.9%) 부적합 적발(12월말 기준)
- 식품안전 교육명령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 뿐만 아니라 위생교육책임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성실신고 평가시스템」은 수입신고 정정내역 관리를 위해 지속 활용
- 수입식품 안전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과정 신설

1-3.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 강화

[1-3-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담당자 :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 제용규 사무관, T.043-719-405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 및 개방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및 식품정보활용시스템 개방
-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 활용 활성화
 - 업체와 품목*에 부여된 국가 고유번호를 부처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공개
 - * 일반음식점 등 식품 관련 42개 업종, 291만 영업업체와 121만 품목
 - 식품안전정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표준코드 운영 관리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위탁운영 관리

2. 추진계획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1~3월)
 - 12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시스템과의 안정적 연계, 이행 데이터의 완전성 검증 등 신규 구축 시스템의 안정화 필요
 - 전국DB 데이터 품질 점검, 식약처·지자체 정보시스템 연계 기능 점검, 12개 부처의 159종 정보의 연계상황 점검 등

□ 시스템 개방 및 사용자 교육

- 식품행정통합시스템(4월) 및 식품정보활용시스템(5월) 개방
 - * 식품안전정보포털의 전자민원 등 민원행정 기능은 행정업무통합시스템과 동시 개방
- 대국민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한 식품안전정보포털 개방(5월)
 - 업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인 '우리회사 안전관리 서비스' 및 식품관련 법령 등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맵' 제공
- 사용자 집합교육 실시(5월, 10월)
 - * 대상 : 부처·지자체 행정업무공무원 및 12개 부처 및 산하기관 정보공동활용공무원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 부처간 협의를 위한 '통합망 운영 협의회' 개최(6월, 11월)
- 지자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6월, 11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위탁운영 관리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1월~12월)
 - 정보 신뢰성 관리, 품질 보안 진단 및 조치(7월, 12월)
 - 위탁기관 성과지표 설정 및 산출물 관리(1월~12월)

3. 추진실적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1~4월)

- 전국 식품안전정보 데이터 품질 확보, 지자체 정보시스템(새울) 및 12개 부처 정보연계 실태 등 점검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3월)
 -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관계행정기관 자료제출 요청 등 근거 마련

-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반영한 식품 위해예보·조기경보 시스템 구축(11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개방(5월) 및 본격 운영(6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사전 교육(5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본격 운영을 위한 식약처(본부·지방청) 및 지자체 식품·축산위생 담당 공무원 등 사전 교육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교육(8~9월)
 - 식약처 및 지자체 식품위생 등 담당공무원 대상 시스템 사용법 교육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현황 설명, 범부처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정보 활용 확대방안 및 건의사항 수렴(8월, 11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지자체) 간담회(8~9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활용도 제고 및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을 위한 지자체 식품 및 축산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의견 수렴
- 주요 민간 포털사이트(네이버)와의 MOU 체결(12월)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및 건강기능식품 정보 등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대형식품박람회 및 지역축제 등과의 연계 홍보 실시(4회)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위탁사업 실시(1~12월)

- 통합망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식품안전정보원) 지정·운영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만족도 60%
- ◇ 추진실적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60.4%

□ 성과

- 12개 부처 159종의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공동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15.5)
 - (국민)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One-stop으로 획득 가능
 - (공무원) 칸막이 없는 부처 간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식품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 (산업체)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통합 전자 민원(87종) 창구 개설
- 맞춤형 Open API 정보 제공(140건) 확대를 통한 민간 신규시장 창출 기여
 - * 스마트냉장고 개발지원을 위한 가전업체(삼성·LG·동부대우전자) Open-API 정보 제공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2단계 사업 추진('16.2~12월)
- 고객 지원센터 운영 등 위탁사업 실시('16.1월~12월)
- 범부처 협업체계 유지 및 사용자 관리

[1-3-2]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①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원창수 사무관, 박종필 사무관 T.043-719-175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국내 위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체계 확대

- 국내 정보는 정부기관 및 언론사의 보도 자료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 필요
- 해외 현지 정보 수집 체계 강화를 위한 해외정보리포터 확대 및 교육 강화

2. 추진계획

식품 관련 국내 위해정보의 수집체계 확대(연중)

- 국내 뉴스 언론 등 실시간 정보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1399) 정보 분석·수집(연중)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신고(1372) 정보 동향 분석(분기별)

해외 현지 정보 수집 체계 강화를 위한 해외정보리포터 확대

- 정보 수집 대상국가 확대를 위한 해외정보리포터 추가모집(4월)
- 해외정보리포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반기별)

3. 추진실적

식품 관련 국내 위해정보의 수집체계 확대

- 주요 언론 정보 등을 통한 식품 위해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핵심 검색 키워드(194개)를 선정(5.29)하고, 주요 정보 제공*

- * 국내 언론 정보 총 4867건 수집
- '16년 SNS 등 정보 분석·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예산 확보(48백만원)
- 국내 언론, 소비자 신고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문 실시(9.8)
- 내부직원 및 분석 담당자 교육 실시(9.23, 6.24)
- 식품안전 소비자신고 정보분석을 위한 자료 확보
 - 각 부서 위해정보 접근권한 확보(9.30) 및 주요 정보** 제공
 - * 국민신문고(고객지원담당관), 식품행정통합시스템[1399, 허위광고모니터링 등](통합식품정보정책팀), 건기부작용신고(건강기능식품정책과)
 - ** 총 142건의 소비자원 등의 관련 정보 수집, 102건의 주요 관심정보 사업부서 제공
 - 소비자 불만사고 내용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협의 3회(8.26, 12.3, 12.18)
 - * 시간이 생명인 정보의 특성을 고려 분기별 정보공유를 실시간 공유로 전환
- 식품위해예측시스템(위해정보자동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DB 연동 완료(5.26.)

□ 해외 현지 정보 수집 체계 강화를 위한 해외정보리포터 확대

- FTA 체결국가, 무역교류가 많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
 - * ('13)25개국 48명 → ('14) 32개국 82명 → ('15)43개국 112명
- 정보수집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정보리포터 대상 교육 실시
 - * (1차)미국 등 17개국 26명(2.12~13), (2차) 미국 등 28개국 60명(8.31~9.1)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식품위해정보 조치율 50%
- ◇ 추진실적 : 식품위해정보 조치율 53.2% 달성
 - * 계산식: 조치정보(82건) / 주요정보(154건) x 100 = 53.2%

□ 성과

- 해외식품안전 주요정보 154건을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수입검사강화,

국내유통제품 수거검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조치(82건)를 함

○ 해외 현지정보 확대 수집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식의약품 등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강화

- 총749건의 해외 심층정보 수집·제공(수시정보 309건 제외)

○ 해외정보리포터의 식의약품 관련 전문화 교육 통한 역량 강화

-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심층정보를 확대하여 조사·수집·제공

* 해당정보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선제적인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심층정보 조사·제공 건수: 211건('13) → 312건('14) → 749건('15)

□ 문제점

○ 최근 이슈정보가 활발히 제시되는 SNS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없어 식의약품안전이슈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미흡

□ 개선대책

○ 최근 이슈정보가 활발히 제시되는 SNS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5. 향후 추진계획

○ SNS 등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트렌드 등을 분석(기법 개발) 하고 관계부서 등에 제공

[1-3-3]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①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백용 사무관, T.051-400-564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해 신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수산식품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수산식품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수산물 수입검역 전자문서 유통망 개선

- 수산물검역을 위한 관세청간 문서유통시스템 구조개선을 통해 수산물검역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외래 수산질병 유입 차단

2. 추진계획

□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위한 의견수렴('15.5~)

-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콘텐츠,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점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15.5~)
- 제출의견 검토 후 기능개선 계획을 수립, 월별 조치결과 보고('15.7~)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 관련 시스템 기반인프라 확충('15.6~)

- 백본스위치, DB접근제어 등 통신, 보안장비 확충

□ 수산물 수입검역 전자문서유통망 개선('15.2~)

- 문서유통, 검역시스템 내부개편작업('15.2~6)
- 수산물품질관리원↔관세청 간 문서유통 모의테스트('15.6~)

3. 추진실적

□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위한 의견수렴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 및 확충계획(안) 검토실시(3.30)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 및 확충사업 착수보고회(7.3)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메인페이지 리뉴얼(9.18)
- 2015년 정보시스템 이용현황 설문조사(9.21~10.8)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 관련 시스템 기반인프라 확충('15.6~)

- 2015년도 정보화 장비 도입 설치 사업 추진(11.10)
- 2015년도 정보화 장비 도입 설치 사업 착수보고회(12.4)
- 백본스위치, DB접근제어 등 장비 도입(12월 완료 예정)

□ 수산물 수입검역 전자문서유통망 개선('15.2~)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협의회 참석(8.31)
- 추가 자료 연계 등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협의회(9.1)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 모듈 설치 및 테스트(8.11~14)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기관 ID(관세청) 변경 조치(10.13~10.21)
- 세관장확인기관 문서유통시스템 재설치 및 테스트(12.7~12.11)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안전정보망 기능 개선율 70%
- ◇ 추진실적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과 연계하여 수산물안전정보망 기능 개선율은 130%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

□ 성과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 연계

- 계획대비 **130% 달성**(‘15년도 6종 이상 연계 계획 중 8종 연계 완료)

구분	수요정보명	반영시기	반영여부
연계정보	식품공전	'15.12	완료
	식품첨가물공전		
	식자재공급업체 정보		
	전자통관 수입정보		
	품목코드		
	시험항목코드		
추가연계정보	식품접객업정보		
	행정처분기본/변경/이력정보		

-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필요한 연계정보를 점진적으로 추가 가능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서비스에 차질 없이 연계 가능
- 백본 이중화 등을 토해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
- DB 접근제어 등 보안장비 추가를 통한 정보보안 강화

□ 문제점

-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사용자 OS 및 브라우저 지원이 어렵고, 기존 시스템에 액티브엑스(ActiveX) 제거 및 대체 기술을 적용불가
 - * 1차 구축('06.7) : 수산물안전성조사시스템, 수산물표시단속시스템 등
 - * 2차 구축('07.6) : 수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 * 3차 구축('08.2) : 검역관리시스템 및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서버 이중화도 함께 진행 필요
- 부처별(기관별) 연계시스템 정보관리 필요

□ 개선대책

- 발전하는 IT 기술에 맞추고, 액티브엑스(ActiveX) 제거, 브라우저 호환성에 부합하는 표준 시스템으로 재구축 필요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이중화 구성 방안 마련
- 부처별(기관별) 연계시스템 정보관리 방안 마련

5.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 각 시스템별 표준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16.5~10)
-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등을 위한 의견 수렴('16.11)

□ 부처(기관)별 연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의 원활한 연계 서비스 운영('16.2)
- 부처별(기관별) 연계시스템 정보관리 등록/수정/삭제 기능구축('16.8)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1-4-1] 연구인력 전문성 강화
① 분석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이민용 사무관, T.054-429-4138)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유해물질별 정도관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 공인기관에 위탁 실시
- 선진 분석기술 및 제도 습득 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실시

2. 추진계획

- 안전성 분석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2~12월)
- 국외 선진 분석기관 등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2~12월)
 - * 분석법 연수, 국제회의, 해외학회 등
- 분석숙련도 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3. 추진실적

- 안전성 분석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 전문적인 분석기술이 요구되는 유해물질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19개 과정 177명)
- 선진 분석기술 및 제도 습득을 위한 해외 연수 실시
 - 해외 분석법 연수 및 국제학회 등 참석(10회 24명)
- 안전성검사 및 검정기관 대상 유해물질별 정도관리
 -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정도관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탁 관리하였으며, 참여기관은 잔류농약 분야 40개 기관과 중금속 분야 25개 기관이 참여하여 모두 “양호” 판정

□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 분석실 외부공인*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 농산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토양 중 중금속 분야에 10개 분석실이 참여하여 모두 “양호” 판정

* 외부 공인기관 : FAPAS(농산물 중 농약, 중금속), FEPAS(미생물), ERA(토양 중금속)

*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 영국 식품환경연구청(The Food and Environment Research Agency : FEPA) 산하 식품 중 화학 분야(잔류농약, 중금속) 숙련도 프로그램
- 농식품 중 잔류농약, 중금속 분야 참여

*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 PT(Proficiency Testing)

- 미국에 소재하며 환경분야(토양, 수질, 공기 등)의 CRM 생산과 숙련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
- 토양 중 중금속 분야 참여

* FEPAS(Food Examination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 영국 식품환경연구청(The Food and Environment Research Agency : FEPA) 산하 식품 중 미생물 분야 숙련도 프로그램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국외연수 이수 인원 20명
- ◇ 추진실적 : 24명(목표대비 120%)

□ 성과

- 국내 민간 전문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를 통한 분석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 분석역량 강화
- 농관원 분석실과 민간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유해물질 정도관리를 통해 분석결과의 신뢰 증대

□ 문제점

- 일부 기관에서 외부공인 숙련도 프로그램과 농관원 주관 숙련도 평가에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어 업무부담 가중

□ 개선대책

- 분석실 정도관리 다양성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외부공인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적합(양호) 판정을 받은 경우 농관원 주관 정도관리 참여를 제외하는 방안 검토

5. 향후 추진계획

- 안전성 분석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

[1-4-1]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② 농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담당자 :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박병준 연구관, T. 063-238-3238)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 잔류농약 신속정밀 분석법 개발 및 노출량 평가
 - 신규등록농약 신속 분석법 개발 보급(농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소면적 재배 및 수출유망 작물 적용 농약 직권등록 : 40품목 이상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기술 확산 및 수입국 기준 대응 : 8국가 28작물
- 농산물 및 작물재배환경 중 중금속등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술 개발
 - 쌀 중 비소 흡수특성 규명 및 저감화 기술개발 : 2건
 - 재배환경 중 중금속의 관리기준(안) 설정 방법개발 : 생물농축계수 등
 -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 : 2종
-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농약의 농작업자 위해성 평가기술 개선
 - 농약의 급만성 노출 예측을 위한 생체바이오마커 개발

2. 추진계획

- 신규등록농약 신속 분석법 개발 보급 (1~12월)
- 소면적 재배 및 수출유망 작물 적용 농약 직권등록(1~12월)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기술 확산 및 수입국 기준 대응(1~12월)

- 쌀 중 비소 흡수특성 규명 및 저감화 기술개발(1~12월)
- 재배환경 중 중금속의 관리기준(안) 설정 방법개발 (1~12월)
-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1~12월)

3. 추진실적

- 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 잔류농약 신속정밀 분석법 개발 및 노출량 평가
 - 토양 중 124종 잔류농약 동시분석법 개발
 - 잔류농약 분석 검증용 표준분석시료 개발: 배추(농약 30종)
 - 신규등록농약 신속 분석법 개발 보급(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등)
 - 국내최초 등록농약 잔류분석법 개발 : 만데스트로빈 등 2종
 - 소면적 재배 및 수출유망 작물 적용 농약 직권등록
 - ('12) 196품목 632병해충 → ('15) 240, 852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기술 확산 및 수입국 기준 대응
 -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보급: 9개국 28작물(12,188품목)
 - 해외잔류기준 설정 : 3농약(일본 고추, 대만 사과, 멜론)
 - ☞ 대만 수출사과 위반농약 기준설정 완료(15종): 전수검사 해제
- 농산물 및 작물재배환경 중 중금속등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술 개발
 - 비소 흡수 저감화 기술개발 : 개량제 처리, 물관리 등 2건
 - 근채류 중금속 기준 재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자료 정책제안(식약처)
 -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 피마자 등 2종
-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농약의 농작업자 위해성 평가기술 개선
 - 농약노출량 측정법 확립 : (현)패치법 →(개선)전신노출시험법

- 농약 피부흡수율 평가법과 측정법 개발(기준/지침)
- 농약노출량 산정모델 개발 : 포도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농산물 안전성 및 작물보호 향상지수 6.64%
- ◇ 추진실적 : 농산물 안전성 및 작물보호 향상지수 6.69%

* 성과지표 산출근거

(정의) 농산물 안전성 및 작물보호분야의 정책지원 및 개발된 기술의 농업현장에 제공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산식) 농산물 안전성 및 작물보호 향상 지수

= 기초기반지수+현장실용화지수+안전관리지수

* 기초기반지수=[(특허등록 건수×2)+특허출원 건수(SCI논문 건수×2)+비SC논문 건수]÷연구비(억원)

* 현장실용화지수=(정책제안제출 건수+영농활용제출 건수+제도개선 건수)÷연구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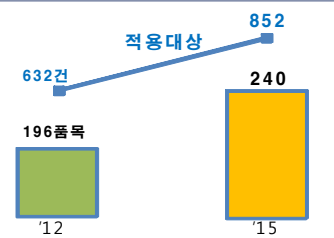
* 안전관리지수=[(농자재평가 건수+기준설정 건수)×1/4]÷연구비(억원)

□ 성과

- 소면적 재배작물 직권등록 농약 확대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 향상 및 소비자 건강 보호에 기여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직권등록 확대 >

- ◇ 적용 병해충 : 632 → 852 (34% 증가)
- ◇ 잔류농약 부적합률 : ('13) 1.57% → ('14) 1.38%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7)
- 잔류농약 부적합률 감소로 국민건강보호 기대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성과지표 변경) 기존의 성과지표는 농산물 안전성과 병·해충 및 잡초 방제 관리기술이 병합된 작물보호분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지표와 부적합 부분이 있어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지표로 변경
- 안전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확대

- 농산물 및 작물재배환경 중 농약의 안전관리기술 개발 강화
 - 살포농약의 한국형 농약 노출량 산정모델 개발 필요
- 유기농업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원료의 지표성분 설정과 관리기술 개발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 및 현장기술지원
-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농약 안전관리기술 확산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대상으로 분석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 2016년도 농약직권등록 시험 계획 수립(2월): 약효·약해 및 잔류분야

[1-4-1]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③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안전성 연구 강화

(담당자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재기 연구관, T. 063-238-3391)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생물적 위해요소 관리기술 개발

-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식중독균·곰팡이독소 오염실태 조사
- 환경 친화적인 식중독균·곰팡이독소 제어기술 개발
- 농산물 중 식중독균·곰팡이독소 신속검출 및 진단기술 개발

□ GAP 활성화를 위한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및 보급

- GAP 농업인을 위한 작물별 실천 매뉴얼 개발
- 농업인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GAP 실천수준 자율점검표 개발
- 농산물 위생관리 향상 수확후처리시설 모델 개발

2. 추진계획

- 농산물의 식중독균·곰팡이독소 오염실태 조사(1~12월)
- 환경 친화적 식중독균 제어물질 선발(1~9월) 및 효과 검증(10~12월)
- 곰팡이독소 생장저해/분해 미생물 선발(1~9월) 및 효과 검증(10~12월)
- 작물별 GAP 실천 매뉴얼(4~9월) 및 표준해설서(7~11월) 개발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관리지침 개발(10~12월)

3. 추진실적

- 생산단계 농산물의 식중독균·곰팡이독소의 오염실태 조사를 통한 과학적 위해성평가기반 마련(1~12월)
 - 농산물중 곰팡이독소 오염실태조사 : 곡류, 두류, 과채류
 - 농산물 생산단계 식중독균 오염실태조사 : 과수류, 곡류, 버섯류 등 8품목
 - 첨단기술 이용 식중독 미생물 친환경 제어제 개발
 -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제어용 박테리오파지 선발 : 7종
 - 황색포도상구균 제어용 박테리오신 개발 : S. epidermis R0002(특허)
 - 곰팡이독소 진단 및 생산억제 기술 개발
 - 세계최초 후자리움균 11종 동시진단 검출프라이머 개발 : 2종(특허)
 - 후자리움균 생장제어 우수 미생물 개발 : 1종(특허)
 - GAP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천기술 개발 및 매뉴얼 보급
 - 작물별 GAP 실천 매뉴얼 「GAP 생산가이드」 20종(딸기 등) 발간
 - GAP 실천수준 자율점검 표준해설서 「GAP 체크리스트」 11종 개발
 - 농산물 위생관리 향상 수확후 처리시설 모델 개발 : 오디 등 6종(누계)
 - 농업현장 사용가능 키트형 식중독세균 5종 동시검출기술 개발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누적) : 유해미생물·독소 동시진단법 개발 5, 유해미생물·독소 위해성평가 3, 유해미생물 제어 유전자원 탐색 4, 유해미생물 제어제 개발 3, GAP 현장실천 매뉴얼개발 20, 국외연수 인원 10
- ◇ 추진실적('15년 누적) : 유해미생물·독소 동시진단법 개발 5건, 유해미생물·독소 위해성평가 3건, 유해미생물 제어 유전자원 탐색 4건, 유해미생물 제어제 개발 3건, GAP 현장실천 매뉴얼 20건, 국외연수 인원 10명

□ 성과

-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GAP 활성화 기여
 - 첨단기술 이용 식중독 미생물 친환경 제어제 개발
 - GAP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천기술 개발 및 매뉴얼 보급
 - 곰팡이독소 진단 및 생산억제 기술 개발
 - 첨단기술 이용 식중독 미생물 친환경 제어제 개발 등

□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작목별 GAP 실천기술 종합 패키지화 지연
 - 종합화 대상작목이 많고, 작목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에 어려움으로 핵심요소 기술의 작목별 종합화에 장기간 소요
- GAP 활성화를 위한 작목별 실천 패키지 기술 개발·보급 강화
- 현행 성과지표 '유해미생물·독소 동시진단법 개발'은 동시진단 이외 최근 개발된 첨단기법이 포함되도록 '유해미생물·독소 진단법 개발'로 변경 필요
- 현행 성과지표 '유해미생물·독소 위해성평가'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정량적 산출이 어려움 ⇒ 위해성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대상 유해생물로 변경이 필요
- 현행 성과지표 '유해미생물 제어 유전자원 탐색'은 탐색대상의 범위가 넓고 탐색건수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유전자원 탐색의 최종목표인 '유해미생물 제어제 개발'로 성과지표 통합 필요
- 현행 성과지표 '국외연수 인원'은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안전성 연구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성과지표에서 삭제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생물적 위해요소 관리기술 개발 강화
 - 노지배추 주산지 유해미생물 오염실태 조사: 5지역, 6종 세균
 - 식중독균 모니터링을 위한 엽채류 시료량 등 전처리법 최적화: 식중독균 2종
 - 식중독세균 친환경 제어제 활성증진기술 개발 박테리오신 1종, 박테리오파지 2종
 - 곡류 후자리움독소 생장저해/분해 우수 미생물 개발: 2종
- GAP 활성화를 위한 작물별 실천기술 패키지 개발·보급 강화
 - 초보자를 위한 『GAP 생산가이드』 발간 : 파, 마늘 등 5종
 - * ('15) 20작물 → ('16) 25 → ('17) 30 (누계)
 - GAP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농업현장중심 연구(On-Farm Research) 확대
 - * ('15) 2품목 : 새싹채소, 오디 → ('16) 5품목(배추, 복분자, 블루베리 추가)
 - 생산 및 수확 후 관리단계 농산물의 위생관리지침 개발: 2종
 - * ('15) 6품목 (오디) → ('16) 8 (복분자, 블루베리) ⇒ ('18) 10 (새싹채소, 배추) (누계)

[1-4-2]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

①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연구관 이제봉 T: 063-238-337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국제적 조화를 위한 농약 시험과 평가기준 개선
- 선진국 수준으로 농약에 대한 위해성평가 강화
- 등록신청 농약 및 유통 농약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

2. 추진계획

- 국제적 조화를 위한 농약 시험과 평가기준 개선(3~12월)
 - 작물잔류성시험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포장 수 확대(1포장 → 2이상)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의 약효·약해평가를 위한 작물그룹화 평가
- 선진국 수준으로 농약에 대한 위해성평가 강화(3~12월)
 - 농약 부자재의 안전관리기준 개정 추진 : 부자재 안전관리 체계
 - 신규 및 기등록 농약 안전기준(안) 마련 : ADI, AOEL, 안전사용기준
- 등록신청 농약 및 유통 농약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3~12월)
 - 신규 원제 및 변경등록 신청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 등록 후 10년 경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 80품목('14년 78품목)

3. 추진실적

- 국제적 조화를 위한 농약 시험과 평가기준 개선

- 작물잔류성시험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포장 수 확대
 -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 14] 14-1-3-1 작물별 시험포장수 및 분석대상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의 약효·약해평가를 위한 작물그룹화 평가
 - * 작물그룹별 대표작물선정 : 배추과(양배추/엇갈이배추), 국화과(상추), 백합과(부추), 명아주과(시금치), 박과(단호박)

□ 선진국 수준으로 농약에 대한 위해성평가 강화

- 농약 부자재의 안전관리기준 개정 추진 : 부자재 안전관리 체계
 - * 미국 환경보호청 등 선진국 농약 부자재의 안전관리기준 및 관리현황 분석 : 미국의 경우 식용 및 비식용 농약에 사용가능한 부자재 1,652종 관리
- 신규 및 기등록 농약 안전기준(안) 마련 : 일일섭취허용량(ADI), 농작업자 노출허용량(AOEL),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
 - * ADI 및 AOEL : 이소페타미드, 옥사티아피플로린 등 신규 농약 원제 8종
 - *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 아바멕틴·클로르페니피르 액상수화제의 딸기에 대한 안전 사용기준 설정 등 120품목 150건

□ 등록신청 농약 및 유통 농약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

- 신규 원제 및 변경등록 신청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 * 농약원제 6성분, 신규품목 112, 변경등록 400품목 등 평가
- 등록 후 10년 경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 80품목
 - 가스가마이신 입상수화제 등 80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
 - * 등록 후 10년 경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14) : 78품목

3.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건수 400건(누적), 원제 GHS 설정건수 15건(누적)
- ◇ 추진실적 : ① 등록신청 농약의 안전성종합평가 112건('15)→총 412건(103%)
 ② 농약원제 GHS 설정건수 : 6성분('15) → 총 16건(107%)

□ 성과

- 작물잔류성시험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포장 수 확대를 통한 작물 잔류시험의 신뢰성 확보 및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 준수를 위한 기반 조성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의 약효·약해평가를 위한 작물그룹화로 경비, 시간, 인력 등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 증대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성과지표가 농약원제에 대한 지표로 농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농약제품의 지표로 대체 필요
 -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19조)’은 기존 지표인 “원제 GHS 설정” 지표보다 농약등록관리의 종합지표로서 농산물 안전성 및 농업인 건강보호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음
- 농약 부자재의 안전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부자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근거 등 지침 제도화가 미흡
- 선진국 사용 농약 부제의 독성, 이화학성 등 DB화, 관리기준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 모색

5. 향후 추진계획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의 약효·약해평가를 위한 작물그룹 고시안 작성 및 제안
- 농약 부자재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 수행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① 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정지윤연구관, T.043-719-4203)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및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생충, 식중독균, 방사능 및 어패류 독소 등 분석법 확립 및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방안 연구
- 수산물의 기준규격 현대화,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

2. 추진계획

□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연구

- 포지티브리스트대비 수산물 중 잔류물질 동시시험법 개발(11월)
- 축산물 중 농약 대사산물 시험법 개발 연구(11월)
- 식육 중 특소포자충 검출법 확립 및 축수산물 중 방사능 실태조사(12월)

□ 축수산물의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

- 해조류의 요오드 및 동물성 수산물의 일반규격 관리 국제화 연구(11월)
- 민물새우류 중 자연유래 세미카바자이드 실태조사(11월)
- 가공치즈 대장균군 기준규격 개선연구 및 조제유류 영양성분 시험법 확립(12월)

3. 추진실적

□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연구

- 수산물 중 잔류동물용의약품(50종) 및 잔류농약(20종) 동시시험법 개발(11월)

- * (잔류동물용의약품) 벤질페니실린, 사라플록사신 등 잔류동물용의약품 50종
- * (잔류농약) 알드린, 엔드린 등 20종
- 허가되어 있으나 기준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 확립(11월)
 - * 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 시험법 개발
- 축산물 중 포레이트 등 3종 농약과 그 대사산물 시험법 개발(11월)
 - * 메소밀, 메티오카브, 포레이트와 그 대사산물
- 식육 중 특소포자충 검출법 확립 및 축수산물 중 방사능 실태조사(12월)
 - * real-time PCR을 이용한 특소포자충 검사법 개발 및 냉장육 모니터링(210건)
 - * 알파핵종(플루토늄), 베타핵종(스트론튬) 시험법 확립 및 모니터링(42건)

□ 축수산물의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

- 해조류의 요오드 및 동물성 수산물의 일반규격 관리 방안 마련(11월)
 - * 해조류 중 요오드 분석법 개발 및 연령별, 특정집단별(임산부, 환자) 섭취가이드 제안
 - * 건포류·건멸치의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산가, 과산화물가, 수분(수분활성) 기준(안) 마련
- 민물새우류 중 자연유래 세미카바자이드(SEM) 실태조사(11월)
 - * 약물 투여 후 날짜 경과에 따른 잔류수준 비교검토
 - * 실제 투약에 의해 조직과 결합되어 있는 세미카바자이드의 검사법 확립
- 가공치즈 대장균군 기준규격 개선연구 및 조제유류 영양성분 시험법 확립(12월)
 - * 가공치즈의 대장균군 정량적 기준(안) 및 조제유류의 비오틴 시험법(안) 마련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정책반영율 64%
◇ 추진실적 : 정책반영율 89.5%(고시반영 17건/제안 19건)
* 산출근거
(전년도·전전년도 고시제안 성과 중)
$= \frac{\text{올해·전년도 고시채택 수}}{\text{전년도·전전년도 고시제안 수}} \times 100 = \frac{17\text{건}}{19\text{건}} \times 100$

□ 성과

- 축수산물 신속 정확한 시험법 개발을 통한 위해요소 검사강화
 -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미설정 품목에 대한 시험법 마련 신속 추진
 - * 알트레노제스트 등 기존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26종 시험법 (행정예고 완료)
- 식품과 축수산물관련 기준·규격 조화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
 - * 가공치즈의 대장균군 정량기준 및 조제유류 중 비오틴 규격 조화
 - * 「식품공전」과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일원화(9종)
- 정책반영율(89.5%, 고시반영 17건/제안 19건)
 - 치즈류에서의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 및 시험법 개정안 7건/8건
 - 록시스로마이신 등 잔류동물용의약품 20종 시험법 신설안 6건/ 6건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45종 동시시험법 등 개정안 4건/5건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축수산물 위해요소 검사강화를 위한 시험법 개발 지속 추진(지속)
- 식품공전과 축수산물관련 공전간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 조화(지속)
- 수산물 분류체계 확립 및 일반성분과 위해요소 기준규격(안) 제안(지속)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② 수산물의 과학적·효율적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이정선 연구관, T.051-400-565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항생제 사용 증가,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우려 증가로 정밀 분석 체계 강화 필요
- 연근해의 지속적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위해요소 오염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밀분석 전문성 제고 필요
 - 수산물 종별에 대한 주요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 신종 유해물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분석능력 제고 필요

2. 추진계획

- 정밀검사 장비 도입 및 숙련도 평가 실시(연중)
 - (장비) 액체질량분석기 등 36종 66대
 - (숙련도) 3개 분야 10개 항목(검역 2, 금지물질 2, 미생물 2, 중금속 3, 항생물질 1)
- 전문 정밀검사 인력 양성 교육 실시(연중)
 - 중금속, 항생제 등 유해물질 및 위생 취약분야
 - 전문 능력 고도화 및 심화된 분석기술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

3. 추진실적

- 정밀검사 장비 도입 및 숙련도 평가
 - (장비) 액체질량분석기 등 총 36종 81대 도입 완료

- (숙련도) 5개 분야 13개 항목(검역 4, 금지물질 2, 미생물 2, 중금속 4, 항생물질 1)

□ 전문 정밀검사 인력 양성 교육

- (자체) 4개 분야 15명, (위탁) 3개 분야 7명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정밀검사 숙련도 평가 5개 분야, 전문인력 교육이수 20명
- ◇ 추진실적 : (숙련도) 정밀검사 숙련도 5개분야 12개 항목 평가 완료, (교육 이수) 전문인력 22명 교육을 이수하여 목표대비 110% 달성

□ 성과

-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검사 체계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 추진 계획 목표를 모두 달성(장비 122%, 숙련도 120%)
 - 정밀 검역·검사에 대한 정확성 및 분석능력확보를 5개 분야(검역, 금지물질, 미생물, 중금속, 항생물질) 12개 항목 숙련도 평가
- 분석처리절차의 표준화 및 전문 분석인력 양성 등을 위한 자체 및 위탁교육 등 7개 분야(항생물질, 중금속,천일염, 노로바이러스, 세균, 방사능) 22명 교육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첨단 분석장비 도입 및 전문 분석인력 양성 도모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③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 연구·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손광태 연구관, T.051-720-262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연근해의 지속적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소 출현 가능성 상존

- 수산물 종별에 대한 주요 위해요소를 파악·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

2. 추진계획

□ 생산단계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15.3~'16.2)

-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56개소)의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E. coli*) 조사
 - 주요 패류생산해역(8개소)의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노로바이러스, 패류독소,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
- * 이화학적 위해요소 : 항생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유기염소계농약, 다이옥신

□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에 대한 노출량 평가('15.3~'12)

-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의 인체 위해도 파악을 위한 노출량 평가
 - 수산물 중 유기염소계 농약 노출량 평가를 위한 분석법 개선

□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7개소) 위생조사('15.1~'12)

-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해수 및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및 병원성세균(살모넬라, 이질균) 조사

-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및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

* 조사결과는 수산물 안전정보 시스템(수과원)에 전산 입력·관리

3. 추진실적

□ 생산단계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15.3~'16.2)

-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56개소)의 패류(112점)에 대한 위생지표세균(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E. coli) 조사 실시(8회)
 - 주요 패류생산해역(8개소)의 패류(30점)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노로바이러스, 패류독소,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 실시(8회)
- * 이화학적 위해요소 : 항생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유기염소계농약, 다이옥신

□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에 대한 노출량 평가('15.3~'12)

-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의 인체 위해도 파악을 위한 노출량 평가
 - 수산물 중 유기염소계 농약 노출량 평가를 위한 분석법 개선 완료('15.12)

□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7개소) 위생조사('15.1~'12)

-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해수(294점) 및 패류(32점)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및 병원성세균(살모넬라, 이질균) 조사 실시(12회)
-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32점) 및 이화학적 위해요소(14점) 조사 실시(12회)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위해성평가 모니터링 1,100건
 - ◇ 추진실적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1,500건 실시, 목표대비 136% 초과 달성
- * 매년 패류 생산해역의 위생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

□ 성과

-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 전국 연안 및 주요 패류생산해역 패류의 위생지표세균 : 600건
 - * 노로바이러스(200건), 패류독소(230건), 항생제(100건), 다환방향족탄화수소(22건), 유기염소계농약(22건), 다이옥신(16건), 중금속(24건)
-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의 인체 위해도 파악을 위한 노출량 평가
 - 패류의 유기염소계농약(17종) 동시분석법 개발
 - * 패류시료 전처리법 개선 및 기기분석(GC-MS) 최적조건 확립
-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해수 및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및 병원성세균 조사
 - 패류의 병원성세균(살모넬라, 이질균) : 306건
-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및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 실시
 - 마비성패독(500건), 기억상실성패독(160건), 설사성패독(240건)
 - 조사결과는 수산물 안전정보 시스템(수과원)에 전산 입력 완료

□ 문제점

-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 조사가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 인력과 예산으로는 조사 빈도 및 항목의 확대 곤란

□ 개선대책

- 연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 빈도 및 항목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 추진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생산단계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의 위생조사 지속 추진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④ 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김풍호 연구관, T.051-720-263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의 지속적 발생

- 감염경로 : 분변에 오염된 일반식품 및 음용수 섭취
 -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13) 43건/1,606명 → ('14) 46건/739명
 - * 패류매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13) 2건/31명 감염 → ('14) 1건/27명
- 국내 생산단계 및 유통 굴에서도 노로바이러스 검출

2. 추진계획

□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조사 강화(연중)

-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따라 굴 생산시기 남해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실시
 - * 5월~10월 : 남해안 패류양식장 15개소(월 1회 조사)
 - * 11월~익년 4월(굴 생산시기) : 격주조사, 검출시 매주검사
 - * 전국연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월 1회, 생산시기)

□ 전국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패류독소 발생실태 파악(연중)

- 조사계획에 따라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 * 월 2회 이상 연중 모니터링(1~2월, 7~12월)
 - * 미검출 시 격주 1회, 검출 시 주 1회, 기준초과 시 주 2회(3~6월)
- 패독 발생 상황 홈페이지(수과원) 게재 및 보도자료 제공
- 패류독소 상시 감시체제 가동 및 피해대책반 운영

3. 추진실적

□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조사 강화(연중)

-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의거 굴 생산시기 남해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실시
 - 남해안 패류양식장 24개소의 패류 356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30회 실시

□ 전국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패류독소 발생실태 파악(연중)

-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실시
 - 동·서·남해안 연안 패류양식장 97개소(정기조사 55개소, 확대조사 42개소)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39회 실시(패류 2,150건)

4. 자체평가

□ 성과

-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조사 강화 및 결과 제공
 - 해수부,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노로바이러스 조사결과 제공(39회)
 - 생산자단체(굴수협) 홈페이지에 조사결과 공개를 통한 생산관리 유도
- 패독 발생 상황 홈페이지(수과원) 게재 및 보도자료 제공
 - * 패류독소 속보(39회), 보도자료(3회), 취재협조(1건)
- 패류독소 상시 감시체제 가동(패독속보 및 앱) 및 피해대책반 운영(패독검출시기)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 강화(계속)
-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발생실태 파악(계속)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2-1-1]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속 정비

① 식품안전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인성 사무관, T.043-719-1718)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국내 원전사고 발생, 식품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2. 추진계획

- 신(新) 사고유형 대비 위기대응 체계 구축(12월)
 - 새로운 위기유형 대비 대응매뉴얼 개발 정책기반연구 추진(2~8월)
 - * 위기 단계별 조치사항, 위기대응 시나리오, 소통전략 및 메시지 등 개발
 - 원전사고(방사능 누출) 분야 위기대응 국제심포지움 개최(4월)
 - * 원전사고 시 식품안전관리 긴급대응 사례 등에 관한 정보공유
 - 원전사고(방사능 누출) 및 식품테러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12월)
- 식품사고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6월)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9월)
 -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8월)
 - 위기대응 매뉴얼 포켓북 및 해설서 제작·배포(11월)

3. 추진실적

□ 새로운 사고 유형에 대비한 신규 매뉴얼 마련

- “새로운 사고 유형의 위기대응 체계 개발 연구” 정책연구 추진(3~9월)
 - * 국내 방사능 누출사고 및 식품 테러 대비 우리 처 조치사항 등
- 「제2차 식·의약품 위기대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9월)
 - * 식·의약품 등 국내·외 체계 및 역량강화 지식·정보 공유
- 국내 방사능 누출 사고 대비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정(12월)
 - * 관련부서 의견수렴(10,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완료(12월)
- 식품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초안 마련(12월)
 - * 식품테러에 대비하여 우리 처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등 규정

□ 식품사고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 정부직제 개편사항 반영 등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6월)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개정(6월)
 - *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완료(9월)
- 위기대응 매뉴얼 활용성 제고를 위한 포켓북 책자 제작·배포(12월)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및 운영 3회
- ◇ 추진실적 :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및 운영 4회

□ 성과

- 새로운 사고 유형에 대비한 신규 매뉴얼 개발(2회)
 - * 국내 방사능 누출 사고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제정(1건)
 - * 식품테러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초안 마련(1건)
- 현행 위기대응 매뉴얼(식품 및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개정(2회)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식품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적 정비(~'16.6월)
 - * 위해정보 등급 통일 등 일관성 확보, 대응수칙 마련 등
- 제3차 「식의약 위기대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16.9월)
- 식의약 사고 대비 지자체 위기대응 가이드라인 개발('16.12월)
- '나라e음' 활용, 위기대응 긴급연락체계 구축('16.1월)

[2-1-2]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① 위기대응 역량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인성 사무관, T.043-719-1718)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위기대응의 일상화 필요
 - 위기대응 실무자 교육, 지방청 순회교육 및 전문가 양성 교육
 - 정부, 지자체, 산업계 참여하는 모의훈련 실시

2. 추진계획

- 식품 관련 공무원 대상 정기·심화 위기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위기대응 실무자교육(5월) 및 지방청 대상 위기대응 순회교육(9월)
 - 위기대응 교육 및 역량평가 프로그램 개발 추진(2월~12월)
 - * 「위기대응 교육·훈련 및 역량평가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10월)
 - 식품분야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7월) 및 개선방안 마련(8월)

3. 추진실적

- 본부·지방청·지자체 식품 위기대응 담당자 역량강화 실무과정 교육(5월)
- 본부·지방청·유관기관 참여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5월), 개선방안 마련 등 결과보고(6월)
 - * 식품사고(식중독) 등 대비 위기대응 모의훈련
- 지방청 직원 대상 국가위기관리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순회교육(11월)
- “위기대응 교육·훈련 및 역량평가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추진(3~11월)

□ 식의약 분야 위기대응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e-러닝) 콘텐츠(안) 마련(12월)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위기대응 교육 이수자 200명

◇ 추진실적 : 본부·지방청·지자체 등 위기대응 교육훈련 이수자 264명

□ 성과

- 본부·지방청·지자체 대상 실무자 교육 및 지방청 순회교육(208명) 실시, 안전한국훈련(56명) 개최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위기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본부·지방청·유관기관) 200명 이상 참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강의식 집합교육은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역량 강화에 한계

- '15년 성과지표인 '위기대응 교육이수자(명)'를 '모의훈련 횟수'로 변경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훈련 실시 필요

* 기존의 본부·지방청·지자체 대상 실무자급 교육은 지속 실시 예정

5. 향후 추진계획

- 'e-러닝' 콘텐츠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학습 과정 등재 추진('16.2월)
- 식약처·지자체 공무원 대상 실습·토론 중심의 참여형 교육 실시('16.4-10월)
- 식약처·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16.5월)
- 산업체 대상 위기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6.11월)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2-2-1]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이우영 연구관, T.043-719-235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문귀임 연구관, T.043-719-450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승인 후 10년 경과 품목 안전성 재심사 실시

2. 추진계획

-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기준 마련(11월)
- 승인 후 10년 경과 품목(유전자변형 면화) 등 안전성 재심사 실시(연중)
- 신규 승인 심사 중인 유전자변형식품(콩 3, 옥수수 3품목) 검사법 확립(연중)
 -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유래 발현 단백질 4종에 대한 알레르기 안전성 검증(12월)

3. 추진실적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12.30)
 - 셀프클로닝 규정 등 심사대상 명확화 및 최종 제품내 유전자변형 미생물과 유전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제출자료 간소화 등 심사 항목 정비
- 승인 후 10년 경과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 완료(8.26)
 - 옥수수 1품목, 면화 1품목 등 2품목 승인

-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유래 발현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안전성 검증 완료(11.30)
 - AAD-12(제초제내성), CspB(가뭄저항성), Pj.D6D, NC.Fad3(영양성 강화) 등 단백질 4종에 대한 알레르기성 여부 검증
- 신규 승인 심사 중인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사법 확립 완료
 - 콩 3품목, 옥수수 3품목 등 6품목의 검사법 확립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GMO 발현 단백질 알레르기 검증 4건
- ◇ 추진실적 : GMO 발현 단백질 알레르기 검증 4건 완료

□ 성과

-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표준화된 심사체계 확립
- 승인 후 10년 경과 품목에 대해 최신 자료를 통한 안전성 재심사 및 알레르기 안전성 검증으로 소비자 안심 확보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10년 경과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 및 알레르기 안전성 검증 지속('16년)
- 신규 승인 심사중인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법 확립 지속('16년)

[2-2-1]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②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김광수 사무관 T.043-719-2158)

과제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과제개요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개선

2. 추진계획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및 유통관리

- 올바른 GMO 표시관련 제도 등 개선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지속 운영(연중)
- 과학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GMO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내에서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 확대
- 표시기준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개선(하반기)
-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표시 사후관리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1월)
- 유전자변형식품등 취급업체 분기별 지도·점검(3,6,9,12월)

3. 추진실적

□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기준 개선

- GMO 표시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모를 위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운영('15.1~ , 4회)
 - GMO 표시 확대, 영양성분 등이 차이나는 GMO 표시, Non-GMO

표시 관련 논의 등

* 소비자단체(8), 업계(8), 학계 등 기타(4) 등 총 20명으로 구성, 월 1회 개최

-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과학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내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 확대**

* 「식품위생법」 개정('15.12월) 및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기준」 개정(10월)

□ 유전자변형식품등 유통관리

-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표시 사후관리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1.19-20)

- 유전자변형식품 등 취급업체 분기별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식품제조업체 2,305개소 점검, 수거검사 424건, 부적합 5건(미표시)

- 사료공장 등 2,783개소 점검, 수거검사 665건, 부적합 0건

- 사후관리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책자발간 및 교육(6~7월)

* GMO 안전관리 이해, 식품용 LMO 안전관리 조사 이해, 구분유통관리 이해, LMO 안전관리방안 표준 기준서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법령(고시) 개정

◇ 추진실적 : 「식품위생법」 개정('15.12월) 및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기준」 개정계획('16.10월)

*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과학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내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 확대

□ 성과

- 지속적인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으로 소비자,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GMO 표시대상 확대

- GMO 우리말을 '유전자변형'으로 법률간 용어 통일하는 등 소비자 및 영업자의 혼란 및 불편 해소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

□ 문제점

- GMO 표시제도 개선 관련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 당사자 간 이견 존재하여 지속적인 협의 필요

□ 개선대책

- GMO 표시관련 제도 등 개선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지속 운영

5. 향후 추진계획

- GMO 원료 사용 식품 표시대상 확대를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기준 고시 개정
- 유전자변형식품등 취급업체 분기별 지도·점검
- GMO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간행물 제작·교육·홍보

[2-2-1]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③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정형욱 연구관, T.043-719-2352)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확대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로 안심인식 공감대 확산

2. 추진계획

-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로 소비자 인식 개선
 - 「GMO 바로알기」 소비자, 대학생 대상 교육 실시(연중)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서포터즈' 구성·운영('15.3~)
 - 일반인 눈높이에 적합한 유전자변형식품 교육자료 마련·배포(6월)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반기별)
 - SNS(페이스북, 트위터) 활용 정보 제공(연중) 및 이벤트 실시(10월)

3. 추진실적

-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로 소비자 인식 개선
 - 주부 등 소비자 및 대학생 대상 「GMO 바로알기」 교육(3~11월)
 - * 소비자연맹 위탁 교육; 51회, 2,700명(6월~11월)
 - * 대학교 방문교육: 25회, 1,813명(3월~11월)
 - 올바른 정보 확산 유도를 위한 GMO 커뮤니케이션 서포터즈 구성·운영(4월~12월)
 - * GMO 관련 기사 작성 및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전파(8건)

- 소비자 교육용 교재(유전자변형식품 올바르게 알기)마련·배포(6월)
- 유전자변형식품 개발사 대상 민원 간담회 2회 개최(4.16, 11.13)
- SNS(페이스북, 트위터) 활용 정보 게재(260회), ‘GMO 바로알기 OX 퀴즈풀이’ 이벤트 실시(2,377명 참여, 10.6~10.12)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소비자대상 교육 횟수 50회
- ◇ 추진실적 : 소비자 대상 교육 51회 실시로 목표 달성

□ 성과

- 대학생, 주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 * 소비자대상 교육 수혜자 : (‘14년) 4,040명 → (‘15년) 4,513명
 - * GMO 인지도 : (‘14년) 61.1% → (‘15년) 63.6%

□ 문제점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소통을 위해 소비자대상 교육·홍보 예산 확대 필요(‘15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현장점검 지적 사항)

□ 개선대책

- 소비자 대상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대상 맞춤형 GMO 바로 알기 교육 지속적 실시
 - * 예산 증액: (‘15년) 54,540천원 → (‘16년) 65,000천원

5.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 대상 「GMO 바로알기」 교육 확대 실시(‘16년)

[2-2-2] 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①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정형욱 연구관, T.043-719-235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오현숙 연구관, T.043-719-450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나노기술응용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 나노기술응용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이해도 제고

2. 추진계획

-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자료 확보
 - 국내외 나노기술응용식품 유통현황 조사(2월)
 - 국내 유통 중인 나노식품 2종(나노 철분 및 아연 함유 식품)에 대한 체내 흡수율 및 위해성 평가(7월)
 - 나노기술응용식품 종합 정보자료집 마련(9월)
 - 비타민D 등 식품용 나노소재 4종에 대한 표준 제조방법, 이화학적 분석법 확립 및 평가(12월)
 - 나노캡슐 등 주요 유형별 나노식품의 체내흡수율 등 안전성평가 기법 확립(12월)
- 나노기술응용식품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 나노기술응용식품에 대한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 정보 제공

3. 추진실적

-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자료 확보
 - 품목제조보고, DB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식품 유통현황 조사 결과,

국내 6품목, 국외 54품목에서 나노 용어 사용 확인

* 대부분 제품 설명에 ‘나노’ 또는 ‘나노기술’ 용어를 단순 사용

- 국내 유통 중인 나노식품(나노 철분 및 아연 함유 식품)에 대한 체내 흡수율 및 위해성 평가(8월)
 - 동물모델을 이용한 체내흡수율 평가 결과, 상품화가 된 나노식품의 흡수율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음
- 나노기술응용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국내외 정책동향 등 종합 정보자료집 마련(9.30)
- 비타민D, 대두 펩타이드 등 대표적 식품용 나노소재 5종에 대한 제조공정, 이화학적 특성 분석법 확립 및 평가(11월)
 - 제조공정 SOP화 및 이화학적 특성(안정성) 시험분석법 확립
 - 온도, pH 등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변화 분석
- 나노식품의 체내흡수율 등 안전성평가 기법 확립(11월)
 - ‘장관 시료주입 실시간 흡수율 측정법’(Intestinal In Situ Single Perfusion) 등 신기술 적용
 - 장기적 식이섭취에 따른 위해성평가 확립을 위해 기존의 독성시험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동시 적용

□ 나노기술응용식품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 ‘식품 나노기술의 응용’ 등 정보 24건 (페이스북 12건, 트위터 12건) 게재(연중)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시험분석법 마련

◇ 추진실적 : 유통 중이거나 향후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나노소재 5종에 대한 제조공정 및 이화학적 특성 시험분석법 마련·확립

□ 성과

- 유통 중인 나노식품 2종의 상품화 전·후에 대한 체내흡수율 및 독성 비교 평가를 통한 생체이용률 및 위해성정보 확보
- 유통 중이거나 향후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나노소재 5종에 대한 제조공정 및 이화학적 특성 시험분석법 마련·확립
- 유기소재 이용 나노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체내흡수율 등 안전성 평가기법 확립 → 향후 나노식품 허가·규제를 위한 안전기술 확보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나노분말화(녹차) 및 나노캡슐화(비타민 E) 식품에 대한 체내흡수율 평가 → 나노화 전·후의 흡수율 차이에 따른 섭취권장량 등 재평가('16년)

[2-2-3]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이진하 연구관, T.043-719-445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기후변화 적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1단계('10~'14년)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사업단의 성과 유지 및 기후변화 적응 실천 등 관리방안 마련
- 기후변화 적응 식품안전 빅데이터 활용 연구

2. 추진계획

□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인자의 영향분석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실천 및 관리방안 등 마련

- 기 수행 1단계 사업단의 성과 관리 및 사후 성과 유지(12월)
- 기 수행 사업단의 영향이 확인된 위해요소의 성과 심층 분석(12월)
- 생물학적 위해인자*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실천방안 제시(12월)
* 생물학적 위해인자: 세균, 바이러스, 해양미생물
- 화학적 위해인자*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실천방안 제시(12월)
* 화학적 위해인자: 곰팡이독소, 패독, 유해중금속, 동물용의약품
- 빅데이터 및 성과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결과 통합(12월)

□ 1단계 사업단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 도출 및 보완책 마련

- 기 수행 사업단의 5년간 생산된 CC-MIMS 데이터베이스 문제점 도출(데이터 gap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12월)

- SNA*분석 등 최신 빅데이터 예측기법을 적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활용방안 도출(12월)
 - *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 위해인자-식품 조합별 기후변화의 영향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활용 통계 산출(12월)
- 기상자료·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CC-MIMS 자료 DB화 및 유지보수(12월)

3. 추진실적

□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인자의 영향분석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실천 및 관리방안 등 마련

- 기 수행 1단계 사업단 연구성과의 심층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등 마련(12월)
 - 곰팡이독소, 패류독소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해인자에 대한 연구결과 심층분석
-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안) 작성(12월)
 - 식품안전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위해인자별 관리 방안 등 제시
- 기 수행 사업단의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연구 사각지대 및 지속 추진 분야 발굴(12월)

□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보완 및 개선

- 1단계 사업단에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11월)
 - 데이터 gap 분석을 통해 통계학적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의 기준 제시
- SNA분석 등 최신 데이터 예측기법을 적용한 위해인자별 취약성 분석 방법 확립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12월)
- 기상정보, 기후변화 시나리오, 위해인자별 실태조사 자료 DB화 및 사업단 홈페이지 개편(12월)
 - * 기존 사업단 홈페이지(www.climate-food.net)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관리 DB 1백만건
- ◇ 추진실적 : 기후변화에 따른 곰팡이독소 발생 예측 모델 개발 및 기후변화 관련 식품안전관리 DB 105만건 구축완료

□ 성과

-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곰팡이독소 검출 건수를 연계한 곰팡이독소 발생 예측 모델 개발
- 기상 자료, 식품 중 위해인자 실태조사 결과 등 기후변화 관련 식품안전관리 DB 구축(105만건)
-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의 관계, 관리 및 대응 방안 등을 수록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대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안) 마련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구축('16.11)
- 기후변화 관련 위해발생우려 농축수산물 종합대책 마련('16.8)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식품안전기술 및 위해인자 신속 검출법 활용('16.11)

2-3.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

① 대국민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김판순, 김현경 연구관, T.043-719-2552)
 식품소비안전과 전대훈 연구관, T.043-719-1904)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신용주 사무관, T.043-719-1904)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식품 등 안전 교육 실시
-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운영
- 국민 관심사항을 반영한 고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추진계획

식의약 안전에 대한 소비자 기본역량 강화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식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필요 정보를 대면교육 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 운영(연중)

체계적인 소통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개최(2회)
- '국민소통단' 운영으로 식의약 관심사안에 대한 실시간 국민의견 직접수렴 및 올바른 안전정보 전파·확산(연중)
- 식의약 이슈별 차별화된 맞춤형 소통전략 발굴 등을 위한 '소통자문위원회' 운영(2회)

□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 운영

- 국민누구나 참여하여 식의약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면 소통의 장 마련(4회)
- 청소년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관리 업무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연중)

□ 소비자 위생감사 요청제 및 위생점검 참여제

- 제도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실시
 - 지방청 및 지자체 공무원과의 간담회 실시(2월)
 -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4월)
- 6개 지방청 및 16개 시·도별 소비자 참여 위생점검 실시(3~11월)
 - 지방청, 지자체별 참여계획 수립 및 위생점검 실시

□ 생산자·소비자 대상 맞춤형 불량식품 근절 교육 실시

- (노인)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생산자)위생적 취급관리, (소비자)불량식품 판별·신고요령 등 교육
 - * 소비자·생산자 단체에 위탁하여 전국대상 집합, 방문 교육

□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문체부, 경찰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홍보
 - * KTV, 신문, 전광판·버스 모니터, 각 부처 홈페이지, SNS, 엘리베이터 모니터, 민간 보유 매체 등 활용
-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 전개
 - * TV, 라디오, 영상, 웹툰, 잡지, SNS 등 활용

3. 추진실적

□ 식의약 안전에 대한 소비자 기본역량 강화

-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운영(7~11월)
 - 노인, 임신부, 주부 3,133명 대상 64회 실시(교육만족도 92점 달성)

□ 체계적인 소통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식의약 정책 공조를 위한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3회)
 - 이슈발생시 부처간 협력사항 논의 및 정책개선 필요사항 발굴·공유
 - * ‘15년 하반기 식품체감도 향상방안 공유 및 부처간 협조사항 논의 등
- 국민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양방향 채널, ‘국민소통단’ 운영(2~11월)
 - 불만사례·설문조사 등을 통한 관심사항 발굴·생활정보 피드백(25건)
 - * 수입과자 안전관리 요청 등 소통이슈에 대해 정책정보 및 조치결과, 생활밀착형정보 등 공유 15건, 교육콘텐츠 활용 2건, 포럼·간담회 개최 등 4건, 설문조사 3건, 캠페인 1건 등
- 맞춤형 소통전략 발굴을 위한 ‘소통 자문위원회’ 운영(2회)
 - 쉬운 소통메시지 개발 등 국민중심의 소통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
 - * 알루미눔 소통메시지 개발, 식의약 정책소통 개선방안 마련 등

□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 운영

-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 ‘소비자 포럼’ 개최(4회)
 - 소비자 관심사안을 의제로 선정, 선제적 갈등조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 *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방향, 식품 허위·과대광고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등
- 자유학기제* 중학생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식의약 주니어’ 운영
 -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협업으로 자유학기제 중학생 대상 14개 체험프로그램 운영·총괄(73회, 3,072명)
 - * 중학교 한학기동안 기본교과시간 감축하고 진로탐색과정 운영
 - ** 식품안전정보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마역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및 위생점검 참여제

- 소비자위생점검 참여제 운영지침 개정(2월)

- 소비자위생점검자 활동수당 인상을 통한 참여 확대

* 참여수당 : 1일 1인 40,000→50,000원

○ 소비자가 공무원 위생점검 시 참여하는 제도('14년부터 시행)

- 식약처, 시·도,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소비자 참여하여 식품행정의 투명성 강화

* 소비자위생점검 참여인원 : 1,394명('15)

□ 생산자·소비자 대상 맞춤형 불량식품 근절 교육 실시

○ 소비자·생산자·어르신 등이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 맞춤형 교육 실시

-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 안전문화가 민간
주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지원(교육 및 캠페인 참여 38,619명,
교육만족도 82.6%)

□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부처별 역할분담 및 예산공동 활용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홍보

- 홍보 주관(문체부), 불량식품 근절 주무부처(식약처) 및 참여부처(경찰청)가
공동으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물을 공동으로 활용

* 예산(120백만원) : 식약처(100백만원), 문체부(20백만원)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위해소통 회의 및 소비자포럼 개최 8회,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인원 1,000명, 소비자 교육인원 25,000명

◇ 추진실적 : 위해소통 회의 및 소비자포럼 개최 9회,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인원 1,394명, 소비자 교육인원 38,619명

□ 성과

○ 소비자 필요정보 발굴 및 눈높이 상시소통을 위한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 부처 등과 소통채널 운영 활성화

○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층별 생활정보 제공
및 청소년 진로체험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 강화

- *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식의약 주니어 등 국민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91점
-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근절 교육·홍보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 농산물(교육 6,634명), 수산물(교육 2,890명, 캠페인 3,750명), 주부(교육 6,688명, 캠페인 13,650명), 어르신(5,007명) 등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지속 운영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

② 소비자 정보 교류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백승하 사무관, T.044-201-2274)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고품질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의견교류 및 교육·홍보 확대

- 소비자단체 정기간담회·포럼 등을 통한 농식품 소비정책 전파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추진을 통한 합리적 소비자 육성

2. 추진계획

□ 농사랑알리미(소비자교육 강사) 확대·육성* 및 알리미를 통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홍보 실시(연중)

* 목표(800명) : (14년) 118명 → ('15) 200 → ('16) 250 → ('17) 250

□ 소비자단체(소비자)와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소통채널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포럼 실시(연중)

3. 추진실적

□ 농식품 소비정책 토론,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등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 정기간담회 및 포럼 등 실시

- 소비자 정책포럼(4회), 워크숍(1회), 간담회(5회)

□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유도를 위한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실시

- 소비자 교육 198회(11,250명), 캠페인 86회 (12,391명)

- '15년 찾아가는 농사랑알리미(99명) 소비자교육 16,799명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소비·식생활 정책 소비자 인식도* 67점

◇ 추진실적 : 소비·식생활 정책 소비자 인식도 70점

* '15년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소비·식생활 정책(아침밥 먹기, 로컬푸드, 국가인증 농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

□ 성과

-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통해 국가인증 농식품, 로컬푸드, 제철 농식품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국산 농식품 충성도 제고에 기여
- 소비자 정책포럼 및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농식품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식품 정책의 이해도 제고 및 협력 강화
 - 원산지 표시제도, 농산물 안전성 관리, 농약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쇠고기 등급제 등을 주제로 의견수렴 및 국민과 소통 강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 역량강화 및 소비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다양화, 소통채널 내실화 추진
 - 농사랑알리미 확대·육성* 등

* 목표(800명) : (14년) 118명 → ('15) 194 → ('16) 250 → ('17) 250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

③ 수산물 위해정보 소통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종섭 사무관, T.044-200-562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안심 제고

- 수산식품 안전사고 발생으로 위해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리 방안 등 대국민 소통 강화

2. 추진계획

□ 수산물 위해요소 홍보·교육 등 강화

- 수산물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 계획 수립('15.3)
- 수산물리스크커뮤니케이션 홍보 및 교육(수시)

3. 추진실적

□ 수산물 위해요소 홍보·교육 등 지속 강화

- '15년도 수산물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 추진계획 수립('15.2.13)
 - 수산물의 조리·섭취 등 위생·안전관리 요령 대국민 교육·홍보(연중)
 - * (교육) 위해정보, 안전관련 제도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홍보) 위해요소, 올바른 조리·섭취 등 위생관리 요령 정보제공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수산물 위생안전 교육 참석자수 6,500명

◇ 추진실적 : 50여개 시·군 53회 5,611명

* 메르스 발생으로 교육 연기·취소 등에 따라 교육 참석자수 미달성

□ 성과

- 조리·섭취 등 위생·안전관리 요령 대국민 교육·홍보 지속 실시
 - * (교육) 50여개 시·군 53회(5,611명, 생산·소비자, 유통종사자, 영양·조리사 등)
 - * (홍보) 포스터 1회, 현장참관 15회, 방송 3회, 기고 1회, 지하철 광고 3회 등

□ 문제점

- 수산물의 올바른 조리·섭취 등 위생·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식품안전사고 지속 발생
- 메르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교육이 연기·취소 될 경우 교육 규모 축소로 참석자의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

□ 개선대책

- 수산식품에 의한 위생·안전사고 예방·관리 교육·홍보 지속 추진
 -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적극적으로 대응
- (성과지표 개선) 교육 인원 규모수에 따라 교육 참석자의 인원수의 차이가 크므로 성과지표를 참석자수에서 교육횟수로 변경
 - * (당초) 수산물 위생안전 교육 참석자수 → (개선) 수산물 위생안전 교육 횟수

5. 향후 추진계획

- '16년도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추진계획 수립('16.2)
 - 수산물 위해요소 등 교육·홍보 지속 실시(연중)

[2-3-2] 식품 등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①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전대훈 연구관, T.043-719-2853)

과제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식품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

- 식품등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 국내외 식품 표시기준 조화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대국민 홍보 강화
-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2. 추진계획

□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연중)

-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
 - 유발사례 발생유형 등 우리나라 식품 알레르기 현황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 조리식품 알레르기 표시 추진
 - 알레르기 표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및 배포
 -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스터 제작, 식품접객업소 등에 배포
- 어린이 및 학부모대상 식품알레르기 교육
 - 식품알레르기 교육자료 개발 및 전국 순회 교육
 - 「식품표시 정보사이트」를 개설하여 식품알레르기 교육자료 게시
 - * e-book, pdf, 그림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공개 및 홍보
 -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식품위생 교육 시 교육 자료로 활용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홍보**

- TV 동영상 제작 및 광고(6월)
- 지역별 설명회 및 교육자료 제작 인쇄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

-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개선을 위한 연구(3월~10월)
- 국제표시기준에 준하여 표시기준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연구 등

□ **식품 표시방법 교육·홍보**

-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지역별 순회교육(6회)

□ **식품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 식품 등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자문협의체 5회 운영

3. 추진실적

□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대**

- 우리나라 처음으로 병의원 내원환자 중심의 식품 알레르기 현황 조사·분석
- 알레르기 유발 표시대상 확대(13품목 → 21품목)
 - * 기존(13개)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 추가(8개)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조리식품 알레르기 표시 추진
 - 알레르기 표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및 배포(5천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스터 제작, 식품접객업소 등에 배포(5천부)
- 어린이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대상 교육자료 개발
 - * 초등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환자부모 및 의료종사자를 위한 교육자료, 진료실에서 흔히 묻는 식품알레르기 관련 질문 중심의 Q&A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대국민 홍보로 소비자인지도 제고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홍보 동영상 미디어 매체 송출(7.27~8.31)
- 영화관 상영 전 광고를 통한 홍보 동영상 상영(12.16~31)
- 일간지(문화일보) 지면광고(12.22, 12.24) 및 소책자 배포(5.27~6.3)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설명회 개최시 지방청,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체 배포

□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 식품 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에 대한 세부판단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
- 국내외 표시관련 규정 비교·분석, 불필요한 표시기준 개선 및 외국 인증 관련 표시현황 조사
- 할랄 등 인증기관 지정방법 및 절차등에 대한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2015-102호, '15.12.23)

□ 식품 표시 교육·홍보로 소비자 및 영업자와의 소통 강화

- 식품표시 및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등 표시기준 설명회를 통한 교육·홍보 강화(5.27~6.3)

□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문협의체 운영(연중)

- 식품등의 표시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표시제도 개선사항 도출

* 자문협의체(식품제조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학회) 5회 운영

4. 자체평가

- | |
|---|
| ◇ 성과지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용건수 3건 |
| ◇ 추진실적 :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완료(3건) |

□ 성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문협의체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식품 표시기준개정(3건)
 - * 카페인 함량 표시의 허용 오차범위 명시,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방법 기준 마련, 주정 및 증류주(위스키 등) 원재료명 의무표시 생략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및 표시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강화

[2-3-3]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민동명 사무관, T.044-201-2276)

과제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 수 확대, 음식점 표시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표시제도 개선
- 취약 품목별·시기별 집중 단속 추진

2. 추진계획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6월)
 -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 확대 및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6월)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및 표시대상 배달용 품목 확대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개정(6월중 개정 공포)
 - 원산지 “수입산” 예외표시 개선 등
- 취약 품목별·시기별 정기 및 특별단속 집중실시(연중)
 - 쌀, 쇠고기, 돼지고기, 양념류, 배추김치, 화훼류, 설, 휴가철 추석대비 등

3. 추진실적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15.6.1. 시행령 개정 6.3. 시행규칙 개정)
 -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16.2.3)

-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시행규칙 개정('16.2.3)

□ 취약 품목별·시기별 정기 및 특별단속 집중실시(연중)

- 설대비(1월), 대보름 성수기(2월), 대도시 음식점 및 쌀(3월), 학교급 식용(4월), 수입화훼류(5월), 수입냉동고추(6월), 휴가철 축산물(7·8월), 수입양파·마늘(7월), 추석대비(9월), 수입쌀혼합금지(9월), 배추김치(10월), 쌀·한약재(10월), 김장철대비(11월) 등 집중단속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5%
- ◇ 추진실적 :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6%

□ 성과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도입·시행 ('16.6.4)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 기대
- 수입급증 및 소비자 관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및 민간감시활동 강화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원산지 단속실적: ('14) 4,290개소 → ('15) 4,331, 전년대비 0.9%p ↑
-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관리 및 민간 감시 활동 강화*로 '15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96.6% 수준으로 향상
 - * 전담 명예감시원 2,800여명 지정·운영, 128개 MOU 체결 전통시장 관리 등
 - 원산지표시 이행률: ('14) 96.4% → ('15) 96.6, 전년대비 0.2%p ↑

□ 문제점

- 한·중 FTA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수입증가 우려로 소비자의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요구 증가
 - 원산지 둔갑판매 시 부당이득 금액이 많은 품목위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지속 발생

□ 개선대책

- 원산지표시에 대한 교육·홍보, 단속 강화 및 효율적 제도 개선

5. 향후 추진계획

- 시기별 취약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및 민간감시기능 강화
- “수입산” 예외표시 개선을 위한 원산지표시요령 고시 개정(16.1/4분기 예정)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처벌강화(형량하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16년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2-3-3] 원산지표시 제도개선 및 단속 효율화

② 수산물 원산지제도 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임창현 사무관, T.044-200-5447)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대외시장 개방에 따라 국산과 가격 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수산물 원산지 정보제공 확대 및 관리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거래 유도, 유통질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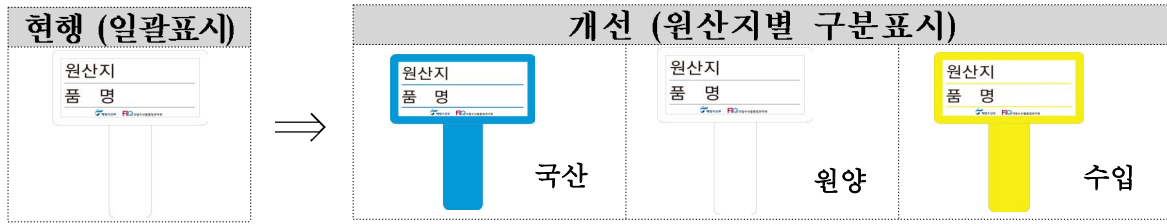
2. 추진계획

□ 음식점 및 유통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연중)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3품목) 추진(농식품부 협업)
 - * 대상품목 확대 계획 : ('13) 9개 품목 → ('15) 12개 품목
- 수산물 원산지표시 상습적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도입
 - * 과징금 :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위반금액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추가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
 - * 제도개선 : (현행) 의무면제 → (변경) 의무화('15.1.1시행)
- 성수기 및 위해정보 발생 시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 명절성수기(2·9월), 여름휴가철(7월), 김장철(10월), 일본산 수산물(매월)

□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 제고를 위한 효율화 추진(연중)

- 전국 주요 전통(수산)시장 색상형 원산지 표준표시판 도입 확대



* 도입시장(9) : 노량진·양동·안면도·우림·성동·남부·상남·신중앙·매일올레

○ 수산물 원산지 이행률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 단속공무원, 소비자, 표시의무 대상자에 대한 분야별, 대상별, 기관별 원산지 표시 교육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3. 추진실적

□ 음식점 및 유통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 (표시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9→12종), 위반자 정보 제공 추진

- 음식점 주메뉴로 다량 소비되는 3품목(오징어, 꽃게, 조기)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 위해 원산지법 시행령 개정('16.1월 공포)
-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기관에 원산지 표시 위반자 정보(상호, 주소 등)를 제공함으로써 거짓표시 식재료 공급 차단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
 - * 제도개선 : (현행) 의무면제 → (변경) 의무화('15.1.1시행)

○ (단속·처벌) 상시 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동일업체가 2년간 2회 이상 위반 시 과징금 부과 ⇒ 상습 위반행위 근절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15.6)
- 명절 계기 관계부처(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 등) 합동 단속,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월 1회, 연중)
 - * 과태료 부과액 : ('14년) 37백만원 → ('15년) 84백만원

□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 제고를 위한 효율화 추진(연중)

○ (자율이행) 원산지 표시 자율이행 도모를 위한 정책 추진

- 원산지별 색상형 표시판 도입 확대(21개 전통시장, 33만개 배포)
- 수산물 원산지 이행률 제고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 * 수산물원산지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10.21~23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수품원 및 각 지자체 원산지 담당 공무원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표준표시판 도입시장수 15개,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수 12개
- ◇ 추진실적
 - 원산지별 색상형 표준표시판을 **21개 시장**(33만개 배포)에 도입, 목표대비 140% 초과 달성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3개 품종(오징어·꽃게·참조기)을 추가, **12개 품종으로 확대**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16.2.3일 공포)

□ 성과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 '15년 기준 원산지 단속 대상은 6.7만개*로 '14년 대비 약 10% 증가 하였으며, 표시 이행률은 98.9%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단계로 평가
 - * (단속업소) '12년 2.4만개 → '13년 1.9만개 → '14년 6.1만개 → '15년 6.7만개
 - * (이행률) '12년 97.5% → '13년 96.2% → '14년 98.8% → '15년 98.9%
 - 또한, 수산물 생산·유통과정 상의 관계주체들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된 것으로 평가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9→12종)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오징어, 꽃게, 참조기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16.2.3일 공포)
 - * 총 12종 : 현행 9종(넙치, 참돔, 낙지,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조피볼락, 명태, 뱀장어) → 3종 추가(오징어·꽃게·참조기)
- 원산지 표시 자율이행 도모를 위해 원산지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색상형 표시판 도입 확대(21개 전통시장, 33만개 배포)

□ 문제점

- 타 부처 등 원산지 담당 관계기관간 협업 체계 구축 미흡
 - 원산지 표시제도의 특성상, 대규모 거짓 표시 적발 등 부정적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
 - * 한우 원산지 위반 적발(중부일보, '15.10.29),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전북도민일보, '15.9.30), 원산지 표시위반 음식점 193곳 적발(연합뉴스, '15.4.2) 등

□ 개선대책

- 관계기관 협조 강화
 - 경찰청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방지
 - * 거짓표시 사례 적발 보도시, 일방적인 부정적 기사보다는 제도의 긍정적 측면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사전 협조 시스템 구축 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통신판매업체(G마켓, 홈쇼핑 등)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기관 홈페이지(우리부, 수품원 등)에 위반정보 공개* 추진
 - * (현행) 판매업체 정보 공개 → (개선) 현행 + 통신판매업체 정보 공개
 -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3개월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수산물 소비성수기 및 위해정보 발생 시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 명절성수기(2·9월), 여름휴가철(7월), 김장철(10월), 일본산 수산물(매월)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 제도 개선

① 농산물 인증·표시제도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민동명 사무관, T.044-201-2276)

과제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및 공통표지 홍보
- 포장 농산물의 권장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 마련

2. 추진계획

-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연중)
 - 온오프라인 마켓 홍보, 대중매체 및 온라인홍보, 대량 소비자를 위한 설명형 홍보 등
- 포장 농산물의 권장 품질 표시 기준 및 방법 마련(11월)
 - 권장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 관련 규정 내용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마련

3. 추진실적

-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연중)
 - 대형유통매장 활용 안테나숍 설치·운영, 국가인증 홍보CF 송출, 블로그 등 스마트기반 홍보, 네이버 등 온라인 배너광고, 문화센터 연계 교육홍보, 놀이공원 등 찾아가는 체험홍보, 영상사 등 급식관계자 대상 설명형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종합인지도 63.0%,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종합소비자 신뢰도 72.0점
- ◇ 추진실적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종합인지도 66.0%,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종합소비자 신뢰도 68.3점

□ 성과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대한 소비자 인지도 66.0%*로 지속 향상(전년대비 4.3%p 상승)

* 농식품 인증제도 소비자 인지도 ('14)61.7% → ('15)66.0%, 구입 시 국가인증제도 고려율('14)69.2% → ('15)71.3, 인증 농식품 구매율('14) 72.1% → ('15)80.8, 국가인증 만족도 ('14)65.0% → ('15)65.5 등

□ 문제점

- 국회 일정 문제로 인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포장 농산물에 대한 권장품질표시 도입 지연

- 개정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법안소위 의원실 대상 설명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일정 상 처리 불가로 하위법령 마련 이행 곤란

* 농해수위 법안소위: 6월(취소), 11월(11.17. 안건심사 전 산회, 11.20.취소)

-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14년 친환경 부실인증실태 TV보도 등)가 농식품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신뢰도 상승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철저한 인증제도 관리와 더불어 대중매체, 현장체험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필요

□ 개선대책

-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한 소비자 접점 홍보 강화

5. 향후 추진계획

-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비자 접점 홍보,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활성화 등 추진

- 포장 농산물 권장 품질표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국회처리 적극 대응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이상훈 사무관 , T.044-201-2437)

과제 분류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 검증체계 구축

- 민간인증기관 인증 건의 일정비율 선정하여 신청, 심사, 인증시 서류와 현장 모든 과정을 확인하도록 검증체계 보완 구축

□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신설

- 인증심사원이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부실 인증을 하지 못하도록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 실시

2. 추진계획

□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에 대한 검증체계 보완

- 민간인증기관 '2중-Check' 관련 고시 개정(9월)
 - * 인증신청 현장 심사 시 농관원, 민간인증기관 2중-Check 도입

□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규정 신설

- 인증기관(인증심사원) 역량강화 방안 기관·단체 협의(1월)
 - *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안) : 자격 취득 후 연 1회(6시간)
- 개정안 관계기관 협의(2월) → 입법예고(3~4월), 국회제출(9월) → 개정 완료(12월)

3. 추진실적

□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에 대한 검증체계 보완

- 민간인증기관 '2중-Check' 관련 고시 개정

- 농관원이 부실인증 우려 건을 선정(전체 3%), 인증승인의 적합성 추가확인(530건 조사, 인증취소 31건)

□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강화

-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자에 대한 자격 재취득 요건 강화(2→3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 * 국조실 규제위에서 인증제도 제로베이스 검토(VIP 지시사항)로 인해 규제 심사지연(4개월)으로 '15.12.1일 국회제출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소비자 만족도 65.0
- ◇ 추진실적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소비자 만족도 64.3(목표대비 98.9%)

□ 성과

-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처벌요건 등 강화
 - (인증기준) 상습 인증위반자의 인증신청 제한기간 강화(1→2년), 유기 종자묘, 무농약 종자의 인증제 신설, 퇴비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상 규격을 적용토록 개선(퇴비공정규격 1/2이하로 제한 → 동일)
 - (인증기관) 업무관련 위반자 임직원 참여 제한(3년), 형사처분시 재지정 신청 제한기한 연장(2년→3), 평가·등급제 도입 및 결과 공개
 - (사후관리) 인증 위반품에 대해 판매정지 외 회수·폐기 및 미이행자 처벌규정 마련
 - (행정처분) 단체인증 인증취소 비율을 조정(구성원 60~15%→20)하고, 취급자 인증 취소 작업장도 1년간 인증 재신청 제한 및 경미한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문제점

- 국조실 규제위에서 법률 규제심사 지연(4개월)으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규정신설 지연

□ 개선대책

- 민간인증기관 소비자 신뢰제고 대책 지속추진
- 인증심사원 보수 교육 규정신설 '16년 재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인증기준 관리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유도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③ 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담당자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이재영 사무관, T.044-200-548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품질인증·표시제도 개선

- 수산식품 인증제도가 다수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낮아 인증제도 단순화 등 개편 필요

2. 추진계획

□ 수산물 품질인증 통합 운영

- (단기) 수산물 인증표기 단일화 추진
 - 현 8종으로 구분된 인증표기의 단일화 추진
 - * '경쟁력 있는 가공산업 제도적 육성방안 연구 용역 실시('14.8~'15.2)로 인증제 관련법 정비방안 마련
- (장기) 친환경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을 우수수산물 품질인증제도로 단일화 추진('17, 관련 법률 개정 필요)

3. 추진실적

□ 수산물 인증 관련 표기 개선(안) 마련('15.5)

- 수산물 인증 표기 단일화(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 연차별 추진 계획 : ('15) 인증로고(표기) 통합 → ('16) 수산물 품질인증 개선 및 통합 → ('17) 친환경수산물 → ('18) 수산전통식품 / 우수수산물 인증

□ 수산물 인증 통합 계획(안) 마련('15.11)

- 현재 총 8종의 수산물 인증을 '우수수산물'로 통합하고, 인증제도 개선(통합) 완료시기를 '18년도에서 '16.11월로 단축 추진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수산물 품질인증 등록건수 및 증가율 1,062건(1.8%)
- ◇ 추진실적 : '15년도 수산물 품질인증 등록건수는 1,285건으로 목표대비 121% 초과 달성

□ 성과

-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인증제도 통합 완료시기를 단축(인증제도 제로베이스 정비, '15.6)
 - * (당초) '18년 완료 →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완료시기를 '16.11월로 단축
-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품질인증 등록건수 확대
 - * (당초) 1,062건 → (실적) 1,285건(당초 목표대비 121% 초과 달성)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16)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산물 인증을 '우수수산물'로 통합

2-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2-4-1]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① 시험·검사능력 선진화 단계 진입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최명신 연구관, 박좌행 연구관 T.043-719-182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팀 조수열 연구관, T.043-719-530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숙련도 평가프로그램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평가

-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에 따라 숙련도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차질 없는 숙련도 평가 추진
 - 초기 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교육·홍보 실시
- 품질관리기준 운영 평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시험·검사기관 수준별 교육 실시 및 사전 전문 컨설팅 제공
 - 평가자 평가 매뉴얼 개발 및 교육

2. 추진계획

□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

-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계획수립(1~2월)
 - * 전체 검사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용 시료 위탁 제조·관리
-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대상 숙련도 평가 안내 및 평가 실시
 - 시험·검사결과 정확도 유지 등 숙련도 평가 설명회 개최 및 평가용 시료 배포(2회: 6월, 9월)
 - 숙련도 평가결과 보고(12월)

□ 품질관리기준 운영 평가 및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기술지원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 실시(연중)
- '품질관리기준 평가의 눈높이 평준화'를 위한 평가자 교육
 -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를 위한 평가 매뉴얼 개발('15.6.)
 - 품질관리기준 평가자 교육 실시(상반기: 3.11~13., 하반기: 10.28.~30.)
- 품질관리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점검 지원
 - 법정 및 민간 검사기관 대상 사전점검 및 미흡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적정한 운영 방향 유도(4월~10월)
 - '품질관리기준' 수준별(초급, 중급 과정 운영) 맞춤형 교육 실시(3~11월)
 - * 초급 : 품질관리기준의 이해, 품질관리기준 사례 연구
 - 중급 : 내부 숙련도 평가의 운영 방법, 측정불확도 추정 사례 실습, 소급성 확보를 위한 방법

3. 추진실적

□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

- 숙련도 평가 계획 수립(1월) 및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대상 숙련도 평가 실시(6월, 9월)
 - * 200개 기관 참여/ 식품 등(78), 축산물(49), 의약품 등(33), 화장품(33), 국외(7)
 - * 숙련도 평가결과 총 200개 중 189개 양호, 2개 주의, 9개 미흡(12월)

□ 품질관리기준 운영 평가 및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기술지원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 실시('15.4~11월)
 - * 적합(23): 지방청(6), 시도보건환경연구원(17)/ 부적합(1): 민간시험검사기관
- '품질관리기준 평가의 눈높이 평준화'를 위한 평가자 교육
 - * 시험검사전문평가관 교육(총 32명) : 1차 29명(3.10), 2차 13명(10.26)
 -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 매뉴얼 제작·배포.(3.17)
- 품질관리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교육 지원
 - 희망기관 수요조사(8.27) 결과 전남 축산위생사업소 사전점검 실시(11.30)

- * 지자체 축산물위생검사 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지원(25명, 11.30)
- '품질관리기준' 수준별(초급, 중급 과정 운영) 맞춤형 교육 실시(3~11월)
-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술지원 위탁사업 실시 : 5개 과정 326명 참여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검사능력평가 양호기관 비율 82%
- ◇ 추진실적 : 숙련도 양호기관 비율 94.5%(총 200개 기관 중 189개 기관 양호)

□ 성과

- 숙련도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숙련도 : 양호기관 비율 94.5%(총 200개 기관 중 189개 기관 양호)
- * 품질관리기준 : 적합기관 비율 95.8%(24개 기관 중 23개 기관 적합)

□ 문제점

- 각 기관마다 검체수거 방법 및 시료식별 관리에 혼란이 있어 업무 표준화 필요
- 평가표에 따른 점수 체계가 우수와 미흡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중간 점수 도입 필요성 제기

□ 개선대책

-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수거 시 검체채취' 부분 개정 요청('15.12)
- 품질관리기준 평가표 개선 추진
-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및 국제표준기구(ISO17025) 수준으로 상향 유도

5. 향후 추진계획

- 품질관리기준 평가표 개선 추진(고시)('16.2~)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지정·재지정)
- 민간시험검사기관 대상 국제수준의 품질관리기준 컨설팅지원

(2-4-1)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② 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이현희 사무관, 박좌행 연구관 T.043-719-1821)

과제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식품 등의 시험·검사기관 관리 감독 강화 및 운영 체계 개선

- 정기 지도·점검 외에 수집정보에 의한 상시·불시 점검
 - 허위 성적서 발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영업형태 근절
-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시 시험·검사 기록 및 정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 마련
 - * 시험·검사 검체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전 과정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기록 및 이력관리 체계 구축 유도

□ 시험·검사기관 지원 및 소통 기능 강화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시험·검사기관 양성을 위하여 시험·검사 검사원 및 대표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관련 제도, 기준, 처분 등에 관한 이해 제고 및 애로사항 소통 강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첨단분석장비 국고보조 지원

2. 추진계획

□ 시험·검사 기관 상시점검 및 운영 체계개선 도모

-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실시(3~11월)
 - 정기 지도·점검 외에 수집정보에 의한 상시·불시 점검으로 허위성적서 발급 적발 시 지정취소 및 즉시 퇴출 조치
 - * 민간시험검사기관(137): 식품(66), 축산물(32), 의약품(12), 의료기기(14), 화장품(13)

-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 도입 추진
 -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도·점검 방법 표준화를 위한 「시험·검사기관 관리지침」 제작 및 지방청 배포(2월)
 - 시험·검사 기록 및 정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배포하여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시 활용
- 지도·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청 담당자 등 전문 교육 추진(2월)
 - 효과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참고용, 재료비 내역 등), 검사 이력 대조, 인터뷰, 사례분석, 조사 기법 등 교육

□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소통·협력 강화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및 검사원 교육 계획 수립(2월) 및 운영(3~12월)
 - 철저한 시험·검사, 부적합 통보, 인위적 조작 방지 노력 등 내용을 포함한 대표자 교육 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윤리경영 유도
 - * 성적서 위·변조 방지, 시험·검사 기록·이력 관리, 부적합 결과 보고 등
 - 시험·검사 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3월, 7월)
- 사·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 및 정보 교류 강화
 -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HPLC 등 첨단분석장비 보강(10억, 1월)
 - 업무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11월)
 - 보도자료 배포전 사전 자문실시(상시)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시험·검사 정보 공유(상시)

3. 추진실적

□ 시험·검사 기관 상시점검 및 운영 체계개선 도모

-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실시(3~11월)
 - * 점검 기관(166개 기관) : 정기(119), 특별(17), 합동(20), 정보사항(10)
 - ** 점검 결과 : 적합(114), 부적합(52) 기관 중 18개 기관은 지정취소

-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 도입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5월)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기능 및 조회 기능 설치('1월)

- 「시험·검사기관 관리지침」 제작 및 지방청 배포(2월)
- 지도·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청 담당자 등 전문 교육(5월)
 - * 시험·검사 관련 법리해석 및 조사기법, 기록관리시스템 점검 요령 등

□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소통·협력 강화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및 검사원 교육 계획 수립(2월) 및 운영(3~12월)
 - 2015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교육계획 수립(2.12)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교육(간담회)(4회)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 및 정보 교류 강화
 - 실험실검사능력강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0억, 1.29)
 - * 대상: 13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HPLC 등 9품목 18점 지원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11.12~13)
 - 보도자료 배포전 사전 자문실시(상시)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시험·검사 정보 공유(상시)

4. 자체평가

□ 성과

- 허위성적서 차단 및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및 장비의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 의무화
- 안전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 부적합시 보고 의무 강화

□ 문제점

- 현장중심의 시험·검사기관 운영체계 강화 및 시험·검사 성적서 인정 범위 명확화 필요

□ 개선대책

-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 '참고용 검사' 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 설치 및 LIMS 사용 실태점검(2월)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3월~)

[2-4-2]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①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이동호 연구관, T. 043-719-2020

식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 T. 043-719-2416

축산물위생안전과 김성일 사무관, T. 043-719-324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 043-719-4503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총회 등 22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에 대해 국제 논의 동향 사전 검토 및 국가 대응 방안 마련
 - 국가 간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당국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2. 추진계획

- Codex 국제규격 설정에 적극적 대응과 참여
 - 국민 다소비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 시 우리나라 기준(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Codex 업무 적극 대응
 - CODEX 정보 공유 및 수출기업체 간 소통강화(연중)
-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식품안전 협력채널 대응(연중)
 -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한 위생기준 조화 추진(3월)
 - 국가간 양해각서 체계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협력 지원(연중)
 - 중국 공무원 HACCP 교육(6월)
 -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 위해평가 국제협력 지속
 - 위해평가 분야 공동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교육 파견(매년)

3. 추진실적

- 국민 다소비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 시 우리나라 기준(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Codex 업무 적극 대응
 - Codex 총회 및 10개 분과위원회 참석하여 우리나라 기준 적극 반영
 - (농약분과)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인삼, 건삼(홍삼 포함)에 살균제 만코제브 기준 설정
 - (첨가물분과) 발효유 등 33개 식품유형에 대한 구연산 등 79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이 우리나라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 (총회) 인삼제품에 대한 지역규격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세계규격으로 전환
-
-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식품안전 협력채널 대응(연중)
 - 김치 위생기준 개정 건강기능식품 정책 및 인정 분야 등 수출입 현안사항 논의
 - * 제13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9.15), 한·중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분야 국장급 회의(12.1), 한중 통상장관회의('4.28)
 - 제6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9.10)을 통해 김치, 조미김 위생 기준 개정을 추진하여 김치 위생기준 개정 완료(11.6)
 - 식품안전관리 협력을 위해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 지원
 - * 베트남 보건부(12.2 체결), 중국 질검총국(삼계탕 수출, 10.31), 중국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9.15), 필리핀(진행 중), 말레이시아(진행 중)
 - 중국 질검총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출입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 과정 교육 실시(9.10 ~ 9. 24, 15일간, 14명 교육)
 -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 위해평가 국제협력 지속
 - 위해평가 및 위해소통 최신기법 습득 및 국내 전파를 위한 BfR 국제 위해평가 전문가 교육 참석(4명, 8.16 ~ 30)
 - 독일 BfR과 식품 위해평가 관련 최신 동향 공유를 위한 국제공동 심포지엄 개최(5.15,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 참석)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 5회
- ◇ 추진실적 :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 5회

□ 성과

- 국가 간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당국자 간 협력체계 구축

연번	회의 또는 훈련명	성 과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및 분과회의 참석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인삼, 건삼 (홍삼 포함)에 살균제 만코제브 기준 설정
2	제11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중국 삼계탕 수입허용
3	제6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김치 위생기준 개정
4	중국 질검총국 대상 교육 실시	중국 수출업체 대상 최근 개정된 식품안전법 설명회 개최
5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위해평가 전문가 교육 참석	위해평가 및 위해소통 최신 기법 습득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협력약정 체결국가, 국제회의 등 참석확대

[2-4-2]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② 한아세안 위생협력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가정훈 사무관, T.043-719-320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아시아 축산식품 안전관리 관계자 초청 및 안전관리 기법 전수
 - 아시아 국가간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수출 기반 마련
 - 우리나라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우수성 소개 및 개도국 전파
 - 참가국의 위생관리 제도 정보 수집, 수출 희망기업 견학 및 홍보를 통해 수출 증대 기여
 - * 한-ASEAN FTA협정 추진에 따라 2008년부터 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 일환으로 對아시아 축산물 위생·안전 협력사업 추진

2. 추진계획

- '15년 아시아 축산식품 안전관리 현지훈련 개최 계획 수립('15. 2~3월) 및 시행
 - 초청국가 및 인원, 개최일정, 프로그램 등 계획 수립
 - 초청 대상 국가 서한 발송 및 참가자 추천 요청
 - '15년 아시아 축산식품 안전관리 현지훈련 개최(15.4월)
 - 한국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소개, 실험실 및 생산현장 현장토론
 - 참가국별 각국의 위생관리제도 소개 및 정보교환

3. 추진실적

- '15년 아시아 축산식품 안전관리 현지훈련 개최 계획 수립(2.3)
 - 참석국가 : 12개국(25명)
 - * ASEAN중 8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OECD 원조 대상국 중 4개국(몽골,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프로그램 : 축산물 및 식품 HACCP 관련 세미나 및 영업장 견학 등
 - * 세미나 기간 중 각국 위생수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참가자 토론회 실시

□ '15년 축산물·식품 HACCP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4.26~5.2)

- (참가국 및 인원) 12개국 25명
 - * 아세안 회원국 8개국 및 몽골, 아제르바이잔,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 (주요 내용) 축산물·식품 HACCP 세미나, HACCP 작업장 현장 견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홍보, 할랄수출 희망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등

4. 자체평가

□ 성과

- (참가자 설문 결과) 세미나 전체에 대해 84%가 전반적으로 만족
 - 자국에서도 식품안전을 위해 HACCP 시스템 적용을 희망
 - * 참석국가 대부분이 업체 자율로 HACCP 시행, 특히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해서만 HACCP 적용 중
- (언론 및 업체 반응) 적극적인 언론 보도와 참여
 - 식약처가 아시아 개도국에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기법을 전수한 것과 할랄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이 높이 평가
 - * 연합뉴스 (4/24), SBS CNBC(4/29), 매일경제(4/29)
 - 할랄식품 수출을 위한 관련 업체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유도
 - *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업체 관계자 180여명
- (외부평가) 종합평가 결과 최종 A 등급으로 매우 우수
 - *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사단법인 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전문가 네트워크로서의 자리매김 및 한-ASEAN FTA 협의사항 이행

[2-4-3]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①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이동호 연구관, T.043-719-2020
 축산물위생안전과 송성옥 서기관, T.043-719-3245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오운환 사무관 T.043-719-2459)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FTA 확대에 의한 무역자유화로 식품의 비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위생기준, 통관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져 식품수출의 장애요인 발생
 - 식품기준의 부조화, 통관절차의 상이함 등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 증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 예) 김치 중국 수출시 대장균균 정량 기준 적용으로 수출의 어려움
 - 수출국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실사 강화 등 해외시설에 대한 실사 확대에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제정('11.1.4일)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의 사전 관리 강화

2. 추진계획

- 수출국 기준규격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연중)
 -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출국 안전정보, 정책변화 등의 정보 제공
 - 주요 식품수출 상대국의 기준규격 및 통관절차 정보 제공
 - * 주요 수출상대국 기준규격 및 통관절차 조사 등('14 ~)
- 미국 등 수출대상국의 국내업체 실사를 대비하여 국내 수출업체 대상 실사대비 사전교육 실시(연 2회) 등 업체 지원
 - 대미 수출업체 실사 대비 설명회 개최(상반기, 하반기/2회)
 - 실사 대상업체 중 현장 수검 희망업체에 대하여 통역 등 지원(연중)

□ 수출업체와 소통강화를 통해 국가, 품목별 맞춤형 애로사항 해결

- 수출업체 및 유관협회 등과 수출 간담회 및 설명회 실시(2회/년)

* 중국, 말레이시아 수출 유제품 희망업체 등

□ 축산물 수출작업장 상대국 정부 등록 지속 확대

- 대중국 유제품 신규 수출업체(품목) 등록 지속 추진(분기별)

* 살균유 등 수출품목 및 업체 등록 확대를 위한 지속적 협의 및 대응

- 국내산 축산물 수입허용을 위해 상대국 현장실사 대비 시 사전점검 및 현장 동행 등을 통한 기술지원 실시(수시)

* (미국) 우리나라 가금육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평가 예정(연 1회)

3. 추진실적

-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외국 식품안전동향 정보를 제공, 가입회원에게는 메일링으로 제공(연중)

- '식품안전정보포털'의 수출지원 정보 코너를 통해 중국 등 수출국 기준규격 및 식품안전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을 제공(총 69건)

- 국내 식품수출업체(30개소) 미국 실사 계획에 따라 설명회 개최(4.28)

- 삼계탕 수출작업장(4개소) 및 정부검증 담당자 대상 세미나 개최(8.12, 8.17)

* 미국 FSIS 현지실사 대비 미국 식품안전규정 설명, 현지실사 대응방안 협의

- 수출업체 및 유관협회 등과 수출 간담회 및 설명회 실시(2회/년)

- 유제품 중국 수출업체, 할랄식품 시장 진출기업 대상 수출설명회 개최(2.5, 4.29, 5.19)

- 식품수출활성화를 위한 식품분야 전문가 협의회 개최(4.7, 9.4)

- 오미자 일본수출을 위한 농식품부 및 문경시 담당자 회의(6.17)

- 식품분야 중국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9.3) 및 중국 수입식품안전 관리제도 특강실시(9.22)

* 중국과 검사성적서 상호인정 추진 시범사업 품목과 지역 선정

- 국가별 품목별 맞춤형 수출 가이드라인 마련

- 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지침 개정(2.10)

* 미국 FSIS와 국내산 삼계탕 수출 행정절차 간소화, 변경된 국내 기준·규격 반영 등

-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지침 마련(7.20)

* 유제품 수출업체 중국정부 등록 절차, 수출 검역·검사절차, 통관절차 등 소개

○ 축산물 수출을 위한 수입허용절차 추진 및 사후 위생관리 지원

- (가금육)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가금육제품 수출 확대 지원

(미국 삼계탕) 수출작업장 추가 등록('15.3), FSIS 사후관리 현지실사 대응('15.9)

(EU 삼계탕) EU 축 우리나라 국가 잔류물질프로그램(NRP) EU 등록 예정 알림('15.10)

(중국 삼계탕) 한-중 삼계탕 수입위생약정 체결('15.10)

(일본 열처리가금육)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입위생조건 체결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완료('15.12)

- (유제품) 중국, 할랄시장 등 유제품 신규 수출업체(품목) 등록 지속 추진(분기별)

(중국 유제품) 유제품 수출업체(조제분유 5개소, 기타 유제품 57개소) 등록 완료, 살균유 수출관련 현지실사 대응('15.2), 살균유 수출업체(3개소) 등록완료('15.6), 국내산 살균유 중국 수출 재개('15.7)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정부점검단 현지실사 대응('14.12), 수출업체 말레이시아 정부 등록('15.3),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수출 개시('15.9)

- (소고기) 홍콩 측 쇠고기 수입허용(11.19) 및 수출개시('12.14)

* 홍콩 식품위생서(FEHD) 현지실사 대응('15.7), 최초 수출물량(3회분)에 대한 사전 잔류물질 정밀검사 지원(지방청)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수출정보 제공 건수 50건

◇ 추진실적 : 수출국 기준규격 등 정보제공(총 69건)

□ 성과

○ '식품안전정보포털'의 수출지원 정보 코너를 통해 중국 등 수출국 기준규격 및 식품안전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을 제공(총 69건)

- 중국(33건), 대만(10건), 일본(8건), 미국(5건), 베트남(3건), EU(2건), 기타(8건)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위생기준, 통관 등 식품수출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적극적 해결 추진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3-1. 생산·제조단계 안전 관리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① 농산물 유해물질 실태 조사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손병철 사무관, T.054-429-413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실태 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잔류조사 실시

2. 추진계획

- '15년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 잔류농약 등에 대한 유통·판매단계에서 12천건 잔류실태조사
- 잔류농약 단성분 분석을 위한 농약사용 모니터링 실시
 - 조사결과는 다음연도 안전성조사 및 당해 연도 특별조사에 반영

3. 추진실적

- '15년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연중)
 - 14,031건(잔류농약 12,105건, 중금속 1,424, 독소류 502) 조사, 부적합 392건(잔류농약 391, 중금속 1)
- 다성분 분석법(245성분) 대상 외의 농약 실태조사(연중)
 - 농약 600성분 모니터링 1,000건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실태조사 단성분수 5성분
- ◇ 추진실적 : 실태조사 23성분(목표대비 460%)

□ 성과

- 국내농산물 안전성 수준을 파악하여 부적합비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농산물 공급관리에 기여
 -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소비 54개 품목의 유해물질 안전성 수준을 평가한 결과 97.8%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현재 성과지표는 잔류농약 분석력에 대한 지표로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농약, 중금속, 독소류 등 포함) 잔류실태 조사 과제에 적절하지 않음

□ 개선대책

- 국내산 농산물 안전성 개선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가잔류실태조사 부적합률을 성과지표로 수정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국내농산물 안전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중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② 오염우려 농산물 사전 차단 안전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백길태 사무관 T.043-719-327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도심도로변, 공단주변, 폐광산·가축매몰지 등 인근 오염우려 농지에서 생산되는 위해 농산물 유통·판매 사전차단
 - 위해 농산물 출하연기 및 폐기 등 조치

2. 추진계획

- 생활밀착형 농산물 및 오염우려 지역 농산물 등 선제적 기획조사
 - 도심 도로변, 공단주변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안전성 조사
 - (봄) 도로변 봄나물 중금속 오염도 조사(300건) 및 결과 공개(4월)
 - (가을) 도로변 가로수 과실 중금속 오염도 조사(300건) 및 결과 공개(11월)
 - 폐광산, 가축매몰지 인근 오염우려 지역 생산 농산물 안전성 조사
 - 중금속 오염우려지역 생산 농산물 검사(3,300건)
 - 가축 매몰지 인근 지역 재배 농산물에 대한 병원성미생물(식중독균 7종) 모니터링 조사(100건, 7~9월)

3. 추진실적

- 생활밀착형 농산물 기획조사 : 820건(기준초과 37건)
 - 중금속 오염도 조사 및 홍보
 - 도심 도로변 봄나물 377건(기준초과 37건), 가로수용 과실 443건 중금속 오염도 조사(기준초과 없음) 홍보
 - * 도로변 봄나물 및 가로수용 과실 등 중금속 오염도 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4.14, 11.5)

- 오염우려 지역 농산물 등 안전성 조사 : 35,232건(부적합 45건)
 - 폐금속 광산 등 중금속 오염우려 지역 농산물 중금속 조사 3,312건 (부적합 45건 채취금지·폐기조치)
 - 가축 매몰지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균 7종) 조사 100건(모두 적합)
 - 오염우려 지역 농경지 조사(6,918건)
 - 잔류농약 등 부적합이력 농산물 안전성조사(10,094건)
 - 로컬푸드 등 직거래,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14,808건)

4. 자체평가

□ 성과

- 도심 도로변, 공단주변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600건) 대비 137% 초과 달성(820건)
-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된 농산물 폐기 및 채취 출하금지(45건)로 위해 농산물 유통판매 사전 차단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관계 부처(농식품부 등)와 협업 추진 강화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③ 재배환경 오염실태 조사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손병철 사무관, T.054-429-413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폐금속 광산주변 등 오염 이외의 지역에 대한 농지, 용수, 자재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실태 평가
- 폐광산 등 오염 우려지역 농지에 대한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

2. 추진계획

- 재배환경 유해물질 오염실태조사(3~12월)
 -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 농지, 용수, 퇴비를 지역별로 선정하여 오염실태 조사
- 폐광산 등 오염 우려지역 농지·농산물 중금속 조사(3~12월)

3. 추진실적

- 재배환경(농지, 용수 및 퇴비 등 자재)의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
 - 조사실적 : 1,486건(농지 797, 용수 99, 퇴비 등 자재 590)
- 휴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조사
 - 오염우려지역 농경지 6,918건 조사(계획 6.5천건 대비 100.6%)
 - 오염우려지역 생산 농산물 3,312건 조사(계획 3.3천건 대비 100.3%)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폐광산 주변 농경지 실태조사 6,500건
- ◇ 추진실적 : 폐광산 주변 농경지 실태조사 6,918건(목표대비 106.4%)

□ 성과

- 오염농경지 생산 농산물 안전성조사와 농경지 복원에 반영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휴·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농경지 3,492필지 6,918건 조사결과 505필지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확인
 -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필지에 대하여 '16년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 * 오염농경지를 한국광해관리공단 통보하면, 검토하여 농경지 복원사업에 반영
- 부적합농산물 사전차단으로 안전농산물 공급에 기여
 - 농산물 3,312건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45건 발생
 - 부적합 품목 : 쌀 31, 대파 3, 감자 2, 고사리 2, 딸기 2, 가지 1, 도라지 1, 부추 1, 수수 1, 콩 1
 - * 기준 초과 농산물은 생산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매·폐기 조치

□ 문제점

-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은 쌀(카드뮴 1종)에서 곡류, 서류, 과채류 등 10개 품목류(카드뮴, 납)으로 확대 설정되었으나 폐광산 주변 농산물 오염실태조사 수준에서 중금속 안전성관리

□ 개선대책

- 조사대상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공단 인근, 쓰레기처리장, 고속도로변 토양 등 중금속 오염실태와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 등 상관관계 조사 추진('16~'17)

5. 향후 추진계획

- '16년 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농경지 및 농산물 중금속 조사(계속)
 - 폐광산 오염우려지역 농경지 중금속 조사는 '1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④ 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이호진 서기관, T.054-429-413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국내 농산물 방사능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방사능측정소 주변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

2. 추진계획

-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대상 유해물질 : ^{131}I (요오드), $^{134}\text{Cs} + ^{137}\text{Cs}$ (세슘) 등
 - 조사대상 및 물량 : 노지재배 채소류 등 89품목 1,800건
 - 조사기간 : 2 ~ 12월(약 10개월)

3. 추진실적

-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계획 수립(2월)
 - 농식품부의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1.28)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등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2.12)에 수립
 - 계획수립 후 주 단위로 전국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방사능 조사
- 방사능 조사실적 : 89품목 1,811건(목표대비 100.6%, 모두 적합)
- 방사능 조사결과 공개 및 관계기관 정보 공유
 - 방사능 조사결과 매주 농관원의 SafeQ홈페이지에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주 단위로 방사능조사결과 통보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방사능 조사 실적 1,800건
- ◇ 추진실적 : 1,811건(목표대비 100.6%)

□ 성과

- 주기적인 조사로 방사능 안전성 확인 및 결과공개를 통한 신뢰확보
 - 조사결과 모두 적합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파악됨
 - 조사결과는 매주 농관원의 SafeQ 홈페이지 공개 및 관계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

□ 문제점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에 따라 조사물량을 대폭 확대 하였으나, 국내산 농산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조사물량 조정 필요

□ 개선대책

- 방사능 조사지역을 지방방사능측정소(15개소)와 원전주변(4개소)으로 축소하고 조사물량도 합리적으로 조정
 - 원전사고 등 조사확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년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

5. 향후 추진계획

- '16년 농산물 중 방사능 안전성조사 계속 실시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⑤ 가축사육환경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서재호 서기관, T.044-201-2336)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한·미 FTA, 영연방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필요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2. 추진계획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도별 자금배정, 집행(연중)
 - 축종별, 시도별 축사시설 신·개축, 시설개선 등 사업 추진(1~12월)
 - 사업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 추진(3~11월)
 - 축종별 사업비 집행상황, 의무사항 준수여부 점검, 사업대상자 생산성 현황조사, 농가만족도 조사 등 실시
 - '1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12월)

3. 추진실적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추진
 - '16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사업비 가내시 통보 및 예산배정(10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도별 자금배정 및 집행(2~12월)
 - 축종별, 시·도별 축사시설 신·개축 등 사업 추진(2~12월)
 - 사업추진 현장 점검(4월, 8월) 및 사후관리 업무 추진(2~12월)

-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한 축종별 사업비 집행상황 점검(연중), 사업 대상자 변경내용, 의무사항 준수여부 점검 및 사업대상자 생산성 현황 조사, 농가 만족도 조사, 축사표준설계도 작성 등 사후관리 업무 추진
- 지자체별 업무사례공유 등 효율적인 업무향상 도모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및 생산자 단체 담당자 워크숍 추진(9월)
- '1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12.29)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지원농가 연간 모든 두당 출하두수 18.0
- ◇ 추진실적 : 지원농가 연간 모든 두당 출하두수 18.2 (목표대비 101%)

□ 성과

-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 및 축사시설, 축산기자재 등의 시설개선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제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정 : 667농가
- 차단방역, 악취방지, 사양관리 효율화 등을 고려한 ICT 융복합 축사 모델 개발을 통한 표준설계도 작성으로 시설 및 가축사육환경 개선 추진

□ 문제점

- 사업 지원 대상이 기존 가축사육 농가로 제한적이고 인허가 문제에 따른 공사 진행 지연 및 사업 포기로 사업 실적행률 저조

□ 개선대책

-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은 지속('16년 2,626억원)하는 한편, 지원 축종 및 대상 확대 등으로 농가 규모화 및 사업 집행률 제고 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16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도별 사업비 배정(연중)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계획 및 업무 추진(3~11월)
- 사업대상자의 축사시설 신·개축,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연중)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⑥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장재홍서기관, T. 044-201-2281)

과제 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식육·식용란)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로 국내 축산물 안전성 제고

2. 추진계획

- '15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1월~12월)
 - 식육 잔류물질 검사 : 143종 물질, 100천건 검사 계획
 -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 : 51종 물질, 6천건 검사 계획
 - 미생물 검사 : 식육 2종, 96천건, 식용란 3종 8천건 검사 계획

3. 추진실적

- '15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1월~12월)
 - 식육 잔류물질 검사 : 143종 물질, 177천건 검사(모니터링 검사 위반율 0.16%, 규제검사 위반율 0.49%)
 -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 : 51종 물질, 7.4천건 검사(위반율 0.23%)
 - 미생물 검사 : 식육 2종, 112천건 검사(권장기준 초과율은 0.07%), 식용란 3종 9천건 검사(살모넬라 등 검출실적 없음)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농축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율 0.57
- ◇ 추진실적 : 농축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율 0.63
- * 농산물: 90,197(부적합 1,232), 축산물: 159,351(부적합 359)

□ 성과

- 국내산 식육 미생물 검사결과 권장기준 초과율이 0.1%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도축장의 위생관리 상태 안정적
- 국내산 식용란 미생물 검사결과 살모넬라 등 검출실적 없어 위생관리가 매우 안정적
- 국내산 식육 잔류물질 검사결과 모니터링 검사 위반율*은 0.16%로 전년 대비(0.1%) 약간 높은 수준이나, EU 등 외국**에 비해 위반율이 낮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모니터링 : ('12) 0.09% → ('13) 0.05% → ('14) 0.10% → ('15) 0.16%

** 국가별 모니터링 위반율('12) : 미국 0.29%, EU 0.25, 한국 0.16

- 규제검사 위반율은 0.44%로 모니터링에 비해 위반율이 높아 잔류 의심축산물 관리에 효과적

* 규제검사 위반율 : ('12) 0.59% → ('13) 0.32% → ('14) 0.62% → ('15) 0.44%

- 국내산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물질 위반율이 0.12%로 전년(0.15%)과 비슷한 수준

* ('11)0.08% → ('12)0.08% → ('13)0.06% → ('14)0.15% → ('15)0.12%

□ 문제점

- 부적합 농산물은 2015년도 총 90,197건 검사 결과 부적합 및 기준 초과율은 1.4%로 전년도(1.3%)에 비해 소폭 상승

* 부적합비율:(('11)1.8% → ('12)1.5 → ('13)1.4 → ('14)1.3 → ('15)1.4

- 동절기 일기불순,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부적합율 증가

- 부적합 축산물은 2015년도 총 152,142두 검사 결과 잔류 위반율은 0.23%로 전년도(0.21%)에 비해 증가

- 전년 동기대비 돼지 규제검사 위반두수가 증가(210두→ 250두)하였으며 이것은 전염병 발생증가*에 따른 동물약품 사용 증가가 원인으로 추정

* 돼지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두수 : ('14) 37,549두(278농가) → ('15) 139,490두(323농가)

* 연도별 위반율(%) : ('11) 0.13 → ('12) 0.21 → ('13) 0.10 → ('14) 0.21 → ('15) 0.23

- 잔류물질 위반원인 분석결과 농가에서 휴약기간 미준수(66%)가 주 요인으로 확인되어 농가의 휴약기간 준수 미흡

□ 개선대책

- 축산농가의 휴약기간 준수 사항 확인 강화 추진
 - 축산농가 HACCP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이력관리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규제검사 강화 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잔류물질의 규제검사 비율을 상향(28→29%)하고, 정밀검사 세부 항목 일부 조정 안전성 검사 강화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①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종섭 사무관, T.044-200-5620)

과제 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어장에서부터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신종 유해물질 증가로 새로운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
 - * 중국산 납 꽃게('02), 송어양식장 말라카이트그린('05), 일본 방사능('11) 등
- 국내산(원양산 포함) 수산물 및 해수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 추진

2. 추진계획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15.2)

- 다소비, 대중성 품종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비브리오패혈증 등 위생안전 취약분야 중점 조사
 - * ('14년 계획) 10,630건 → ('15년 계획) 11,170건
 - ** 수산물 집중 조사 : 패류독소(3월), 장염비브리오균(6월), 굴 노로바이러스(11월)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중점조사, 실태지도·점검 및 교육·홍보('15.6)
 -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조리·섭취 등에 대한 교육·홍보·예산 및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위·공판장 등 수산식품 취급업소 위생 감시 강화
-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미승인물질 불법사용 지도·점검('15.6)

□ 국내산 수산물 및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 (수산물) 생산단계 수산물(원양산 포함) 검사품종 및 횡수 확대
 - * ('14년 계획) 23개 품종, 710건 → ('15년 계획) 25개 품종, 850건
- (해수)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지속 실시(9.6조치 해제 시까지, 원안위 협력)

* 21개 정점(분기 1회), 6개 정점 강화(제주도 남방 4개, 월 2회/울릉도 동부 2개, 월 1회)

○ (정보제공) 국내산 수산물 검사결과 홈페이지 주 2회 공개

□ 다소비 품종, 사회적 관심품종 등 중점 모니터링 실시(연중)

○ 생산량,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양식장, 위·공판장 등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조사 관리

□ 지자체 수산물 안전성조사 지속 실시(연중)

○ 관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지속 추진

□ 중앙-지자체간 수산식품 안전 협력 강화 협의회 개최(15.12)

○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논의

3. 추진실적

□ '15년도 생산단계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15.1.29)

○ 다소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수산물 중점조사(연중)

* '15.12월 12,759건 검사결과, 205건 부적합(출하연기 189, 폐기 7, 용도전환 9)

○ 수산물(원양산 포함) 및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지속 실시(연중)

* (수산물) '15.12월 현재 30품종 1,563건 검사결과 모두 적합(홈페이지 주 2회 공개)

* (해수) 21개 정점은 분기 1회, 6개 정점은 월 1회 이상 실시(제주 남방 4개 정점, 월 2회 / 울릉 동부 2개 정점, 월 1회)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지도·점검(15.5) 및 교육·홍보(15.4)

* (지도·점검) 13개 시·도 26개소(위·공판장, 도매시장) 수산물 및 해수 조사

* (홍보) 여름철 수산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15.4)

○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미승인물질 불법사용 지도·점검(15.7-9월)

* 12개 시·도, 102개소 양식장(넙치·뱀장어·송어 등 169건) 지도·점검

□ '15년도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15.11.26)

○ 안전성조사 관련 추진 시 문제점 발굴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총 15명 : 해수부 2, 수품원 2, 수과원 1, 지자체 10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수산물 안전기준 적합율 97.9%
- ◇ 추진실적 : '15년도 안전성검사 12,759건 실시하여 부적합은 205건으로 안전 기준 적합율은 98.3%로 목표를 초과 달성

□ 성과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지속 강화
 - 다소비·부적합 이력 품종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불량 수산물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
 - * 총 건수/부적합건수 : ('14) 12,922건/235건 → ('15) 12,759건/205건
 -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1년간(당초 6개월) 특별관리하고, 유입원 가능성이 있는 치어 종묘장 등 관리 강화
 - 검사결과 정보공개(주 2회)를 통한 알권리 제공 등 소통 활성화

□ 문제점

-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등 관리가 필요한 다소비 품종을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양식장 안전성조사 대상에서 일부 누락
- 양식장 현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미흡

□ 개선대책

- 조사물량 확대를 통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조사 지속 확대
- 다소비 품종 중 양식면적이 500m² 이상 양식장에 대해 5년내 1회 이상 조사토록 '16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양식장 현황 정보를 공유(반기 또는 연간)하는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

5. 향후 추진계획

-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16.1)
 - 다소비·부적합 이력 품종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조사 지속 실시(연중)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② 수산물 생산해역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경정 주무관, T.044-200-5618)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어장에서부터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 소비 격감 추세 완화

2. 추진계획

□ 패류 생산해역 수질, 병원성세균 등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71개소)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수행 대학교 선정 추진('15.1~)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추진 상황 점검('15.7)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 보고('16.2)

* 패류 생산·채취 시기상 위생조사가 다음연도 초까지 진행되어야 함

3. 추진실적

□ 패류 생산해역 수질, 병원성세균 등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71개 개소)

- 주요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위생관리를 위해 '15년도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사업 계획 통보('14.12.31)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실시를 위한 용역연구사업 설명회 개최(1.9)
- 정착성 수산동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회의 실시(4.2)

* 내수용 패류 생산해역 관리제도 도입의 정당성(어민의 피해우려 등)

* 패류생산해역 등급 설정을 위한 제도의 형태 및 대상해역 등에 대해 논의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중간점검 침 전문가 간담회 개최(9.23)
 - 위생조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급화 추진방안 등 논의
- '15~'16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10.7)
 -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시료채취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논의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실시 결과보고(12.15)
 - 생산해역 위생조사 실시 결과 및 향후 해역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4. 자체평가

□ 성과

- 국내 패류 생산해역 위생·오염원 관리 강화에 따른 수출 증대 가능
 - 미 FDA의 국내 패류생산해역 위생점검('15.3.4~11) 결과 한국의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 패류는 생산해역이 EU에서 정한 등급기준을 충족해야 통관 허용
 - 우리나라 5개 해역에서 강우량이 집중되는 6~9월간 EU 기준치 초과 (B등급으로 분류)되어 '14년부터 패류가 수출 금지되었으나, EU는 한국이 제시한 '계절적 분류(10~5월 : A등급, 6~9월 : B등급)' 방안을 수용·반영하여 한국의 패류가 '15.7.30일 이후 EU로 수출이 가능하게 됨

□ 문제점

- 수산물 생산해역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해상오염원 차단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취약하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음

□ 개선대책

- '17년 예산 확보 시 환경부에 적극 협조 요청

5. 향후 추진계획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조사 계획수립('15.12.31)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③ 국내 생산 천일염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수정 사무관, T.044-200-5449)

과제 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6.2월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천일염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토양 등의 위해요소 차단

- 천일염 생산해역 조사 등을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 및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효율적 생산체계 구축

- 낙후된 염전시설을 식품위생기준에 걸맞은 소재로 교체하여 고품질 천일염 생산 기반 마련

2. 추진계획

□ 천일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체계 구축

- 해역, 토양(갯벌), 기구·자재, 생산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조사('15.3~'16.2)
 - *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함유여부 조사
- 염전시설 및 기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개선(연중)
 - * 소금창고, 해주(海宙)의 지붕 등을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로 교체
- 염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염전원부 정리 완료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완료('15년 상반기)
 - * 소금산업진흥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 소금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15.3~'16.2)
 - * 소금산업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염전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2년에 1회 실시

3. 추진실적

□ 천일염의 위생·안전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식용천일염에 관한 안전성조사 실시('16.1 최종보고 예정)

- 취수해역 수질 검사 : 10개 해역 20개 염전을 선정하여 pH, 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중금속(납, 수은, 비소, 카드뮴), 취수해역 수질평가지수 등을 시기별로 4회 조사
- 염전 주변 저수지 및 제1증발지 토양의 안전성 평가 : 5개 중금속(구리,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에 대해 조사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염전 기구·자재 등의 안전성 조사
- 염전에서 수거한 천일염의 안전성 평가 : 시기별 4회, 60개소 염전에 대한 4개 중금속(납, 수은, 비소, 카드뮴) 함량 분석

○ 염전 바닥재 등 천일염 생산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진행 및 지자체와의 중간점검회의('15.4월, '15.11월) 개최

○ 지자체 염전원부 1차 취합 정리('15.4월) 및 소금산업 안전관리대책 수립 보고('15.2.24 보고)

○ 소금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중간점검회의 개최 및 최종 보고('16.2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예정)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소금수출 실적 13,177천불

◇ 추진실적 : 소금수출 실적은 10,467천불로 목표 대비 79% 수준

- * FTA확대로 소금수입량 증가에 따른 산지 소금가격 하락과 소금수출단가의 하락으로 당초 소금수출 실적 미달성(목표대비 79% 수준)

□ 성과

○ 염전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천일염의 위생적 생산환경 마련

○ 국산 천일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산 천일염에 대한 국민 신뢰 보호

○ 소금산업 현황조사를 통해 천일염산업 정책방향 수립 기초 자료 마련

□ 문제점

- 식약처의 저나트륨 운동 등 소금 섭취에 관한 부정적 언론보도에 따라 천일염에 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 자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특성상 갯벌성분이 소량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천일염의 위생논란 지속 제기 우려
- FTA확대로 소금수입량 증가에 따른 산지 소금가격 하락과 소금수출 단가의 하락으로 국산 소금수출액은 하락 추세

* 소금가격 추이(원/kg) : '12) 391 → '13) 294 → '14) 263 → '15) 195

□ 개선대책

- '16년 천일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통해 안전성 조사 결과를 대국민 홍보하여 국산 천일염의 안전성 및 건강 우수성을 강조
- 천일염 품질검사 관련 법령기준을 정비하여 품질관리를 강화
- 현재 3종으로 분리 운영중인 천일염 인증제를 통합 정비하고 국가 공인 인증을 받은 염전 확대
- 염전 시설개선사업을 지속 진행하여 천일염의 위생적 생산환경 마련
- **(성과지표 개선)** 산지 소금가격 하락과 소금수출단가의 하락으로 당초 소금수출액 실적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지표 재조정

* (당초) '16년 소금수출실적 13,572천불 → (개선) 소금수출실적 10,572천불

5. 향후 추진계획

- 천일염 소비촉진 및 품질관리사업계획 수립('16.1)
- 천일염 품질검사 관련 법령기준안 마련 및 관련법령 개정('16.6)
- 천일염 인증관련 법령정비안 마련 및 개정작업('16.12)
- 염전 시설개선사업 진행(연중)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④ 수산물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태환 사무관, T.044-200-5443)

과제 분류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의 위생·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시설기준 체계 확립을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산지 위판장 시설기준, 위생관리 인증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2. 추진계획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6)
 - 산지 위판장의 설치·운영, 위생관리, 시설기준, 생산 후 처리, 저온 유통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
- 산지위판장의 시설기준, 위생관리 인증제 등 도입 방안마련(‘15.12)
 -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산지 위판장의 시설기준, 위생관리 인증제 등 도입을 위한 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3. 추진실적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15.3.27)·시행(‘16.3.28)
 - 산지 위판장 설치·운영, 위판장 평가, 시설기준, 저온유통체계 구축,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이력추적관리 등 반영
- 수산물 유통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안 마련(‘15.12)

- 산지 위판장 관리·운영, 시설기준,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처리 제한, 수산물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등을 반영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13.7)」 관련 산지 유통인프라 확대 및 산지 수산물유통시설 위생관리 강화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2개소(제주·속초) 준공(15.4), 산지위판장 신축(4개소) 및 시설개선(11개소),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건립 1개소(영덕)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수산물 계통출하율 54.9%
- ◇ 추진실적 : 수산물 계통출하율 55.5%로 목표 대비 101%로 달성

□ 성과

- 수산물유통법 제정에 따라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 FPC·품질위생관리형위판장 건립, 노후화된 위판장 시설개선 및 재건축 등 산지유통인프라 구축으로 산지 수산물 위생수준 제고

□ 문제점

-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 시장의 수산물 유통시설의 노후화로 선도 관리 및 위생적인 취급에 한계(위판장 39%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

□ 개선대책

-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
- 산지유통시설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한 위생시설 기반 확충

5. 향후 추진계획

- 위판장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위생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 위생관리형 위판장으로 개선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시설 기반 확보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⑤ 수산물 안전성 조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윤재호 사무관 T.043-719-3273)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생산단계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국정과제 79-4)* 및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환경(어장, 용수, 자재) 등 안전성 확보
 - 유해 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 수산물 집중관리 및 유해 수산물 출하제한 등 조치

2. 추진계획

- 오염우려 해역 생산 어장환경 및 수산물 안전 관리(5,800건, 연중)
 - 오염우려 어장환경 및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방사능 등 안전검사
 - 오염우려 지역 생산 어장환경 및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 부적합 빈발 품목 특별관리(14품목) 및 다소비 수산물(40품목) 등 집중관리(5,300건, 연중)

3. 추진실적

-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 안전성 조사 7,780건(부적합 153건)
 - 오염우려 어장환경 및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방사능 등 안전검사
 - 5,715건 검사, 부적합 33건 출하제한 또는 폐기 등 조치
 - 오염우려 지역 생산 어장환경 및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 2,065건 검사, 부적합 120건 채취금지 조치

- 부적합 빈발 품목 특별관리(14품목) 및 다소비 수산물(40품목) 등 집중관리 5,768건(부적합 154건)

4. 자체평가

□ 성과

- 생산단계 오염우려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유해 수산물 유통판매 차단

□ 문제점

- 안전성조사 인력예산 및 장비 부족으로 조사 확대에 한계

□ 개선대책

- 관계기관 협업 강화 및 소요인력 및 예산 확충

5.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16년 분기별)
- 소요인력 및 예산 확보 추진('16)

[3-1-3]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① 축산물 유통 전[前]단계 안전성 검사 지속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송성옥 서기관 T.043-719-324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강화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 연간 국내 축산물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시행
 - 축산물 안전성 검사방향 설정 및 결과 분석·평가

2. 추진계획

- '14년 검사실적 분석 및 '15년 계획 수립 및 시행(1월)
 - 생산단계 안전성검사 계획(농식품부)을 포함한 축산물 안전성검사 종합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시달
- 관계부처 간 상호협력을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
 - 축산물안전성 조사·검사 협력을 위한 시도 워크숍 실시(11월)
 - '14년도 업무평가, '15년도 검사 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등 안전성 검사 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관계부처 실무자 간 실무 협의회 운영(반기별 1회 이상)
 - 축산물 안전성 검사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등 논의

3. 추진실적

- '14년 검사실적 분석 및 '15년 계획 수립 및 시행('14.12.31)
 - 생산단계 안전성검사 계획(농식품부)을 포함한 축산물 안전성검사

종합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시달

- 축산물 안전성 검사 총 396,921건(식약처: 14,468, 농림부: 382,453)중 1,896건 부적합(식약처: 228, 농림부: 1,668)

□ 관계부처 간 상호협력을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

-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계기관 간 워크숍 개최(11.26~27)
 - * '16년도 안전성 검사 방향 등 논의 및 지자체 등 현장 의견 수렴
- 관계기관(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고위급(국장급) 협의체 회의(1회, 12.11)
 - * 계란 안전성 강화 방향 설명,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지도 등 당부
- 식육 잔류물질 검사 소관 고시 개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4.2)
- 우리나라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EU 등록 추진을 위한 국내 안전성 검사 강화 방안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8.28)
 - * 곰팡이 독소, 중금속 등 검사물질 추가, 농장단계에서의 공무원의 시료 채취방안 등 협의

4. 자체평가

□ 성과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강화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검사 실시(연중)

[3-1-3]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② 위생취약분야 선제적 지도·점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 사무관, T.043-719-2054)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개요

□ 식품안전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

- 제조·가공업체의 시설, 위생관리 상황 등 지도·점검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한 지도·점검의 효율화 도모

□ 소비자 기만행위, 위생취약시기 부정축산물 특별점검

- 인터넷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하고 하절기 위생취약시기 특별점검 추진

2. 추진계획

□ 시기별, 계절별 위생 취약분야 선제적 지도·점검

- 설·추석 등 명절, 김장철 등 성수식품, 하절기 위생취약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전국 합동단속(4회)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효율적 감시와 위해정보교류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3회)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및 수출부적합 제품 관리 강화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및 수출부적합 제품(동일제품 국내유통 시)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원인을 개선토록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체 특별관리

- 최근 3년간 5회 이상 위반업체를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지속

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반행위 근원적 차단

□ 허위표시 등 인터넷 부정축산물 중점단속(2회)

- (자체) 인터넷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등 중점단속(1월)
- (합동) 인터넷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등 중점단속(10월)

□ 하절기 위생취약시기 특별점검

- 전국 축산물영업장 특별점검 및 취약제품 일제수거 실시(6~7월)

□ 중앙감시반 편성·운영(식약처·지자체)

- 축산물보관업·운반업 위생관리를 위한 실태점검(4월)

3. 추진실적

□ 시기별, 계절별 위생 취약분야 선제적 지도·점검

- 설,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합동 지도·점검(1.26~2.6, 8.19~28)
 -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4,388개 업체 점검, 235곳 적발
 -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2,476개소 점검, 168곳 적발
- 하절기 전국 합동점검 실시(6.29~8.31)
 -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11,511개 점검, 200곳 적발
-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11.3~11.14)
 -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3,498개소 점검, 117곳 적발
- 효율적 감시와 위해정보교류를 위한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 4회(2, 5, 9, 12월)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및 수출부적합 제품 관리 강화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업체에 대해 부적합제품 적정 처리여부 및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 점검('14.11~15.3)

* 4,365개소 점검, 85개소 적발

- 수출 부적합 정보에 따라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실시
 - * 5건 수거·검사, 4건 적합, 1건 부적합

□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체 특별관리

-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적 위반업체를 특별관리업체로 지정('14년 기준 41개소) 3개월 주기로 반복 점검 실시

□ 허위표시 등 인터넷 부정축산물 중점단속(2회)

- (자체) 29개소 33건 적발(1월), (합동) 21개소 23건 적발(10월)

□ 하절기 위생취약시기 특별점검

- 전국 축산물영업장 특별점검 및 취약제품 일제수거 실시(6~7월)
 - 4,670개소 점검, 165개소(175건) 적발

□ 중앙감시반 편성·운영(식약처·지자체)

- 축산물보관업·운반업 위생관리를 위한 실태점검(4월)
 - 93개소 점검, 14개소(15건) 적발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재위반율 13%
- ◇ 추진실적 : 재위반율 10.7%로 성과목표 달성
 - * 최근 3년간 적발업체 116,653개소 중 재적발업체 수는 11,746개소로 재위반율 10.7%

□ 성과

- 계절별로 국민 다소비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수준 향상에 기여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재위반율이 10.7%로서 목표(13%) 대비 초과 달성

* 재위반율(%) = (최근 3년간 재적발업체수 11,746개소 / 최근 3년간 적발업체수 116,653개소) × 100

□ 문제점

-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위반율이(30.0%) 높음

□ 개선대책

- 위생취약 및 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중점 점검
- 상습·고의적 위반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반복 지도·점검

5. 향후 추진계획

- 기본안전수칙 중심의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점검 실시
 - 위반율이 높은 업체 등 통계적 기반의 기획점검, 국회·언론 등 사회적 이슈의 특별점검, 기본적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3-1-3)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③ 단순가공 농·수산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위생수준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백길태, 운재호 사무관 T.043-719-327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위생관리 취약분야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신선편의 포장농산식품, 마른멸치·마른김 등 수산식품

2. 추진계획

단순가공 농·수산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위생수준 개선

○ 농·수산물 단순가공업체 실태조사 및 신규 발굴

시기별, 계절별 위생 취약분야 선제적 지도·점검

○ 단순처리 농·수산물업체 지도·점검(5월, 11월)

- 단순가공 및 신선편의 포장농산식품, 마른멸치·마른김 등 수산식품 생산업체 위생지도·점검 : 200개소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점검

- 위생 취약 단순처리 농·수산물 수거검사

「위생취약 수산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활용

○ 단순처리 수산물 가공업체 현장 지도 교육 등

- 자율위생관리 점검표 개발 보급 및 현장 지도·점검

3. 추진실적

농수산물 단순가공업체 실태조사 및 신규 발굴

○ 단순처리 농수산물 가공업체 추가확인(39개소)

- 단순가공 농수산물식품 안전관리 방안 협의회 개최('15.3.13)
 - * 식약처, 농식품부, 농관원, 수품원, 지자체 등 22개기관 45명 참석
- 단순가공 농수산물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5월, 11월)
 - 농수산물식품 단순가공업체 648개소 점검
 - * 1개소 고발(부패 수산물판매), 18개소 위생관리 미흡으로 현지시정
 - 단순가공 농수산물식품 115건 수거·검사
 - * 잔류농약, 중금속 등 (모두 적합)
- 「위생취약 수산물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활용
 - 관계기관에서 현장 지도·점검시 위생관리 점검표('15년 식품안전관리 지침) 활용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지도점검 업체수 200개소
- ◇ 추진실적 : 농수산물식품 단순가공업체 648개소 점검으로 목표 초과달성

□ 성과

-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관련업체 위생수준 향상
- 기초식품인 단순가공식품의 안전 및 국민 먹을거리 안심확보

□ 문제점

- 단순가공 농수산물식품업체 위생관리 미흡(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

□ 개선대책

- 지도점검 지속 추진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유도 및 위생관리 개선

5. 향후 추진계획

- 단순가공 농수산물식품업체 위생관리기준서 제작·배포
- 단순가공 농수산물식품업체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3-1-4) 제조단계 이물 등 위생관리 강화

① 제조단계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 지원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임현진사무관, T.043-719-2052
식품관리총괄과 성준현연구관, T.043-719-205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식품 중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해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 지원

* 이물 신고현황(건) : ('11)7,491 → ('12)6,540 → ('13)6,446 → ('14) 6,419 → ('15)6,017

2. 추진계획

-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협업체) 활성화 추진

- 대기기업이 멘토가 되어 중소기업에 이물관리 정보 및 이물 저감화 공정 등 기술적 노하우를 지원하는 이물관리 네트워크 확대 운영
- 6개 지방청 중심으로 멘토-멘티를 선정하여 분기별 운영
- 이물혼입 행정처분 사례가 많은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음료류 및 지역 내 취약업소 등을 반영한 네트워크 활동 독려

- 식품제조·가공 관련 동업자조합의 자율적 위생관리 지원 및 관리

- 식품 동업자조합별 자율지도원 운영·감시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 식품 동업자조합별 자율지도원에 식품위생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 도모

3. 추진실적

- 대기기업(멘토)-중소기업(멘티) 간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운영

- 이물관리 우수업체(멘토) 현장견학 및 이물발생 저감화 기술 공유, 중소기업 이물 저감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109개 업체 참여)

구분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합계
대기업(멘토)	3	7	4	4	6	5	29
중소기업(멘티)	7	14	11	4	24	20	80

□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율적 위생관리 지원 및 관리

-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서 지켜야할 ‘기본안전수칙’ 리플릿 등 제작·배포(3만부 배포)
 - *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으로, 건강진단, 수질기준, 방충·방서시설, 자가품질검사, 이물관리, 보관기준 등
- 식품제조·가공업체 종사자 대상 전국 순회 위생교육 개최(4.7~5.18)
 - * 전국을 1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식품제조가공 업체 종사자 2,874명 교육
- 식품 동업자조합 대상 위생 점검 항목 및 관리요령 등 교육 지원
 - * (사)한국떡류가공협회(156명, 4.14.), (사)대한제과협회(132명, 4.22)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이물저감화 네트워크 참여업체수 120개소
- ◇ 추진실적 : 이물저감화 네트워크에 대기업(멘토)-중소기업(멘티) 109개소 참여

□ 성과

- 업계 간 상생(相生)적 이물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업계 자율적 이물관리 수준 향상
 - * 이물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10년 대비 38% 감소
 - * (’10) 9,740건 → (’12) 6,540건 → (’14) 6,419건 → (’15) 6,017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기존 운영방식은 대기업 1개소와 중소기업 4~5개소를 한 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가능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대기업의 피로도 및 네트워크의 효율성 측면에서 1:1 매칭 체계로 전환하였음
- 일부 업체의 경우 작업장 공개,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투입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여, 우수업체 포상 및 사례집 제작 등을 통한 유인책 마련

5. 향후 추진계획

-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성과를 반영한 이물관리 우수사례집 제작·보급(16.9)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①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 및 교육 강화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한상균 사무관, T. 063-238-0830)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부정·불량 농약 유통점검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

- 부정·불량 농약 단속 및 교육 강화로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 확대
 - * 법적 근거: 농약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유통농약의 검사계획 수립, 품질 검사 수행)
- 농약의 안전사용 교육을 통한 농약의 오·남용 방지 효과 제고

2. 추진계획

□ 불법 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다각적 유통단속 체계 구축

- 양질의 농약 공급을 위한 품질 검사(300점/년간) : 연중
 - 검사 내용: 주성분, 물리성(수화성, 분말도, 유화성 등) 등 품질 확인
- 부정·불량 농약 유통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시점검 : 연중
 - 점검 내용: 밀수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규정위반 여부 등
 - * 특별사법경찰관(11명), 명예지도원(141명) 활용 불법농약 유통 근절

□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 농약관매관리인(농협, 시판상, 농약업체) 안전사용 교육: 격년
- 농업인에 대한 농약 등의 안전사용 교육: 1~4월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홍보: 연중
 -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사용 기준준수 등 홍보: 신문기고, 팜플릿 등

3. 추진실적

□ 불법 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다각적 유통단속 체계 구축

- 시중 유통농약의 품질검사: 315점 분석(목표대비 105%)
 - 검사내용: 주성분, 물리성(수화성, 분말도, 유화성 등) 등 품질 확인
- 부정·불량 농약 유통방지를 위한 유통점검 및 불시점검
 - 민간 명예지도원(141명)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 점검: 4회
 - * 125개 시군 939개 판매업체 점검하여 148건 적발
 - *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112개소 적발(1차 시정권고 108, 2차 과태료 4)
 - 유관기관(경찰청, 관세청)의 공조체제로 불법 농약 유통근절
 - * 부처(경찰청, 관세청 등) 협업으로 밀수농약 판매업자((‘15) 5명) 적발

□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 농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교육 : 267,904명
 - 농약 안전사용·취급제한 기준 준수, 농자재 가격표시 이행 등
 -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265,133명), 지자체 공무원 교육(1,241명), 농약관관리인 교육(1,504명, 농협 포함)
- 농약의 안전사용 및 불법 농자재유통 근절 위한 각종 홍보 및 보도



<실사판넬 등 설치(15개)>

<홍보현수막 설치(20개지역) >

<신문보도>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농약의 품질검사 건수 300건

◇ 추진실적 : 농약의 품질검사 건수 315건

□ 성과

- 불량 농자재 차단을 위한 시중 유통농약의 품질검사 실시('15년 315점)
- 농자재 명예지도원, 시군 지자체 공무원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 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
-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및 안전사용 기준 준수 교육·홍보를 통하여 농약의 오남용 방지에 기여

□ 문제점

- 부정·불량 농약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로 밀수 농약 유통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과수 주산단지에서 여전히 사용

□ 개선대책

-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맞춤형 유통관리 방안 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부정·불량 농약 유통단속 및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② 농약직권등록 및 직권그룹화 적용방안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중 사무관, T. 063-238-0824)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 등록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
- 농약의 약효·약해, 작물잔류성, 그룹화 연구 등 시험 연구

2. 추진계획

□ 농약 직권등록 시험결과 우수 약제 등록(4월)

- 2014년도 농약직권등록 시험결과에 따른 농약 등록
 - * 그동안 직권등록 실적 : 75작물 790병해충 대상농약 234품목 등록(누계)

□ 2015년도 농약직권등록 시험 수행(1~12월)

- 2015년도 농약직권등록시험 약제선정 설계협의회 개최 : 1월
 - 시험분야 : 약효·약해시험(1년 2포장), 작물 잔류성시험(1년 1포장)
- 2015년 소면적농약 등 직권등록을 위한 시험 추진 : 2~12월
 - 대상 : 소면적 작물, 수출 유망 작물용 대상 농약
 - 내용 : 약효·약해, 작물 잔류성, 약효약해 그룹화 실증 연구 등
 - * 사업 예산 : ('13) 25억 → ('14) 30억 → ('15) 30억
- 시험 결과 선발된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 추진 : '16. 4월

3. 추진실적

□ 농약 직권등록 시험결과 우수 약제 등록(4월)

- 2014년 시험결과에 따른 농약 등록: 18작물 49품목 62적용대상
* 직권등록 실적 : 79작물 852병해충 대상농약 240품목 등록(누계)

□ 2015년도 농약직권등록 시험 수행(1~12월)

- 2015년도 농약직권등록시험 약제선정 설계협의회 (1.20)
 - 약효·약해: 살균제 10항목 43품목, 살충제 16항목 68품목
 - 작물 잔류: 105품목 125종 농약성분
- 2015년 소면적농약 등 직권등록을 위한 시험 추진 (2~12월)
 - 대상 : 소면적 작물, 수출 유망 작물용 대상 농약
 - 내용 : 약효·약해, 작물 잔류성, 약효약해 그룹화 실증 연구 등
 - * 사업 예산 : ('13) 25억 → ('14) 30억 → ('15) 30억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농약 직권등록 50 품목
- ◇ 추진실적 : 농약 직권등록 49 품목

□ 성과

-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 등록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 들깨, 멜론 등 소면적 재배작물 작물 농약품목 등록
- 소면적 재배작물의 약효·약해 그룹화를 위한 기초연구 완료로 작물군별 등록이 가능하여 향후 농약 등록 확대가 예상됨

□ 문제점

- 개별 작물별 약효·약해 시험을 통한 등록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대표작물 약효·약해 시험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물군별 등록제도 조기 도입 필요

□ 개선대책

- 약효·약해 분야의 작물군별 등록제도 도입 ('16년)

5. 향후 추진계획

- 시험 결과 선발된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 추진('16. 4월)
-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작물군별 약효·약해 등록기준 마련('16. 9월)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③ 농약 위해성 재평가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중 사무관, T. 063-238-0824)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 내용

□ 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

-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준 설정
- 유효기간 만료('15) 농약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

2. 추진 계획

□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연중)

- 농약 원제, 품목 및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500여건)
-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사용·취급제한기준 설정

□ 유효기간 만료('15) 농약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12월)

- 평가대상 및 분야 : 96품목, 인축독성·생태독성·작물 및 토양잔류성 등

3. 추진 실적

□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 501건

- 신규·재등록 신청 농약 및 원제의 안전성 평가 및 등록
 - 등록신청 농약 329건, 재등록신청 농약 91건, 등록신청 원제 81건

□ 사용중인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및 결과 조치

- 검역용 농약 안전성 재평가(에틸포메이트 훈증제 1품목)
 - 평가결과 : 인축독성을 저독성(IV급)으로 구분하고, 저독성 농약

의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여 취급·사용하도록 조치

- EU 한시적 사용금지 농약 꿀벌 위해성 재평가*(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등 3종)
 - * 꿀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국내 신규 및 변경등록을 금지. 다만, 꿀벌 노출 가능성이 없는 수간주사용, 육묘상 처리, 꽃이 피지 않는 작물 등은 제외
- 미국 사용금지 농약 꿀벌 위해성 재평가* 착수(디노테푸란 성분 함유 농약)
 - * 꿀벌 위해성 재평가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되, 평가 완료시까지 신규·변경등록 제한 및 꿀벌 위해 가능성 경고문구 강화 등 조치

□ 유효기간 만료(15) 농약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 91품목(목표대비 100%)

- 재평가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89품목은 재등록
- 재등록 미신청 2품목은 등록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등록말소 조치

□ 농약의 안전사용·취급제한 및 검사기준 등 안전기준 설정

- 작물 잔류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 506건
 - 추가설정 : 감자, 취나물, 멜론 등 61작물 223품목 469건
 - 변경설정 : 배추, 사과, 포도 등 13작물 23품목 37건
- 신규 농약의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설정 고시: 아이소페타미드 등 4종
- 농작업자 노출평가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등록기준 개정 고시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농약 위해성 재평가 건수 91건
- ◇ 추진실적 : 농약 위해성 재평가 건수 91건

□ 성과

- 신규 등록신청 농약 및 재등록신청 농약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토양오염 방지에 기여
- 유럽연합 한시적 사용금지 농약 및 검역용 훈증제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 및 농약의 사용·취급자, 환경생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농약 위해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사용·취급제한 등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살포 작업자에 대한 노출 평가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등 농약 안전성 확보에 기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계속)
- 유효기간 만료('16) 농약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359품목)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정윤구 사무관 T: 031-467-4304)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 내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실시

* 해당 약품의 효능·효과·용법·주의사항·기준 및 시험방법 등

- 최신의 과학 수준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

신약 재심사* 실시

* 신약으로 허가받은 약품에 대한 효능·효과·부작용 등

- 재심사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판 후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 재심사

2. 추진 계획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8월~12월)

- '15년 재평가 공고(안) 의견조회 및 실시공고(8월)
 - 총 20제재 187품목(백신류 등 생물학적 제재 16품목, 항생제 등 화학제재 171품목 예상)

- 재평가 시안열람 및 이의신청(12월)

- '16년 재평가 실시대상제제 품목* 예시(12월)

* 품목수는 허가 취소 등으로 변경 가능

신약 재심사 실시(연중)

- 대상 : 생물학적 제제 등 33품목(예상)

* 품목수는 허가 취소 등으로 변경 가능

3. 추진실적

□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 생물학적 제제(백신류 등) 6품목, 화학제제(항생제, 항균제 등) 85품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
- 2016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9월)
- 2017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제제 품목 예시(12월)

□ 신약 재심사 실시

- '15년 생물학적제제 20건, 화학제제 5건 재심사 및 보완 처리

4. 자체평가

□ 성과

- 동물용의약품 91품목(33품목 진행 중)에 대한 재평가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를 강화함
- 신약 재심사 대상 생물학적 제제 20품목 및 화학제제 5건에 대한 시판 후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 관리를 강화함

□ 문제점: 해당사항 없음

□ 개선대책

-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 대상 제품에 대한 업체 홍보로 재평가 및 재심사 효율성 제고

5. 향후 추진계획

-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총 16제제 351품목)
 - 설파제 및 아미노글리코시드계 항균제제 : 12제제 304품목
 - 생물학적 제제 : 4제제 47품목
- 신약 등 재심사 실시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② 우수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돈환 사무관 T: 031-467-4302)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GMP) 사후관리 지속 추진

- 제조 및 품질관리(GMP)에 대한 점검으로 동물용의약품 품질 향상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실시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보급

2. 추진계획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GMP) 사후관리(6월)

-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점검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25개소(예정) 사후관리 실시(6월)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7~9월)

3. 추진실적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GMP) 사후관리(6월)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25개소 사후관리 실시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8~12월)

-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제 추진 계획 수립(8월)
-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실시(8~10월), 우수업체 평가 및 시상(12월)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율 61%
- ◇ 추진실적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 참여율 60.2%

□ 성과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25개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사후관리 점검 실시로 우수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공급 기반을 구축
-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약 60%)가 사전 예방적 품질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개선하여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공급에 기여

□ 문제점

-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중 수입업체 참여율이 약 50%로 저조

□ 개선대책

- 자율점검제 참여업체의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점검제 실시 요령과 우수 사례에 대해 업체 설명 및 자율점검제 홍보
 - 특히, 동물용의약품 수입업체의 자율점검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수입업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점검 홍보 및 참여 독려

5. 향후 추진계획

-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GMP) 사후관리 추진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등 자율점검 실시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③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방역과 권문경 연구관, T.051-720-304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실시 및 신약 등 재심사 실시

-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 신약 시판 후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 재심사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체 약사감시 실시

-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예방·확산방지 필요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 등 수거·감정을 통한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2. 추진계획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마련

- 차별화된 개념정립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 제·개정 계획수립('15)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규정 발전 방안 수립('16)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 계획 수립('15)

- 수산용 항생·항균제 등 재평가 계획('15) 및 재평가 실시('17) 등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15.6)

- 양식장 등에 사용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사용 방지 등 관리체계 마련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수거·검정 계획 수립(15.7)

3. 추진실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마련

- 차별화된 개념정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제·개정 및 발전방향을 위한 현안대응과제 수행(15.3~12)

* ‘수산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검정 및 평가기준 설정’ 최종보고(15.12)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 계획 수립(15)

- 수산용 백신 3개 제품의 재심사 수행 중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15)

- 수산용의약품 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약사감시 등 계획 수립

- 수산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백신검정, 제조업변경 등 473건 완료(현재)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수거·검정 계획 수립(15.7)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지도 및 점검

- 12개 시·도의 102개소 양식장의 양식어류 173점 점검·검사(4개소 불합격) 및 수산용의약품 홍보·지도 2,500건

- 제주관내 출하전 넙치의 불법약품 사용 실태 및 안전성 조사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수거·검정 및 약사감시원 교육

- 12개 시·도에서 77점 수거·검사 및 1회 약사감시원 교육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품목허가 752건, 수거·검정 횟수 82회

◇ 추진실적

○ (품목허가)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품목허가는 584건으로 목표대비 78% 수준

○ (수거·검정) 수거·검정은 77점으로 목표대비 94% 수준

* 제조(수입)업체의 제품개발 물량에 따라 품목허가 물량변동과 항인생제 사용량 감소로 신규·변경 제조품목 허가 물량이 감소

□ 성과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지도 및 점검
 -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등 지도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
 - * 지도·점검 양식장수 : ('13) 61개소 → ('14) 103개소 → ('15) 102개소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수거·검정
 - 제조업체 및 수산질병관리원 등에서 제조·판매되는 의약품분석
 - * 수검검정 물량 : ('14) 80점 → ('15) 77점
- 수산용의약품 전자민원 시스템 구축
 - 수산용의약품 인허가 업무 소요기간 단축 및 투명성 제고

□ 문제점

- 제조(수입)업체의 제품개발 물량에 따라 품목허가 물량변동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지정에 관한규정'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 감소로 신규·변경 제조품목 허가 물량 감소

□ 개선대책

- 성과지표 측정사항을 개선하여 품목허가 변동 사항을 반영할 계획
- 수산용의약품의 수거검정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5. 향후 추진계획

- 수산현실에 맞는 수산용의약품 관리규정 마련을 위하여'수산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검정 및 평가기준 설정'보고서 발간

[3-1-7] 사료안전관리 강화

① 사료 품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 성 사무관, T.044-201-234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 확대 및 TMR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

2. 추진계획

-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검정 확대

- 연간 사료 검사·검정 계획 수립·시달(12월)
- 사료 제조·유통단계에서의 검사·검정 실시(1~12월)
 - * 사료 검사·검정 물량 : ('14년 계획) 4,200점 → ('15년 계획) 4,350

- TMR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

- TMR 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자금(40억원, 용자) 집중 지원으로 HACCP 업체 13개소 추가 지정('20년까지 90%로 확대)
 - * TMR 업체 HACCP 지정(누계): ('13) 43개 → ('14) 52 → ('15) 65 → ('20) 140

3. 추진실적

- 연간 사료 검사·검정 계획 수립·시달(1월)
- 사료 제조·유통단계에서의 검사·검정 실시(1~12월)
- 사료 검사·검정 확대: (계획) 4,350점 → (실적) 4,406
- TMR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 (계획) 65개소 → (실적) 66
- HACCP 지정업체 전체에 대한 정기심사 실시: 146개소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TRM 사료공장 HACCP 지정 65개소
- ◇ 추진실적 : TRM 사료공장 HACCP 지정 66개소(목표대비 101.5%)

□ 성과

- 사료 검사·검정 물량 확대 및 TMR 업체 HACCP 지정 확대로 사료 품질·안전성 관리 체계 강화하여 안전한 사료 공급

□ 문제점

- TMR 업체에 대한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 중 시설개보수자금 집중 지원 계획이었으나, TMR 업체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금리가 4%(생산자 3%)로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정책금리 이점 상실로 TMR 업체의 사업신청 유인 부족

□ 개선대책

- TMR 업체의 HACCP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 지원 및 HACCP 활성화 추진
 - 시설신규지원 및 보완지원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융자 100%(연리 2%, 2년거치 일시상환)

5. 향후 추진계획

- 사료 검사·검정 지속 추진 및 TMR 업체 HACCP 지정 확대

[3-1-7] 사료 안전관리 강화

② 친환경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 연구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료연구센터 한현섭 센터장, T.054-230-360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고품질의 안전한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사료의 등록성분과 안전성 성분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

- 사료관리법 및 사료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매년 분기별 검사

2. 추진계획

□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검정 강화

- 연간 사료 검사·검정 계획 수립·시달('15.2월)
- 사료 제조·유통단계에서의 검사·검정 실시('15.3~12월)
 - * 사료 검사·검정 물량 : ('14) 180점 → ('15년 목표) 200점
- 사료검정 항목 40성분 추가('15.1월)
 - * 사료 검사·검정 항목 : ('14) 47항목 → ('15년) 87항목

□ 사료검정 물량 확대 및 장비 보강

- 사료 품질·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정물량 확대 및 장비 보강
 - * 사료검정 물량 : ('14) 180점 → ('15) 200 → ('16) 200 → ('17) 200
 - * 연차별 사료검정장비 확충 : ('14) 2종 → ('15) 5 → ('16) 5

3. 추진실적

□ 양어용 배합사료 품질 및 안전성 성분 검정

- 시도별 검사의뢰 시료 192점 778건 분석 및 검정

합계 (점/건)	품질성분			안전성 성분	
	일반성분	무기물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멜라민 MG 등
200/811	198	53	284	64	212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사료검정 물량 220점
- ◇ 추진실적 : 사료검정 물량 건수는 200점으로 목표대비 91% 수준

□ 성과

- 사료 안전성 성분 검사 강화를 위한 장비보강(5종)
 - HPLC, ICP, 조섬유분석기, Microwave digestion system, GC

□ 문제점

- 사료검사는 연간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검사 물량을 배정하여 시료 수거 및 검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계획 물량 대비 검사 의뢰가 부족한 경우 발생

□ 개선대책

- 연간 사료검사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사료검사 의뢰 물량이 계획 물량에 부족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5. 향후 추진계획

- 4/4분기 검사의뢰 시료 검정

[3-1-8]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① 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

(담당자 : 환경부 수도정책과 김경록 사무관, T.044-201-7112)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인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 실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수질 감시항목 지속 확대

2. 추진계획

수돗물 원·정수 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연중)

- 조사항목(63종) : 먹는물 중 우선관리대상물질(23종), 수질모니터링 후보항목(13종), 과불화물 및 의약품 등 신규 관심물질(27종)
- 조사대상 정수장(70개소) : 지역분포, 시설규모, 처리공법 고려
- 조사주기(3회/년) : 저수기, 갈수기, 풍수기 포함

신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 확대 검토('15.12월)

- 위해도, 검출농도 및 빈도에 따라 수질기준 또는 감시항목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국내 측정분석 수준과 처리기술을 고려하여 기준치 설정

3. 추진실적

70개 정수장 원·정수 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6월, 9월, 12월)

- 조사항목(63) : 먹는물 중 우선관리대상물질(23종), 수질모니터링 후보항목(13종), 과불화물 및 의약품 등 신규 관심물질(27종)

□ 신규로 추가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은 없음

- 함유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인체노출평가 및 인체위해도 평가에서 모든 조사항목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됨

□ 수돗물 중 유해물질 관리강화 기반 마련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고시 개정('15.8)
 - 우라늄 조사대상 시설 확대 및 검사주기 강화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15.10)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조사대상 정수장 수 70개소
- ◇ 추진실적 : 전국 70개 정수장에 대해 63개 항목 조사 실시

□ 성과

- 수돗물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해 검사, 인체위해도 평가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

□ 문제점

- 환경관련 R&D 예산 축소로 본 과업의 예산도 '16년부터 15% 삭감되어, 중장기적으로 사업 계획 축소 우려

□ 개선대책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사항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16년 미량물질 조사계획 수립·시행

[3-1-8]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②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감시

(담당자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고휘석 사무관, T.044-201-7183)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지하수오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사고 예방

- 갈수기 급수취약시설 대상으로 먹는물(지하수)의 병원성미생물 감시
-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상시 운영

2. 추진계획

□ 갈수기 급수취약시설 병원성미생물 안전관리 및 감시 강화('15.2~5)

- 소규모수도시설(200~300톤/일, 365개소) 중 노후시설('90년 이전 설치) 조사(50개소)
- 급수취약시설의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 배포('15.1월)

□ '15년도 전국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운영('15.5~12)

- 5개 권역별로 소규모수도시설(100~200톤/일)의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 (총 50개소)
- 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시 권역별* 비상연락 및 신속한 사고대응 시스템 운영

* 전국 5개 권역을 과학원(본원) 및 4대강 물환경연구소 등 5개 기관이 분담

3. 추진실적

□ 군부대 및 다중이용시설 등 80개소 노로바이러스 조사('15.1~3월)

- 군부대 19개, 학교 32개, 마을상수도 11개, 다중이용 및 개인시설 18개
- * 5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엔테로바이러스는 미검출 → 관리요령 통보

□ 갈수기 급수취약시설의 병원성미생물 안전관리 강화(3~5월)

- 지방(광역)상수도 미보급 소규모수도시설 50개소 조사
- * 노로바이러스는 불검출이나 34개소에서 염소소독 불량 → 관리요령 통보

□ 소규모수도시설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운영(6~12월)

-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51개 시설 조사
- * 노로바이러스는 불검출이나 44개소에서 염소소독 불량 → 관리요령 통보
- 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시 권역별* 비상연락 및 신속 대응 시스템 운영(상시)
- * 전국 5개 권역을 국립환경과학원 및 4대강물환경연구소 등 5개 기관 분담

□ 급수취약시설의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 발간·배포('15.1월)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감시지점 수 180개소
- ◇ 추진실적 : 총 181개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 실시

□ 성과

-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조사(181개소) 및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운영을 통해 급수취약지역의 먹는물 안전성 강화
- 현장 교육, 매뉴얼 배포로 시설 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16년 갈수기 취약급수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3-1-8]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③ 먹는 샘물 수질 안전성 강화

(담당자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이광용 사무관, T.044-201-7188)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먹는샘물 중 미량 유해물질 함량조사 등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2. 추진계획

□ 먹는샘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

- 53개 제조업체의 제품수 및 164개 취수공별(원수) 조사(연 2회)
- 지질기원(바륨 등 28항목) 및 제조·보관과정에서 생성 우려 물질(아세트알데히드 등 6항목) 등 총 34항목

□ 신규 먹는샘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 확대 검토('15.12월)

- * 위해도, 검출농도 및 빈도, 주요 선진국의 수질기준 설정현황, 물질별 특성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질기준 또는 감시항목 확대 여부 등을 결정

3. 추진실적

□ 먹는샘물에 대해 '우라늄' 수질기준(30 μ g/L) 지정

- 먹는샘물(원수 포함)이 우라늄 수질기준 초과시 취수정 개발제한, 제품수 회수·폐기 조치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15.11.23)
- 우라늄 수질기준 설정 이전에 취수정 및 제품수가 우라늄 감시기준(30 μ g/L) 초과시 조치를 위해 “먹는샘물의 우라늄 관리지침” 마련·시행(2.17)

□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

- 먹는샘물 중 라돈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방안 마련·권고(8월)

- 유통중인 제품수(40개) 조사결과 국외기준을 초과하는 항목 없음.
- 반기별 수질기준 외 신규 유해물질*의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새로운 수질기준 항목의 추가여부 검토에 활용
- 무기물질 함량 전수조사 실시(30개 항목, 170개 취수공, 53개 업체)
-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결과(제품수 66개) 국외기준을 초과하는 항목 없음
 - * 소독부산물(클로레이트, 클로라이트), 용기유래 환경호르몬(BPA, DEHA 등), 자연유래물질(몰리브덴, 니켈, 안티몬, 바륨, 우라늄, 라돈 등) 총 33개 물질
-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10.30)
 -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수질기준 외 유해물질의 검출시 조치(공표, 회수·폐기 등)근거 마련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먹는샘물 수질감시 항목 수 3개 항목
- ◇ 추진실적 : 감시항목 3개(안티몬, 우라늄,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년2회 실시
 - * 안티몬, 우라늄(원수 53개 업체, 제품수 66개), 포름알데히드(제품수)

□ 성과

- 먹는샘물내 우라늄 항목을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먹는샘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

□ 문제점

-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관리필요성이 부각되는 유해물질이 나타남에 따라 수질기준 관리 항목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 개선대책

- 신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출빈도,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질기준 또는 감시항목 추가여부 검토

5. 향후 추진계획

- 먹는샘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16년)
- 신규 먹는샘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 확대 검토('16.12월)

3-2. 유통 · 소비단계 안전관리

(3-2-1)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식약처)

① 유통단계 가공식품 및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성준현 연구관, T.043-719-2055)
 축산물위생안전과 김성일 사무관, T. 043-719-324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위해우려 국민 다소비 가공식품 및 불량 축산식품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2. 추진계획

- 유통단계 가공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가공식품)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월1회) 및 하절기·김장철 등 다소비 품목(6월, 12월) 등 수거·검사
 - (축산물) 조제유류 등 분기별 1회 특별검사 및 하절기 등 취약기간 집중 수거·검사(13,000건 → 13,740건)
 - * 자가품질검사 대상 완화에 따른 식육가공품 검사 물량 5,140건으로 확대('14년 3,996)
- 시기별·테마별 위생점검 실시
 - 허위과대(1월), 자사제조용 수입축산물(3월), 하절기 위생점검(6-7월), 축산물수입판매업(11월), 연말연시(12월) 등
- 영업자 단체 등을 활용한 자율지도·계몽 활성화(연중)

3. 추진실적

-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이력 품목 등 수거·검사 실시
 - (가공식품) 유통 중인 가공식품에 대해 부적합율이 높거나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총 126,073건 수거검사, 393건 부적합*

- * '16.1.5자로 조회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수거검사 자료
- 설 성수식품(1,508건, 1.26.~2.6), 하절기 다소비 식품(1,611건, 6.15.~8.31), 추석 성수식품(1,609건 9.8.~9.17), 김장철 성수식품(713건 11.2.~11.13) 등
- 외국 부적합 사례·식품사고 등 해외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국내 유통여부 확인 및 수거검사(연중)
- * 중국산 대나무 도마 중 포름알데히드 검사(4.28), 필리핀산 건조코코넛 제품 중 이산화황 검사(10.6) 등 총 24건 검사

○ (축산물) 조제유류 등 14,468건 수거·검사, 228건 부적합

- * 자가품질검사 완화(품목별→유형별)에 따라 식육가공품의 수거검사 강화 ('14년 3,087건 → '15년 3,369건)

□ 시기별·테마별 위생점검 실시

- 인터넷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등 기획점검(2회 적발 50개소)
 - (1차) '15.1월 적발 29개소(33건), (2차) '15.10월 적발 21개소(23건)
- 성수기 등 축산물 보관·운반 위생관리 점검(4회 679개소, 위반 123)
- 어린이 다소비 축산물 생산업소 및 자사제조용 수입축산물 특별 점검(2회 106개소, 위반 17)
- 하절기 위생취약 분야 일제점검(4,670개소, 위반 165) 및 축산물수입 판매업(축산물보관업 포함) 위생점검(96개소, 위반 5)
- 언론 문제제기·우려에 따른 긴급점검 (5회 1,742개소, 위반 101)
 - * 알가공업 폐기계란 등 원료 사용(131개소, 위반 17), 훈제 식육가공업(106개소, 위반 9), 식육 운반 위생관리(49개소, 8), 축산물 할랄 인증 표시·광고 (43개소, 5), 안전관리인증 식육포장처리업(1,411개소, 위반 62)

□ 영업자 단체 등을 활용한 자율지도·계몽 활성화(연중)

- 영업자 단체별 자율지도원 대상 '식품위생 교육프로그램' 지원
 - 교육프로그램명: 위생감시 시책방향, 위반업소 적발 및 행정조치 등
 - * 지원기관: (사)한국떡류가공협회(156명, 4.14.), (사)대한제과협회(132명, 4.22)

- 영업자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배포(9,000부, '15.12)
 - * 식육판매업(6,000),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1,000), 식용란수집판매업(2,000)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 120,000건,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13,740건
- ◇ 추진실적 : 유통식품 수거검사 126,073건,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14,468건

□ 성과

- 국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기준규격 수거검사를 통해 위해 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한 안전관리로 소비자 피해 예방
 - * 가공식품 수거검사 건수: (성과지표) 120,000건 → (실적) 126,073건
 - *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성과지표) 13,740건 → (실적) 14,468건

□ 문제점

- 위해우려, 소비트렌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건수 위주 수거·검사에서 탈피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필요

□ 개선대책

- 일상적인 건수 위주의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부적합 이력, 소비트렌드, 위해우려 항목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수거·검사 강화

5. 향후 추진계획

- 가공식품 등의 목표 건수를 조정하고, 위해우려, 소비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검사 강화

[3-2-1] 유통 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②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 신속 검사 체계 구축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백길태 사무관 T.043-719-3272)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 내용

- 위해 농수산물의 유통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중 판매 前 단계인 도매시장에 신속 수거·검사 체계 구축

* 33개 공영 도매시장중 현재 12개 현장 검사소가 운영중임

2. 추진 계획

- 공영 도매시장 농수산물 현장 신속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15년도 4개시·도 신속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밀 검사 장비 구입 예산 국비 지원 사업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14.12)
 - GC-MS/MS, LC-MS/MS 등 농수산물 정밀 검사 장비 신속 구입·설치
 - * 인천(구월), 대전(오정), 충남(천안), 경북(안동)
 - 공영도매시장 현장 신속 수거·검사 체계 연차적 확대

3. 추진 실적

- 공영 도매시장 농수산물 현장 신속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15년도 4개시·도 신속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밀 검사 장비 구입 예산 국비 지원 사업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14.12)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24시간 운영하는 농수산물 현장 검사소 4개소(인천, 대전, 천안, 안동) 확대 구축

* 33개 공영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14) 총 12개소 → ('15) 총 16개소(+4개소)

- 검사 및 조치 소요시간 대폭 단축(평균 7일 → 4~8시간)
- 농수산물 정밀검사 장비 구입·설치(예산 2,800백만원)

4. 자체평가

□ 성과

-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신규 설치(4개소)
-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운영을 통한 검사 소요시간 대폭 단축으로 부적합 위해 농산물 유통 판매 사전차단

□ 문제점

- 공영도매시장 현장 신속수거검사체계 연차적 확대를 위한 '16년 현장검사소 설치 및 운영 예산 미반영

□ 개선대책

- '17년 예산반영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17년 소요예산 확보 및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연차적 확대 추진

[3-2-1] 유통 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③ 농수산물식품 선제적 안전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백길태, 운재호 사무관 T.043-719-327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신선 과일·채소류 및 수산물은 특성상 유통·소비시간이 짧아 통상적인 유통식품 수거·검사로는 유해 농수산물의 폐기 등 차단이 불가능함
 - 주요 부적합 농수산물은 깻잎, 상추, 활어 등 신선농수산물임
 - 시기별·계절별, 주생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 * '14년 유통 농산물 검사 54,628건, 부적합 517건 중 306건 폐기(59.2%)
 - * '14년 유통 수산물 검사 8,528건, 부적합 49건 중 28건 폐기(57.1%)

2. 추진계획

- 신속 수거·검사로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12개 현장검사소의 상시 신속 수거·검사 강화로 부적합품 현장폐기조치(연중)
 - * 공영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속수거검사(20,000건)
 - 현장검사소 미설치 시·도 공영 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 신속 수거·검사 강화(매월 20건 이상)
 - 농수산물 주산지·품목별·계절별·시기별 안전관리(연중)
 - 지역특화 품목 및 계절별 주요품목 선제적 안전관리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장염비브리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 수산물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및 예방 홍보

3. 추진실적

- 농수산물 신속수거·검사 강화 및 부적합 위해 농수산물 유통 사전차단

-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신속 수거·검사(21,342건)하여 부적합 농수산물 현장 폐기 조치(416건, 78,109kg)
- 현장검사소 미설치 시·도의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 신속수거검사(5,283건)
- 계절별, 주생산지 지역특화 농산물 등 안전관리 추진(906건)
 - 주생산지 출하·유통 농산물인 토마토, 고구마 등 626건, 유원지 주변 판매 농산물 280건(1건 부적합)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장염비브리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 수산물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및 예방 홍보
 - (봄철 패류독소) 수거검사 2,100건(부적합 120건 채취금지 등 조치)
 -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 수거검사 1,527건(부적합 1건 폐기조치) 생산유통업체 지도·점검 175개소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수거검사 148건(1건 부적합 폐기) 생산유통업체 지도·점검 42개소(적합)
 - 보도자료 배포(3회), 홍보물 제작·배부(부채 6천개, 스티커 53천부)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농산물 수거검사 건수 55,000건, 수산물 수거검사 건수 8,500건
- ◇ 추진실적 : 농산물 55,154건, 수산물 8,842건 수거검사로 목표 초과 달성

□ 성과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등 신속검사 및 계절별 주생산지별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부적합 위해 농수산물 사전차단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등 신속검사 강화
- 계절별, 주생산지 등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

[3-2-1]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④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강화 및 정보공개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남혜선연구관, T.043-719-3274)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

-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의 검사계획을 수립(식약처)하고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및 시·도 협업으로 검사 추진

□ 방사능 검사결과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교육·홍보 실시

- 방사능 검사결과 및 관련정보 공개 및 소비자(단체) 등 교육·홍보 강화로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제고

2. 추진계획

□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

- 국민 다소비 및 소비자우려 식품 등 중점관리(연중)
 - 검사계획 : 중점관리 150개 품목 9,400건
 - * 식약처 4,500건, 농식품부 1,800건, 해수부 700건, 지자체 2,400건

□ 방사능 검사결과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교육·홍보

- 방사능 검사결과(검출량 포함, 2주 단위) 및 방사능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모바일(방사능 안전관리) 공개(연중)
- 식품 방사능 검사 유관기관 담당자 방사능 분석법 교육(5~6월)
- 소비자(단체) 및 학교급식 관계자 등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홍보(9~10월)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11월)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보도자료 및 홍보물 제작·배포(3회/년)

3. 추진실적

□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

- 국민 다소비 및 소비자우려 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연중)
 - * 중점대상품목 : 국민다소비 및 소비자 우려 식품 등 150개(국산 100개, 수입산 50개)
 - * 검사실적 : 12,407건(농산물 4,278건, 축산물 1,096건, 수산물 5,305건, 가공식품 1,728건)
 - * 기관별 검사실적: 식약처(4,752건), 농식품부(1,811건), 해수부(914건), 시·도 (4,930건)

□ 방사능 검사결과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교육·홍보

- 관계부처 및 시·도 등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및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공개(1.1~12.31, 게시 27회, 접속횟수 8,272회)
- 식품 방사능 검사 유관기관 담당자 방사능 분석법 기술훈련(3회)
- 소비자(단체) 및 학교급식 관계자 등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홍보(6회)
- 전문가 초청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세미나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2회)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보도자료 및 홍보물 제작·배포(3회/년)
 - * 보도자료(2건) :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KBS 등 32개, '15.1.30),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KBS 등 32개, '15.11.27)
 - * 홍보물(1건) : 우리가 먹는 식품은 안전합니다('15.7~11)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건수 4,500건(식약처)
- ◇ 추진실적 :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 4,752건 완료

□ 성과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안전관리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기여
 - * 유통식품 방사능 중점관리대상품목 : 150개 품목
 - * 검사실적 : 12,407건(식약처 4,752건, 농식품부 1,811건, 해수부 914건, 시·도 4,930건)

-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정책 인지도 제고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인지도 향상 : 43% (교육전 3.02점 → 교육후 4.30점)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국내 유통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 지속 추진
-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공개 지속 추진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3-2-2]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①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사무관, T.043-719-2054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신용주 사무관, T.043-719-1904)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및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 피해사례 증가

2. 추진계획

식약처,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단속

-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전담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홈쇼핑, 케이블 방송, 일간지 대상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 지방신문, 지역 케이블방송,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 대상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처벌 강화

- 경찰청과 협업하여 뺑다방(홍보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행위자는 사법처리
- 대한노인회(시니어감시단), 소비자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사전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위반사항 홈페이지 공개
 -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운영으로 불법 광고 내용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려 소비자 피해 예방

- 질병예방·치료 표방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적용 등 처벌 대폭강화

3. 추진실적

□ 효율적 모니터링 수행 및 신속 조사 처리

- 식약처와 지자체간 매체 구분을 통해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고, '모니터링 정보망'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신속 이첩하여 조치
 - * '14년 505건 적발 → '15년 552건 적발

□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처벌 강화

- 경찰청·지자체와 협업하여 뺏다방(홍보관) 허위·과대광고 행위 범부처 합동 기획감시 실시(1,111개소 점검, 128개소 적발)
 - * 인터넷 신문 등 허위과대광고(3.4~4.26), 뺏다방1차(4.27~5.15), 뺏다방 2차(8.31~9.30)
- 뺏다방 피해 사례 신고·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교육 실시
 - 전국 시·군·구 단위에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255곳) 및 대한노인회 지회(245곳)에 뺏다방 피해사례 신고·상담 창구 설치(8월)
 -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량식품 근절 교육(7월~11월)
 -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310회, 5,007명)
- '뺏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10만원)
-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및 법령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및 사례 교육 실시
 - * '시니어감시단'을 위촉(84명)하여 어르신들 대상의 "뺏다방"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등 홍보 실시(10회)
 - * 통신판매업자 등 대상 설명회 개최(3회, 4.21, 4.28, 10.20), 300여명 참석
- 허위·과대광고 위반 제품 공개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운영, 59건)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 450건
- ◇ 추진실적 : 허위·과대광고 위반 552건 적발

□ 성과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유통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552건 적발
 - * 허위과대광고 위반 건수 : ('14) 505건 → ('15) 552건
 - * 사이트 차단 건수 : ('14) 11,820건 → ('15) 13,032건

□ 문제점

- 최근 인터넷 유통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 인터넷/전체 적발건수(%) : ('14) 461/505(91%)→('15) 517/552(94%)
- 판매자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적발되어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완료되기 전까지 광고 행위가 지속

□ 개선대책

- '식품통신판매업' 신설을 통해 온라인(On-line) 유통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관리 강화

5. 향후 추진계획

- 식품통신판매업 신설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입법예고('16.6)

[3-2-3] 위해식품 회수체계 강화

① 위해식품 회수제도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성준현 연구관, T.043-719-2055)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해식품 회수체계 강화

- 회수대상 식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수체계 선진화를 통해 위해 발생식품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회수로 소비자 피해 예방

2. 추진계획

소비자 안전 및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

-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미표시 제품 회수대상 포함(1월)
-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회수효율성 평가 지표 개선(1월)
 - * 당해 회수 건에 대한 회수 조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평가

회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지자체 및 검사기관 교육강화(년3회)

- 지자체 수거·검사 시 유통 초기제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 다빈도 부적합사례, 기준·규격 오적용 사례 방지 등 교육

3. 추진실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회수 대상 포함 및 회수효율성 지표 개선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등 미표시 제품을 회수 대상에 포함(1월)
 - * '15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1월) 및 「위해식품 회수지침」 개정('15.1.30)
- 회수에 대한 신속성 및 정확성 판단을 위한 8개 지표 개선 시행(2월)
 - * 회수효율성 평가 계획 마련('15.2.5)

□ 신속한 회수를 위한 지자체 및 검사기관 교육 강화

- 지자체 식품위생감시원 대상 식품안전관리지침 설명회(1.8.)
 - * 수거검사시 유통 초기 제품 중심으로 수거검사, 회수 절차 등 설명
- 지자체(검사기관 포함) 공무원 대상 식품위생공무원 교육(3.19, 5.21, 9.17.)
 - * 다빈도 부적합사례, 기준·규격 오적용 사례 방지 등
- 전국식품위생공무원 워크숍 개최(2.26, 5.28, 12.3.)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가공식품 회수효율성 평가 80점 이상 업체비율 80%
- ◇ 추진실적 : 가공식품 회수효율성 평가 80점 이상 업체비율 81.6%
 - * '15년도 회수대상 가공식품 310건에 대한 회수효율성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253개소(81.6%)

□ 성과

- 위해식품 회수실적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성과지표명	'15(목표)	'15 실적
가공식품 회수효율성 평가(%)	80	81.6

* 회수 효율성 평가기준(8개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의 비율(%)

□ 문제점 및 개선 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회수 강화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①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오금순 연구관, T.043-719-2153)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한 정밀검사 강화

- 국가·품목·유해물질 검출 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차등 적용 및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 선정
-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을 무작위표본검사에 활용 및 개선 추진

2. 추진계획

무작위표본검사 종합계획 수립(1월) 및 반기별 계획 수립(1월, 7월)

- 최근 3년간('12~'14) 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대상별로 점수화하여 0.5~100% 차등 적용
 - OPERA 분석결과(일반/주의/집중), '집중'에 대해서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활용
- 최초수입식품의 중점검사항목 선정(1월)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중점검사항목 선정(1월, 7월)
 - 최근 5년간('10~'14) 부적합 항목과 기준·규격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중심의 검사항목 선정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OPERA)' 운영

- OPERA 분석결과(일반/주의/집중), '집중'에 대해서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활용(1월, 7월)

- OPERA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과의 품목·원재료 코드 연계 추진(6월)
-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 개선 및 교육
 - '15년 수입식품포탈 재구축시 예측정확률 및 속도 개선(11월)
 - 지방청 수입식품담당공무원 대상 시스템 운용 재교육(12월)

3. 추진실적

□ 무작위표본검사 종합계획 수립 및 반기별 계획 수립

- 최근 3년간('12~'14) 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대상별로 점수화하여 0.5~100% 차등 적용(1월, 7월 시행)
 - 무작위표본검사 총 19,524건 검사(부적합 107건, 0.54%)
 - * '15년 전체 426,279건 중 1,116건(0.26%)
- 최초수입식품의 중점검사항목 선정(1월)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중점검사항목 선정(1월, 7월)
 - 최근 5년간('10~'14) 부적합 항목과 기준·규격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중심의 검사항목 선정

□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시스템(OPERA)' 개선 및 운영

- OPERA 분석결과(일반/주의/집중), '집중'에 대해서는 무작위표본 검사에 활용(무작위검사계획 적용, 연중 2회(1, 7월 시행))
- OPERA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과의 품목·원재료 코드 연계 추진(5.26)
-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 개선
 - '15년 수입식품포탈 재구축시 예측정확률 및 속도 개선(11.31)
 - 지방청 수입식품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역량 강화과정'을 통해 통계 및 시스템 운용 교육(10.19)
- OPERA를 자체무작위표본검사에 적용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부적합률 1.3배 증가
 - * 시스템 적용 이후 식품검사 부적합률 증가 : ('14) 0.7% → ('15.12) 0.9%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0.19%
- ◇ 추진실적 : 위해 우려 수입식품 집중 검사 체계로 전환하여 부적합률 0.23%로 상승

□ 성과

-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시스템(OPERA)」 적용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이력을 고려하여 대상국가, 품목 선정 및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시스템(OPERA)을 활용한 무작위 표본검사 실시
 - 국내·외 부적합항목을 검토하여 정밀검사 중점검사 항목 선정
 - * OPERA 분석결과 일반/주의/집중 3단계로 분류하고 ‘집중’에 대해서는 정밀(무작위)검사 시행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현재 성과지표는 단순히 전체 수입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를 산출하여 매년 ‘수입식품검사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본 과제는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등 각종 정보를 반영하여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부적합식품)을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제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을 적용한 검사 부적합률’로 변경 필요
 - *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은 각종 위해정보 및 통계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검사대상 선정 방법이며, 동일 인력·예산 대비 수입식품 검사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

5. 향후 추진계획

- 부적합 이력 및 위해정보 통계 기반의 위해발생 우려등급을 집중 검사하는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현장적용 확대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②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축산물 정밀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강성필사무관, T.043-719-2223
송상길사무관, T.043-79-223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수입 물량 증가 및 다변화에 따라 위해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전(前) 검사 강화
 - 관능검사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사전 조치 기능 강화
 -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과 니트로푸란 등 위해잔류물질 등의 정밀검사 실시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수산물 정밀검사 강화
 -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내용에 대한 통관단계의 신속한 검사 강화로 불량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연중)
 - 국가·품목·유해물질별 위해도를 분석하고 위해정도에 따른 정밀 검사 비율 차등 적용

2. 추진계획

- 축산물 통관 단계에서 3단계 검사 철저(연중)
 - (서류검사) 한글표시사항, 부적합 이력 및 기준규격 부합여부 확인
 - (관능검사) 3년 이내 부적합 이력 제품, 정밀검사 대상 축산물
 - * 수입신고 수량이 300상자 이상인 경우 1%, 미만인 경우 3상자 이하 실시
 -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성분 규격 검사

- (대상) 최초 수입축산물, 유통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국내외 문제 축산물 등

□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내용에 대한 신속한 검사 강화로 위해우려 축산물의 국내수입 차단(연중)**

- (정보입수) 국내외 위생정보 수집기관, 언론, 인터넷 등
- (정보분석) 수입실적 확인, 위해여부 및 조치사항 결정
- (긴급조치) 수입건별 연속 5회 정밀검사, 유통 중 제품 수거검사

□ **수산물 위해정보에 따른 유해물질 특별검사(연중) 및 부적합 빈발수산물의 중점관리 대상 품목 지정·운영(반기별)**

- 국내외 유해물질 검출로 문제가 야기된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 확대 등 수입 통관단계의 검사 강화
 - *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클로람페니콜 등 15개 유해물질 검사 실시('15.1~)
-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부적합이 발생한 품목의 정밀검사 강화
 - * ('15년 상반기) 6개국 19개 품목에 대한 유해물질(12개) 정밀검사는 매건 실시

3. 추진실적

□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통관 단계 수입검사로 위해 축·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

- **(축산물) 수입건수(89,729건) 대비 11.8% 정밀검사**
 - * 기준·규격 신설 또는 강화항목에 대한 정밀검사 (신설 : 설피린 등 4종, 강화 : 대장균O157:H7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확대 등 590건)
- **(수산물) 수입건수(82,078건) 대비 23.1% 정밀검사**
 - * 위해정보(모든 국가산 연어, 중국산 자라, 베트남산 새우·메기)에 따른 검사 등

□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검사항목에 대한 신속한 강화검사 및 대응으로 위해우려 축산물의 국내수입 차단(연중)**

- 금지약품이 검출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선적 중단(3개소)
 - 브라질 닭고기(노르플록사신), 중국·스페인 난백분(엔로플록사신)
 - 국내외 식품위생정보에 따라 강화검사 추진
 - 뉴질랜드 아이스크림, 미국 및 프랑스산 치즈 연속 5회 강화검사 등 14건
 - 부적합 수입축산물 관련 정보(작업장, 부적합사유 등) 수출국으로 즉시 또는 매월통보
 - 리스테리아 검출에 따른 프랑스 등 11개국 통보
-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등 15개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관리 및 국내외 위해정보 발생된 수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위해정보 검사 실시
- 부적합 지속 발생 및 안전성 미확보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연중)
 - *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디프루벤주론, 프로메트린 등 15개 유해물질 검사 실시(3%~매건검사)
 - 국내외 위해정보 발생된 수산물에 대한 위해정보 검사 실시
 - * 중국산 자라(엔로/시프로플록사신), 베트남산 새우(설파제), 베트남산 메기(니트로푸란), 모든국가 냉동연어(에톡시퀸)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부적합 발생 품목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품목 지정(2회) 및 운영으로 정밀검사 강화
 - * ('15년) 6개국 19개 품목에 대한 유해물질(15개)는 매건 정밀검사 실시(연중)
 -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을 위한 '물 코팅' 수입 수산물 내용량 검사 강화 조치('15.8.17~)
 - * 냉동낙지, 냉동새우살 등 물 코팅을 통한 중량 증가 행위 집중 감시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수입 축산물 검사 부적합률 0.50%, 수입 수산물 검사 부적합률 0.30%
- ◇ 추진실적 : 수입 축산물 검사 부적합률 0.22%, 수입 수산물 검사 부적합률 0.11%

□ 성과

- 수입 전 단계부터 통관 단계까지 수입 축·수산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13년 이후 수입 축·수산물의 검사 부적합률 감소 추세

* 최근 3년('13~'15년) 수입축·수산물 수입검사 부적합률(%)

구 분	'13	'14	'15
계	0.40	0.27	0.17
수입축산물	0.50	0.37	0.22
수입수산물	0.30	0.16	0.11

- 국내외 정보에 따른 긴급 대응조치로 축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위해 발생 요인이 높은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추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대비 행정규칙 정비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③ 해외 원전사고에 의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오재준 사무관, T.043-719-2160)

검사실사과 강성필사무관, T.043-719-2223

검사실사과 송상길사무관, T.043-719-223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일본산 수입식품의 철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 관련 국가(44개국) 오염우려 품목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추가 실시

2. 추진계획

□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연중)

-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 태평양산 수산물 6개 어종은 주 2회, 러시아산 3개 어종은 주 5회 검사

□ 체르노빌 원전 사고 관련 방사능 검사 추가 실시(연중)

- (가공식품) 최초 및 무작위 검사시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사 실시
* 5개 품목군 : 건조과실류, 견과류, 버섯류, 천연향신식물, 천연향식료
- (축산물) 러시아 등 31개국, 연간계획 100건 수준으로 품목 유형별 1.35~7.0% 수준으로 시스템 상에서 검사대상 자동 선정(연중)

□ 방사능 검사결과 및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공개(연중)

- (후쿠시마 원전사고) 홈페이지에 검사 및 검출 현황 공개
- (체르노빌 원전사고) 홈페이지 검출 현황 공개

3. 추진실적

□ 일본산 가공식품,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 실시

- (가공식품)24,400건, (농산물)182건, (축산물)565건, (수산물)6,525건
검사결과 모두 적합
- 매수입시방사능검사및방사능미량검출시스템통합등기타핵종감시증명서추가요구

□ 체르노빌 원전 사고 관련 등 가공식품·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 뉴질랜드 등 31개국 유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 검사(289건, 적합)
- 러시아 등 태평양산 주요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1,464건, 적합)
 - * 태평양산 주요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다랑어, 상어, 꽁치) 주 2회,
러시아산 주요 품목(명태·대구류·가자미류) 주 5회 방사능 검사
-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44개국 건조과실류 등 일부 제품 검사(357건, 적합)
 - * 대상품목 : 건조과실류, 견과류, 버섯류, 천연향신식물 및 가공식품 중 천연향신료

□ 방사능 검사결과 및 관련 정보 등 대국민 홍보(연중)

- 일본산 등 축·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매일)
 - * 방사능 검사결과 매일 공개(일본산 241회, 태평양산 240회)
- 소비자단체 및 관계 언론기관에 매주 보도참고자료 제공
- 수입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동영상 제작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및 SNS(페이스북) 동영상 홍보(7.20~8.18),
KTX내부 LCD 동영상 홍보(12.1~31), 부산·인천 등 지자체 보유매체(6, 7월)
- 방사능 민간전문가위원회 일본 현지조사 보도자료 배포(1월)
- 방사능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9.10~12.10)
 - 전국 17개 시·도 거주 일반 국민 대상으로 방문형 면접조사

4. 자체평가

성과

- 일본산 등 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해 지속적인 대국민 방사능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일본산 식품(축·수산물 포함) 및 태평양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 방사능검사 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④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위해우려 식품 검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사무관, T.043-719-2054)
수입식품정책과 조태용 연구관, T.043-719-2158)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해외 인터넷을 통해 국내 반입(해외직구)되는 식품 안전관리
 - 해외 인터넷 판매식품 수입신고 의무화 본격 시행(7월)
 -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유해물질 함유제품 등 불법식품 유통차단

2. 추진계획

- 구매대행 식품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시행(7월)
- 해외 인터넷사이트 판매제품 수거검사(3회 200건 → 4회 400건)
 - 성기능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표방제품 및 젤라틴 캡슐제품 등
-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모니터링·차단(연중)
 - 허위·과대광고, 유해물질 함유제품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세청에 통관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

3. 추진실적

- 인터넷 해외 구매대행자 식품 수입신고 세부규정 마련
 - 원활한 구매대행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신고 절차 안내
 - *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설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5월)
 - * 민원설명회 개최(10월), 수입식품 업무 담당자 수입신고시스템 등 교육(10월)
- 관세청과 업무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 관세청과 업무협업을 통해 식약처 검사 인력을 세관(인천공항세관)에 파견(출장)하여 합동으로 현장검사* 실시

* 총 84,381건수 중 472건 적발(0.56%)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반송조치(11.17~ 12.31)

□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표방제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여부 수거·검사 강화

* '14년 255건 검사(40건 부적합) → '15년 444건 검사(47건 부적합)

□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모니터링·차단 강화

- 유해물질 함유식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해외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

* 사이트 차단 건수 : ('14) 11,820건 → ('15) 13,032건

4. 자체평가

□ 성과

- 인터넷구매대행자의 식품수입신고 의무화로 해외직구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반마련
- 유해물질 함유식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해외 인터넷사이트 신속 차단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기여

□ 문제점

- 구매대행 업자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한계 발생

□ 개선대책

- 해외 직구식품 모니터링(수거·검사 등) 강화 및 인터넷사이트 신속 접속차단 요청
- 해외 직접구매로 식품 구입시 주의사항 등 대국민 홍보 실시

5. 향후 추진계획

-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의 검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해외 직구식품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연중, 800건 이상)
- 유해물질 함유 등 불법제품 신속 통관금지 및 접속차단 요청(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⑤ 수입식품 사전 반입차단을 위한 통관전 반입금지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윤동주 사무관, T.042-481-7851)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분석·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성분 함유 부적합 식품에 대해 긴급통관보류 강화
- 수입물품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수입물품 검사강화로 불법 식품류 반입차단

2. 추진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청·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강화
 -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위해 식의약품* 반입방지를 위해 EDA**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관심사 및 검사 기능 강화
 - * 위해 식·의약품 DB (위해물질인 디클로메틱이 검출된 슈퍼알트골드 등 3,893개 품목)
 - ** EDA(Event Driven Architecture) : 여러영역의 Data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선별기법으로 '모델규격'사항 등 비정형항목(text)에 대하여 적용가능
- 위해성분 함유·성분미기재 식품 등에 대한 분석·검사강화(연중)
-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불시 일제검사」 및 「집중검사 강화기간」 운영 등으로 불법물품 차단
 - 설, 대보름, 추석, 김장철 등 특정물품 과수요 시기에 맞추어 유관 기관 합동 해당물품 집중검사

3. 추진실적

- 중점감시대상 수입식품을 설정하여 통관단계 검사 강화

- 불법·불량 수입 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점감시 수입식품 (127개*)에 대한 수입검사율을 일반 검사율보다 높게 설정·운영
* 기존의 123개 품목에 대한 운영실적 등을 분석하여, 품목 재조정
- '15.12.31. 기준으로 15.73%의 수입검사율 달성(목표 15.5%)

□ 식약처·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

-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위해 식·의약품 정보 및 중앙관세분석소 분석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수입통관시 활용(바코드 리더기로 스캔)
* '15.11.30. 현재 4,181개 품목의 품명, 상세품명, 상품이미지 등 6개 자료가 등록
-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위해 식·의약품 반입방지를 위해 EDA*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관심사 및 검사 선별기능 강화
(→ '15년 중 EDA 선별기준 32건 등록)

□ 특송화물에 대한 『집중검사강화기간』 운영 등으로 불법물품 차단

-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식품류에 대한 검사강화(X-ray 등 과학검색장비 활용)로 금지성분 포함 건강기능식품 등 15,507건 적발

□ (해외직구 식품) 식약처와 협업검사체계 운영(정부 3.0 중점추진)

- 식약처 검사 인력의 관세청 파견(출장) 및 합동 현장검사*(15.11.17~)
* 505건 선별검사 결과 396건(78.4%)의 유해물질 적발로 반송조치(15.11.17~12.31)
- 제품 구매 前 위해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 운영(1.21)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중점관리대상 수입식품 검사율 16.5%
◇ 추진실적 : 중점관리대상 수입식품 검사율 15.73%
* 국정과제(79번)의 관세청 단위과제와 관련된 성과지표인 '중점감시 수입식품 검사율'의 목표값(2015년 15.5%) 및 2015년 관세청 자체통합성과관리계획 상 관련 성과지표(중점감시 수입식품 검사율)의 목표값(15.5%) 대비 초과 달성

□ 성과

- 의약품 정보 수집·분석 강화(DB 구축)를 통해 부적합 식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
- 중점감시 수입식품 검사율 상향, 바코드리더기 활용, EDA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심사 및 검사기능 강화

□ 문제점

- 중점관리대상 수입식품 검사율의 2015년 목표값 16.5%는 일반물품 검사율에 비하면 **과다하게 높게 설정***된 목표임
 - * 일반물품 검사율의 10배를 초과하는 검사율로서 현장 검사인력의 업무량을 감안할 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음
- 국정지표 단위과제 성과지표 및 관세청 성과관리계획상 '15년 성과지표도 식품안전관리계획상 성과지표 목표값보다 낮게 설정되었음
 - * 국정과제(79번) 단위과제의 성과지표(중점감시 수입식품 검사율)의 2015년 목표값을 **15.5%**로 설정
 - * 2015년 관세청 자체통합성과관리계획상 관련 성과지표(중점감시 수입식품 검사율)의 목표값을 **15.5%**로 설정
- 중점관리대상 수입식품 검사율 상향 성과지표의 내용을 보면 중수량, 가격 등의 차이로 인한 단순적발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개선대책

- 검사인력의 업무량을 감안한 합리적 검사율을 목표값으로 설정 (16.0%)
- 중점감시 수입식품의 품목을 국민체감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중점감시 수입식품의 검사율 상향만 지속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핵심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 개편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중점감시 수입식품 검사율 상향 유지(15.5% → 16.0%)
- 수입식품에 대한 식약처와의 협업 검사 확대(현행 특송화물 →우편물)
- 식약처(통합식품안전정보망), 농관원, 수품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 위해 식·의약품 반입방지를 위해 '복합선별기준(EDA)' 강화
- 위해성분 함유·성분미기재 식품 등에 대한 분석·검사강화 (연중)
-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불시 일제검사』 및 『집중검사 강화기간』 운영 등으로 불법물품 차단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⑥ 수입식품의 원산지 조작행위 차단

(담당자 : 관세청 기획심사팀 염승렬 사무관, T.042-481-7892)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고위험·사회관심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역량 집중

- (특별단속) 설·추석 명절, 김장철 등 취약시기, (기획단속) 정보분석 등 고위험 품목, (테마단속) 불법 수입식품 등 집중 단속

□ 범정부 단속기관간 및 민간 전문가와 협업 활성화

- 원산지표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유통 추적조사 및 합동단속 강화
- 민간전문가(35개 단체, 104명)와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 등 협업 강화

□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전시회,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 재조정

- 국민건강과 직결된 수입식품류 등을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통관 후 불법 용도전환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

2. 추진계획

□ 수입식품의 원산지 위반행위 차단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및 세관별 민·관 소그룹 간담회 개최 ▪ 생산자·소비자단체와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 ▪ 테마단속(반기별 보고) 	수시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및 대보름 대비 특별단속 실시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원산지표시 홍보계획 수립 	3월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수시 기획단속 실시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비교전시회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민관 협의회 개최 ▪ 제2회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개최 	6월

3/4	▪ 여름 휴가철 및 추석절 특별단속 실시	7월
	▪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실시	8월
	▪ 제3회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9월
4/4	▪ 제4회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10월
	▪ 김장철 특별단속 실시	11월
	▪ 특화품목 성과분석 및 재지정	12월

□ 국민건강 밀접 식품류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강화

- 한약재·농수산물 등 국민건강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품목 확대
 - * 확대 대상품목 수요조사 및 선정 예정('15.1 등 年 2회)
- 유통이력 대상 품목의 이행실태 등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시(年 4회)

3. 추진실적

□ 수입떡거리 등 고위험·사회관심 품목에 대한 특별·상시단속

- 설·대보름(2월), 가정의 달(5월), 추석(9월), 김장철(11~12월) 등 성수기 수입식품 특별단속 등을 통해 158개 업체 332억원 적발
 - * 미꾸라지(97억), 담배(56억), 고추(37억), 호두(29억), 들깨(21억), 장어(11억) 등
- 유통이력신고실태 집중 점검 실시('15년 중 4회 - 1, 4, 9, 11월)
 - * (실적) 현장점검 4,504회, 행정지도 187건, 과태료 31건 1,850만원

□ 단속기관 및 민관협업을 통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효율성 제고

- 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정보 공유시스템」 구축(6월)
- 생산자단체와 간담회(3.12, 6.11), 민관협의회·워크숍(6.29) 및 「원산지 국민감시단」 민간전문가 재정비(35개 단체·104명, 7.2)
- 지자체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요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 서울시(1.21), 범정부(4.6~4.8, 10.5~10.7), 농관원·지자체(6.23)
- 유통이력신고정보를 식약처(통합식품안전정보망), 농품원, 수품원과 공유
 - * 유통이력대상물품 31개 품목(수산물 16, 농산물 15)의 신고정보를 매일 1회 공유

- 「국내유통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11.18)
 - * 국회·정부·관세청·범정부협의회·학계·생산자단체·연구기관 등 119명 참석
- 범정부 단속기관 협의회(4월, 12월)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2월)
 - * '15년 중점 추진과제 의결 및 이행실적 점검, '16년 운영방향 및 추진과제 논의
 - **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우수작 10편 선정·포상)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對국민·기업 맞춤형 홍보 실시

-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전시회」 개최
 - * 서울역광장(11.9~11.10), 부산역광장(11.12~11.13), 국회의원회관(11.18)
- 지하철, 대형쇼핑몰, 전통시장 등 원산지표시 홍보
 - * 지하철 스크린도어(서울 및 5개 광역시), 서울(영등포 타임스퀘어, 여의도 IFC Mall), 광주(유스퀘어), 대구(칼라스퀘어), 전국 주요 전통시장 50곳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 재지정

- 천일염, 냉동 복어 등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개 품목에 대하여 재지정 여부 심의를 통해 3년 간 재지정
 - * 천일염(비식용·식용), 냉동 목어, 가리비, 활돔, 비식용 대두유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유통이력 대상 품목수 31개
- ◇ 추진실적 : 유통이력 대상 품목수 31개

□ 성과

- 성과지표 목표값(유통이력대상 품목수 31개)을 달성
- 명절·김장철 등 취약시기에 수입 먹거리 등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한 기관간·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 단속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전시회, 유통단계 사각지대 해소 및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등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 노력

- 수입 식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수입 식품의 원산지 둔갑 및 비식용 농수산물의 식용 둔갑을 차단하여 수입 먹을거리 안전 확보

□ 문제점

- 관세청이 관세법에 따라 농(수)관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발족·운영하였으나,
 -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중점단속대상 및 단속역량이 차이가 나지만 이를 총괄 조정(지휘)하는 기능 부재

□ 개선대책

- 범정부 협의회를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근절 추진단'으로 승격*
 - * 상설화 곤란 시 관련부처 합동으로 6개월 간 T/F 조직으로 운영 검토
- 범정부적 원산지표시 관리와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전국·전품목을 포괄하는 종합 관리, 단속계획 수립·운영체계 구축

5. 향후 추진계획

- 설·추석·휴가철·김장철 등 특별단속 및 농수산물 테마단속 실시
- 범정부 단속기관 및 민관 정보·인력교류를 통한 협업 활성화(상시)
 -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개최(4월, 10월)
 - 원산지표시 민관협의회 개최(6월)
-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연중)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 재조정(연1~2회)
- 유통이력신고실태 집중 점검 실시('16년 중 4회)
 - 명절(설날, 추석), 휴가철, 김장철 등 특정물품 과수요 시기에 맞추어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통이력신고실태 합동 점검기간 설정 운영

3-3. 불량식품 근절

(3-3-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지속 강화

①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담당자 :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사무관 신용주, T.043-719-1904)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 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추진계획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운영(연중)

- 불량식품 근절 범정부 고위급·실무급 협의체 회의 개최(4회)
 - * 효율적인 합동 기획 감시 방안 논의, 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실적 점검 등

□ 불량식품 발생정보 수집 다각화와 부처 간 정보 공유(연중)

- 불량식품 발생 패턴 등 정보 분석 보고서 작성, 각 부처 제공(매월)
- 불량식품 단속 실적 및 계획을 범부처(29개 기관) 공유(매주)

3. 추진실적

□ 협업강화를 위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 검·경, 지자체 등 29개 기관 참여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회의 개최(5회)
 - * 설·추석 성수식품 합동 감시(1.15, 8.26),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4.13), 뚝다방 합동 단속(7.20), 추진실적평가 및 향후계획(12.21) 등 협의 및 의견수렴

□ 불량식품 발생정보 수집 다각화와 부처 간 정보 공유

- 매월 생성·수집되는 불량식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보

분석보고서 작성, 관계기관(29개)에 공유(13회)

- 부처 별 불량식품 활동실적 및 향후 계획을 관계기관(29개)에 주단위로 공유(52회) 및 분기별 실적 보고서 작성하여 범부처 공유(4회)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범정부 협의체 회의개최 건수 4건
- ◇ 추진실적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회의 5회 개최

□ 성과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회의(29개 기관, 5회 개최)를 통해 위생취약분야·다소비 식품 등을 매월 집중 단속하여 위생불량 업소 발생률 감소
 - * 위생불량 업소 발생률(%) : ('13년) 6.9 → ('14년) 3.3 → ('15년) 3.2
- 배달 음식점, 떼다방 등 일상감시가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최초 실시하여 영업자의 경각심 고취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안심도 향상
 - * 식품안전체감도(%) : ('13년) 72.2 → ('14년) 73.2 → ('15년) 79.6

□ 문제점

- 불량식품 발생 동향, 빈도, 원인 등을 분석하여 관계기관 공유하고 있으나 기획감시 실마리 정보 활용도는 낮은 편

□ 개선대책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의 활용도 제고
 - 부처별·지자체 단속 정보 분석 등을 통해 핵심관리 품목 등 발굴
 - * 단속정보 : 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도축장·집유장 단속 정보, 국방부 군납 식품 정보 등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불량식품 발생요인 선제적·집중관리
 - 단속정보(업종·위반유형·위해도 등) 뿐 아니라 국민 관심품목·판매 증가 식품유형 등 외부 정보의 실시간 분석 실시

5. 향후 추진계획

- 빅데이터 기반 식의약품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 예정('16.12)

[3-3-2]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①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사무관 신용주, T.043-719-1904

식품정책조정과 사무관 김종수 T.043-719-2011)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

- 위해식품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고 위해중심의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로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불안 해소
- 불량식품 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2. 추진계획

□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실시(매월)

- 소비자 불만 사례, 언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취약업체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기획 감시 실시
- 각 부처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합동 단속 시 부처별 역할을 설정하여 단속의 시너지효과 창출

□ 불량식품의 근원적 발생원인 분석 등 제도개선 실시(연중)

- 영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자가품질 검사제도 개선
 -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개선
 - 부적합 식품 미보고·미회수시 벌칙 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강화 추진
 - 부적합 다빈도 항목, 위해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자가품질 검사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가품질검사의 실효성 제고
 - 시험·검사 결과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사시스템 개선

- 기획 감시 결과를 토대로 대상별 불량식품의 발생원인, 해결방법 등을 검토·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추진실적

□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실시

구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10,203개소 점검, 800개소 적발(7.8%)
1.12~1.23	식육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83개소 점검, 16개소 적발(19.2%)
1.26~2.6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5,165개소 점검, 264개소 적발(5.0%)
3.4~4.26	인터넷신문등 허위과대 광고	6개소 점검, 6개소 적발(100%)
3.27~4.16	소스류 제조업체	100개소 점검, 38개소 적발(38%)
4.27~5.14	떫다방 허위과대 광고	40개소 점검, 19개소 적발(47.5%)
5.19~6.11	PB제품 및 온라인 판매 식품	95개소 점검, 24개소 적발(25.3%)
6.17~7.14	순대제조업체	92개소 점검, 42개소 적발(45.6%)
7.22~8.7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개소 점검, 28개소 적발(25.5%)
8.13~8.27	조미용 분말제품 제조업체	58개소 점검, 17개소 적발(29.3%)
8.31~11.30	떫다방 합동감시	1,065개소 점검, 103개소 적발(9.6%)
9.8~9.17	추석 성수식품 합동 감시	2,847개소 점검, 187개소 적발(6.6%)
10.5~10.27.	떡볶이떡 제조업체	429개소 점검, 37개소 적발(8.6%)
11.4~12.7	계란가공업체	113개소 점검, 19개소 적발(16.8%)

□ 불량식품의 근원적 발생원인 분석 등 제도개선 실시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화, 자가품질검사 주기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정착
 - * 부적합 미보고(3년 이하의 징역), 검사 주기 강화(1회 이상/1~6개월 → 1~3개월), 업체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 *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원발의('15.8), 시행규칙 개정('15.10.21)
- 불량식품 제조 등 불법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9건) 발굴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기획감시 건수 12건, 제도개선 사항 발굴건수 6건
- ◇ 추진실적 : 기획감시 실시(13회), 제도개선 발굴(9건)

□ 성과

-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다수의 불법행위 적발
- 계란, HACCP 미인증업체 불법생산 등 불량식품 발생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발굴 추진(9건)

< 제도개선과제 9건 발굴 >

- √ '산양삼' 관련 3건 : 품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에 대한 폐기 및 거래제한 사후관리 등
 - √ 자가품질 미실시 관련 1건 : 식품유형별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처분도 식품유형별(전체품목)로 실시
 - √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원료 사용 관련 2건 : 표시기준을 위반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등
 - √ HACCP 미인증업체 수탁생산 관련 1건 : HACCP 미인증업체가 HACCP 인증업체의 위탁을 받아 HACCP 제품을 불법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 √ '계란' 등 축산물 관련 2건 : 식용계란 산란일을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통기한 표시 등
-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불량식품 뿌리뽑기 「국민안심 프로젝트」 추진
 - 주된 불량식품의 발생경로(생산단계, 수집상 등)를 추적, 부처협업 계통감사·영업자 교육 등 선제적·집중관리를 통해 실질적 근절 추진

[3-3-3]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

① 불량식품 과학적 감시체계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최장덕 연구관, T.034-719-4452
 첨가물포장과 이근영 연구관, T.043-719-4352
 첨단분석팀 박성관 연구관, T.043-719-5303)

과제 분류	정책 사항/ 법령 개정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

- 동물성(축·수산물) 및 식물성 식품의 유전자를 탐색하고 원료의
가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법 개발
- 원료를 특징할 수 있는 지표물질 탐색 및 분석법 개발
- 국내 미지정 식품첨가물의 식품 중 분석법 개발

2. 추진계획

- 소비가 많거나, 식품원료 사용불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마련 및 지침서 개발(11월)
- 핵자기공명분석 및 동위원소질량분석기 등을 이용한 식품원료
판별법 개발(11월)
- 식품 중 부정물질 실태조사를 통한 신종 부정물질* 규명 및 시험법
개발(11월)
*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 불법 혼입성분 검출을 위한 동시분석법 개발 및 미지물질 신속
탐색을 위한 불법유해성분 DB 구축(11월)
- 국내 미지정 첨가물(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의 식품 중 분석법 개발(11월)

3. 추진실적

□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 백수오 제품, 할랄식품 검사를 위한 유전자 이용 진위 판별법 개발
 - *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마련 : (~'13) 119건 → ('14) 45건 → ('15) 45건
 - 다빈도 식품원료, 사용불가 품목 등을 포함하는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 지침서' 개발(11월) 및 발간(12월)

□ 이화학적 분석법을 이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대두유, 향미유 등을 혼합한 가짜 참기름을 100% 판별해 낼 수 있는 참기름 진위 판별법 개발(3월)
 - * 참기름 고유의 지표물질 이용 핵자기공명법 및 탄소안정동위원소법
 - * '식약처, 참기름 진위 판별법 개발!' 보도자료 배포('15.4.23)

□ 식품 중 부정물질 신규 규명 및 시험법 개발

- '번데기'를 원료로 한 분말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의심되는 성분 2종*에 대한 구조 규명
 - * 시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 유사물질(cis&trans-사이클로펜틸타다라필)
- 식품에 혼입이 금지된 암페타민 이성체 BMPEA, 디니트로페놀 등 20건에 대한 시험법 개발
 - * 식용유지류 중 벤젠, 공전미수제 11종(펜플루라민 등), 디니트로페놀(DNP),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5종(겐데나필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2종 시험법 마련

□ 부정·불법 식의약품 차단을 위한 분석기술 영역 확대

- 식·의약품 중 고혈압치료제 등 분석법 개발·검증 및 불법 식·의약품 성분 라이브러리 구축(11월)

□ 식품 중 미지정 첨가물의 분석법 개발

- 식품 중 미지정 착색료 2종(Azorubine, Brown FK), 보존료 2종(Biphenyl, dimethyl dicarbonate), 산화방지제 4종(Propyl gallate, Octyl gallate, Dodecyl gallate, 2,4,5-trihydroxybutyrophenone)의 분석법 확립 및 검증(11월)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건수 45건
- ◇ 추진실적 : 가금류 등 다빈도 및 사용불가 원료 45건에 대한 판별법 개발

□ 성과

- 가금류 등 다빈도 및 사용불가 원료 45건에 대한 판별 지침서 개발
 - * 연구논문(1건), 특허 출원(1건, No. 10-2015-0063283), 분석법 기술이전(코젠바이오텍)
- 핵자기 공명 분석법, 탄소 동위원소 비율 분석 등 첨단 분석기술을 활용한 가짜 참기를 분석법 개발
 - * '식약처, 참기름 진위 판별법 개발' 보도자료 배포('15.4.23)
- 신규 부정물질 2종 규명 및 사용 금지원료 20건에 대한 시험법 개발
 - *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식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보도자료 배포('15.9.16)
- 불법 혼입성분 검출을 위한 동시분석법 개발 및 불법유해성분 DB 구축
 - * 고혈압치료제 35종 성분 분석법 개발 및 비만치료제 등 102종 DB 구축
- 식품 중 미지정 첨가물 8종에 대한 분석법 확립 및 유효성 검증
 - * 연구논문(2건), 학술발표(14건), 특허출원(1건, No. 10-2015-0100642)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및 검증('16.11)
- 이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부정원료 진위 및 혼입여부 판별법 개발('16.11)
-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 및 원료 중 지표성분 10종 분석법 개발('16.11)
- 국내 미지정 첨가물(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의 식품 중 분석법 개발('16.11)

[3-3-4]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

①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박성준 사무관, T.043-719-130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팀 조수열 연구관, T.043-719-530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적발, 처벌 강화
 - 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조수사 확대 및 지방청, 지차체 특사경과 합동단속 등 협력을 통해 적발, 처벌의 시너지 효과 창출

2. 추진계획

- 취약계층 대상 허위·과대 광고 등 기획수사(연중)
 - 만병통치, 고혈압 치료 등 효능·효과 표방 식품 단속
 - 의약품 성분 또는 식품 사용불가 성분 함유 식품 단속
- 식품위해사범 적발, 처벌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5월)
 - 식품분야 특별사범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 적용 등 제도변화에 관한 실무교육 실시
- 범죄정보, 수사기법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11월)
 - 위해식품 밀수입 등 국제적 범죄 발생시 수사기관간 공조방안 협의, 범죄정보 및 첨단 분석기법 등 공유

3. 추진실적

- 취약계층 대상 허위·과대 광고 등 기획수사
 - 질병치료, 어린이 키성장, 여성 갱년기 증상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 적발(24건 송치)

- 식품에 사용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조업체,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김밥 제조업체 등 기획수사(25건 송치)

□ 위해사범 적발, 처벌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특별사범경찰관리를 대상으로 현장수사와 적법절차, 피의자 신문 방법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11월)

□ 국제 불량식품 단속 프로젝트 및 태평양 국제 화학학회 참여

- 위조식품 및 불량식품 단속사례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참여국가간 공조 강화(4월)
 - * 인터폴 및 유로폴 연합으로 개최된 불량식품 단속 프로젝트(OPSON)에 참여, 우리나라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홍보
- 식품에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분석결과 발표 및 외국의 최신 유해물질 분석방법 습득(태평양 국제화학 학회, 12월)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반복적 위해사범 기획수사 건수 20건
- ◇ 추진실적 : 반복적 위해사범 기획수사 건수 24건

□ 성과

- 어린이 키성장,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수험생의 집중력 강화 등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 광고 등을 신속히 수사하여 및 사건송치(24건)
- 검찰청과 불법식품 합동단속(수사)을 통해 위해사범 단속의 시너지 효과 증대
 - * 추석명절 음식 제조업체 및 축산물 불법 가공·유통업체일제단속,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사건 합동수사
 - * 검경 합동수사 : ('14년) 20회, 103명 지원 → ('15년) 22회, 383명 지원

□ 문제점

-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 또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반 사례 빈번

* 식품, 건강기능식품 송치사건 77건중 표시광고기준 위반사건 36건(46.8%)

□ 개선대책

-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유통기한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자 적발, 처벌 지속

5. 향후 추진계획

-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및 지속적 단속, 검경 등과 협업으로 단속의 시너지 효과 증대

[3-3-4] 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

② 식품위해사범 단속

(담당자 :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혁, T.02-2110-3544)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범죄유인 차단으로 식품안전 구현

-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강력대응
 - 범죄수익환수, 국세청 탈세통보 등 부수처분 강화를 통한 범죄유인의 근원적 차단

2. 추진계획

□ 부정·불량식품사범 지속적 단속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각 검찰청에 편성된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통해 지속적 단속활동 전개(연중)
 -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 단속 강화

□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범죄유인 근원적 차단

-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탈루수익 국세청 통보, 압수된 불량식품·원재료·제조도구 몰수·폐기 등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한 부수처분 강화(연중)

□ 유관기관 협업 강화, 지능적·신종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식품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양성, 전문성 강화

3. 추진실적

□ 부정식품사범 단속 강화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서울서부지검)」 및 전국 58개 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 등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
 - * '15. 1.~12. 검찰 직접단속 377명(구속 13명),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2,341명
- 검찰청별로 '특사경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 실효성 있는 합동단속 실시
 - 식품관련 기관(식약처,농관원,검역본부,세관,지자체)특사경 참여하에 단속 아이템 공유,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협조 방안 체계적 단속 방안 등 협의
 - * 서울서부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등에서 12회에 걸쳐 협의체 운용('15년도 총 340회에 걸쳐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
- 부정식품사범 단속활동 강화 지시('15. 3. 9.)
- 부정식품사범 단속체계 재정비 및 특별단속 지시('15. 8. 13.)

□ 수사지휘체계 개편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에 '식품의약조사부' 신설('15. 2. 25.)
- 전국 주요 거점별 5대 검찰청(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중점 식품전담 수사부」를 지정, 전국청에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 상설·운영('15. 8. 13.)

□ 범죄 유인 차단을 위한 범죄수익환수 조치 강화

- * '15. 1.~12. 범죄수익 환수(64억 5,888만원)

□ 식품범죄 수사역량 강화

- 법무연수원, 각급 검찰청 등을 통한 특사경 교육 지속 실시
 - * '15. 1.~12. 법무연수원 특사경 수사실무 집합교육(19회 855명) 및 사이버교육(5회 5,827명), 검찰청별 관내 특사경 교육(44회 677명)

□ 전국 검찰청 식품전담 부장검사 회의('15. 8. 24.)

- 부정식품사범 최근 동향 및 특별단속 방안,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처벌 강화 방안 등 부정식품 근절 대책 논의

□ 식품사범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15. 9. 3.)

- 인체 유해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판매금액에 따라 구형기준 세분화, 질병예방·치료효능 내용의 허위표시사범 구형기준 상향,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재범자 구속원칙 등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한 부정식품 합동워크숍 개최(15. 10. 16.)

- 전국 식품전담 검사 및 식약처, 농관원, 지자체의 식품전담 특사경 참여, 권역별 합동단속방안 등 협업 활성화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불량식품 관련회의 개최실적 12회, 수사 전문화 교육실적 23회
- ◇ 추진실적 : 불량식품 관련회의 개최실적 12회*, 수사 전문화 교육실적 24**회
*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실적, **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실적

□ 성과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서울서부지검)」 및 전국 58개 검찰청 「부정식품 사범 합동단속반」 등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
 - * 전체 부정식품 단속인원 21,978명(구속118명), 검찰 직접단속 377명(구속 13명),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2,341명
- 법무연수원 및 각급 검찰청 등을 통한 특사경 교육 지속 실시로 식품범죄 수사역량 강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속 추진
- 부정식품사범 근절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
-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추진

3-4.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3-4-1] 농약·중금속·미생물·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평가

① 농약·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 T.043-719-2416,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 T.043-719-3852,
 첨가물기준과 박성국 연구관, T.043-719-250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장문익 연구관, T.043-719-4204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043-719-4353)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들이 사용된 수입식품에 대해 기준 설정 신청 시 잔류허용기준 설정
- (국내식품) 신규 등록 및 농산물 적용확대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00년 이전에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 *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농약이 식품에 잔류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성 등의 자료를 평가하여 잔류허용기준 설정

□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국내 미등록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국내식품)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 허가되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에 잔류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성 등의 자료를 평가하여 잔류허용기준 설정

□ 식품첨가물의 국내외 기준·규격 조사, 사용실태 조사, 추정 섭취량 조사 등을 통한 품목별 기준·규격 재검토

- * 대상품목(6품목) :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산성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2. 추진계획

□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수출국의 합법한 규정에 따라 사용한 농약들에 대해 독성, 잔류성 자료 등의 검토를 통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안) 행정예고(6, 12월)
- 국내 농산물에 신규 사용·등록되는 농약들에 대한 독성, 잔류성 자료 등의 검토를 통한 안전성 평가
 - * 신규 등록 농약 제초제 테퓨릴트리온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안) 행정예고(6, 12월)
- 과거 외국기준을 준용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 * 살충제 디크로보스 등 40종 농약 잔류허용기준(안) 행정예고(6, 12월)

□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주요 수입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미등록된 동물약품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 기준 설정 대상목록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12월)
- 록시스로마이신 등 2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6월)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55종)에 대한 시험법 마련
 - * 시험법 마련 연구 2년차 계속 과제 지속 수행 및 시험법 확립된 동물용의약품 25종의 잔류허용기준 행정예고(12월)

□ 식품첨가물(아황산류) 품목별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12월)

- 국내외 아황산류의 안전관리 자료 조사 및 국내 실태조사(10월)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국내 섭취량 추정 및 사용기준 적정성 평가(11월)

3. 추진실적

□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 아몬드 등 23개 농산물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기준 등 83건 농약 잔류허용기준(안) 행정예고(4.29, 7.22, 10.15)
- 신규 등록 농약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 포도, 복숭아 등에 대한 테퓨릴트리온 등 73종 173건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안) 행정예고(4.29, 7.22, 10.15)
- 글루포네이트 등 40종에 대해 실제 포장(field)시험 및 식습관 변화에 근거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완료(행정예고 10.15)

□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잔류허용기준 신설(6.11, 록시스로마이신 등 20종) 및 기준 미설정 동물용 의약품(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에 대한 시험법·기준(안) 마련(12.24)
- 주요 수입국에서 사용하고 있어 수입식품 중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기준설정 우선순위 및 시험법 마련을 위한 연구 착수(12월)

□ 식품첨가물(아황산류) 품목별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

- 국내외 아황산류의 안전관리 자료 및 사용 현황조사(3~10월)
 -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모니터링 수행(730여건)
 - * 유통식품 중 이산화황 기준초과식품에 대한 관련부서 정보제공('15. 6.4. 당절임 1건, 9.24. 음료베이스 3건, 절임류 1건, 11.9. 과·채음료 1건)
- 성분규격 검토 및 국내 섭취량 평가 결과를 통해 건조채소류(건조버섯류) 및 기타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안)마련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개정건수 40종, 동물용의약품 기준 개정 건수 20종, 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품목수 5개
- ◇ 추진실적 : 농약 40종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동물용의약품 20종 기준개정, 식품첨가물 6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 성과

- 국내·외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를 통한 잔류 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
 - * 수입식품 83건, 국내 신규 등록 농약 173건 기준 설정 확대, 40종 농약 기준 재평가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로 안전관리 강화
 - *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 : 165종('14) → 185종('15) → 211종('16) → 240종('17)
- 식품첨가물 표백제(아황산류 6품목)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섭취량 평가 등을 통한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를 통한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지속)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설정 및 시험법 마련('16년 29종)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보존료 11품목 및 알루미늄함유 식품첨가물 5품목 기준·규격 재평가 추진('16)

[3-4-1] 농약·중금속·미생물·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평가

② 중금속·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엄미옥, 박종석 연구관, T.043-719-2416,
축산물기준과 조병훈 연구관, T.043-719-385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김혜정 연구관, T.043-719-4253
미생물과 김순한 연구관, T.043-719-4303)

과제 분류	정책 사항/ 법령 개정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 환경오염, 기후변화,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노출량의 변화를 반영한 현행 기준·규격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 식품위생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관련 법적근거 마련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 미생물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적 개념의 기준·규격(시료수 및 허용치) 도입에 필요한 식품·축산물 유형별 합리적·과학적 재평가

* 미생물 특성상 오염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시료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함

2. 추진계획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 중금속 6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10월)

* ('15) 중금속 6종 → ('16) 곰팡이독소 8종 → ('17) 다이옥신, PCBs

- 농·축산물 등에 대한 PCBs 7종 및 중금속 6종 총 식이조사(12월)

- 식품 중 곰팡이독소(8종), 벤조피렌(4종), 3-MCPD, 멜라민 오염도 실태 조사(12월)

□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 미생물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7월)
 - 국수, 우유류 등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103건 규격 개정
 - 생식제품, 조제분유 등의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19건 규격 개정

3. 추진실적

□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 과일·채소류음료 기준·규격 재평가를 통한 중금속 납 기준(0.05mg/kg) 강화(10.29 고시)
- 농·축·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인체 총 노출량 산출 및 위해성 평가 완료(12.31)
- 농·축·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인체 총 노출량 산출 및 위해성 평가 완료(12.31)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중금속 6종(4,800건), PCBs 7종(5,600건) 총 식이조사 완료(11.30, 총 10,400건)
- 다소비·다빈도 식품에 대한 곰팡이독소(8종), 벤조피렌(4종), 멜라민(2종), 3-MCPD(2종) 검사 완료(12.31, 총 21,652건)

□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과자류 등 위생지표균 60개 및 영아용조제식 등 식중독균 13개 규격(7.22), 면류, 혼합장, 소스류 등 위생지표균 34개 규격('16.1.6)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개정(12.16)
 - * 우유류 등 위생지표균 31건, 조제유류의 식중독균 6건 규격 개정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관련 전문가회의(4.30, 6.11)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 개최(6.15)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기준·규격 재평가 중금속 6종, 위생지표균 규격 제·개정 건수 103건, 식중독균 규격 제·개정 건수 19건
- ◇ 추진실적 : 중금속 6종에 대한 인체 총 노출량 산출 및 위해성 평가, 위생지표균 125건의 규격 제·개정, 식중독균 19건의 규격 제·개정 완료

□ 성과

-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준·규격의 과학적 재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 확보
 - 16개 시·도 및 6개 지방청을 통한 전국적으로 다소비·다빈도 식품 중 곰팡이독소 등 오염물질 21,652건 오염도 조사
- 통계적 개념의 규격 도입 확대로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
 - 시료수 확대(1→5개)를 통한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 향상 및 국제기준 조화
 - * 위생지표균(416건) : ('12) 107건 → ('13) 122 → ('14) 214 → ('15) 305
 - * 식중독균(626건) : ('12) 529건 → ('13) 565 → ('14) 575 → ('15) 594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총식이조사,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반영한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16년 7월)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정비 완료('16년)
 - * 위생지표균 : ('12) 107건 → ('13) 122 → ('14) 214 → ('15) 327 → ('16) 416(누적, 완료)
 - * 식중독균 : ('12) 529건 → ('13) 565 → ('14) 575 → ('15) 601 → ('16) 626(누적, 완료)

(3-4-2)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①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최용훈사무관, T.043-719-2502,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043-719-4353)

과제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기구·용기·포장 이행가능 물질(납, 카드뮴)에 대한 사용실태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노출량 평가 및 이에 따른 기준·규격 적정성 재평가

2. 추진계획

- 기구·용기·포장 유래 납, 카드뮴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 국내 유통 기구·용기·포장에서 유래되는 납, 카드뮴 이행량 모니터링 조사(10월)
 - * 합성수지제 250건 이상 및 그 외 재질 250건 이상
 - 노출량 평가 모델을 적용한 납, 카드뮴의 노출량 평가(12월)
- 노출량 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 납, 카드뮴의 노출량이 인체노출 허용량 대비 적정 수준이 되도록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12월)

3. 추진실적

- 기구·용기·포장 유래 납, 카드뮴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 납, 카드뮴 이행량 모니터링 조사(3~10월) 결과 기준·규격 이하
 - * 모니터링 건수 : 합성수지제 255건, 그 외 재질 263건 완료(총 518건)
 - 노출량 평가 모델을 적용한 납, 카드뮴의 노출량 평가(11월)
 - * 납, 카드뮴의 이행량이 미미하여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

□ 노출량 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 노출량 평가결과 및 국내외 기준·규격 등 비교결과 현행 기준·규격 유지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기구·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 2종
- ◇ 추진실적 : 이행물질 2종(납, 카드뮴)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 성과

- 기구·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 2종(납, 카드뮴)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등을 통한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 기구·용기·포장 중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규격 재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기구·용기·포장 이행가능물질 3항목(벤조페논, 톨루엔, 아민류) 재평가 추진('16)

[3-4-3] 인체모니터링 기반 통합 위해평가

① 유해물질 노출 수준 확인 및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043-719-4505)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인체 중심의 통합위해평가 기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 유해물질의 인체노출량 산출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체바이오 모니터링에 근거한 통합위해평가 수행

2. 추진계획

□ 인체 시료(혈액, 소변, 모유 등) 중 유해물질(곰팡이독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 수준 파악(12월)

□ DDT 등 유기염소계 농약 복합노출 고려 위해평가 지침 마련(12월)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12월)

* 인산염류 등 식품첨가물 20종 및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 3종 평가 수행

□ 유해물질 모니터링 자료 통합관리시스템(MIMS/MAPs) 운영

- 식품 중 잔류농약 등 7개군 106종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확보 및 식이섭취량,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노출현황 등 정보 제공(상시)

3. 추진실적

□ 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한 우리나라 국민의 유해물질 노출수준 파악(12월)

- 인체시료 1605건(소변1092건, 혈액 248건, 모유 265건) 중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오크라톡신A)의 모니터링 수행
- 소변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사체 분석법 마련·확립 및 시료

(4000건)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알디카브(살충제) 등 카바메이트계열 농약성분의 다매체·다경로 복합노출 고려 위해평가 지침 마련(12월)
- 식품첨가물(인산염류 등) 및 유해물질(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인체 노출안전기준 (재)설정(12월)
- MIMS/MAP¹⁾을 통한 위해평가 기반 빅데이터 확보 및 활용 확대
 - 식품 중 잔류농약 등 7개군 166종에 대한 모니터링, 식이섭취량, 인체노출안전기준, 리스크프로파일링 등 확보 및 정보 제공(상시)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정책제안 건수 25건, 가이드라인 제안 및 시험법 마련 5건
- ◇ 추진실적 : 정책제안 건수 45건, 가이드라인 제안 및 시험법 마련 18건

□ 성과

- 식품첨가물 41종, 유해물질 4종 인체노출안전기준 (재)평가 및 제안
- 우리국민의 대표성 있는 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평가
 - 곰팡이독소 2종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사체 15종에 대한 인체 시료 중 시험분석법 마련
 -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안전 수준임을 제시
- 과학적 위해평가 지원을 위한 복합노출평가지침서 1건 마련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인체시료 중 유해물질(환경성페놀류, 비스페놀 A 등) 노출 수준 파악('16.12)

1) 유해물질통합관리시스템: Monitor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Monitoring Data Assessment Program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16.12)
 - * 아황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20종 및 PCBs 등 유해물질 3종 평가 수행
- 유해물질 다매체·다경로 노출 고려 복합노출 위해평가기법 확립(~12월)
 - 선정된 물질의 사례 적용을 통한 MIMs/MAP자료 활용 복합노출 위해평가 수행 → 복합노출 위해평가기법 지침서 개정
- 유해물질 모니터링 자료 통합관리시스템(MIMS/MAPs) 운영(상시)
 - 식품 중 잔류농약 등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확보 및 식이섭취량,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노출현황 등 정보 제공

[3-4-4]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연구

①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공전 간 조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문귀임 T.043-719-4503,
 잔류물질과 장문의 연구관, T.043-719-4204)
 오염물질과 김신희 연구관, T.043-719-4252)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043-719-4353)

과제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확립 및 개선

- 생산단계 농약 시험법 공전조화, 미생물 시험법 개선
- 유해물질 첨가, 혼입, 오염 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기술 개발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및 양성대조물질 개발
- 기준규격 관리 및 사전예방적 차단을 위한 식품 중 식품첨가물 분석법 개발
-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기구·용기·포장 원료물질 분석법 개발

2. 추진계획

- 대표 작물의 농약 시험법 검증을 통한 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안) 마련(11월)
- 식품 중 스테리그마토시스틴 시험법 마련 및 HBCD 분석법 개발·실태조사(12월)
- 관련 부처의 공동연구 대상물질의 매질별 시험법 비교 검토를 통한 부처통합 오염물질 표준시험법 SOP 제작(11월)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콩 등 9건) 및 옥수수 22종 양성대조물질 개발(12월)
- 미생물 시험법 개발 및 최신 분석기술 적용 식중독균 검출법 개발
 - * 식중독균 시험법, 세균발육시험 등 비교·검증을 통한 시험법 개선(10월)
 - * 황색포도상구균 등 4종 신속동시검출법 및 특소포자총 검출법 개발(12월)
- 식품 중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중 이행물질 분석법 개발(12월)

* 식품 중 식품첨가물(식용색소, 수소 및 동클로로필) 분석법 마련('15.12)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중 산화방지제 분석법 마련('15.12)

3. 추진실적

□ 대표 작물의 농약 시험법 검증을 통한 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안) 마련

○ 생산단계 농약 시험법의 식품공전 조화를 위한 분석법 검증 및 비교 평가

* 대상농약 : 317종(LC-MS/MS 227종, GC-MS/MS 90종)

□ 식품 중 곰팡이독소 시험법 마련 및 잔류유기성오염물질 분석법 개발·실태조사 완료

○ 곡류 중 스테리그마토스시틴, 식품(10품목) 중 HBCDs 및 TBBPA 시험법 마련(12월)

□ 공동연구 대상물질의 매질별 시험법 비교 검토를 통한 부처통합 오염물질 데이터베이스(ECO Food Network) 구축(11월)

* 부처별(식약처, 환과원, 농과원, 수과원) 비소, 무기비소, 과불화합물 시험법 비교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및 옥수수 22종 양성대조물질 개발(12월)

○ 미승인 품목의 유전자변형 식품의 시험법 확립 및 유전자변형식품 옥수수의 시험을 위한 표준품 22품목 개발(11월)

* 아마(1), 파파야(5), 감자(3)의 정성시험법

□ 미생물 시험법 및 최신 분석기술 적용 식중독균 검출법 개발

○ 살모넬라, 세균수 등에 대한 시험법 개정안(4건) 마련(4월)

○ 식중독균 시험법에 대한 비교검증 시험 및 개정안 마련(3-11월)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 캄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크로노박터 사카자키, 바실러스 세레우스, 브루셀라

○ 독소포자충 특이 유전자를 이용한 일반 PCR법 및 real time PCR법 개발(8-11월)

○ 5종 식중독균에 대한 real time PCR 신속 검출법 마련(12월)

*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 식품 중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이행물질 분석법 개발 완료(12월)

* 식품 중 식품첨가물(3종) 분석법 : 식용색소, 수소 및 동클로로필

* 기구·용기·포장 중 이행물질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중 산화방지제(이가녹스 등 10종)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시험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 120건

◇ 추진실적 : 시험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 120건

□ 성과

- 생산단계 농약 시험법과 식품공전 다중농약다성분 시험법의 비교를 통한 시험법 조화로 검사의 효율성에 기여
- 오염물질, 미생물 등의 시험법 마련으로 관련 기준규격 관리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
 - * 곰팡이독소(1종) 및 잔류유기성오염물질(2종) 시험법 마련
 - * 식중독균 신속검출법(5건) 및 특소포자총 검사법(2건) 마련
- 기준규격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안) 및 「식품 중 식품첨가물 분석법」 책자 수재(안) 마련
 - * 살모넬라 등 공인미생물시험법 개정(안) 마련 및 정책부서 송부(4건)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 미설정 물질인 산화방지제 10종에 대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시험법 신설(안) 마련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본 과제에 포함되어 있던 ①미생물 및 오염물질, 기구용기포장 이행물질, ②잔류농약, ③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선 중 ②, ③ 과제내용 조정에 따른 실적 감소분을 '16년 성과목표치에 반영하여 조정 필요

② 잔류농약 신속스크리닝 시험법은 '16년 목표달성으로 종료예정

③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등은 [2-2-1-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과제로 옮겨 추진

5. 향후 추진계획

- 생산단계 농약 시험법 식품공전 조화를 위한 개정 추진('16년~)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식품공전 오염물질 시험법 개선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 최신 분석기술을 적용한 식중독균 신속검출법 개선
-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리 강화 및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분석법 지속 개발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4-1-1)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 식품관리

①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및 환자용 영양식품 수요조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이해영 연구관, T.043-719-2259)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개인이 영양소 섭취량을 쉽게 계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양관리 프로그램 '칼로리 코드' 앱을 통하여 영양정보 제공 확대
- 영양취약환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식품 개발을 위하여 수요조사 실시 및 관리방안 마련

2. 추진계획

칼로리 코드 등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제품의 영양정보 DB화(9월)
- 칼로리 코드 앱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 확대
- * 정보제공 품목수(누적) : ('14) 583개 → ('15) 3,973개

환자용 영양식품 수요도 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 환자용 영양식품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의 임상영양사, 산업계 대상 수요조사(4~10월)
- 환자용 영양식품의 공통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11월)

3. 추진실적

□ 칼로리 코드 등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제품의 열량 등 영양정보를 DB화하여 홈페이지(식품영양성분 DB 시스템)에 업로드 후 정보 제공(12월)
 - * ('14년) 밀가루, 사탕 등 약17,000개 → ('15년) 약 39,786개
 - * 식품영양성분 DB정비 및 확충사업 추진(10.14~12.15)
- 개인이 식품섭취량을 입력하면 영양섭취량이 자동 계산되는 개인 영양관리 앱(칼로리코드 앱)을 업그레이드하여 정보 제공 확대
 - * 모든 페이지에서 원클릭 접근(슬라이딩 메뉴맵 사용)

□ 환자용 영양식품 수요도 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 환자용 영양식품 시장 현황 파악 및 사용 실태조사(4~12월)
 - * 국내시장(약 2천억원)은 글로벌 시장(약 11조)의 2.0% 수준이나, 성장률(7.75%)이 세계 3위 수준으로 잠재적 수요 증가 예상
 - 전국 의료기관 영양사·의료진·업체 사용실태·수요도 조사(9월)
 - * 의료기관의 85%가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사용하나, 33%는 시중 제품을 다시 조제하여 제공(현 제도 만족도는 영양사 34%, 의사 11%로 낮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수요는 높음)
- 환자용 영양식품의 기준·규격, 첨가물, 표시 등 개선방안 도출 등
 - * (기준·규격) 8종 → 간질환자용 등 5종 추가 총13종으로 유형확대
 - * (첨가물) 외국에서 허용되는 첨가물 미등재 → 첨가물 사용 확대
 - * (표시) 질병 표시 제한 → 섭취대상 및 용도 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 제외국의 관리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개선방안 도출(12월)
 - * 제품에 섭취목적, 용도 등을 표시할 때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시 가이드라인(안) 마련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영양프로그램 ISP개발, 환자용 영양식품 가이드라인 개발 건수 4건
- ◇ 추진실적 : 영양프로그램 ISP개발 및 가이드라인 8개 유형 개발

□ 성과

- 식품영양성분 DB 확충 및 칼로리코디 앱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확대
- 의료용도식품의 제조·유통·사용실태, 수요도, 제도현황 조사 등을 통해 의료용도식품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확보

□ 문제점

- 식품영양성분 DB는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학교급식, 보건소 및 산업체 등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조체계 미흡
- 의료용도식품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는 확보되었으나, 개발 및 활성화 기반은 미흡

□ 개선대책

- 학교, 보건소 및 산업체 등의 시스템과 협업하여 할 수 있는 관련 학회, 협회 등을 통해 홍보
- 다양한 의료용도식품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 의료용도등식품 섭취가이드, 표시 가이드라인 개발 등

5. 향후 추진계획

- 대국민참여 박람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등 우리처 각종 행사에 칼로리코디,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홍보
- 현 법령체계에서 질환별 특성에 맞게 섭취대상, 섭취용도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작·배포('16.6월)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개발 지원 및 섭취가이드 마련('16.12월)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유형 확대 및 첨가물 사용기준 확대('16.12월)

[4-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황선순사무관, T.043-719-2313)

(담당자 :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선우은성 사무관, T.043-719-2310)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영양사 고용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에 대한 체계적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2. 추진계획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연중)

- 센터 설치 독려를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2월~) 및 어린이집 대상 홍보용 포스터 배포 등(연중)

* 지원센터 설치 및 어린이 수혜율(%) : ('14) 142개소, 37% → ('15) 190개소, 5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 거점센터 운영(연중)
- 가이드라인 질의·답변집, 예산집행지침 및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지침서 제작·배포(1월~2월)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6,9,11월)
-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안전·영양 현장 방문 지도 강화(1월~)
- 센터 우수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3월, 8월)
- 센터 현장 점검을 위한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3월~10월)
- 센터 등록 급식소를 대상으로 센터의 원활한 지원업무 수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실시(5월, 10월)

- 센터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확산(12월)

3. 추진실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센터 설치 독려를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67회), 어린이집 대상 홍보용 소책자 및 포스터 배포 등(2.5, 14,510부/3.3 608부)
- * 지원센터 설치 및 어린이 수혜율(%) : ('14) 142개소, 37% → ('15) 190개소, 5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관리

- 센터간의 업무효율화, 상향평준화 및 컨택 포인트 역할 등을 위한 지역 17개 거점센터 지정·운영
 - * 거점센터 팀장 회의(2.26, 7.29) 및 정기 협의회 개최(1.16, 4.16, 7.9, 11.13) 실시
- '가이드라인 질의·답변집', '예산집행지침' 및 '어린이급식관리 지침서' 제작·배포(1.19, 2.6, 3.17)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3.23~24, 7.20~21, 8.31~9.1, 11.2~3)
 - * 2일 집합교육, 센터 직원 204명 교육 이수
-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안전·영양 현장 방문 지도 강화(1월~)
 - * ('14년) 급식소 당 연 6회 → ('15년) 급식소 당 연 9회
- 센터 우수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3.16, 3.17, 3.18, 3.19, 3.20, 3.25, 3.26, 8.20)
 - * 센터 직원, 지자체 담당자, 위탁기관 관계자 등 약 338명 참석
- 센터 현장 점검을 위한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4.6~4.30)
 - * ('14) 48개소 → ('15) 139개소
- 센터 등록 급식소를 대상으로 센터의 원활한 지원업무 수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실시(7.3~8.7, 11.16~30)
 - * 총 521개소(상반기 301개소, 하반기 220개소)
- 우수사례 확산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한 '15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최종성과보고회 개최(12.16)

- * '15년 우수센터 시상(최우수 1개소, 우수 4개소, 장려 15개소) 및 센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지자체, 센터직원 등 960여명 참석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대상 어린이 수혜율 50%
- ◇ 추진실적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대상 어린이 수혜율 50%(71만명) 달성

□ 성과

- 100명 미만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를 통한 지원 수혜율 13%p(19만명) 증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14년 142개소 → '15년 191개소
 - 수혜 아동수 : '14년 52만명(37%) → '15년 71만명(50%)
- 지역센터 총괄 관리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높은 수준의 표준화된 위생·영양관리 제공을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예산 확보 및 운영('16.2~12)
 - * 예산 : 711백만원 / 총 11명(센터장 1명, 직원 10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 * 등록시설 지원서비스 종합만족도 : ('14년) 89.6점 → ('15년) 91.0점
 - * 수혜 어린이 부모 종합만족도(신규) : 87.9점

□ 문제점

- 전체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은 53%(23,318개소)에 이르나, 센터 지원을 받는 가정어린이집은 27%(6,397개소)에 불과
 - * 센터 지원 대상 어린이집 43,742개소 중 가정어린이집 23,318개소(53%)('14.12.31, 보육통계)
- 조리원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원장이 조리원을 겸하는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개선대책

-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가정어린이집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위생 사각지대 해소

5. 향후 추진계획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및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20명이하)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연중)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관리 상향 표준화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연중)

[4-1-3]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① 영양표시 실태조사 및 외식 자율영양표시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이해영 연구관, T.043-719-2259)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영양표시 확대 및 기술지원, 영양표시기준 개선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으로 영양표시제도의 효율성 제고

2. 추진계획

□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및 표시기준의 합리적 운영

- 표시실태, 위해가능성분 급원*, 국민요구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15년 하반기)

* (예) 당류 급원식품 : 떡류, 설탕 및 당류, 드레싱 및 조미식품, 김치류 및 절임식품, 건과류, 규격외 가공품(당류가공품) 등

□ 영양표시 확대를 위한 영양성분 DB 확충 및 기술지원 확대

- 직접 분석하지 않고도 DB를 활용하여 영양성분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주요 식품원료 DB 분석·보완(12월)
- 산업체를 위한 영양표시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연 2회)

□ 영양표시 교육·홍보 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 확산

- 어린이·청소년 대상 '영양표시 교실' 운영(4~9월)
 - * '올바른 식품선택요령', '영양표시 읽는 방법' 등
- 국민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영양표시 읽기' 캠페인(5, 10월)
 -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식품안전의 날, 영양의 날, 청소년박람회, 어린이 날 등) 시 식품안전·영양 정책 홍보관 운영
- 영양표시 활용 인식 확산을 위한 TV광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9~11월) 및 소비자 인식 조사(9~10월)
 - * 영양표시 활용도 : ('14) 64.8% → ('15) 58% 목표

3. 추진실적

□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및 표시기준의 합리적 운영

- 국민 섭취량을 고려한 영양표시 확대 우선순위* 및 업체 매출액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방안 도출
 - * 시리얼류, 어묵류, 즉석섭취식품, 김치류 등 우선확대 대상 식품 선정
 - * 영양표시 확대 및 개선 사업 추진(2.24~12.15.)
- 영화관 등 자율 영양표시 확대
 - * ('13) 3,910 매장 → ('14) 6,693 매장 → ('15) 7,168 매장(전년 대비 7.1% 상승)
- 커피, 장류 등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 확대 및 1회 제공기준량 신설·개정 등 영양표시 기준 재정비
 - *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8.18)
 - * (기존) 11개 식품군 86개 식품유형 → (확대) 13개 식품군 100개 식품유형
- 설탕, 장류 등 1회 제공기준량 미설정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 신설(44개) 및 개정(15개)
 - *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11.12~12.3), 개정공포(12.14)
-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거쳐 1회 제공량 등 영양성분 표시단위 체계화
 - 다른 표시와 구분되게 영양표시 도안 개선 등 재정비(11월)
 - * '영양표시 개선 및 정보제공' 국민디자인 10대 과제 이행(4~11월)
 - * 41개 중앙부처 75개 과제 중 선정(주제: 소비자가 알기쉬운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 영양표시 확대를 위한 영양성분 DB 확충 및 기술지원 확대

- 직접 분석하지 않고도 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영양성분을 산출 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DB 분석·보완(12월)
 - * 총 39,786건 검토(기존 DB포함) → 중복, 오류 등 검토 후 최종 24,702건 확충
- 공무원, 산업체 등 영양표시 담당자 영양표시 교육과정 운영
 - * 국내외 동향, 영양표시 규정·실습,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교육(10.26~11.3)

□ 영양표시 교육·홍보 강화 및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수요조사

- ‘영양표시 교실’ 운영을 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현장 체험교실
 - * 어린이·청소년 등 총 216회 5,316명(지방 65회 1,450명 포함) 교육 참여
- 대국민 행사 연계, 영양표시 읽기 제고를 위한 캠페인
 - * 정부3.0박람회(4월), 청소년박람회(5월), 식품안전의날(5월), 튼튼쑥쑥박람회(5월)
- 영양표시 읽기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공익광고
 - * 종합편성채널 뉴스(6~8월), 영화관(12월), 신문사(7.15)
- 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및 활용도, 이해도 및 요구도,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 조사(10.15~30)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영양표시 소비자 활용도 58%
- ◇ 추진실적 : 영양표시 활용도 66.4%로 전년대비 1.6%p 상승(성과 지표 달성)

- 커피,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 확대로 시중 유통중인 식품의 영양표시 정보제공 확대
 - * (기존) 11개 식품군 86개 식품유형 → (확대) 13개 식품군 100개 식품유형
- 외식의 자율영양표시 확대 및 DB 확충으로 정보 제공 강화
 - * ('14) 6,693 매장 → ('15) 7,168 매장(전년 대비 7.1% 상승)
- 영양표시에 대한 활용도 향상으로 영양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 * '15년 영양표시 활용도 66.4%로 전년대비 1.6%p 상승(성과 지표 달성)

□ 문제점

- 커피, 장류 등 영양표시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1회 제공량 등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

□ 개선대책

- 영양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당’ 표시에서 ‘총 내용량(1 포장)당’ 표시로 변경 및 영양표시 도안 개정

5. 향후 추진계획

-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및 표시기준 개선

[4-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환경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김성희 사무관, T.043-719-2302)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보장을 위한 관리 강화

- 학교주변 판매 식품에 대한 국민 안심체감도 향상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및 정책 홍보 강화

2. 추진계획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 관리 강화

- 가격이 저렴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강화(분기별)
-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대비 제조·수입업체 지도·점검(1월)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6월)
- 어린이 기호식품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및 수입단계 무작위 검사 강화(연중)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매월 상시 점검(상시) 및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확대 실시

□ 대국민 정책 인지도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

- (학부모) 지하철 역사에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 동영상 송출(6월, 11월) 및 대형마트에 동영상, 음성광고, 포스터 등 안전정책 홍보(10월)
- (어린이) 박람회, 공모전을 활용한 홍보 실시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

- 전담관리원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3월)
-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교육과정 운영(3월 8월)

3. 추진실적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 관리 강화

- 가격이 저렴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15.6)
 - * 237개소 점검(전년 229 개소 대비 3.4% 증가)
-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수입업체 지도·점검(1.13~21)
 - * 123개소 점검('14 122개소 점검), 위반 20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추진
 - * 품질인증마크 통일(2월), 처리기한 단축(30일→20일) 및 재심사 수수료 폐지(10월)
- 어린이 기호식품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및 수입단계 무작위 검사 강화
 - * 현지실사 8개국 19개소, 정밀(무작위)검사 비율: 37%(전년 34%)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상시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확대실시
 - * 378,346개소 점검, 위반 177개소(전년 340,832 개소 대비 11% 증가)
- 봄·가을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상시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 62,984개소 점검, 위반 34 개소(전년 15,074 개소 대비 317% 증가)

□ 대국민 정책 인지도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

- **(학부모)** 지하철 역사에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 동영상 송출 및 대형마트에 동영상, 음성광고, 포스터 등 안전정책 홍보
 - * 수도권 지하철 70개 역사, 마트(동영상, 포스터), SNS 홍보이벤트, 인터넷카페
 -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기관장 현장점검(11.27)
- **(어린이)** 박람회, 공모전을 활용한 홍보 실시
 - * 어린이 안전체험교실(4~11월), 튼튼쑥쑥 어린이 박람회(5월), 청소년 건강박람회(5월)
 - *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 개최(3월) 및 전시(8~10월)
 - * 홍보물 배포(3종) 및 가정통신문(4회) 및 정례반상회지 게시(4회)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

- 전담관리원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 * 교육책자1종, 강의PPT 및 대본4종, 지도·점검 동영상 4종
 -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매뉴얼(3월) : 전국 245 시·군·구 3,897부 송부
-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교육과정 운영
 - * 2회 81명 교육 (3.4(46명), 7.31(35명))
-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과정 운영
 - * 4회 131명 (7.29~30(33명), 8.5~6(35명), 8.10~11(31명), 8.12~13(32명))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65%
- ◇ 추진실적 : 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51.5%

□ 성과

-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횟수를 확대하여 안전한 어린이기호식품 유통·판매 환경조성에 기여
 - 학교주변 식품안전체감도 : 51.5%(전년 대비 1.8% 증가, '14년 49.7%)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율 : 0.05%(전년 대비 0.03% 감소, '14년 0.08%)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성과 목표를 의욕적으로 설정하고 학교주변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 전년대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반율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의 인식 변화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음
- * 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 ('12)52.0→('13)43.0→('14)49.7→('15)51.5,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율 : ('12)0.10→('13)0.09→('14)0.08→('15)0.05

- 학교주변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나, “체감도”라는 지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목표치로 재설정 필요
- (개선대책)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횟수를 확대*하고, 학원밀집구역·놀이동산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하여 관리 강화
- 대상별 맞춤형 홍보도 지속 추진하여 국민 인식변화 도모

*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횟수(회/년) : ('15)10 → ('16)12

5.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식생활 정책홍보 강화
- 학원 밀집구역·놀이동산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하여 관리(연중)

[4-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② 초·중·고등학생 대상별 식생활 안전·영양 교육 지원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반경녀 연구관, T.043-719-230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등 식생활 안전·영양 교육 지원 확대
 - 초등학교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교사용 지침서 보급
 -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 청소년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육 지원 확대

2. 추진계획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식생활 실천을 위한 초등학교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확대
 - 초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 교육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교육 교재(1·2학년, 3·4학년, 5·6학년용) 및 교사용 지침서 배포(3월)
 - * 전국 초등학교(278만명) : ('14년) 12만5천명(4.5%) → ('15년) 14만명(5%)
 - 참여학교 담당 영양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3월)
 - *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가이드 및 성인지 교육 실시
 - 영양교사 식품안전·영양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개설(7~8월)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10월)
- 청소년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중·고등학교 식품안전·영양 교육 지원
 - 중·고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 교육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교육 교재(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사용 지침서 배포(3월)
 - * 전국 중·고등학생(355만명) : ('14년) 1만2천명 → ('15년) 1만4천명

- 참여학교 담당 영양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3월)
- 청소년 식품안전·영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10월)

3. 추진실적

□ 초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확대

-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교육 교재(1·2학년, 3·4학년, 5·6학년용) 및 교사용 지침서 배포(3월)
 - * ('14년) 12만5천명(543개교, 4.5%) → ('15년) 14만1천명(551개교, 5.2%)
- 참여학교 담당 영양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3월)
 - * 1차(3.19, 수도권, 호남권 등), 2차(3.20, 충청권, 영남권 등) / 총 235명
- 영양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개설(7~8월)
 - * 1기(7.29~30, 33명), 2기(8.5~6, 35명), 3기(8.10~11, 31명), 4기(8.12~13, 32명)
- 식품안전·영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4회 우수사례 공모전(10~11월)
 - * (참여) 초 27개 우수사례 / (시상) 초등학교 10개 선정

□ 중·고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 교육 지원

-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교육 교재(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사용 지침서 배포(3월)
 - * ('14년) 1만2천명(60개교) → ('15년) 2만6천명(125개교)
- 참여학교 담당 영양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3월)
 - * 1차(3.19, 수도권, 호남권 등), 2차(3.20, 충청권, 영남권 등) / 총 56명 참석
- 청소년 식품안전·영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10~11월)
 - * (참여) 중·고 10개 우수사례 / (시상) 중·고등학교 4개 선정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초등학교 교육참여 학생비율 5.0%
- ◇ 추진실적 : 초등학교 교육참여 학생비율 5.2% 달성
- * (참여 초등학생수 14만1천명/전국 초등학생 수 272만명)

□ 성과

-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린이·청소년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실천을 유도하고 식품선택 능력 향상

* 초등학교 수 : ('14)12만5천명(543개교, 4.5%) → ('15) 14만1천명(551개교, 5.2%)

☞ '14년 대비 참여학생 비율 0.7%p 증가

* 중·고등학교 수 : ('14년) 1만2천명(60개교) → ('15년) 2만6천명(125개교)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실천유도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수혜율이 여전히 낮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필요
- '16년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여 학교당 교육교재 보급을 늘려서 초·중·고등학교 식품안전·영양교육 참여 독려

5. 향후 추진계획

- '16년 초·중·고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 실시 및 영양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지속적으로 운영

[4-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③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공표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김성희 사무관, T.043-719-230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수행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 환경개선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인구규모 및 생활여건에 따른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실시

2. 추진계획

- 2014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결과 공표
 - 2014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 결과 심의(2월)
 - 전국 228개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결과 공표 및 보도자료 배포 (3월)
 -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우수지자체 포상(4월)
- 지자체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컨설팅 실시(4월~)
 - 228개 권역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지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책지도 제작·발표

3. 추진실적

- 2014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결과 공표
 - 2014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 결과 심의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2.27)
 - 전국 228개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결과 공표 및 보도자료 배포

- 2014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결과 발표(3.26)

○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우수지자체 포상

- 우수 지자체 포상 : 8개 시·도 포상금 지급(총 포상금 1,000만원)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사업 완료('15.2~11)

- '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 사용할 세부지표 개발연구

□ 지자체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컨설팅 실시

○ 228개 권역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지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책지도 제작·발표(3.26)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 결과보고서 내에 최상위, 최하위 비교·분석하여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수립 시 참고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지수 정책지도 제작

4. 자체평가

□ 성과

○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어린이 식생활안전·영양수준 향상

* ('14)67.5 (전년 대비 3.8점 증가, '13. 63.7)

내용 \ 연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조사대상	군 단위 85개 평가지표개선안 마련 추진	69개 특광역시 구 전국조사사업동시 실시	전국 288개 지자체
안전지수(점)	61.8	63.7	67.5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사업 완료('15.2~11)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17년 식생활안전지수 조사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 '17년 식생활안전지수 조사에 활용할 세부지표 검토 및 확정

[4-1-5]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기성 사무관, T.044-201-227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체험·교육 기회 제공 및 우수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바른 식문화 구현
 - 소비자 계층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식생활교육 기회 제공
 - 효율적·효과적인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강화
 - 지역단위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국적 확산 도모

2. 추진계획

-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시행(3월~)
- 범부처 식생활교육위원회 개최(2월~)
- 식생활교육 지자체 지원사업 실시(3월~)
- 식생활교육기관 및 우수농어촌체험공간 지정 확대 추진(1월~)
- '식생활교육의 달' 및 '식생활교육의 날' 지정 추진(6월)

3. 추진실적

- 식생활교육지원법 따라 관계 부처(기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개최(2.25.)
 -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5~'19)를 심의 의결하여 확정 공포(3.2.)
- 식생활교육지원법 따라 관계 부처(기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개최(2.25.)

-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생활교육기관 2개소 신규지정(누적 55) 및 농촌 체험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체험기관 18개소 신규지정(누적 167)**
- **식생활교육의 가치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의 달과 날을 지정하여 범국민 캠페인과 연계하여 추진(6월)**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체험공간지정 160개소, 교육기관 지정 60개소, 초등 텃밭가꾸기 60개소, 어린이집 텃밭 100개소
- ◇ 추진실적 : 체험공간지정 167개소, 교육기관 지정 55개소, 초등 텃밭가꾸기 110개소, 어린이집 텃밭 216개소

□ 성과

- **식생활·식습관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실천·확산 노력으로 교육대학교 학과목 신설, 농촌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 시범사업 추진 및 식생활교육기관 신규 지정**
 - * 교육대학교 식생활교육 학과목 신설 : ('14년) 0개교 → ('15) 7
 - ** 농촌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 시범사업 : ('14년) 0개 마을 → ('15년) 10
 - *** 식생활교육기관 : ('14년) 53개 → ('15년) 55
- **관계부처·기관, 기업체, 단체·협회 등 업무 협업·협약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 영·유아 어린이집 대상 식생활 개선사업 : 복지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업무협약(10.15.)
 - ** 농촌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 시범사업 :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풀무원 및 농협 등

□ 문제점

- 다양한 식생활·식습관 교육을 전개하였으나, 시범사업 형태의 단기성 추진으로 교육 효과의 지속성 미흡

□ 개선대책

-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수혜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추진
- 대학교를 중심으로 식생활교육 운영에 역량 있는 기관을 발굴하여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5. 향후 추진계획

-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강화
- (영유아) 텃밭을 활용한 과일·채소류 재배 및 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편식 예방, 식생활 교구 지원 등으로 바른 식습관 형성 추진
- (청소년) 쌀 중심 식습관 학교 확대('15: 172개교 → '16: 200개소) 운영을 통해 쌀 소비의 미래 수요층 육성 및 건강 증진 도모(3월)
- (성인) 식생활교육 과목을 개설한 학교를 확대하여 예비교사 단계부터 교육(3월~)
 - * ('15) 7개 학교 시범 운영 → ('16) 11개교
- (전체) 대형유통업체 문화센터에 식생활교육 강좌 개설 확대
 - * 확대 운영 : ('15) 3사 40개소 → ('16) 4사 50개소
- (기타) 학교, 기업체 등 대상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활성화 및 식생활교육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

[4-1-6]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①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사무관, 강행화주무관, T.044-203-6546)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체계화
 - 식단표,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 학교급식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하여 학생의 자기건강 관리능력 함양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규격 표준화(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협업) 및 개정된 식품성분표 내용 반영 추진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반영
 - *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토요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월2회 이상 실시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
 - 저염식단 개발·보급, 학교급식 관계자 및 학생 대상 교육 강화
 -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 및 가공식품에 함유된 나트륨량 정보 파악(입력) 및 식단표를 통한 산출기능 개발·보급

2. 추진계획

-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지침 시달('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15.1월)
- 식재료 규격 표준화(상반기) 및 NEIS 학교급식시스템 반영(하반기)
-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영양·식생활교육,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및 나트륨 저감화 추진실적) 점검('15.12월)

3. 추진실적

-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지침 시달(2015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15.1.19)

- 알레르기, 영양량, 원산지 등 급식정보를 식단표에 표시하여 학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NEIS 대국민 서비스)으로 공개, 가정에 통보
 -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반영 등
- 학교급식 현장 모범사례 발굴·보급
- 모범사례 발굴(28건), 발표회 개최('15.5.29), 학교 보급('15.6.9)
- 식재료 규격 표준화 및 NEIS 급식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 식재료 규격 표준화 완료('15.6.3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협업)
 - 표준규격 반영을 위한 NEIS 급식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15.9.30)
-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15.12월)
- 영양상담실 운영(11,566개교, 98.9%), 영양교사의 월 2회 이상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3,264개교, 66.8%),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11,697개교, 100%), 나트륨 저감화 계획 수립·추진(11,100개교, 94.9%)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영양·식생활 교육실시율 65%
- ◇ 추진실적 : 2015년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율 66.8%
- * 영양교사가 배치된 4,888개교 중 3,264개교에서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월2회 이상 교육 실시

□ 성과

- 학교단위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모범사례 발굴·보급, NEIS 급식시스템 기능 개선(영양관리 등) 등 과학적이고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 * 영양교사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율(월2회 이상): (목표) 65% → (성과) 66.8%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계속)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4-2-1]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①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정정순 사무관, T.043-719-2104)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우려 시설 집중 지도·점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2. 추진계획

식약처 주관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구성·운영(연 3회)

*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32개 기관 참여

학교(3, 8월),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우려 시설 지도·점검(4월)

* 학교 전수점검 : ('14) 5,047개교(46%) → ('15) 10,248개교(100%)

전국 교장, 영양사 대상으로 개학 전 식중독 예방교육

- 교육청별 학교장, 영양(교)사 기존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1~3월, 7~9월)
- 위생취약 학교 대상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및 교육·홍보 강화
- * 식중독 발생 이력학교,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학교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 주요 안전기준* 위반 시 즉시 HACCP 지정 취소(One-strike제 도입, 9월)
- * 지하수 살균·소독·작업장 세척소독·원료검사 미실시, 중요관리점(CCP) 위반 등
- 부적합 이력 학교급식 납품 HACCP 업체 평가(연2회) 실시(1월~)

3. 추진실적

식약처 주관,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운영하여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수립·추진(연 3회, 32개 기관 참여)

- * (2.26, 고위급)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등 → (6.26, 실무급) 여름철 예방관리 대책 등 논의 → (11.18, 실무급) 겨울철 예방관리 대책 등 논의

□ 학교(3, 8월),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우려 시설 지도·점검

- 개학전 학교급식시설 청소·소독·살균 등에 대한 현장 확인(1.29~2.27)
 - * 총 624개교 점검, 현장지도 3개교(청소상태 및 주방기구 살균소독 미흡)
- **올해 최초로** 교육부·지자체와 합동 **학교급식 전수 지도·점검**(3, 8월)
 - * 점검 : ('14) 5,047개(46%, 52개 적발) → ('15) **10,248개(100% 전수점검, 80개 적발)**
- 청소년 수련시설, 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점검(4.6~17)
 - * 2,897개소 점검, 168개소 적발

□ 전국 교장, 영양사 대상으로 개학 전 식중독 예방교육

- 전국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 실시
 - * 상반기(1~4월) 90회, 24,042명 / 하반기(7~10월) 117회, 22,521명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 지하수 살균·소독, 중요관리점(CCP) 위반 등 중요항목 위반시 HACCP을 즉시 취소하는 'One-strike out' 제 도입(축산물 7월, 식품 8월)
- 부적합 이력 학교급식 납품 HACCP 업체 평가(연2회) 실시(1월~)
- 개학철 식중독 예방 대비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 * 1,893개소 점검, 32개소 적발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 44.8명(십만명당)
- ◇ 추진실적 :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십만명당) : ('15) 32명 (달성도 129%)
 - *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 : ('14) 4,135명 → ('15) 1,944명 (53.0%↓)

□ 성과

-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십만명당) : ('13) 43 → ('14) 62 → ('15) 32명
 - * (식중독 발생 학생 환자수 × 100,000) / 총 학생수(6,114,363명, '15년 교육부 통계)
 - *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 : ('12) 3,185명 → ('13) 2,247명 → ('14) 4,135명 → ('15) 1,944명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계획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강화(강화)
 - 학교급식시설 전수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위생취약 학교 상시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강화

[4-2-1] 식중독 사전예측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②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황진희 연구관, T.043-719-210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계절 식중독 원인균 등 식중독 발생 원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홍보 실시

2. 추진계획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식중독 업무 담당자 대상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및 전문강사 양성 과정 교육 실시(1~8월)
-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 (동영상) 개학 초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여름철(병원성대장균), 겨울철(노로바이러스) 등 맞춤형(시기별·원인균별) 제작(1월~)
 - TV(지상파 등), 라디오,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기별 송출(연중)
 - 청소년박람회(5월), 식품안전의 날 등 홍보부스 운영(5월), 시기별 이슈 맞춤형 보도자료 배포(연중)

3. 추진실적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식중독 원인조사과정(4회, 132명), 식중독 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4회, 84명)
 -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5.1~8.28)
 - * 전국 226개 자치구 및 세종·제주 지역 대상 196회, 20,516명 교육

□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 개학 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여름철(병원성대장균), 겨울철(노로바이러스) 등 맞춤형(시기별·원인균별) 영상 및 음원 각 3종 제작(5.28)
- ‘보고 느끼는’ 콘텐츠로 식중독 예방 관련 웹드라마 제작·송출
- ‘수사관 엘리스’ 8편 제작 및 인터넷 등 방영(10.15~), 약 250만명 시청
- TV(5~12월), 라디오(5~9월, 11~12월), 지하철·KTX(7~9월, 12월), 옥외전광판(11월), 인터넷(1~3월, 6~9월, 11~12월)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식품안전의 날(5.9),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연중),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10.2~10.11), 광주국제식품전(11.26~29) 등 관련 행사시 홍보물품(물티슈, 퍼즐, 리플릿 등) 지원 및 시기·이슈별 보도자료 18건* 배포(연중)
* 식중독 예방 요령 홍보(9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6건), 기타(3건)
- 뽀드득 뽀드득 어린이 손 씻기 UCC 공모전 실시(6.22~8.7) 및 우수작을 전국 어린이집 대상 교육용 배포(9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155개 어린이집 참여, 5개 우수작 선정 및 시상(9.7)

4. 자체평가

□ 성과

- 전체 식중독 환자수 : ('14) 7,466 → ('15) 5,947명 (20.3↓)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식중독 홍보계획 수립('16.1월)
 - 주요 원인균별, 시기별 이슈에 따른 맞춤형 홍보
 - 식품위생 담당자, 급식종사자 등 역량강화 교육 지속

[4-2-1] 식중독 사전예측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③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황진희 연구관, T.043-719-210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 저감화

2. 추진계획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집중관리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 및 검출업체 개선조치(연중)
 - * 조사건수 : 총 680건(평가원 및 지방청 360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20건)
 -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위한 장치 보급 확대(지자체, 총 16대)
- 학교 등 비영리 급식시설에 대한 살균·소독장치에 대한 이전설치 등에 대한 사후관리(연중)
 - '12년 및 '13년 설치한 지하수 살균(염소 및 복합살균)·소독장치, '14년 반납(철거) 및 이전설치 된 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3. 추진실적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집중관리
 -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계획 시달(1.30)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
 - 총 680건 검사(평가원 및 지방식약청 360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20건)
 -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 : 총 6건(부산식약청 1건, 대구식약청 1건, 강원도 4건)

- 검출(부적합) 시설 조치 : 상수도전환, 저수시설 청소·소독, 시설개수 등 실시 후 재검사 적합 확인
- 채수 장비 및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자본보조금 192백만원)
- 유전자 증폭기, 원심분리기 등 노로바이러스 분석 장비 확보
- 학교 등 비영리 급식시설에 대한 살균·소독장치에 대한 이전설치 등에 대한 사후관리(연중)
- '12~'13년 지원 설치한 장치 및 '14년 이전설치 한 살균·소독장치에 대한 이전설치 등에 대한 사후관리(단가계약) 계약(4.1)
- 학교 등 비영리 급식시설 56*대에 대한 이전설치 및 반납 등 사후관리 수행
- * 56대 중 이전설치 20대, 반납 36대(12.31)

4. 자체평가

□ 성과

-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로 김치 등 가공식품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저감에 기여
- 지하수 사용 학교 등 비영리 시설 대상 염소 소독장치 지원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체제 강화에 기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에 대한 '16년 국고보조금 확정 알림 및 사업계획 제출 요청
- 지자체 월별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제출('16.1월)

[4-2-1] 식중독 사전예측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④ 식중독균 추적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황진희 연구관, T.043-719-210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신속한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식중독균 유전자형(PFGE) 분석, 유전정보 DB 운영 및 전국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수입·유통식품 및 농·축·수산물에서 분리된 식중독균 유전자형을 비교 분석하고 DB 관리로 원인규명 및 오염원 추적관리

2. 추진계획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 등의 식중독균 실태조사(연중)
 - 농·축·수산물, 즉석섭취·편의식품 등에서 식중독균 검사(목표건수 : 10,000건)
 - 식중독균 유전자분석(PFGE) 및 DB화(연중)
- 식중독균 통합 정보망 시스템 구축(연중)
 - 식중독균 정보 비교·분석 시스템 등 DB 개발 및 운영

3. 추진실적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 등의 식중독균 실태조사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 등의 식중독균 실태조사
 - 수입·유통식품 및 농·축·수산물에서 분리된 식중독균 유전자형을 비교·분석하고, DB 관리로 원인규명 및 오염원 추적관리
 - 농·축·수산물, 즉석섭취·편의식품 등에서 식중독균 검사 11,847건
 - 식중독균 유전자 분석(PFGE) 및 DB화 700건

□ 식중독균 통합 정보망 시스템(KIPIN*) 구축

○ 식중독균 정보 비교·분석 시스템 등 DB 개발

- 식중독균 통합 정보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 구축('14)에 이은 유전정보 웹기반 비교·분석 시스템 개발 완료('15.12.11)

* KIPIN : Korea Intergrated Pathogen Information Network

* 식중독균 통합 DB 구축 : 식중독 원인체 통합 DB 시스템 구축('14) → 식중독균 정보 비교·분석 시스템 등 DB 개발 및 운영('15) → 시스템 고도화 및 유전체 사업단 등 유사 DB 연계('16~)

○ 식중독균 통합 정보망 운영

- 식중독균의 다양한 생물·화학적 특성정보 등 2,100건(누계) DB 구축

* 식중독균 검출정보, 항생제 내성 정보, 혈청형(분류특성) 정보, 상동성 정보,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유전자지문 정보, 유전체정보 등

* 식중독균 DB(누적) : ('15) 2,100건 → ('16) 3,100건 → 매년 1,000건씩 DB화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통합 DB 콘텐츠 확보건수 1,600건

◇ 추진실적 : 식중독균 통합 DB 콘텐츠 1,600건 확보(달성도 100%)

□ 성과

-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통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식중독균 DB 확보 ('14) 600건 → ('15년, 누계) 2,100건
- 식중독 원인 규명률 향상을 위한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구축
- 식중독 사고 현장에 신속검사 차량을 급파하여 신속한 원인조사를 통한 식중독 원인규명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수입·유통식품 및 농·축·수산물에서 분리된 식중독균 유전자형을 비교 분석하고 DB 관리로 원인규명 및 오염원 추적관리 지속

[4-2-2]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① 주방문화 개선

(담당자 : 식품영양안전국 식중독예방과 박용춘 연구관, T.043-719-2115)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개방형 주방문화 확산 및 주방문화 개선 대국민 공감대 형성
 - 개방형 주방 만들기, 위생모 착용 등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및 홍보
 - 표준설계도 보급,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한 업체 참여 유도

2. 추진계획

- 개방형 주방 문화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업소(40개소) 지정(3월) 및 운영
- 주방문화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 대국민 홍보 광고 제작(3월) 및 송출(4~9월)
 -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사진·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 참여 확대
 -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주방문화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2월)
 - 업종 및 규모별 개방형 주방 표준설계도 위생 관리 매뉴얼 배포(2월)

3. 추진실적

- 영업자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개방형 주방 시범사업 및 협의체 운영
 - 개방형 주방 문화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40개소 지정 및 운영
 - * 개방형 주방 시범업소(40개소) : 공고(2월) → 선정(4.9) → 운영(4.9~12.31)
 - 주방문화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2.24~)
 - * 17개 시·도,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4개 관련협회, 학회 전문가 2인 참여
 - * 1차 협의체(2.24), 2차 협의체(6.16), 3차 협의체(9.22) 운영

□ 주방문화 인식개선과 실천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홍보

- 주방문화 개선사업 **활성화 토론회**(1.13) 및 **심포지엄** 개최(5.11)
 - * 토론회 : 17개 시·도 주방·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담당자 60명 참여
 - * 「식중독예방 정책방향 심포지엄」 : 시·도, 교육청, 급식·외식 관련협회, 학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36명 참여
- 「**열린 청결주방**」 대국민 **홍보 동영상·포스터·매뉴얼** 제작 및 **송출**
 - * 개방형 주방 음식점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배포(6월)
 - * 지하철 행선안내기(5월), 차내(6월), KTX(7, 8월), TV(10월), 신문(7, 11월)
- 영업자 자발적 참여를 위한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다짐대회)** 추진
 - * 16개 시·도 지역별 캠페인(영업자 및 관련협회 관계자 7,075명, 40회)
 - * 전국 규모의 「주방문화 개선 다짐대회」 개최(9.8, 영업자 등 401명 참여)
- 「**열린 청결주방**」 **사진·우수사례 공모전** 개최(10.28)
 - * 주방의 위생 및 안전성을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열린 청결주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고, 음식점 청결주방에 대한 홍보 가치가 있는 13작품 선정
- 식약처-문체부-복지부 협업 「**국민건강 실천 캠페인**」 일환으로 ‘국, 찌개 덜어먹기 실천 운동 전개(9.7~12.31)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개방형 주방 참여업소 10,000개소
- ◇ 추진실적 : 개방형 주방 참여업소 11,000개소 (달성도 110%)

□ 성과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 * 식품위생법 개정('15.5)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15.12)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생등급 표시방안 마련('16.8월)
- 위생수준 현장평가를 위한 평가자 교육 및 양성('16.연중)
- 평가방법, 평가자 교육, 사후관리 등을 위한 고시 제정('16.12월)

[4-2-3] 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

① 국민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윤은경 연구관, T.043-719-2262)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2017년까지 1일 나트륨 섭취량 20% 저감('10년 대비)

○ 인식·행동 변화 유도, 참여·실천 확대, 건강한 식문화 정착

* ('10) 4,878mg → ('12) 4,583mg → ('15) 4,000mg → ('17) 3,900mg

2. 추진계획

□ 공급자 대상 분야별(가공식품, 급식, 외식) 나트륨 줄이기 지원

○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

* ('14) 도시락 등 7개 → ('15) 식빵 등 7개 품목

○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 제품 개발 지원(3~11월)

* 김치, 장류, 절임류 제조업체 대상 현장컨설팅 및 제품화 기술 지원

○ 삼삼급식소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 ('14) 21개소 지정 → ('15) 100개소 지정(지자체 위임)

* 삼삼급식소 : 나트륨 제공량이 한끼 1,300mg 이하로 제공하는 급식소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운영, 관리 강화(연중)

○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저감메뉴 개발 지원(연중)

* 100g당 20% 이상 저감 메뉴 제공, ('14) 6개 업체 25개 메뉴 → ('15) 5개30개

□ 소비자 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인식 개선

○ 대중매체(TV, 교통수단 등) 활용 나트륨 줄이기 실천방법 홍보(연중)

○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전(분기별 1회), 전국 삼삼한 요리경연 대회(5월) 등 체험행사 개최

- '튼튼 먹거리 탐험대' 현장체험 농어촌 지역 확대 및 특수차량 제작('15)

□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국 확산

-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과정 추가 운영(3~11월)
- 소지바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별 행사 등에 미각테스트, 실천운동 동참서명 등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24회, 연중)
- 영양사, 조리사 대상 보수교육 및 학술세미나에 나트륨 줄이기 교육 지원(강사 지원, 연중)

3. 추진실적

□ 공급자 대상 분야별(가공식품, 급식, 외식) 나트륨 줄이기 지원

-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
 - * 기타식품(김밥, 햄버거), 과자류(쿠키, 크래커), 후리가케, 어육소시지, 춘장, 치킨너겟류, 식빵 등 7개 품목 가이드라인 개발 완료(11월)
-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 제품 개발 지원(3~11월)
 - * 김치(10개소), 장류(8개소), 절임류(4개소) 업체 대상 현장컨설팅
 - * 저감제품의 관능검사, 맛분석, 미생물 안전성 검사 등 분석기술 교육(152개 업체)
- '14년 지정 '삼삼급식소' 사후관리 및 사전운영 확대(연중)
 - * ('15) 148개소 지속 운영(49개소 지정, 지정율 33%)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운영, 관리 강화(연중)
-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저감메뉴 개발 지원(연중)
 - * ('14) 6개 업체 25개 메뉴 → ('15) 4개 업체 31개 메뉴

□ 소비자 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인식 개선

- 대중매체(TV, 교통수단 등) 활용 나트륨 줄이기 실천방법 홍보(연중)
 - * 아파트·승강기(2~4월), 지하철·버스(2~10월), TV·신문(연중), 옥외광고(11~12월)
-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전(분기별 1회), 전국 삼삼한 요리경연 대회(5.28) 등 체험행사 개최

- '튼튼 먹거리 탐험대' 현장체험 농어촌 지역 확대 및 특수차량 제작('15)
* 총 216회 5,316명 교육(지방 ('14) 39회 1,014명 → ('15) 65회 1,450명)

□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국 확산

-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과정 추가 운영
* 지자체 공무원 대상 나트륨 줄이기 실무과정 7회(7-11월, 241명)
* 나트륨 줄이기 전문강사 양성과정(7,10월 2회 35명)
- 소지바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별 행사 등에 미각테스트, 실천운동 동참서명 등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보령, 홍천 등 지역축제 등 전국 24개 지역행사에 홍보캠페인 운영(7-11월)
- 영양사, 조리사 대상 보수교육 및 학술세미나에 나트륨 줄이기 교육 지원(5-11월, 지역별 44회 강사 및 강의교안 지원)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나트륨 저감화 가공식품의 증가율 14%
- ◇ 추진실적 : 나트륨 저감화 가공식품의 증가율 17.4%
* ('14) 69개 → ('15) 81개 ($81-69 / 69 = 17.4$)

□ 성과

-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섭취량 '17년까지 목표(3,900mg) 조기달성
* ('12) 4,583mg → ('13) 4,027mg → ('14) 3,890mg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15.5.9. 식품위생법 개정)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당류 섭취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당류 저감대상 식품 선정과 단계적 관리방안 등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수립·추진(16.3)
- 당류 영양성분 기준치 설정 및 시리얼류 등 당류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추진('16.1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아용 당류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 보급(상시)

[4-2-3] 나트륨 및 당류 과잉 섭취 저감화

② 당류 섭취 저감화 추진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이해영연구관, T.043-719-2259)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박선영사무관, T.043-719-2255)

과제 분류	정책사항/ 법령개정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어린이·청소년 당류 적정 섭취 인식 개선 교육·홍보 확대

- 당류 저감화 가이드라인

2. 추진계획

당류 저감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칭) 식품영양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15.1~)

* 식품위생법·국민영양관리법 등 법령의 사각지대인 식품 영양성분관리 및 영양표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 WHO 권고수준 유지

- 당류 함량 표시확대를 위하여 첨가당 DB 구축 연구('15.3~10.)

*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배합비 등자료를 활용

음료류 등 산업체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가공식품 종류별 당류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가공식품(음료) 중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15.3~10.)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섭취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 유아용 당류 저감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설의 급식단계별(식단, 구매, 배식 등)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배포(4~11월)

* 구연동화도구(인형, 책, CD), 팝업북 등 교육교재, 교사용 지침서 등

- 아동·청소년용 당류 저감 교육실시(4~9월)

3. 추진실적

□ 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발의(4월, 법안 소위 계류 중)
- 식품영양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개발 및 법제화사업 수행('15.6~10)
- (가칭) 식품영양안전법(안) 마련(12월)
* 관련부서 협의('15.1, '15.12) 등을 거쳐 총7장, 35조로 구성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 WHO 권고수준 유지

- 당류 함량 표시확대를 위한 첨가당 DB 구축(11월)
* 품목제조보고 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 업체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구축
- 당류 섭취량 분석,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한 당류 섭취 패턴 파악 및 계층별 맞춤형 섭취 저감화 교육 확대(3~12월)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섭취량 지속 증가 42.7g → 44.7g(1일 열량의 8.9%)

□ 산업체 및 급식의 저감화 기술 지원

- 가공식품을 통한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음료류의 당류 저감 목표 설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9~12월)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섭취 기여도가 높은 과채·탄산·혼합음료 및 액상커피의 당류 함량을 현재 대비 22%감소시키기 위한 3단계 전략 제시

□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섭취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 유아 눈높이에 맞춘 당류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15.8~12)
* 보육시설 당류 줄이기 교육 아이디어 공모전('15.9)과 당류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그림동화, 플래쉬동화, 교육활동지, 가정통신문 등 개발
- 초·중·고등학교 당류 줄이기 학생·교사용 교재·지침서 및 단맛 미각판정 도구 등 교육프로그램 보급(상시)
* 초·중·고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학교 713개교 선정(1~3월) → 교재·교구 보급('15.6.30): 학교당 30부(총 38,180부) 및 30세트(총 22,490세트)
-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을 통한 당류 줄이기 교육·홍보 실시

- *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건강 박람회(5.1~3), 청소년박람회(5.21~23), 삼삼한 건강한마당(4.10~12), 당류 등 줄이기 실무과정 개설·운영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 10% 미만 유지
- ◇ 추진실적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 8.9%로 목표 달성

□ 성과

- 식품영양안전법(안) 추진으로 향후 당류 줄이기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당류 특별관리가 필요한 ‘유아’ 대상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 교사·학부모 만족도 제고
 - * 교육 만족도(5점만점) : 교사 4.7점, 학부모 4.7점
 - * 행동변화(5점만점) : 3.8점, 올바른 식습관(5점만점) : 4.0점

□ 문제점

- ‘단맛’은 소비자 기호성, 제품고유의 특성 등과 밀접한 관련있어 국민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업체 저감화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 있음

□ 개선대책

- 국민 행동변화 및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보급

5. 향후 추진계획

- 당류 섭취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당류 저감대상 식품 선정과 단계적 관리방안 등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수립·추진(16.3)
- 당류 영양성분 기준치 설정 및 시리얼류 등 당류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추진(16.12)
- 과자류 등의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16.3)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아용 당류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 보급(상시)

[4-2-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① 학교급식 점검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사무관, 강행화주무관, T.044-203-6546)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체계 개선(계속)
 - 학교급식소 연2회 정기점검시 학부모 등 민간참여제 운영
 - * 연1회는 지방식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2식 이상 급식학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식품위생 교수 등)
- 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관리 및 응급대책 마련
 - 식단표에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식생활교육 등 특별관리와 교육자료(동영상 또는 책자) 개발·보급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개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용하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공간 구획 등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2. 추진계획

-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지침 시달('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15.1월)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에 학부모 등 민간참여제 운영(계속)
- 식품알레르기 원인별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15.9월)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작·보급('15.9월)
-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등) 점검('15.12월)

3. 추진실적

-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지침 시달(‘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15.1.19)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급식여건 조성
 - 급식시설 연2회 정기 위생·안전점검 강화, 개학 전 학교 자체 점검(11,615개교) 및 교육청 확인점검(589개교) 실시(‘15.2.2~2.7)
 -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4.28, 8.25)
 - 2식 이상 급식학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431개교, 1.3억원)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에 학부모 등 민간인 참여(8,759명 참여)
- 식품알레르기 원인별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
 - 학부모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알레르기 원인별 실태조사 실시(9~10월) 및 전문가 협의회 실시(3회), 학교급식 지도자료 개발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편으로 학교 위생관리 강화
 - 정책연구, 현장의견, 관계규정과 변화된 위생관리 기술 등을 반영
 - * 정책연구 추진(4~9월) 및 전문가 회의(5.21, 7.9, 7.15, 9.2), 공청회 개최(8.12) 등
-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15.12월)
 - 노후 급식시설 509교 현대화에 2,208억원 지원 등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수 500개교
- ◇ 추진실적 : 2015년도 학교급식 현대화 학교수 509개교

□ 성과

-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15년 509개소), 개학대비 학교단위 급식소 자체점검 실시, 교육청 중심의 연 2회 안전점검 강화(학부모 8,759명 참여) 등의 노력으로 식중독 환자수가 대폭 감소*됨
 - *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 : (‘14년) 51건 4,135명 → (‘15년) 40건 1,944명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계속)

(4-2-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② 식재료 납품전 안전성 조사체계 강화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손영배 사무관, T.054-429-4121)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원산지 표시, 등으로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 공급
- 안전 식재료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사업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2. 추진계획

- 학교급식 등 식재료(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3~12월)
 -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업체와 계약한 재배농가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6,700건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안전성 조사 1,980건
- aT·조달청에 등록된 학교급식 공급업체* 원산지 표시 등 점검·단속(1~12월)
 - 원산지 표시, 인증품 진위여부 등 점검·단속으로 사각지대 해소
 - * aT·조달청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수 : 약 7,900개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확대 육성 및 사후관리(1~12월)
 - 지 정확대 : ('14) 82 → ('15) 102
 - 사후관리 : 위생·원산지표시·안전성·품질관리 등 점검(반기 1회)
-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연중)
 - 생산자, 공급자, 구매자 및 관계기관 간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으로 안전성관리 효율화, 공급확대 방안 등 발굴 : 지원(9개)별 연 2회

□ 농관원-조달청 간 학교급식 공급업체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 등 점검·단속에 활용하여 불량식재료 공급 차단

3. 추진실적

□ 학교급식 등 식재료(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 : 8,680건

- 학교급식 : 6,700건,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 1,980건

□ aT·조달청에 등록된 학교급식 공급업체 점검·단속 : 3,627건(적발 32)

- 적발내역 : 원산지 22(거짓표시 15, 미표시 7), 양곡 2(미표시), 축산물이력 8(거짓표시)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육성 : 24개소

- 연도별 지정 누계 : ('11~'14) 82 → ('15) 100(↑ 18)
- 지정업체 사후관리 : 95개소(취소 4, 자진반납 2)

□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18회

- 생산자, 공급자, 구매자 및 관계기관 간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으로 안전성관리 효율화, 공급확대 방안 등 발굴 : 지원(9개)별 연 2회

□ 농관원-조달청 간 학교급식 공급업체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1월)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계약정보를 원산지 표시, 쇠고기이력 등 점검·단속에 활용하여 불량식재료 공급 차단

4. 자체평가

◇ 성과지표 :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 6,700건, 식재료 우수관리 업체 지정확대 102개소

◇ 추진실적 :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 6,700건(100%)
식재료 우수관리 업체 지정확대 100개소(98%)

* 식재료 우수관리 업체 내실화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취소 4건, 자진반납 2)로 102개소 지정에는 미달했으나 전년 대비 18개 업체를 확대 지정

□ 성과

-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분석 및 원산지, 축산물 이력 등 점검·단속으로 부적합 식재료 공급차단 기여
-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유통단계에서 생산(저장) 단계 조사로 전환하여 부적합품 출하 차단
 - 대상 : (14)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 (15) 학교급식 농산물 계약재배농가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5. 향후 추진계획

- 농관원 조직개편 및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담당 조정

[4-2-5]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①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사무관, 강행화주무관, T.044-203-6546)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식중독 감시 및 신속 보고체계 강화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교사의 모니터링 등 학교 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여부 감시
- 학교장은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에 보고

초동단계 신속대응 및 원인조사 협조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관계기관 협업, 환자치료와 급식 대책 마련 등 혼란 방지 및 학사일정 차질 최소화
 - 급식중단, 오염식품 사용금지, 도시락 지참 및 급식지원 대책 등
- 원인규명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 현장보존, 가검물 채취, 학생들 귀가보류 등(보건소 협의)

2. 추진계획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지침 시달(20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15.1월)
- 식중독 감시 및 신속 보고체계 운영, 초동단계 신속대응 등(상시)
- 식중독사고 예방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15.4월, 8월)

3. 추진실적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지침 시달('15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15.1.19)

-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 및 식중독 발생 시 초동단계 신속 대응 등
- 식중독 감시 및 신속 보고체계 운영, 초동단계 신속대응 등(상시)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등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
 -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초동단계 신속 대응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관계기관 협업, 환자 치료와 급식대책 마련 등 혼란 방지 및 학사 일정 차질 최소화
 - * 학교장은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에 보고
-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4.28, 8.25)
 - 식중독 사고 예방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시달 및 교육청별 대책 논의를 위한 교육청 급식담당관 대상 회의 실시

4. 자체평가

□ 성과

- 상시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 및 식중독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식중독 확산 차단 및 재발방지
- *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인원 : ('13년) 2,247명 → ('14년) 4,135명 → ('15년) 1,944명

□ 문제점

- 식재료 원산지 둔갑, 위생관리 소홀 및 부적합 제품 등이 학교급식에 납품되어 식품사고 발생우려 및 수요자 불안감 지속

□ 개선대책

- 부적합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부정행위 감시 및 단속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체계 상시 운영(계속)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4-3-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①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담당자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오운환사무관, T.043-719-2459)

과제 분류	법령개정사항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일부지연
-------	----------------	------	------	------	------

1. 과제내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 기준·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자격 확대

식품의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광고 통합 관리 추진

2. 추진계획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6월)

- 질병치료 등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준·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자격 확대(6월)
-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지속 개선(6월)
 -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허용

식품의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광고 통합 관리 추진

- 일반식품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 내용은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2월)

3. 추진실적

- 질병치료 등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5.18)
- 기준·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자격 확대
 - 제조업·수입업 이외에 신청 자격을 확대하도록 총리령 위임 근거 마련

- * 학교,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 * 수입업·판매업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 신고시 직권 말소 근거 마련
- 표시 원칙, 절차, 표시대상, 제공정보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식품정보표시법(가칭) 제정 추진 계획 마련(15)
 - * 식품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방안 보고(BH 보고, '15.12)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기준 등 개선
 - * 제조업체 창고 등 보관시설의 공동 이용 허용,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위탁 제조 범위 확대, 자유판매증명서 발급개선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법률개정
- ◇ 추진실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2회)

□ 성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5.5.18, 12.31)
 - * 기능성 불인정 범위 규정, 기능성 원료 신청 자격 확대, 기능성 재평가 근거 마련 등

□ 문제점

-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 개선대책

- 기능성 인정, 생산·제조, 유통·판매, 표시·광고 등 **순단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 * 기능성 등급 단일화, 원재료 진위확인, GMP 의무화, 소비자 행정조사 요청 등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시행('15.10.7)
- 인체적용시험자료의 검증 및 이상사례 원인분석 강화를 위해 **인체적용시험 평가분과와 이상사례 평가분과 신설**
 -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5. 향후 추진계획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속 추진

(4-3-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②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담당자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박희라연구관, T 043-719-2453)

과제분류	정책사항	추진시한	'15년	추진상황	정상추진
------	------	------	------	------	------

1. 과제내용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 통계 등 정보집 발간
- 신규 기능성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지원

2. 추진계획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 과학의 발달과 다양한 기능성 수요에 따른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선제적 평가지표 및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월)
* 평가가이드 발간 : ('14) 5건 → ('15) 7건 → ('16) 4건
- 국민건강 증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 및 GMP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지원(3~11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 통계 등 정보집 발간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3월) 영업자를 위한 인정 안내서(6월)

3. 추진실적

건강기능식품 관련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 기능성 원료 신청 업체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모듬토회*)(30회)
* 모듬토회의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전·후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등'을 모두 토의하는 제도
- 찾아가는 정책 및 민원설명회(7회) 및 개별상담(513회) 실시

-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교육**(10.14~16)
 - *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연구개발자 등 28명 수료
-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기능성별 평가가이드**' 마련 및 제공(5.11)
 - * 간·눈·장 건강, 갱년기 남성·여성 건강,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7종)
- 수출지원을 위한 미국, 중국 등 **10개국 수출정보** 제공(1.13)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홈페이지** 공개(2.6, 6.24)
- 영업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안내서** 발간(10.23)

□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세미나 개최(11.19)

-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기능성 원료 인정절차, 산업발전 방향 등 정보 공유
 -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수입업체, 연구개발자 등 500여명

□ 한·중 식약총국(CFDA) 국장급 회의 개최(12.1)

-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한·중 국장급 회의 개최하여 작업반(제도·검사분야) 구성 합의, 추후 MOU 체결 합의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기능성 원료 인정건수 40건(누적)
- ◇ 추진실적 : 기능성 원료 인정 건수 41건으로 목표 달성

□ 성과

- **한·중 식약총국(CFDA) 국장급 회의** 개최(12.1)
-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세미나** 개최(11.19)
-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 제공(4회) 및 역량강화 교육(28명 양성)

□ 문제점

- 국내 건강기능식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정책 및 기반 취약
- 설정된 성과지표(기능성 원료인정 건수)는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산업 환경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성과 지표로 실질적인 지표로 변경 필요

□ 개선대책

- 제외국 제도 등 정보 공유, 상호인정 등 체계적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필요
- 국내·외 산업 경쟁력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GMP가 의무화('16.2.3)됨에 따라, 의무대상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지원으로 조속한 GMP 정착이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지원(연중)
- 기능성 평가기준 제시를 위한 '기능성별 평가가이드' 마련·제공('16.12월)
- 건강기능식품 정책 설명회 및 전략세미나 개최(2회)

[4-3-2]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① 「기능성평가센터」 건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성명 이수한, T.044-201-2182)

과제 분류	정책 사항	추진 시한	'15년	추진 상황	정상 추진
-------	-------	-------	------	-------	-------

1. 과제내용

- 기능성평가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 '16년까지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내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

2. 추진계획

- (준비단계) Site Lab구축을 통한 R&D지원 기반기술 확보('14~'15)
- (1단계) 기능성식품에 대한 표준화 검증 및 효능평가 지원('16)
- (2단계) 실용화지원 및 GLP기관 구축을 통해 안전성 평가 지원('17)
- (3단계) 제품 실용화 지원 확대('18)

3. 추진실적

- 기능성평가지원센터 구축
 - '16년 9월말 완공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내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은 '15.12.31 현재 공정률이 72.1%임.
- Site Lab 구축을 통한 R&D지원 기술 확보
 - Site Lab(임시연구소) 구축('14.10월)을 통한 원스톱 지원을 위한 사전역량 확보
 - 연구인력 : 9명(연구인력 3, 연구보조원 6)
 - 주요장비 : 84종 30억원(고가장비 20종 25.5억원, 소액장비 48종 3.8억원, 실험 기자재 등 16종 0.7억원)
 - 기능 및 역할 : 기능성식품의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원료 인증 과정의 표준화 및 효능평가(in-vitro)

< 임시연구소 기능성평가분야 지원범위 >

표준화 (소재 탐색)	효능시험		독성 시험(GLP 기관)		임상 시험
	시험관시험 · in-vitro	동물시험 · in-vivo	(설치류 대상) · 단회, 반복, 유전독성	(비설치류 대상) · 단회투여	
← 임시연구소 수행			기업지원시설 준공이후		→ 산학연 협업수행



□ 기능성 분야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 R&D 지원

○ 6개 기업과 임시연구소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지원 수행

기업명	과제명(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원 내용
케비젠	바이오헬스케어소재의 Global 상품화 및 산업화 기반조성 모델 개발 (`13. 3. 15 ~ `15. 12. 31.(3년), 493백만원)	글로벌 제품 개발 지원
㈜네오 크레마	노인성변비 개선을 위한 dual type 올리고당 개발 (`14. 11. 5. ~ `15. 4. 30., 50백만원)	기업 애로개선
천호식품	국내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시장진입 상품개발 기술연구 (`14. 11. 5. ~ `15. 12. 31., 170백만원)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 BTC	국산 돌외 추출물의 표준화 연구 (`15. 5. 1. ~ `15. 12. 31., 50백만원)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월드웨이 (주)	실크단백질 가수분해물의 간보호물 기능물질 표준화 (`15. 5. 1. ~ `15. 12. 31., 50백만원)	제조 공정 개선
네이처텍	일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개선 인삼제품 개발 (`14. 8. 1 ~ 17. 7.31., (정부지원금 1,080백만원)	글로벌 제품 개발 지원

○ Site Lab(임시연구소) 구축을 통한 기능성 평가분야 검사분석 기술 지원

- 특수성분(안토시아닌, 퀘세틴 등) 분석 등 총 23건 63시료 분석 지원

□ 기술지원 DB구축(인력, 장비 등), 산학연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추진

- 산학연 협의체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식품기업 기술수요에 대한 니즈분석,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술지원방향 제안 전문가세미나 개최 활용 추진(총 9회)

* '15년 산학연 협의체 4개 분과 : 연구기획·운영, 기호적품질, 기능성식품, 식품패키징

- 국내 식품학회*의 국제학술대회 활용, 특별세미나 개최 및 학회 전문지 광고를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술지원센터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 특별세미나 3회 개최(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등) 및 학회 전문지(식품영양과 학회지 등) 활용 홍보 추진

□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트렌드) 및 선진기술 습득을 통해 국내 글로벌 식품 실용화 R&D 기술 향상에 일조

- 해외 우수연구기관(독 프라운호페IV) 보유기술을 소개하는 『제 5회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개최를 통해 산학연 기술공유 場 마련

- 국내기업에게 해외 우수기술 설명 및 1:1 면담 애로기술 자문 기회 제공

4. 자체평가

- ◇ 성과지표 : 건축공사 공정율 80%
- ◇ 추진실적 : 건축공사 공정률 72.1%

□ 성과

- 기술지원 주요 성과 사례

- (주) 비티씨(기능성 소재업체, 매출 126억원)는 중국산원료(돌외)를 국내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원료의 표준화를 임시연구소 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술지원에 매력을 느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확정('15.10.5, 20,224㎡)

- (주) 네오크레마(기능성 소재업체, 매출 100억원)는 수출국(일본)에서 요청한 미지의 성분에 대한 분석을 임시연구소 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지원

* 일본 수출 물량 증가를 감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확정('15.12.23, 9,600㎡)

- (주) 케비젠(기능성 소재업체, 매출 80억원)은 국제공동R&D지원사업을 통한 기능성소재 전기식 인증획득으로 중국시장 판로 확대를 예상 투자 MOU체결('13.6.13, 6,600m²)

* 중국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 확대를 예상 투자유치양해각서

-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개최('15.11. 장관님 주재)
 - 프라운호퍼IVV를 초대하여 기능성식품·품질안전·패키징 각 분야별 전문가가 전세계 기술동향과 최근 기술 발전상황에 대해 소개와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기업맞춤형 1:1 기술상담 진행으로 기업의 큰 호응 및 업무협약 체결

□ 문제점

- 기업의 기술지도 수요는 많은데 비해 예산 한정에 따른 선별 지원
- 건축공사 연약지반구간의 지반상황이 좋지 않아 처리기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어 계획 공정에 영향을 미침

□ 개선대책

- 식품기업의 검사분석 의뢰 건수 증가에 따른 검사분석 수수료 지침 마련 필요
- 건축공사 공정률 만회대책 수립(통합공정률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16년 9월말 완공 예정임

5. 향후 추진계획

- 기능성지원센터의 안전성평가(GLP 시설)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장비 도입 및 GLP 인증을 위한 사전 컨설팅 수행)
- 기업공동연구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문가 코디네이터 지원 시스템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를 위한”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2016. 4.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교	육	부	법	무	부
농림축산식품부	환	경	부	해	양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	세	청	산	부	

목 차

I. 추진경과	1
II. 개요	2
1. 중점 추진과제	2
2. 세부과제 및 예산	5
III. 분야별 세부계획	6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0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10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39
1-3.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 강화	49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55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70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70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74
2-3. 국민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82
2-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96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106
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106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139
3-3. 불량식품 근절	160
3-4.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167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177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177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194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212

I 추진경과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 통합적 식품안전정책 추진, 긴급대응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08.06)·시행('08.12)
- 식품안전정책 종합·조정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08.12) 및 위원회 구성·운영
 -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구성: 국무총리 위원장, 위원: 정부9명, 민간10명

□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14.12)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의 식품안전관리계획(3개년)을 종합한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15년~'17년) 수립
 - 이를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

① 위해요소 사전예방

- * 식품안전 관리인증(HACCP)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확대
- * 해외제조업체(34천개소) 사전등록 및 차등관리, 기존 수출업체 현지실사 확대 등

②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 *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 *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식품안전관리 DB 구축 확대 등

③ 상시 안전관리 강화

- * 범부처 합동 기획감시 실시, 사회적 약자 대상 고의적 위해식품 사범 철저 수사
- *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차단 등

④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환경 개선,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 *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등

□ 「2015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16.3월)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의한 각 부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 제5조)

Ⅱ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개요

1 중점 추진과제

□ '16년도 시행계획은 4대 분야 60개 과제 122개 세부과제로 추진

- ▶ 위해요소 사전예방 : 33개 ▶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 21개
-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47개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21개
- * 식약처 68, 농식품부 27, 해수부 18, 교육부 3,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

□ 분야별 과제현황

구분	과제	세부과제
총괄	60	122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5	33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6	15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3	7
1-3.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3	3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3	8
* 식약처 15, 농식품부 9, 해수부 9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12	21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2	2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3	5
2-3.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4	9
2-4. 식품안전관리 국제경쟁력 제고	3	5
* 식약처 14, 농식품부 4, 해수부 3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20	47
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8	26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4	11
3-3. 불량식품 근절	4	5
3-4. 식습관 반영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4	5
* 식약처 24, 농식품부 11, 해수부 6,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13	21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6	8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5	10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2	3
* 식약처 15, 농식품부 3, 교육부 3		

2

세부과제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16년 예산 (국고기준)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1-1-1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GAP) 활성화	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농식품부 7,946
1-1-2	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①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278,532
		② 친환경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해수부 25,814
1-1-3	안전관리인증 (HACCP)확대	① HACCP 적용업체 인증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식약처 18,627
		② HACCP 적용업체 재정·기술지원 확대	식약처
		③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농식품부 1,650
		④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해수부 600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① 식품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식약처 599
		② 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방안	농식품부 20,280
		③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활성화	농식품부 303
		④ 수산물 이력제 확대	해수부 2,220
		⑤ 국산 천일염 이력관리 강화	해수부 1,900
1-1-5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① 주류 안전기준·법규 재정비 및 건강한 소비·섭취 홍보 강화	식약처 40
		② 주류 제조업체 기술지원 및 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483
1-1-6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①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식약처 684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과제명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16년 예산 (국고기준)
1-2-1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 출국위생평가	① 수입 전(前) 해외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
	② 축산물 수출신청국에 대한 위생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식약처	510
1-2-2 수입식품 현지 살사 및 위생협 력 강화	①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및 우수 수입업소 등록 확대	식약처	480
	②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현지실사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3,794
	③ 수입 수산물 해외수출국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해수부 식약처	3,859
1-2-3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 책임강화	①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입식품 수입	식약처	-
1-3.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 강화			
1-3-1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구축	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활성화	식약처 (법무부의 10)	630
1-3-2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 석 강화	①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식약처	467
1-3-3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①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해수부	375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1-4-1 농산물 유해물 질 안전성 연 구강화	① 분석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농식품부	126
	② 농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농식품부	3,588
	③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안전성 연구 강화	농식품부	2,543
1-4-2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	①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강화	농식품부	900
1-4-3 축·수산물 유해 물질 안전성 연 구강화	① 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화	식약처	4,202
	② 수산물의 과학적·효율적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4,119
	③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 연구·강화	해수부	4,702
	④ 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해수부	250
15개 과제	33개 세부과제		390,223

과제명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16년 예산 (국고기준)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2-1-1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속 정비	① 식품안전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식약처 266
2-1-2	위기대응역량 제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	① 위기대응 역량 강화	식약처 165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2-2-1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식약처 995
		②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식약처 223
		③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	식약처 75
2-2-2	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①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	식약처 220
2-2-3	기후변화 대응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마련	식약처 250
2-3.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	① 대국민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	식약처 1,203
		② 소비자 정보 교류 강화	농식품부 1,370
		③ 수산물 위해정보 소통 강화	해수부 300
2-3-2	식품등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①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	식약처 627
2-3-3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농식품부 15,702
		② 수산물 원산지제도 관리 강화	해수부 3,403
2-3-4	농수산물인증·표시제도개선	① 농산물 인증·표시제도 개선	농식품부 868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농식품부 -
		③ 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해수부 -
2-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2-4-1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① 시험·검사능력 선진화 단계 진입	식약처 1,417
		② 시험 검사기관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	식약처 1,000

과제명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16년 예산 (국고기준)
2-4-2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①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식약처	98
	② 한아세안 위생협력	식약처	77
2-4-3 우리식품 수출 지원 확대	①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식약처	111
12개 과제	21개 세부과제		28,370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3-1-1 농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①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농식품부	2,268
	② 농산물 재배환경 안전관리	농식품부	1,400
	③ 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농식품부	150
	④ 가축사육환경 개선	농식품부	177,509
	⑤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14,130
	⑥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등 안전관리	식약처	-
	⑦ 축산물 유통 전(前)단계 안전성 검사 지속 관리	식약처	-
3-1-2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①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927
	② 수산물 생산해역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2,210
	③ 국내 생산 천일염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1,276
	④ 수산물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	해수부	5,630
	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식약처	-
3-1-3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① 위생취약분야 선제적 지도·점검	식약처	1,082
	② 단순가공 농·수산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위생수준 개선	식약처	-
3-1-4 제조단계 이물 등 위생관리 강화	① 제조단계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 지원	식약처	-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①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 및 교육강화	농식품부	-
	② 농약직권등록 및 직권그룹화 적용방안	농식품부	3,000

과제명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16년 예산 (국고기준)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③ 농약 위해성 재평가	농식품부	-
	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강화	농식품부	-
	② 우수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농식품부	-
3-1-7 사료안전관리 강화	③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150
	① 사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14,500
3-1-8 먹는물 안전관 리 강화	② 친환경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 연구	해수부	200
	① 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	440
	②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감시	환경부	220
	③ 먹는샘물 수질 안전성 강화	환경부	158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3-2-1 유통 식품의 수거·검사 강 화	① 유통단계 가공식품 및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	식약처	3,388
	② 농수산물식품 선제적 안전관리	식약처	-
	④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1,927
3-2-2 식품등의 허위 ·과대광고단속 강화	①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540
3-2-3 위해식품 회수 체계 강화	① 위해식품 회수제도 개선	식약처	-
3-2-4 수입식품 통관 단계 검사 강화	①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	식약처	4,405
	②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축수산물 정밀검사 강화	식약처	7,453
	③ 해외 원전사고에 의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식약처	379
	④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	식약처	55
	⑤ 수입물품검사 강화로 불법식품류 반입차단	관세청	-
	⑥ 수입식품의 원산지 조작행위 차단	관세청	-

3-3. 불량식품 근절

3-3-1 불량식품 근절 을 위한 범정부협 업자속강화	①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식약처	206
-------------------------------------	---------------	-----	-----

과제명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16년 예산 (국고기준)
3-3-2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및 제도개선	①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식약처 1,011
3-3-3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분 석법 개발	① 불량식품 과학적 감시체계 강화	식약처 2,870
3-3-4	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	①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	식약처 -
		② 식품 위해사범 단속	법무부 -
3-4.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3-4-1	농약·중금 속·미생물· 첨가물 등 기 준·규격 재평 가	① 농약·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926
		② 오염물질·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3,389
3-4-2	기구·용기·포 장의 기준·규 격 재평가	①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190
3-4-3	인체모니터링 기반 통합 위 해평가	① 유해물질 노출 수준 확인 및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식약처 800
3-4-4	식품 안전관리 를 위한 시험 법 마련 연구	①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공전 간 조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식약처 1,420
20개 과제	47개 세부과제		254,209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4-1-1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식품관리	①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확대	식약처 190
		②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개발 보급 기반 마련	식약처 150
4-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	식약처 35,935
4-1-3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 시 확대	① 영양표시 확대·개선 및 교육·홍보	식약처 901
4-1-4	어린이 식생	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환경 개선	식약처 1,117

과제명	세부과제명	추진부처	'16년 예산 (국고기준)	
	② 초·중·고등학생 대상별 식생활 안전·영양 교육 지원 확대	식약처	219	
4-1-5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농식품부	3,529	
4-1-6	① 학교 식생활 교육 및 영양 관리 강화	교육부	-	
4-2. 음식과 외식의 안전 관리				
4-2-1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①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식약처	1,544
		②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 강화	식약처	1,133
		③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강화	식약처	665
		④ 식중독균 추적관리	식약처	1,298
4-2-2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① 주방문화 개선	식약처	400
4-2-3	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	① 나트륨 저감 실천 확산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식약처	3,102
		② 당류 섭취 저감화 추진	식약처	305
4-2-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① 학교급식 점검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	교육부	-
		② 식재료 납품전 안전성 조사체계 강화	농식품부	1,409
4-2-5	학교 식중독 대응 체계 확립	①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교육부	-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4-3-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①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식약처	1,884
		②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식약처	
4-3-2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① 기능성평가센터 건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농식품부	16,660
13개	21개 세부과제		70,441	
60개 과제	총 122개 세부과제 (식약처 68, 농식품부 27, 해수부 18, 교육부 3,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		743,243	

Ⅲ. 분야별 추진실적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1. 위해식품 사전 관리체계 구축

[1-1-1]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이원형 사무관, T.044-201-2278)

1. 과제내용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인 GAP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

□ 농업인, 소비자 지향적 제도·교육·홍보를 통해 GAP 인증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소비자 신뢰제고

* 소비자 GAP 인지도: '11) 22% → '12) 35 → '13) 43 → '14) 57 → '15) 61

2. 추진계획

□ '16년 GAP 활성화 계획 수립(1~2월)

○ (기반 확충) 주산지(120개소) 중심 토양·용수 분석 지원, 1지자체 1GAP 작목반 조성, GAP 재배 시범단지(15개소) 조성 등

○ (유통업체·단체급식 판로 확대) 「단체급식 GAP 취급 확대 T/F」 구성·운영을 통한 취급물량 확대 및 신규 수요 창출

○ (홍보 강화) 소비자 대상 차별화된 GAP 홍보로 인지도 제고, GAP 우수사례 발굴·홍보로 농업인·지자체의 관심도 증대

○ (교육 및 컨설팅) 농업인 및 유통·소비자 GAP 교육(10만명) 추진, 품목단체·지역조합 등 분야별 GAP 전문인력(17,000명) 양성

- (R&D 및 기술지원) 5개 작물 GAP 생산가이드 신규 개발·보급, GAP 기술공감 Band 개설, 영농일지 APP 개발로 농업인 편의 증대
- (인증 사후관리 개선) 인증기관 관리강화로 인증 신뢰도 제고, GAP 인증 신청·관리기관 일원화(농관원·인증기관→인증기관) 추진

□ GAP 활성화 주요 실천과제별 추진계획

주요 실천과제	추진주체	일정
1. GAP 인증 기반 조성		
①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농식품부·지자체	연중
②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사업 지침개정	농관원	2월
③ 쌀, 엽채류 GAP 종합 시범단지 조성·운영	농진청	연중
2. 유통 판로 확대 및 급식		
① MOU 체결 유통업체 사후 실적 점검	농식품부	연중
② 유통업체 GAP 취급 실적 확대	홈플러스, 올가, 농협	연중
③ 단체급식 GAP 취급 T/F 운영	농식품부	2월
④ 단체급식 GAP 취급물량 확대방안 마련	농식품부	5월
⑤ 급식관계자, 영양사 등 GAP 교육	농식품부	3~5월
3. GAP 제도 홍보		
① 제2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관원, 지자체	4~7월
② GAP 농산물 품평회, 우수사례 전진대회	농협	6~10월
③ GAP 농산물 판촉전	농협, 농관원	11월
④ GAP 홍보(TV, KTX, 마트) 추진	농관원	연중
4. GAP 교육 및 컨설팅		
① GAP 농업 기본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농진청	1~5월
② 품목별 GAP 교육	과수연합회,생약협회	2~4월
③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농관원	4~8월
④ GAP 생산여건 조성사업	농관원	연중
⑤ 자기주도형 GAP 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정원	3~6월
5. R&D 및 기술지원 강화		
① 작물별 GAP 생산가이드 개발(5종)	농진청	8월
② GAP 기술공감 밴드 구성·운영	농식품부	5월
③ 유통업체와 GAP 영농일지 APP 공동개발	농식품부, 유통업체	6월
6. 인증 사후관리 개선		
① 인증기관 운영비 지급방식 변경	농관원	2월
② GAP 인증시스템 일원화 법령개정	농식품부	8월
③ GAP 시설의 GAP 취급물량 점검	농식품부	분기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사업(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9,225	17,446	15,800	7,800	4,500	54,771
◦ 국고	소 계	2,925	7,946	7,500	3,500	2,500	24,371
	직접수행	225	446	500	500	500	2,171
	보조·출연	2,700	7,500	7,000	3,000	2,000	22,200
	용 자						
◦ 지방비		1,800	7,000	6,660	1,460	800	17,720
◦ 자부담		4,500	2,500	1,640	2,840	1,200	12,68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수준)	'16	'17	'18
GAP 인증 농가수 (%, 전년도 농가수 대비)	4.8	5	6	7

* 성과지표 변경사유: GAP 제도 제약요건(농업인 제도이해 및 가격차별화 미흡, 판로부족 등)에 따라 GAP 인증면적을 단기간 내에 상승('17년 전체 농경지 대비 30%)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GAP 인증 농가수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단계적으로 GAP 확산 유도

[1-1-2] 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①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철호 사무관, T.044-201-2443,
김승동 사무관, T.044-201-2439)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사무관, T.044-201-1892)

1. 과제내용

- 지속가능한 전문화·집단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추진
-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채널 다양화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확대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속 공급으로 지력 증진 및 농산물 품질제고

2.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지구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지원 강화
 - 시·군단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계속 지원('16: 4개소, 29억)
 - 우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사업 지원('16: 1개소, 4억)
 - 마을단위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선정·지원('16: 20개소, 62억)
- 유통 지원체계 확대 및 신규 소비시장 개척
 - 친환경농식품 생산자(단체)의 전문점 연계 및 오픈마켓 입점 지원(300개 경영체)
 -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CSA^{*}) 확산으로 생산자-소비자 교류 확대('15 : 4백명 → '16 : 50)
 - * 소비자조직이 농가경영비를 지불한 후 수확기에 농산물을 제공받는 직거래 방식
-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농업 실천 및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
 - 유기질비료 320만톤, 1,600억원, 토양개량제(규산,석회) 682만톤, 640억원

-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32억원)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지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7,933	31,566	31,566	31,566	31,566	164,197
° 국고	소 계	11,450	9,540	9,540	9,540	9,540	49,610
	직접수행						
	보조·출연	11,450	9,540	9,540	9,540	9,540	49,610
	용 자						
° 지방비		16,483	14,640	14,640	14,640	14,640	75,043
° 자부담		10,000	7,386	7,386	7,386	7,386	39,544

□ 사업명(재원)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농안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51,440	41,440	36,860	36,123	35,762	201,625
° 국고	소 계	51,440	41,440	36,860	36,123	35,762	201,625
	직접수행						
	보조·출연						
	용 자	51,440	41,440	36,860	36,123	35,762	201,625

□ 사업명(재원)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685,717	683,756	740,877	785,023	809,880	3,705,253
° 국고	소 계	228,602	227,552	244,228	259,400	269,200	1,228,982
	직접수행						
	보조·출연	228,602	227,552	244,228	259,400	269,200	1,228,982
	용 자						
° 지방비		128,615	128,204	138,149	146,623	151,680	693,271
° 자부담		328,500	328,000	358,500	379,000	389,000	1,783,00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 총 경지면적 대비)	4.5 (추정치)	5.5	6.3	7.0

*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사유: 저농약 인증제 폐지('16년부터)에 따라 인증면적 비율 목표치에 대한 하향조정이 불가피함

[1-1-2] 친환경 농업 및 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② 친환경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김승룡 사무관, T.044-200-5635)

1. 과제내용

양식어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양식업 보급 및 확대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환경친화적인 양식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 확대 등으로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유도

2. 추진계획

친환경적인 양식기술·시스템 발굴 및 도입을 통한 안전한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매년)

- 신규 친환경 양식기술·시스템 발굴을 위한 공모 추진(3월)
- 공모 신청 사업의 평가 및 선정(5월)
- 육상 어류 양식장 용수 정화시스템 도입 추진(12월)
-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12월)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67,370	51,788	28,400	26,500	28,500	199,158	
◦ 국고	소 계	28,433	25,814	28,400	26,500	28,500	134,247
	직접수행	2,300	7,600	7,000	7,500	8,000	32,400
	보조·출연	22,633	18,214	18,000	19,000	20,500	98,347
	용 자	3,500	-	-	-	-	3,500
◦ 지방비	22,633	18,014	18,000	19,000	20,500	98,147	
◦ 자부담	16,304	7,960	14,240	14,900	16,430	69,834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신개념 생산시스템 구축률(%)	89.5	92	94	100

[1-1-3]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

① HACCP 적용업체 인증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김세환사무관, T.043-719-2852)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문성심사무관, T.043-719-3242)

1. 과제내용

□ HACCP 적용 확대를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 마련 및 증가하는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알가공품, 순대, 떡볶이 떡 등 국민간식의 조기 HACCP 적용 추진
- 인증 「유효기간 연장제」 및 정기평가 면제 취소제 도입 등

2. 추진계획

□ HACCP 의무적용 및 자율업체 인증 확대 지속 추진(연중)

- 단속 시 마다 적발되어 먹을거리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던 서민 기호식품의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HACCP 적용 확대 추진(연중)

- 3대 서민기호식품 HACCP 인증목표 및 실적('16.2.29기준)

구분	전체	'15까지 실적 (누계) (a)	'16년 목표		'17년 목표		'16.2까지 실적 (누계)	전체대비 인증율 (%)
			당해 인증 (b)	목표 (누계) (c=a+b)	당해 인증 (d)	목표 (누계) (e=c+d)		
계	1,544	177	174	351	217	568	206	13.3
순대	200	35	83	118	82	200	41	20.5
알가공장	132	39	47	86	46	132	48	36.3
떡류	1,212	103	44	147	89	236	117	9.6

* 순대 : 종업원수 2인이상('16.12.1), 나머지 업소('17.12.1)

* 알가공장 : 연매출액 1억이상이면서 5인이상('16.12.1), 나머지 업소('17.12.1)

* 떡류 : 연매출액 5억이상이면서 21인이상('16.12.1), 연매출액 1억이상이면서 10인이상('17.12.1)

- 3대 서민기호식품 제조업체 지원 강화

* 시설개선자금 지원 : 총 43.7억원(서민기호식품 업체당 1천4백만원 지원)

* 컨설팅비용 지원 : 총 9.5억원(서민기호식품 업체당 320만원 지원)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유가공업 등 기존 의무화 품목을 포함한 차질 없는 HACCP 인증 확대 추진(연중)

*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매출액,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의무화, '14~'20) ▲순대('16~'17)
▲집유업('14~'16) ▲알가공업(계란, '16~'17) ▲유가공업(매출액,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의무화, '15~'18)

- 제조·가공업 위주의 의무적용과 병행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판매·보관·운반업소* 등의 자율 인증도 확대

* 농축협 등 대형유통업체, 수입축산물 검역장, 운반업소 등

□ 엄격한 HACCP 인증유지요건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연중)

- HACCP 인증에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기간 경과 시 연장 심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미흡업체에 대한 인증 취소 실시(8월)

* 현재 축산물은 연장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은 미도입한 상황

- 점검 결과 인증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평가 면제 취소(1월)

* 현재 정기평가 시 90점 이상인 경우 다음 1~2년간 정기평가를 면제

- 정기 조사·평가(검증)와 함께 언론 이슈 제기 식품, 계절별성수기별 수요가 많은 품목 생산업체에 대한 무작위 기획점검 실시(연중)

□ 축산물 HACCP 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기준 적정성 여부 및 실행성 등을 검증, 미흡사항은 제도개선

- 검증계획 수립(1월) 및 정부 검증(2~11월)

* HACCP 기준 미흡 업체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 HACCP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 추진(연중)

* 방송매체(TV, 라디오), 다중이용시설(KTX), 신문, 잡지 등 활용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HACCP 제도 활성화(일반), 축산물 HACCP 인증(농특)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6,094	18,627	15,483	15,340	15,270	80,814
° 국고	소 계	16,094	18,627	15,483	15,340	15,270	80,814
	직접수행	1,040	1,040	1,040	1,040	1,040	5,200
	보조·출연	15,054	17,587	14,443	14,300	14,230	75,614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HACCP 인증율(식품, %)	14.8	17.2	20.0	23.8
HACCP 인증율(축산물, %)	12.5	13.9	15.3	16.8

*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사유

- (변경) 축산물 HACCP 인증율(%) 14.4 ⇒ 13.9
- (사유) '14년부터 집중 발생한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농장 등 생산단계의 HACCP 인증을 진행할 수 없었고, 유통·판매업소 영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참여도가 저조
- (대책) 최근 2년간 평균 인증률이 하락(1.6→1.4%) 추세에 있어 '16년 이후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수정('15년 실적치 12.5%에서 1.4% 상향조정한 13.9%)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영세업체 기술 및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컨설팅 및 시설자금 예산 확보하여 적극 지원 예정

[1-1-3]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

② HACCP 적용업체 재정·기술 지원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김세환사무관, T.043-719-2852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문성심사무관, T.043-719-3242)

1. 과제내용

HACCP 적용 희망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기술 및 재정지원 지속

- 영세업체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HACCP 적용 유도로 식품업체 전반의 위생수준 향상
- 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기술 및 재정지원 지속 추진

2. 추진계획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연중)

- HACCP 의무적용 품목을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
 - 순대, 떡 등 국민간식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성을 감안하고, 조기적용 유도를 위해 지원비율 확대

* 연매출액 5억미만 또는 종업원수 21인미만

* 지원금액(억원) : ('15년) 23.1 → ('16년) 43.71

-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개소당 800만원, 국고 40%)

* 지원금액(억원) : ('15년) 3.2 → ('16년) 9.53

맞춤형 전문 기술지원 강화(연중)

- HACC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영세업체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 기술상담, 표준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등 지속 추진
 - 일대일 매칭을 통해 준비부터 인증까지 맞춤형 기술지원

* 지원업체수(개소) : ('15년) 1,475 → ('16년) 1,600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HACCP 제도 활성화, 축산물 HACCP 인증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6,094	18,627	15,483	15,340	15,270	80,814
° 국고	소 계	16,094	18,627	15,483	15,340	15,270	80,814
	직접수행	1,040	1,040	1,040	1,040	1,040	5,200
	보조·출연	15,054	17,587	14,443	14,300	14,230	75,614
	용 자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1-1-3] 안전관리인증(HACCP)확대

③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장재홍서기관, T. 044-201-2281)

1. 과제내용

- HACCP 인증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인증농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2. 추진계획

- HACCP 인증희망 농가대상 컨설팅 사업 추진(3~12월)

- HACCP 컨설팅 업체 신규 및 변경 등록(1월)
- 각 권역별 컨설팅지원사업 수행업체 공개기술평가·선정(2~3월)
-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2~3월) 및 사업추진(3~12월)

- HACCP 인증이후 사후관리 미흡농가 대상 기술지원 사업 추진(3월~)

- 각 권역별 사후관리 미흡농가 조사 및 대상자 선정(3월)
-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기술지원 수행업체 선정(3월~11월)

- 소규모 농장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표준 기준서 제작(3~12월)

- 연차별·축종별로 단계적으로 제작·보급

※ 농식품부는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담당부처로 영세농민을 위한 소·돼지·닭 등 표준매뉴얼은 기 제작·배포하였으며, '16년도부터는 소규모 농장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표준 기준서를 단계적으로 제작·보급할 계획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축산물HACCP지원(축발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902	3,570	3,570	3,570	3,570	18,182
◦ 국고	소 계	1,622	1,650	1,650	1,650	1,650	8,222
	직접수행	-	-	-	-	-	0
	보조·출연	1,622	1,650	1,650	1,650	1,650	8,222
	용 자	-	-	-	-	-	-
◦ 지방비		1,140	960	960	960	960	4,980
◦ 자부담		1,140	960	960	960	960	-

* '16년부터 축산물HACCP컨설팅(축발)과 생산단계 HACCP 기술지원 및 검정사업(농특)을 축산물HACCP컨설팅(축발)으로 통합하고 사업명을 축산물HACCP지원으로 변경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생산단계(농장) HACCP 인증개소(농식품부)	6,675	7,375	8,075	8,775

[1-1-3] 안전관리인증(HACCP) 확대

④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종섭 사무관, T.044-200-5620)

1. 과제내용

- 육상양식장의 잠재적 위해요소에 대해 사전 예방·관리 지속 강화
 - 항생제·용수 등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도록 위생·안전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HACCP 등록 양식장 지속 확대

2. 추진계획

□ '16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16.2)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실시('16.3~)
 - * 워크숍·설명회 및 착수·최종보고회 등 추진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적극적인 홍보, 등록 양식장 혜택 제공 등 어업인 지원을 확대
 - * 마트 등에 판매 활성화 유도, 정기적인 질병관리, 안전성검사 등

□ '16년도 육상양식장 위생관리 실태조사 실시('16.3~)

- 실태조사를 통해 HACCP 등록 가능한 양식장 지속적으로 발굴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위생관리(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접수행	600	600	700	800	900	3,60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양식장 HACCP 등록수(누계)	78	100	130	160

* 성과지표 변경사유 : 당해연도 신규 등록이 아닌 누계로 성과지표명을 수정하면서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매년 30개소 이상 등록 추진)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① 식품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기반 조성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박상은 사무관, T.043-719-2855)

축산물위생안전과 김성일 사무관, T.043-719-3243)

1. 과제내용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도입에 따른 원활한 적용을 위한 운영 지원
- 식품이력추적관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생산·가공·판매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반 조성

2. 추진계획

-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3단계) 의무화 제품 등록 추진(연중)
 - * (영유아·건기식) 제조·수입업소 : 매출액 1억 이상, 판매업소: 매장면적 300㎡이상
- 조제유류 단계별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 등록 시행(신규)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에 따라 수입조제유류 의무등록 시행
 - * 1단계(16.12.1) 등록대상은 매출액 50억 이상 조제유류 수입업소
 - 국내생산 조제유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하여 의무화 예정(16~18년)
-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등록 확대를 위한 설명회 전문교육 등 영업자 지원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연중)
 - * 정기설명회 30회, 산업체 전문교육 44회, 현장기술지원 1,800회, 홍보전시회 3회 등
-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2회/년)
 - 각 부처 이력추적 정보 연계를 위해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개최(6월, 12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659	599	607	595	589	3,049
◦ 국고	소 계	659	599	607	595	589	3,049
	직접수행	228	168	182	165	169	912
	보조·출연	431	431	425	430	420	2,137
	용 자	-	-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식품이력추적등록 업소수(순증)	2,016	1,610	2,784	-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② 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방안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김준걸 사무관, T.044-201-2362)

1. 과제내용

□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검증체계 마련 및 정보제공 강화로 부정축산물 사전차단 등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이력제 이행실태 모니터링 강화 및 상습 위반자 인터넷 공개 등

2. 추진계획

□ 부정축산물 사전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연중)

- 농가신고정보 정확도 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평가실시(6월, 10월)
- 시·도별 유통업소 및 가축시장 이력제 이행실태 모니터링(연중)
- 부정축산물 사전차단을 위한 식육유통업소 DNA동일성검사(연중)

□ 축적된 정보의 유관기관 공유·개방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 상습 축산물이력관리 위반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연중)
- 이력정보 활용도 및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2월~)
- 축산물이력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11월~)

□ 축산물 이력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체계 마련

- 실제 사육농가와 이력정보간 일치여부 검증 및 정보공유를 위한 품질개선 방안 마련(2월~)

* 일정 표본 추출후 위탁기관 및 축평원을 통한 면접/전화 청취조사 등 실시

□ 도축·유통업소 등 이행주체의 이력관리 기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모품·장비 등 지원

- 이력표시용 라벨(포장처리업소) 및 전산 SW(바코드) 개발·보급(2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축산물품질관리-축산물이력제(축발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28,030	25,518	25,818	25,406	25,234	130,006
° 국고	소 계	22,334	20,280	20,580	20,168	19,996	103,358
	직접수행	-	-	-	-		
	보조·출연	22,334	20,280	20,580	20,168	19,996	103,358
	용 자	-	-	-	-		
° 지방비		5,696	5,238	5,238	5,238	5,238	26,648
° 자부담		-	-	-	-		
° 기 타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이력정보 조회건수 증가율(%)	41.3 (30,056천건)	44.6 (43,473천건)	15 (50,000천건)	20 (60,000천건)

* '16년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정착에 따른 이력정보 조회건수의 일시적인 증가예상.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될 것으로 추정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③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활성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이동희 사무관 T: 054-912-0380)

1. 과제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 영업장 관리를 통한 제도 정착

- 전자적 거래신고, 이력번호 표시 등 제도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 영업자·소비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2. 추진계획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대상 영업장 지도·점검 : 1,000개소(연중)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영업자·소비자 교육 및 홍보(연중)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 영업자 대상 제도 안내 및 거래내역 전산신고 방법 등 교육(12회)
- 제도 이해 및 이행 능력이 부족한 소형마트 내 영업장 등 취약업소 방문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및 이력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홍보(연중)
- 수입쇠고기 실질적 구매층인 주부계층 대상 이력정보 조회방법 등 설명 및 판매업소 방문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조회 실습 교육 행사(3회)
- 수입쇠고기 유통관리제 인지도 제고를 통한 공감대 향상을 위한 인터넷·대중매체 홍보 2회 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축산식품안전관리(일반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303	303	303	303	303	1,515
° 국고	소 계	303	303	303	303	303	1,515
	직접수행	303	303	303	303	303	1,515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④ 수산물 이력제 확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수정 사무관, T.044-200-5449)

1. 과제내용

□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산물 정보기록·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 등 공중보건 확보 필요

-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방사능 등에 대한 과도한 소비자 반응 완화

2. 추진계획

□ '16년 수산물이력제사업 추진계획 수립('16.2)

- 중점관리품목을 '15년 12개에서 '16년 17개로 확대하여 추진
 - (선정기준) 대중성 어종 등 사회적 의미가 크고 이력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을 중점추진품목으로 추가 지정·관리

'14년 품목(7개)	'15년 품목(12개)	'16년 품목(17개)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넙치,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넙치, 멸치, 미역, 굴, 김, 다시마, 오징어, 옥돔	고등어, 갈치, 참조기, 전복, 넙치, 멸치, 미역, 굴, 김, 다시마, 오징어, 옥돔, 홍어, 뱀장어, 송어, 명게, 꽃게

- (기대효과) 추진 대상을 명확화하여 품목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이력표시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16.3~12)

- 한중 FTA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입 확대로 국민의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확인 욕구가 증대됨에 따른 구체 실행계획 마련
- '16년 중점추진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유통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세부 추진방안 수립

- 수조 판매 등 혼입 우려 등으로 이력제 시행이 곤란한 품목에 대한 효과적인 시행방법을 개발·보급

□ 이력표시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업체와의 협력 행사 개최 ('16.6월 이후, 3회 이상)

□ 수산물이력제사업 참여업체 대상 교육·홍보 실시(수시)

□ 수산물이력제사업 워크숍 개최(매년 1회 이상)

□ 이력제사업 소비자, 참여업체 모니터링(설문) 조사 실시(매년 1회 이상)

□ 수산물이력제사업 중간('16.7)·최종보고회 개최('16.12)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이력제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접수행	3,880	2,220	3,220	4,220	5,220	18,76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수산물이력제 참여 업체 실적(%)	12.9	13.2	14.0	14.8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기존 성과 목표치와 측정산식이 계획대비 단순 100% 실적 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치와 측정산식을 체계화 및 합리화

· ('15년 측정산식) 수산물이력제 참여 업체수(당해연도 이력제 참여업체수 / 최근 3년간 평균 참여 업체수)×100

· ('16년 측정산식) (당해연도 참여업체수/참여대상어가 및 업체수) × 100

· ('16년 목표치) 수산물이력제 사업 참여독려 및 홍보 강화로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점진적 증가 추세 반영

[1-1-4]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강화

⑤ 국산 천일염 이력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수정 사무관, T.044-200-5449)

1. 과제내용

- 천일염의 생산,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천일염 이력제 확충
 -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값싼 수입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 천일염 생산자 보호
 -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선택권 보장

2. 추진계획

- 천일염이력관리제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16.2)
- 이력관리제 홍보계획 수립 ('16.2)
 - 이력관리제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중 매체(TV, 라디오 등) 홍보
 - * 지상파 방송 3사 인기 시청 프로그램을 활용한 천일염 이력관리제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송(1회, 20~60분)
 - 언론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천일염 주 소비층(주부)를 타겟으로 천일염의 청결성 및 건강 기능성 정보 배포
- 천일염이력관리제 4개 부문(총괄, 시스템, 홍보, 라벨) 사업자 선정('16.3)
- 천일염 이력관리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16. 4~)
- 이력관리제 실적 중간점검 및 분기별 회의 개최('16 매 분기말)
- 이력관리제 최종보고회 개최('16.12)
- 이력관리제 우수참여자 대상 워크숍 개최('16.12)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천일염 이력관리제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접수행	2,100	1,900	2,200	2,400	2,600	11,20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천일염 이력제 구축율(%)	66.17	70	75	77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최근 소금가격하락에 따른 천일염생산량의 감소 추세와 천일염이력제 사업참여조건 강화(재봉포장 의무화)에 따른 참여물량 감소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

- 천일염 생산량 : '13)42 → '14)30.9 → '15)33 만톤
- 소금가격 추이(원/kg) : '12) 391 → '13) 294 → '14) 263 → '15) 195
- '15년 천일염이력제 구축률(%) : 계획(68), 달성(66.17)

[1-1-5]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① 주류 안전기준·법규 재정비 및 건강한 소비·섭취 홍보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김성근 사무관, T.043-719-6052)

1. 과제내용

□ 주류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법규 제·개정 추진

-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주류 제조업체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준·규격 신설 추진

□ 안전하고 건강한 주류 소비·섭취를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 안전한 주류 제조 및 건강한 주류 소비를 위한 홍보 강화
- 공병 재사용에 따른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업

2. 추진계획

□ 주류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개정 추진

- 소규모 주류업체를 위한 주류 총산 시험법 개선(12월)
- 주류의 아세트알데히드 등 기준·규격 재검토 및 시험법 개발(4~12월)

□ 주류 제조 특성을 고려한 표시기준 및 법령 개정 추진

- 주정 및 증류주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개정(6월)
- 주류를 즉석판매, 소분, 위탁제조 및 유통전문판매 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 등에 명확하게 규정(12월)

□ 건강한 주류 소비·섭취를 위한 주류안전관리 강화

- 에너지폭탄주 등 새로운 주류 소비형태 실태조사 및 대응책 마련(9~12월)
- 주류소비형태에 따른 맞춤형 홍보콘텐츠 개발·보급(5~11월)
- 안전하고 건전한 주류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이벤트(11월)

○ “빈병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대국민 홍보 캠페인(10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40	40	40	40	40	200
° 국고	소 계	40	40	40	40	40	200
	직접수행	40	40	40	40	40	200
	보조·출연	-	-	-	-	-	-
	용 자	-	-	-	-	-	-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1-1-5]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② 주류 제조업체 기술지원 및 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김성근 사무관, T.043-719-6052)

1. 과제내용

□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거점형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한 영세업체 지원확대
- 소규모 전통주 우수 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집중 지원

□ 주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조·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주류제조업체의 위생관리수준에 따른 차등 위생관리등급제 실시
- 야구장 판매 맥주 등 대한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수거·검사 실시

2. 추진계획

□ 거점형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소규모주류 제조업체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및 분석지원

- 주류 안전관리 교육, 애로사항 컨설팅, 에탄올 등 기준규격 분석 등 지원(연중)
- 소규모 주류(탁주·약주·청주) 우수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배포(3~6월)

□ 주류제조업체 이물 저감화를 위한 안전관리 등 지원 강화(연중)

- 이물 저감화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주류 이물관리 강화
- 소주, 과일주 HACCP 관리기준서 개발, HACCP 적용 희망업체 대상 기술지원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제조업체 지원강화

□ 주류 제조·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강화

- 자율·일반·중점업체로 차등관리 하는 위생관리등급제 지속 운영(연중)
- 주류물류센터, 도매점 등을 대상으로 주류의 안전한 보관·유통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도입 및 교육 강화(6~9월)

- 야구장 판매 맥주, 소규모 맥주 제조, 생맥주 등 대상으로 위생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4~10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합 계		202	501	483	501	501	2,188
° 국고	소 계	202	501	483	501	501	2,188
	직접수행	202	239	237	239	239	1,156
	보조·출연	-	262	246	262	262	1,032
	용 자	-	-	-	-	-	-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중점관리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87	88	90	91

[1-1-6]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①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성준현 연구관, T.043-719-2055)

1. 과제내용

소비자 구매시점에서 위해식품의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계속)

* 전국 14만여개 매장 중 현재 6만개소 적용 중, 매년 1만개소씩 확대

* 시스템 설치 업소수(누계): ('13) 42,134개 → ('14) 52,966개 → ('15) 64,060개

2. 추진계획

대형 식품 유통·판매업체 대상 시스템 자발적 설치·확대(연중)

○ 본사 방문설명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자율설치 독려(2월)

○ 그간 설치가 진행된 식품 유통·판매업소 외에 집단급식소·프랜차이즈 식자재 공급 업체*까지 시스템 확대 적용(10월)

* 점유율 높고 식수인원 많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1만여개 매장에 시스템 적용 추진

* 시스템 설치를 위한 업체 방문설명 및 기술지원 추진(5월)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대국민 홍보실시(8월)

중·소규모 식품판매점 대상 무상설치 지원(연중)

○ 식약처 예산 지원을 통한 무상설치 위탁사업 추진(3월)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18	684	662	659	643	3,366
°국고	소 계	718	684	662	659	643	3,366
	직접수행	718	684	662	659	643	3,366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 수(누계)	64,060	70,000	80,000	80,000

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1-2-1]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

① 수입 전(前) 해외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조태용 연구관, T.043-719-2159)

1. 과제내용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 등록제도의 조기 정착

- 특별법 시행('16.2.4.)에 따라 원활한 해외제조업체 등록 추진을 위한 효율적 등록시스템 구축 및 기존 수입신고 업무와의 연속성 유지

2. 추진계획

□ 해외 제조업체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해외제조업체 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연회 및 시범운영(1월)
- 해외제조업소 등록 추진('16.2~, 8.3까지 유예)
 -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도하기 위한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3월)
 -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따른 등록절차 안내 등 설명회(3월6월)
-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 승인 시 해당 제조업소의 수입신고 이력과 연계(2월)
 - 신규 등록 해외제조업소와 기존 신고업소와의 동일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보완

□ 해외 제조업체 등록 확인 및 정보 활용

- 해외제조업체의 중복 등록 방지를 위한 기준 및 검증 방안 마련(3월)
- 위해정보 부적합 발생 여부 상황등을 고려한 등록 해외 제조업체 구분 관리(연중)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해외제조업체 등록	-	등록	등록	등록

[1-2-1]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

② 축산물 수출신청국에 대한 위생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송성옥 서기관, T.043-719-3245)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조태용 연구관, T.043-719-2159)

1. 과제내용

- 축산물 수입 전 수출상대국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수입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2. 추진계획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따른 제도정착 기반구축

- 수입위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홍보강화(1월)

수입위생평가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평가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처내 전담 T/F 구성(1월)
- 전산시스템(식품행정통합망)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 마련(7월)

수입식품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2월)

- 수출국 위생평가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고시* 제정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축산식품 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07	510	530	580	580	2,507
° 국고	소 계	307	510	530	580	580	2,507
	직접수행	307	510	530	580	580	2,507
	보조·출연	-	-	-	-	-	
	용 자	-	-	-	-	-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1-2-2] 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

①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및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김은정 연구관, T.043-719-2210)

1. 과제내용

□ 수입 전 단계 현지실사 강화를 통한 위해 수입식품 사전 차단

- 수출국 제조시설과 제품의 관리현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입하는 '우수수입업소 등'의 관리
- 부적합·수입건수 상위 제조업체 및 해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지 위생관리 강화

2. 추진계획

□ 해외제조업소 10개국 80개소 현지실사 (연중)

-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부적합 품목 해당제조업소
 - 2012년 통보이후 수입지속 여부 등 및 2015년도 수입량 고려
- 다년간 수입단계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품목의 해당 제조업소
 - 자사제품제조용, 정밀검사생략대상품목 중 수입지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15년도 수입량 상위업체 우선 대상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해당 제조업소 사후관리
-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실사

□ 사전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관련 홍보

- 주한외국대사관 및 관련자 대상 설명회 개최(1월)
- OEM제조업체 「위생점검 검사기관」 대상 교육 실시(1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하위규정 관리 및 개선(6월~)
 -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적용검토 후 의견수렴 및 반영

- 우수수입업소 확대를 위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자’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1월, 10월)
-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위한 실사관 양성(4월, 10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511	480	470	461	456	2,378
° 국고	소 계	511	480	470	461	456	2,378
	직접수행	511	480	470	461	456	2,378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1.78	2.23	2.72	3.14

[1-2-2] 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

②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현지실사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전세회사무관, T.043-719-2220)

1. 과제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15.2.3) 후속조치 추진
 - 특별법에 따른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관리 및 현지실사 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시행
- 수출국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축산물 사전 안전관리로 위해 우려 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
 - 위생관리 수준이 확인된 작업장에 대하여만 등록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수입 기반을 마련
 - 위생 취약 작업장에 대하여 시정,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통해 수입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2. 추진계획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합동 점검 등 타부처 협업방안 마련(2월)
 -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실무협의회 개최(1월) 및 협업방안 마련
- 수입축산물 사전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주한외국대사관 및 민원인 대상 설명회 개최(1월, 6월)
 - * 주한외국대사관 관계관 및 축산물 수입관련 영업자 대상
- 해외작업장 실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연 2회, 상·하반기)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등에서 모의실사를 통한 현장 참여 교육으로 실무역량 강화(상·하반기 각 1회, 연 30명)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용역(상반기)

□ 해외작업장 등록제도 시행(2월)

- 신규 등록 요청 작업장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서류검토 또는 국가 간 협의된 방법(수입위생요건 등)에 따라 검토 후 등록

□ 수입축산물 해외 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연중)

- '16년 수입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계획 수립(1월, 13개국 80개소)
 - * 멕시코(성장촉진제), 독일(부패 돈육), 중국(항균제), 미국·호주(식중독균), 등 위해요소 검출 이력이 있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사후 실사 포함
- 해외작업장 세부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 등 현지실사 프로토콜을 수출국 정부 및 영업자에 공개(영문본, 5월)
- 위해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 또는 해외작업장 중심의 현지실사 실시
 - * 매년 1월초 위해가능성에 기초한 사후실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사계획 수립
 - * (기준) ①최근 2년간 식중독균 또는 잔류화학물질 검출 작업장, ② 최근 3년간 현지실사 미실시 국가/작업장 ③ 품목별 수출량이 많은 국가/작업장 ④ 그 외 국내외 위해정보에 포함된 축산물/작업장 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입축산물 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3,800	3,794	4,082	5,960	5,901	23,537
° 국고	소 계	3,800	3,794	4,082	5,960	5,901	23,537
	직접수행	3,800	3,794	4,082	5,960	5,901	23,537
	보조·출연	0	0	0	0	0	0
	용자	0	0	0	0	0	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71개소	80개소	90개소	100개소

[1-2-2] 수입식품 현지실사 및 위생협력 강화

③ 수입 수산물 해외 수출국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경정 주무관, T.044-200-5619,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송상길 사무관, T.043-719-2230)

1. 과제내용

□ 수출국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로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

- 사전에 안전관리 수준이 확인·등록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 유도로 안전성 제고
- 주요 교역국과 수산물 위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2. 추진계획

□ 수입 수산물 해외 수출국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식약처, 해수부)

-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가의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으로 수입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연중)
 - * 위생약정 체결국 :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에콰도르
 - * 위생약정 체결국 점검계획 ('15) 50개소 → ('16) 55개소 → ('18) 65개소
- 비약정국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으로 수입수산물 사전 안전관리(연중)
 - * 수입량이 많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 있는 국가의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 수산부산물 수출국 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식약처)

- 수산부산물 수입 실적이 많은 국가의 생산시설이나 신규 등록 위한 생산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연중)
 - * 반기별 1개국이상 수산부산물 생산시설에 대한 점검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위생관리(수산물위생협력 이행)(해수부)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접수행	200	200	240	240	240	1,120

□ 사업명(재원) : 수입수산물 검사(식약처)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571	3,659	3,571	3,571	3,571	17,943
° 국고	소 계	3,571	3,659	3,571	3,571	3,571	17,943
	직접수행	3,571	3,659	3,571	3,571	3,571	17,943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1-2-3]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 책임 강화

①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입식품 수입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조태용 사무관, 오금순 연구관, T.043-719-2158)

1. 과제내용

□ 위해우려 식품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확대 실시

- 현재 운영 중인 검사명령제 이외,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명령제 적용으로 영업자 책임의식 고취

□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제 확대 시행

-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피교육자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 신설

2. 추진계획

□ 위해우려 식품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 수입단계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중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규 검사명령제 대상으로 선정(1월)

* 예) 집성목으로 제조된 중국산 식품용 기구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검사

- 신규 검사명령제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수입영업자, 대행자 등)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1월)

- 국내외 위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우려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게 위해물질을 미리 검사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 운영(연중)

□ 부적합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명령 대상 확대 시행

- 영업자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영업자(대표자) → (변경) 영업자 및 수입식품 위생 책임자

-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 확대

* (현행) 식품등 수입판매업 → (변경)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수입판매업

- 제도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영업자의 교육방법**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온라인 교육 과정 신설**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교육명령 이수율	71%	74.5%	78.2%	82.1%

* 최근 3년 평균 이수율 : 67%('13년 63%, '14년 67%, '15년 71%)

1-3.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1-3-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활성화

(담당자 :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 제용규 사무관, T.043-719-4053)

구분	부처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부처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방사청

1. 과제내용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 개선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구축된 통합DB를 분석·활용하여 정책수립 또는 현장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안정적 상시 운영체계 확립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위탁기관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협업기관 간 지속적 협업기반 운영
- 담당 사업국(부서) 및 유관부처,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통한 안정적 상시 운영 체계 확립

2. 추진계획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활용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 추진('16.2~12월)

- 범정부 공무원용 「식품안전 정책통계 지원시스템」 구축
- 위해예보 및 조기경보 기능 구축
- 단속대상 업체 자동선별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식품안전정보포털 앱 개발

- 식품안전정보 상황판 및 식품안전정보포털 기능 개선

□ 고객 지원센터 운영 등 위탁사업 실시('16.1월~12월)

- 식약처, 관계기관(부서), 지자체로부터 송·수신되는 식품안전정보의 연계오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각종 식품안전정보 분석 및 유형별로 통계화된 위해정보 제공
 - *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전문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운영

□ 범부처 협업체계 유지 및 사용자 관리

- 범부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개최(년2회)
 - * 식품안전정보 추가연계 등 협력방안 논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16.5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16.11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위해예방관리운영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642	630	642	642	642	3,198
◦ 국고	소 계	642	630	642	642	642	3,198
	직접수행	642	630	642	642	642	3,198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만족도(%)	60.4	70	75	80

[1-3-2]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①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박종필 사무관, 김현정연구관 T.043-719-1762)

1. 과제내용

□ 해외 위해식품 등 정보제공 강화

- 최근 해외직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 정보를 공개하고 국내 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 보호

□ 국내 식품 등 위해정보 수집체계 확대

-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 발생하는 식품 등의 이슈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제공시스템이 없어 효율적인 사전예방관리가 미흡

2. 추진계획

□ '해외직구 소비자 주의 정보방' 개설·운영(1월~)

- 해외 위해 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연중)

□ 소셜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국내 식품정보 수집·분석·제공

- 사전이슈 발굴을 위한 SNS 수집시스템 구축(10월)
- SNS 등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계부서 등에 제공(11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44	467	600	650	700	2,861	
° 국고	소 계	444	467	600	650	700	2,861
	직접수행	444	467	600	650	700	2,861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식품 위해정보 조치율*(%)	53.2	55	60	65

* 조치율 = 조치정보¹⁾/ 주요정보²⁾ × 100

1) 조치정보: 수입검사강화, 국내유통제품 수거검사, 판매금지·회수, 인터넷 사이트 판매차단요청, 안전성서한, 허가변경, 보도자료, 현장실태조사, 유관기관정보공유, 기준규격설정 등 정보를 통한 예방적 조치들을 유도한 정보

2) 주요정보: '식의약품 위해정보관리메뉴얼'에 따라 2등급(식품기준위반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정보) 이상이거나, 우리처 내부에 분석하여 보고한 정보로 수거·검사 등의 예방적 조치와 사업부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

[1-3-3]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①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및 협력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백용 사무관, T.051-400-5640)

1. 과제내용

□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한 신규 서비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수산식품 관련 콘텐츠 발굴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수산식품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수산물 검역정보 및 안전정보의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

- 국가관세종합정보망(관세청)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 등과의 연계 정보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수산물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2. 추진계획

□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위탁사업 수행('16.1~2)

- 정보시스템 기반환경(HW, SW)의 안정적 운영·관리
- 표시단속 현황조회 기능 신규구축('16.3~6)
- 유익한수산물정보 앱 콘텐츠 추가제작 및 업데이트('16.4)

□ 연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의 안정적인 연계를 위한 기능 점검('16.1~2)
- 타 부처(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관리를 위한 기능 추가('16.6)

□ 노후화된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노후 OS·브라우저 미지원 문제, 시스템 내 액티브엑스(ActiveX) 제거를 위한 시스템 재구축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요청
- 9년 이상 교체 없이 사용된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화 장비 교체를 위한 방안 마련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위생관리(수산물안전정보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 국고	직접수행	375	375	375	375	375	1,87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안전정보망 기능 개선율(%)	70	72	74	76

1-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1-4-1.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① 분석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이민용 사무관 T.054-429-4138)

1. 과제내용

- 분석 인력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시험·연구 능력 향상
 - 선진국의 분석기술 조사 및 도입을 위한 해외 분석법 연수 등

2. 추진계획

- 안전성 분석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2~12월)
 - 안전성 분석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외 선진 분석기관 등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 * 분석법연수, 국제회의, 해외학회 등
 - 분석숙련도 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농산물 안전성조사(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8	
합 계		126	126	126	126	126	630
° 국고	소 계	126	126	126	126	126	630
	직접수행	126	126	126	126	126	630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국외연수 이수 인원	24명	20	20	20

[1-4-1]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② 농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담당자 :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박병준 연구관, T. 063-238-3238)

1. 과제내용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확대
 - 농약품목 추가·변경·삭제 등 보완: 10국가 28작물
 - 인도네시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신규 설정
-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농약 안전관리 기술개발
 - 다성분 검출 및 환경 중 농약 모니터링 기술 체계화
 - 농업인 농약 노출량 산정모델 및 저감기술 개발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 및 관리기술 개발
 -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 정향, 박하 등 3종
 - 다사용 식물추출물 유효성분 안정성 검증 : 피마자 등 2종
- 재배환경 및 농산물 중 중금속 안전관리 기술개발
 - 비소흡수특성 규명 및 저감화 기술개발
 - 중금속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

2. 추진계획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확대(연중)
 - 농약품목 추가·변경·삭제 등 보완: 10국가 28작물
 - 인도네시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신규 설정(2월)
-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농약 안전관리 기술개발
 - 퀘처스(QuEChERS) 기법 활용 다성분 동시분석기술 개발·보급(2~10월)
 - 분석표준물질 이용 농산물중 잔류농약분석 정도관리(3~10월)

- 라이시메타 이용 환경 중 잔류농약 이동 및 잔류특성 평가(2~11월)
- 농업인 농약 노출량 산정모델 개선: 벼(6~9월)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 및 관리기술 개발(2~12월)
 -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 정향, 박하 등 3종
 - 다사용 식물추출물 유효성분 안정성 검증 : 피마자 등 2종
- 재배환경 및 농산물 중 중금속 안전관리 기술개발
 - 비소 흡수특성 규명 및 저감화 기술개발(5~12월)
 - 중금속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연중)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679	3,588	3,946	4,341	4,341	18,895
° 국고	소 계	2,679	3,588	3,946	4,341	4,341	18,895
	직접수행	1,155	1,912	2,103	2,313	2,313	9,796
	보조·출연	1,524	1,676	1,843	2,028	2,028	9,099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수출대상국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 지침 설정(건, 누적)	9국가 28작물	10국가 28작물	10국가 30작물	-
농약 노출량 산정모델 개발(작물, 누적)	2	3	4	5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종, 누적)	8	9	11	13

(1-4-1)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③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안전성 연구 강화

(담당자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재기 연구관, T. 063-238-3391)

1. 과제내용

□ 유해미생물, 곰팡이독소의 오염여부 신속 진단 기술 개발

- 농산물 오염 식중독균(5종)의 신속진단법 확립 및 현장적용시험(5개소)
- 곰팡이독소 신속분석법 개발 및 조사료 표준분석법 확립

□ 농산물의 유해미생물 및 곰팡이독소 오염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 농산물 오염 모니터링 전처리기술 확립 : 배추, 엽채류
- 노지배추 주산지 생산단계 식중독균 오염실태 조사 : 6종 식중독균
- 주요 농산물 수확후 곰팡이독소 오염실태 분석 : 곡류, 두류, 과채류

□ 유해미생물 및 곰팡이독소 발생생태 구명 및 저감화기술 개발

- 유해미생물의 환경 친화적 제어물질 현장적용 : 박테리오신 등 2종(특허출원 1건)
- 토착 미생물 군집의 오염 식중독균 활성억제 효과구명 : 토양, 수확후 등
- 곡류 후사리움독소 생장저해/분해 우수 미생물 특성구명 : 2종

□ GAP 활성화를 위한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및 보급

- 농업인용, 작물별 GAP 생산가이드 발간 : 파, 마늘 등 5종
- 농업현장 실천을 위한 영농단계별 GAP 세부실천지침 개발 : 32종
- 생산 및 수확 후 관리단계 농산물의 위생관리지침 개발 : 2종

2. 추진계획

□ 농산물의 식중독균·곰팡이독소 오염실태 조사(1~12월)

□ 환경 친화적 식중독균 제어물질 활성제고(1~6월) 및 현장적용(1~12월)

□ 곰팡이독소 생장저해/분해 미생물 특성구명(1~9월) 및 효과검증(10~12월)

□ 작물별 GAP 생산가이드(4~9월) 및 표준해설서(7~11월) 개발

○ GAP 생산가이드 발간: ('14) 15품목 → ('15) 20 → ('16) 25 → ('17) 30 (누계)

* 식량작물(4 ; 벼, 맥류, 감자, 고구마), 채소류(10 ; 배추, 무, 양파, 수박, 토마토, 딸기, 고추, 부추, 상추, 잎들깨), 과수류(3 ; 사과, 포도, 귤), 약용·특용작물(2 ; 당귀, 참깨), 느타리버섯

○ 작물별 GAP 세부실천지침 개발: ('15) 14품목 → ('16) 46 → ('17) 77 (누계)

* ('15) 식량(11), 특용(3) → ('16) 과수(14), 약용(18) → ('17) 채소(22), 버섯(9)

- 식량(10): 벼, 콩, 감자, 고구마, 보리, 밀, 조, 수수, 기장, 팥, 옥수수
- 특용(3) : 참깨, 들깨, 땅콩
- 과수(14) : 사과, 배, 감, 감귤, 유자, 복숭아, 자두, 매실, 포도, 무화과, 오디, 참다래, 블루베리, 앵두
- 약용(18)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울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오미자, 지황, 매(산약), 황금,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더덕, 결명자, 통골레(위유), 헛개나무, 녹차잎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관리지침 개발(9~12월)

○ 농산물 위생관리지침 개발: ('14) 5종 → ('15) 6 → ('16) 8 ⇒ ('18) 10 (누계)

* ('14) 5품목 (인삼가공품, 장류, 미나리, 꽃감, 과채류) → ('15) 6 (오디) → ('16) 8 (복분자, 블루베리) → ('18) 10 (새싹채소, 배추) (누계)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고유연구사업, 공동연구사업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277	2,543	2,955	3,250	3,543	14,568
° 국고	소 계	2,277	2,543	2,955	3,250	3,543	14,568
	직접수행	1,347	1,398	1,439	1,582	1,725	7,491
	보조·출연	930	1,145	1,516	1,668	1,818	7,077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유해미생물·독소 진단법 개발(건, 누적)	5	8	10	11
위해성평가 기반구축 유해미생물·독소 모니터링(중 누적)	3	4	5	6
유해미생물 제어제 개발(건, 누적)	3	4	5	6
GAP 현장실천 매뉴얼 개발(건, 누적)	20	25	30	30

* 성과지표 변경사유:

- ① 현행 성과지표 '유해미생물·독소 동시진단법 개발'은 동시진단 이외 최근 개발된 첨단기법이 포함 되도록 '유해미생물·독소 진단법 개발'로 변경 필요
- ② 현행 성과지표 '유해미생물·독소 위해성평가'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정량적 산출이 어려움 ⇒ 위해성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대상 유해생물로 변경이 필요
- ③ 현행 성과지표 '유해미생물 제어 유전자원 탐색'은 탐색대상의 범위가 넓고 탐색건수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유전자원 탐색의 최종목표인 '유해미생물 제어제 개발'로 성과지표 통합 필요
- ④ 현행 성과지표 '국외연수 인원'은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안전성 연구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성과지표에서 삭제 필요

[1-4-2]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

①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이재봉 연구관, T. 063-238-3370)

1. 과제내용

- 잔류성시험의 국제조화를 위한 시험지침 개발 연구
- 농약의 활성,작물안전성 평가 및 관리기준 개선
- 등록 및 재등록 신청 농약의 안전성종합 평가

2. 추진계획

- 잔류성시험의 국제조화를 위한 시험지침 개발 연구(3~12월)
 - 작물잔류성시험 표준작업 지침서 작성을 위한 지침 개발
 - 농약등록 시험의 잔류성분야 시험방법 개선 연구
- 농약의 활성,작물안전성 평가 및 관리기준 개선(3~12월)
 - 작물별 농약 살포물량 기준 설정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의 약효·약해평가를 위한 작물그룹화 평가
 - * 소면적 대표작물 선정기준은 지금까지 수행된 약효·약해분야 시험성적적서 누적건수, 재배면적, 성적서의 재현성 등을 고려하고 있음
 - * 선진국의 사례연구 조사 실시(2012~2014년)
- 등록 및 재등록 신청 농약의 안전성 종합평가(3~12월)
 - 신규 원제 및 변경등록 신청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 농약 부자재의 안전관리기준 개정 추진 : 부자재 안전관리 체계
 - 신규 및 기등록 농약 안전기준(안) 마련 : ADI, AOEL, 안전사용기준
 - 등록 후 10년 경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 100품목
 - * 등록 후 10년 경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15) : 80품목

3. 예산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850	900	900	900	900	4,450
° 국고	소 계	850	900	900	900	900	4,450
	직접수행	650	650	650	650	650	3,250
	보조·출연	200	250	250	250	250	1,200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현 수준)	'16	'17	'18
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건수(건, 누적)	412	480	560	620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건수(건, 누적)	400	500	600	700

*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19조)'은 기존지표인 '원제 GHS 설정' 지표보다 농약등록관리의 종합지표로서 농산물안전성 및 농업인 건강보호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음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① 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정지윤 연구관, T.043-719-4203)

1. 과제내용

□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및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생충, 식중독균, 방사능 등 분석법 확립 및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방안 연구
- 수산물의 기준규격 현대화,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

2. 추진계획

□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연구

- 수산물 중 인체유해 기생충 감염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11월)
- 국내 미등록 및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 시험법 개발(10월)
- 쿠도아 등 원충 5종*에 대한 신속동시분석법 마련(11월)
* 쿠도아, 람블편모충, 작은와포자충, 이질아메바, 특소포자충
- 알가공품 열처리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1월)
- 국내 유통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 방사능 모니터링(12월)

□ 축수산물의 기준규격 국제조화 연구

- 건조저장육류, 아이스크림 및 알가공품의 식중독균 위해평가 연구(11월)
- 국내 미등록 및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발(10월)
-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안전관리 및 기준규격 개선방안 연구(11월)
- 수산물 중 천연유래 보존료 함유량(11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축수산 안전관리(R&D)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201	4,202	3,201	3,201	3,201	17,006
° 국고	소 계	3,201	4,202	3,201	3,201	3,201	17,006
	직접수행	3,201	4,202	3,201	3,201	3,201	17,006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수준)	'16	'17	'18
정책활용률(%)	89.5	68	72	74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② 수산물의 과학적·효율적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이정선 연구관, T.051-400-5650)

1. 과제내용

- 수산동물용의약품 사용 증가 및 지속적인 금지물질 사용 등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우려 증가로 정밀분석 체계 강화
- 연근해의 지속적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위해요소 오염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밀분석 전문성 제고
 - 수산물 종별에 대한 주요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 신종 유해물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분석능력 배양

2. 추진계획

- 정밀검사 분석장비 도입 및 숙련도 평가 실시(연중)
 - (장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총 31종 58대
 - (숙련도) 4개분야 14개항목(검역4, 금지물질2, 미생물2, 중금속3, 항생물질3)
 - * 국제숙련도는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신청이 안될 수도 있음
- 전문 정밀분석인력 양성교육 실시(연중)
 - 항생물질,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및 위생 취약 분야
 - 전문 능력 고도화 및 심화된 분석기술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
 - (자체) 3분야 7명, (위탁) 6개분야 13명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검역검사(수산물정밀분석)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 국고	직접수행	4,247	4,119	4,200	4,200	4,200	20,966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정밀검사숙련도평가	12	14	14	14
전문인력 교육이수	22	20	20	20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③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 연구·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안전연구원 식품안전과 손광태 연구관, T.051-720-2620)

1. 과제내용

□ 연근해의 지속적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소 출현 가능성 상존

- 수산물의 주요 위해요소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해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2. 추진계획

□ 생산단계 수산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16.3~'17.2)

-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 전국 연안 패류생산해역(56개소)의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E. coli*) 조사
 - 주요 패류생산해역(8개소)의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노로바이러스, 패류독소,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

□ 수산물 유래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16.1~'12)

- 해조류 중 무기비소 위해도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분석법 개선

□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7개소) 위생조사('16.1~'12)

-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해수 및 패류에 대한 위생지표세균 및 병원성세균 조사
- 경남 및 전남일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및 이화학적 위해요소 조사

* 조사결과는 수산물 안전정보 시스템(수과원)에 전산 입력·관리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위생관리,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796	4,702	5,182	5,182	5,182	25,044
°수산물위생관리	직접수행	2,652	2,492	2,492	2,492	2,492	12,620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직접수행	2,144	2,210	2,690	2,690	2,690	12,424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위해성평가 모니터링(건수)	1,500	1,600	1,700	1,800

[1-4-3] 축·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강화

④ 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안전과 김풍호 연구관, T.051-720-2630)

1. 과제내용

□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관리 강화 및 패류독소 상시 감시체제 유지

-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 강화
- 전국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패류독소 발생실태 파악

2. 추진계획

□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조사 강화(연중)

-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따라 남해안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 * 5월~10월 : 남해안 패류양식장 15개소(월 1회 조사)
 - * 11월~익년 4월(굴 생산시기) : 격주조사, 검출시 매주검사
 - * 전국연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월 1회, 생산시기)

□ 전국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패류독소 발생실태 파악(연중)

-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 * 월 2회 이상 연중 모니터링(1~2월, 7~12월)
 - * 미검출 시 격주 1회, 검출 시 주 1회, 기준초과 시 주 2회(3~6월)
- 패독 발생 상황 홈페이지(수과원) 게재 및 보도자료 제공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접수행	200	250	250	250	250	1,200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확대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2-1-1)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속 정비

① 식품안전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인성 사무관, T.043-719-1718)

1. 과제내용

□ 위기대응 매뉴얼 내실화·고도화 등 위기대응 체계 정비

- 식품테러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신규 제정 및 현행 매뉴얼 보완
- 관계부처·지자체 위기대응 긴급연락망 구축, 국제 심포지엄 추진

2. 추진계획

□ 식품 등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적 정비(6월)

- 미국 FDA 등 선진국 위기대응 시스템 조사 연구사업 추진(1~3월)
 -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 구분 시 합리적·현실적 기준 마련
- 소통메시지 보완 등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6월)
 - 매뉴얼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관·팀(반)별 대응수칙 마련
 - * 복잡한 설명식 위주의 매뉴얼을 핵심절차 위주의 행동수칙(SOP)으로 개선
- 「식품테러 위기대응 매뉴얼」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제정 추진(~8월)
 -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지속 추진
 - 국내 식품의 제조·가공과정 중 유해물질 투입 등 식품 테러에 대비한 대응 조치 및 절차 제시
 - * 식품테러 위기대응 매뉴얼 초안 마련('15.12)

□ 위기대응 체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정보 교류

○ ‘나라e음’ 활용, 위기대응 긴급연락체계 구축(2월)

* 식의약 안전 관계부처·지자체에 위해정보, 임무·역할 등 조치사항 신속 전파

○ 제3차 식의약 위기대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9월)

* 국내외 정부·학계·업계 등과 적극적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30	266	266	266	266	1,194
◦ 국고	소 계	130	266	266	266	266	1,194
	직접수행	130	266	266	266	266	1,194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4회 (4개)	3회 (4개)	3회 (4개)	3회 (4개)

[2-1-2]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① 위기대응 역량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인성 사무관, T.043-719-1718)

1. 과제내용

식약처·지자체·산업체 대상 위기대응 교육·훈련 강화

- 본부·지방청·지자체 위기대응 실무자 대상 참여형 교육·훈련 실시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및 산업체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2. 추진계획

식품 관련 실무자 대상 실습·참여형 위기대응 교육·훈련 실시

- 'e-러닝' 콘텐츠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학습 과정 등재(2월)
 - * 식의약 분야 위기대응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e-러닝) 콘텐츠 개발('15.12)
- 식약처·지자체 공무원 대상 실습·토론 중심의 참여형 교육 실시(4월)
- 실제상황을 가정한 소규모 실무자급 반복훈련 실시(8월)
 - 관련부서 실무자급 대상 반복연습을 통한 위기 시 대응능력 제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체 역량강화

- 식약처·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5월)
 - 신속 대응으로 위기사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식품분야 산업체 대상 위기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1월)
 - 국민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체 위기관리 역량강화 지원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30	165	165	165	165	790
° 국고	소 계	130	165	165	165	165	790
	직접수행	130	165	165	165	165	79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모의훈련 횟수(회)	1회	2회	3회	3회

- * 성과지표 변경사유 : (당초) 위기대응 교육 이수자 ⇒ (변경) 모의훈련 횟수
- 강의식 집합교육은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어, '16년부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이를 새로운 성과지표로 선정
 - 기존의 본부·지방청·지자체 대상 실무자금 교육은 지속 실시 예정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2-2-1]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이우영 연구관, T.043-719-235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문귀임T.043-719-4503)

1. 과제내용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 및 알레르기 검증을 통한 안전성 재확인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 및 개선

2. 추진계획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확인 등 사전안전관리 강화
 - 승인 후 10년 경과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 실시(연중)
 -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유래 발현 단백질 4종에 대한 알레르기 안전성 검증(12월)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전문 심사관 운영(7월~)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콩 등 15건) 및 양성대조물질 개발(연중)
 - 안전성 심사중인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등에 대한 정성, 정량시험법 확립
 -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등에 대한 양성대조물질 개발
 - 미승인 유전자변형 쌀 시험법 개선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입식품안전관리, 식품 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 지원(수입대체경비), 식품등 안전관리(R&D)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954	995	1,060	1,092	1,125	5,226
° 국고	소 계	954	995	1,060	1,092	1,125	5,226
	직접수행	954	995	1,060	1,092	1,125	5,226
	보조·출연	-	-	-	-	-	-
	용 자	-	-	-	-	-	-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GMO 발현 단백질 알레르기 검증	4	4	4	3

[2-2-1]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②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김광수 사무관, T.043-719-2158)

1. 과제내용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표시제도 개선

- 「GMO표시제도검토협약체」 운영 등을 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2. 추진계획

□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지속)

- 'GMO 표시제도 검토 협약체' 지속 운영(연중)
-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2회)

□ GMO 원료 사용 식품 표시대상 확대를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10월)

-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남아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 추진

* (종전) 원재료 함량이 5순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만 유전자 변형 표시

** 식품위생법 개정('16.1월) → 하위규정 마련(10월) → 시행('17.1월)

□ 유전자변형식품 및 농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지속)

- GMO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연중)

* 전국 일제점검(6개 지방청, 5월), 일상적 지도점검(지자체, 지방청, 연중)

-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표시 사후관리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1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입식품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합 계		216	223	230	237	906
° 국고	소 계	216	223	230	237	906
	직접수행	216	223	230	237	906
	보조·출연	-	-	-	-	-
	용 자	-	-	-	-	-

[2-2-1]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③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정형욱 연구관, T.043-719-2352)

1. 과제내용

-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확대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로 안심인식 공감대 확산

2. 추진계획

-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로 소비자 인식 개선
 - 「GMO 바로알기」 소비자, 대학생 대상 교육 강화(연중)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서포터즈' 구성·운영(4월~)
 - 일반인 눈높이에 적합한 유전자변형식품 교육자료 마련·배포(6월)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반기별)
 - SNS(페이스북, 트위터) 활용 정보 제공(연중) 및 이벤트 실시(10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입식품 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2	75	150	200	300	797
◦ 국고	소 계	72	75	150	200	300	797
	직접수행	72	75	150	200	300	797
	보조·출연	-	-	-	-	-	-
	용 자	-	-	-	-	-	-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소비자 대상 교육 횟수	51	55	100	100

[2-2-2] 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①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오현숙 연구관, T.043-719-450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정형욱 연구관, T.043-719-2352)

1. 과제내용

□ 나노기술응용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2. 추진계획

□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자료 확보

- 식이섭취에 따른 직접적 체내흡수율 평가기법 확립 및 SOP화(12월)
 - * 장관 시료주입 실시간 흡수율 측정법(Intestinal In Situ Single Perfusion)
- 유통 중이거나 향후 유통 가능성이 높은 나노기술응용식품에 대한 체내흡수율 정보 확보(지속)
 - 나노분말화(녹차) 및 나노캡슐화(비타민 E) 식품에 대한 체내흡수율 평가
→ 나노화 전·후의 흡수율 차이에 따른 섭취권장량 등 재평가
- 나노기술을 이용한 식품의 안전성 평가 방법 마련(12월)
 - *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등 안전성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제시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등안전관리(R&D)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00	220	220	220	220	1,180
◦ 국고	소 계	300	220	220	220	220	1,180
	직접수행	300	220	220	220	220	1,180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시험분석법 마련 건수	2	2	2	2

[2-2-3]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이진하 연구관, T.043-719-4452)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박규나 사무관, T.043-719-3220)

1. 과제내용

□ 기후변화 적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추진계획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패독 등 위해인자의 발생 예측 모델 개발(11월)

□ 기후변화 대비 농축수산물 종합대책 마련(8월)

- 품목별, 위해요인별, 계절별, 지역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 * 온난화 현상 심화에 따른 적정 유통온도 기준 개선, 기후변화 취약식품 관리강화 등
- 정부기관간 협의체 활용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 협력체계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단계 사용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농약,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식품안전기술 및 신속검출법 활용

- 방충 포장기술, CO₂ 저감화를 위한 대체 살균 기술, 위해인자 신속 검출법 등의 적용범위 설정(10월)
- 제조·유통·가공 단계, 접객업소 위생관리 방안 활용성 제고 방법 검토(11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등안전관리(R&D)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280	250	500	700	1,000	2,730
° 국고	소 계	280	250	500	700	1,000	2,730
	직접수행	280	250	500	700	1,000	2,730
	보조·출연	-	-	-	-	-	-
	용 자	-	-	-	-	-	-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기후변화 적응 식품안전 예측 시스템 구축	1	1	-	-
기후변화 관련 식품안전관리 DB건수(백만건)	1	1	1	1

2-3. 국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

① 대국민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박남수 사무관 T.043-719-2552)

식품소비안전과 전대훈 연구관, T.043-719-1904)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신용주 사무관, T.043-719-1904)

1. 과제내용

□ 국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로 식품안전체감도 향상

- 찾아가는 대면교육으로 식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필요정보 제공
- 미래 스마트소비자 양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
- 식의약 정책공조를 위한 단체, 학계, 관계부처 등과 소통채널 운영

□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및 위생점검 참여제 확대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맞춤형 교육 실시

□ 먹을거리 안전문화 캠페인 등 실시

2. 추진계획

□ 식의약 안전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 일상생활에서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확대·운영(연중)
- 미래 진로탐색 기회 및 권역별 소통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연중)

- 식약처(평가원·지방청) 및 산하 공공기관(6곳) 협업으로 자유학기제 중학생 대상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16개) 운영

·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등 10개, (공공기관*) 식품 HACCP 바로알기 등 6개 체험 프로그램 실시

*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지방 교육지원청 및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권역별 (지방청·공공기관)로 운영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

□ 국민 필요정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 국민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양방향 채널 ‘국민소통단’ 운영(연중)
- 부처간 정책공유 및 이슈 발생 시 긴밀한 협업체계 유지를 위한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개최(2회)
-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 ‘소비자 포럼’ 개최(3회)
- 이해하기 쉬운 소통메시지 발굴을 위한 ‘소통 자문위원회’ 운영(2회)

□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및 위생점검 참여제

- 제도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실시
 - 지방청 및 지자체 공무원과의 간담회 실시(2월)
- 6개 지방청 및 16개 시·도별 소비자 참여 위생점검 실시(3~11월)
 - 지방청, 지자체별 참여계획 수립 및 위생점검 실시

□ 현장 중심의 실천형 위생교육 실시(연중)

- 현장에서 실천이 가능한 내용으로 알기 쉬운 교육교재 개발·보급
-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와 연계하여 단속과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 * 불량건고추, 계란, 젓갈, 뚝다방 등 영업자·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 먹을거리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연중)

- 범부처(식약처, 문체부, 경찰청 등) 협업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홍보
 - * KTX, 대형마트,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철도 등
- 국민참여형 홍보를 통해 사회적 붐업(Boom Up) 조성
 - 접근이 쉽고, 전파력이 높은 온라인 기획 홍보 및 1399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UCC 공모
 - *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페이스북 이벤트 및 정책공감도 여론조사 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위해예방관리운영,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불량식품 근절추진체계 운영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1,042	1,203	1,217	1,233	1,250	5,945	
° 국고	소 계	1,042	1,203	1,217	1,233	1,250	5,945
	직접수행	1,042	1,203	1,217	1,233	1,250	5,94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위해소통 회의 및 소비자 포럼	9회	10회	10회	10회
소비자위생점검 참여인원	1,394명	1,000명	1,000명	1,000명
교육 및 캠페인 참여인원	38,619명	25,000명	25,000명	25,000명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

② 소비자 정보 교류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백승하 사무관, T.044-201-2274)

1. 과제내용

고품질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의견교류 및 교육·홍보 확대

- 소비자단체 정기간담회·포럼 등을 통한 농식품 소비정책 전파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추진을 통한 합리적 소비자 육성

2. 추진계획

농사랑알리미(소비자교육 강사) 확대·육성* 및 알리미를 통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홍보 실시(연중)

* 목표(800명) : ('14년) 118명 → ('15) 194 → ('16) 250 → ('17) 250

소비자단체(소비자)와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소통채널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포럼 실시(연중)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농식품 소비정책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농특)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710	1,710	1,760	1,810	1,860	8,850
°국고	소 계	1,370	1,370	1,420	1,470	1,520	7,150
	직접수행	1,030	1,030	1,080	1,130	1,130	5,400
	보조·출연	340	340	340	340	340	1,700
	용 자						
°지방비		340	340	340	340	340	1,70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소비식생활 소비자 인식도(점)	70	71	72	73

* 지표변경사유: 3차 기본계획의 '16년 목표치(70점)를 '15년 기 달성하여 '16년~'18년 목표치를 3차 기본계획의 목표치보다 1점씩 상향 조정함

[2-3-1] 대국민 소통강화 및 소비자 참여확대

③ 수산물 위해정보 소통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종섭 사무관, T.044-200-5620)

1. 과제내용

수산식품의 위생·안전 관련 위해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 강화

- 수산물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안전관련 정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한 교육·홍보 실시로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

2. 추진계획

수산식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 등 강화

- 수산물리스크커뮤니케이션 추진계획('16.2)
 - 수산물 위해요소 언론매체 등을 통한 교육·홍보 지속 실시(연중)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수산물위생관리(리스크커뮤니케이션)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60	300	400	400	400	1,760
◦ 국고	민간보조	260	300	400	400	400	1,76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수산물 위생안전 교육 횟수	53	55	60	65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1회 교육을 해도 교육 인원 규모수에 따라 교육 참석자 인원수의 차이가 크므로 성과지표를 변경(참석자수 → 교육횟수)

[2-3-2] 식품 등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①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전대훈 연구관, T.043-719-2853)

1. 과제내용

□ 식품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강화

-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대국민 홍보 강화
- 식품등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사업

2. 추진계획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대국민 홍보

- 동영상 제작 및 TV 송출(7~8월)
- 영화관 상영 전 광고를 통한 홍보 동영상 광고(9~10월)

□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3월~12월)

- 식품등의 유용성 표시에 관한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사업

□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연중)

- 식품 알레르기 대상별 교육
 -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대상별(학동전기 어린이, 학동 후기 어린이, 학부모등) 전국 단위의 위탁 교육 실시
- * 식품알레르기 기본 개념, 원인 식품, 임상 증상 및 중증 식품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식품표시제 설명,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법 등 교육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알레르기 자율표시 추진
 -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 포스터 및 업체를 위한 메뉴판 표시방법 등 가이드라인 배포

□ 식품 표시 교육·홍보로 소비자 및 영업자와의 소통 강화(5월~)

- 식품표시(식품 알레르기 포함) 및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한 전국 지역 순회 교육·설명회
 - * 5개 지역권(서울·경기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판 제작·배포

□ 식품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연중)

- 식품등의 표시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표시제도 개선사항 도출
 - * 자문협의체 구성 : 식품제조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학회로 구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66	627	706	692	685	3,476
]° 국고	소 계	766	627	706	692	685	3,476
	직접수행	766	627	706	692	685	3,476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용건수	3건	3건	3건	3건

[2-3-3]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민동명 사무관, T.044-201-2276)

1. 과제내용

- 형량하한제 도입 등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강화 추진
- 취약 품목별·시기별 집중 단속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

2. 추진계획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처벌강화(형량하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6.6월)
- 취약 품목별·시기별 정기 및 특별단속 집중실시(연중)
 - 쌀, 쇠고기, 돼지고기, 양념류, 배추김치, 화훼류, 설, 휴가철 추석대비 등
- '16년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연중)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16.2월) 및 개정내용* 집중 홍보·교육** (연중)
 - * 표시대상 확대(음식점 품목 16 → 20개, 가공품 원료 2 → 3순위), 표시방법 개선(음식점 원산지표시판 크기 확대 및 게시위치 지정, 음식물 통신판매시 원산지 표시방법 명확화) 등
 - ** 관련단체 간담회, 영업자 소비자 교육, 홍보물 제작·배포, 언론 및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농산물 원산지관리(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5,275	15,702	15,702	15,702	15,702	78,083
° 국고	소 계	15,275	15,702	15,702	15,702	15,702	78,083
	직접수행	14,245	14,672	14,672	14,672	14,672	72,933
	보조·출연	1,030	1,030	1,030	1,030	1,030	5,15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6	96.7	96.8	96.9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개)	16	20	20	20

[2-3-3] 원산지표시 제도개선 및 단속 효율화

② 수산물 원산지제도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신재영 서기관, T.044-200-5447)

1. 과제내용

- 대외시장 개방에 따라 국산과 가격 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수산물 원산지 정보제공 확대 및 관리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거래 유도 및 유통질서 확립

2. 추진계획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6)
 - (내용) 통신중개판매업체 위반 사항 적발 시 위반정보 공개(제9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9조2)
 - 통신판매업체(G마켓, 홈쇼핑 등)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기관 홈페이지(우리부, 수품원 등)에 위반정보 공개* 추진(박민수 의원 법률 개정안에 포함)
 - * (현행) 판매업체 정보 공개 → (개선) 현행 + 통신판매업체 정보 공개
 -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3개월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향후계획
 - (현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민수 의원 대표 발의, '15.5)이 농해수위 계류 중
 - (추진일정) 19대 국회 종료시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 * 내부방침('16.6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16.7~9월), 규제심사 및 국회 제출('16.12월)
- 수산물 소비성수기 및 위해정보 발생 시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매달 실시하고, 단속 횟수를 늘려*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14) 6.1만개 → ('15) 6.7만개 → ('16) 7.5만개(목표)

** 명절성수기(2·9월), 여름휴가철(7월), 김장철(10월), 일본산 수산물(매월)

□ 원산지 색상형 표시판 확대

○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색상형 표시판 배부를 확대하여 원산지 표시 정착에 기여

* 색상형 표시판 보급 시장(누적) : ('15) 21개 → ('16) 25개

□ 해수부·농림부·각 지자체의 원산지 담당 부서와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협조 체계 강화

* 관계관 회의 개최('16.4월 예정) 시 원산지 표시 단속정보를 공유 및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 등을 논의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 원산지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접수행	3,403	3,403	3,403	3,403	3,403	17,01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표준표시판 도입시장 수	21	25	30	35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수	9	9	12	12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최초 계획수립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을 3품목 추가한 12개 품목으로 시행('15.6월)할 계획이었으나, 피규제자의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지연(중요규제로 분류) 등으로 인해 16년 2월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17년부터 의무시행 예정임. 또한 이해관계자인 외식업중앙회,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 2년 이상 단위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개정령이 의무시행 되는 17년을 기점으로 하여 2년후인 19년 대상품목 확대 추진 예정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 제도 개선

① 농산물 인증·표시제도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민동명 사무관, T.044-201-2276)

1. 과제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및 공통표지 홍보
- 포장 농산물의 권장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 마련

2. 추진계획

-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연중)
 - 온·오프라인 마켓 홍보, 대중매체 및 온라인홍보, 대량 소비자를 위한 설명형 홍보 등
- 포장 농산물의 권장 품질 표시 기준 및 방법 마련 법령개정 추진(12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처리 후 권장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 관련 규정 내용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 19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 미처리 시, 20대 국회 재입법 추진('16.12월 국회 제출)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870	868	868	868	868	4,342	
◦ 국고	소 계	870	868	868	868	868	4,342
	직접수행						
	보조·출연	870	868	868	868	868	4,342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종합인지도(%)	66.0	68.5	70.5	72.0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이상훈 사무관 , T.044-201-2437)

1. 과제내용

□ 무농약 인증 전환기간 폐지

- 무농약 인증을 받기 전 전환기간(1년) 동안 무농약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여야 하는 규정 폐지로 원활하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생산계획서 제출 간소화

-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생산계획서는 고령농업인 등이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심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 등 간소화
 - * 생산계획서 작성 내용들 중 일부는 인증심사원의 토양 등 조사·분석, 현장 심사, 경영 관련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추진계획

□ 무농약 인증을 위해 전환기간(1년) 요구조항 삭제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11 개정
 - * '16.5월 개정안 마련, 6월 입법예고, 8월 규제심사, 9월 법제심사, 10월 시행

□ 생산계획서 제출 간소화(농관원 고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간소화
 - 현행 10항목(40세항) 10쪽 분량을 5항목(17세항) 3쪽 분량으로 축소
 - * '16.6월 개정안 마련, 7월 관계기관 의견조회, 9월 규제·법제심사, 10월 시행

□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지속 추진

-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 미처리 시, 20대 국회 재입법 추진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소비자 만족도(%)	64.3	69	71	72

* 소비자 만족도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조사'

[2-3-4] 농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③ 수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담당자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이재영 사무관, T.044-200-5485)

1. 과제내용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품질인증·표시제도 개선

- 관련법*에 따라 정의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인증을 '우수수산물'로 통합을 추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식품산업진흥법(전통식품, 식품명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친환경수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

2. 추진계획

□ 관련 법 개정 추진

- (5월) 관련법 개정(안) 마련
- (6월~8월)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8월) 법제처 제출
- (9월) 국회 제출
- (12월) 공포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수산물품질인증 등록건수 및 증가율(%)	1,285 (23.2)	1,308 (1.8)	1,337 (2.0)	1,370 (2.5)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15년 수산물품질인증 등록건수가 1,285건으로 당초 목표 1,042건을 초과 달성하였기 때문에 목표치 재조정 필요, 다만 증가율은 변동 없음

2-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2-4-1]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① 시험검사능력 선진화 단계 진입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최명신 연구관, 박좌행 연구관 T.043-719-181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팀 조수열 연구관, T.043-719-5302)

1. 과제내용

□ 숙련도 평가프로그램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평가

-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숙련도 평가 추진
 - * 허위성적서 발급, 백수오 검사 등 시험·검사 결과 신뢰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양호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교육·홍보 실시하고 '주의',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재평가 실시
- 품질관리기준 운영 평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시험·검사기관 수준별 교육 실시 및 ISO 인증 컨설팅 제공

□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 FTA, TPP 등 국제교역 환경의 변화로 해외교역이 증가됨에 따라 시험·검사의 국내·외 분쟁사례 발생 가능성 증가
 - (국외) 멜라민 시험결과로 한국-중국 무역마찰('08), 중국-미국산 가공육 수입중단 무역마찰 심화('07)
 - (국내)중국산 닭꼬치 검사결과 논쟁('15), 가짜 백수오 사건시 검사결과 논쟁('15)
-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분쟁시 최종판결을 위한 국제기준(ISO/IEC 17025)에 적합한 실험실 육성 필요
- 분야별 대표항목 및 다빈도 부적합 항목으로 25개 우선추진 항목 선정하여 국제공인실험실(ISO 17025) 인정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2. 추진계획

□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

-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계획수립(2월)
 - * 전체 검사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용 시료 위탁 제조·관리
-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대상 숙련도 평가 안내 및 평가 실시
 - 시험·검사결과 정확도 유지 등 숙련도 평가 설명회 개최 및 평가용 시료 배포(2회: 6월, 9월), 숙련도 평가결과 보고(12월)

□ 품질관리기준 운영 평가 및 교육·기술지원

- 품질관리기준 평가표 개선 추진(고시)('16.2~)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 실시(연중)
- 품질관리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 (민간) '품질관리기준' 수준별(초급, 중급 과정 운영) 맞춤형 교육 (3~11월)
 - * 초급 : 품질관리기준의 이해, 품질관리기준 사례 연구
 - 중급 : 내부 숙련도 평가의 운영 방법, 측정불확도 추정 사례 실습 등
 - (평가자) '품질관리기준 평가의 눈높이 평준화'를 위한 교육(3월, 10월)
- 민간 시험·검사기관 대상 국제공인실험실 인증 컨설팅 지원(4월)
 -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 위탁

□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계획수립(2월)
 -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분쟁의 소지가 많은 항목 중심으로 4단계로 추진
 - * ('16) 1단계 7항목 → ('17) 2단계 7항목 → ('18) 3단계 7항목 → ('19) 4단계 4항목
- 국가표준실험실 근거마련(3월~)
 - (법)「식품의약품검사법」개정안 입법예고('15.7), 규제심사('16.3)
 - * 제13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신설하는 개정안 마련

- (예산)국가표준시험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 * 1항목당 구축에 179백만원 소요(구축 72백만원, 인정 57백만원, 운영 50백만원)
- 국제공인시험실(ISO 17025) 인정 추진(4~11월)
 - 시험실 현 단계 진단
 - * 품질관리기준과 ISO 17025 비교, 추가 준비사항 도출
 - ISO 17025에 적합한 문서체계 구비 : 메뉴얼-지침서-절차서
 - 내부 심사 및 보완 등을 통한 ISO 17025 인정 준비
 - * 위탁사업공고(3월), 사업자선정(4월), 추진(5~10월), 결과보고(12월)
- 시험실 역량강화(4~12월)
 - (교육)국제공인시험실(ISO 17025) 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유럽 등 국제 표준시험실 방문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시설·장비)시험법 개선 등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 밸리데이션 및 사후관리 우선 지원, 기구·초자에 대한 검·교정
 - (숙련도) FAPAS 등 국제숙련도기관 숙련도평가 주기적 참여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검사품질의 국제 동등성 확보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직접수행	717	1,417	1,000	1,100	1,200	5,434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숙련도평가 양호기관 비율(%)	82	92	92	92

(2-4-1)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② 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이현희 사무관, 박좌행 연구관 T.043-719-1803)

1. 과제내용

□ 민간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 정기 지도·점검 및 특별·기획 상시·불시 점검
- 시험·검사기관 기술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검사기관별, 분야별 검사 전과정(접수, 검사, 성적서) 등 실시간 모니터링
-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부실 시험검사기관 퇴출제도 도입

□ 시험·검사기관 지원 및 소통 기능 강화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시험·검사기관 양성을 위하여 시험·검사인력 및 대표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이해 제고 및 소통 강화

2. 추진계획

□ 민간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 「2016년 시험·검사기관 관리지침」 마련 및 통보(1월)
- 연간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시달 및 지방청 자체 점검 계획 수립(1월)
-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2월)
-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 설치(의무) 및 LIMS 사용 실태점검(2월)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6월)
- ‘참고용 검사’ 등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3월~)
- 2016년 시험·검사기관 점검 결과 종합 보고(12월)

□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소통 강화

- 시험·검사기관과의 간담회, 설명회 및 교육 실시
 - '16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 개최(1월)
 - * 법정·민간 시험·검사기관 대상 제도 개선 내역 등 정책 방향설명
 - 식품·의약품 분야별 간담회(대표자) 및 설명회(관계자) 실시(3~7월)
- 고충·애로사항 공유,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한 '시험·검사 발전협의체' 구성·운영(분기별)
-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관련 담당자 간 소통 및 교육(3월)
 - 지도·점검 사례공유 등 전문평가관 교육을 통하여 검사기관 지도 전문가 양성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와 협업체계 구축

- 시험·검사 중복지시 조정(시·도)을 위한 처내 업무조정회의 주관(2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 및 정보 교류 강화
 -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HPLC 등 첨단분석장비 보강(10억, 1월)
 - 업무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11월)
- 지도점검자 눈높이 향상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점검표준매뉴얼」 마련('16.6월)
 - * 주요내용 : 지도·점검 주안점, 지도·점검 프로세스, 감시 사례 공유 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실험실검사능력 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000	1,000	2,360	2,431	2,504	9,295
° 국고	소 계	1,000	1,000	2,360	2,431	2,504	9,295
	직접수행						
	보조·출연 용 자	1,000	1,000	2,360	2,431	2,504	9,295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2-4-2]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①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이동호 연구관, T: 043-719-2020
식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 T.043-719-2416
축산물위생안전과 김성일 사무관, T: 043-719-324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043-719-4503)

1. 과제내용

- 총회 등 23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에 대해 국제 논의 동향 사전 검토 및 국가 대응 방안 마련
- 국가 간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당국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2. 추진계획

□ Codex 국제규격 설정에 적극적 대응과 참여

- 국민 다소비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 시 우리나라 기준(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Codex 업무 적극 대응
- Codex 정보 공유 및 수출기업체 간 소통강화(연중)

□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식품안전 협력 채널 대응(연중)
-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한 위생기준 조화 추진(연중)
- 국가 간 양해각서 체계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협력 지원(연중)
- 중국 공무원 HACCP(6월)* 및 동남아 9개국 공무원 식품위생안전 교육(10월)**

* 질검총국 및 지방 검험검역국 식품담당자 15명, 15일 간 우리나라 HACCP 인증관리 제도 전수 교육

** 네팔(2), 동티모르(2), 라오스(2), 몽골(1), 방글라데시(1), 스리랑카(2), 캄보디아(2), 필리핀(2), 몰디브(2) 총 16명, 15일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우수성 전파

-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 위해평가 국제협력 지속
 -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 국제공동연구('16.4~6), 전문가 교육 파견(매년)
- 제외국 정부와 식품안전협력 약정 확대(연중)
 - 식품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식품안전에 관한 협력약정 체결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관리운영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98	98	98	98	98	490
° 국고	소 계	98	98	98	98	98	490
	직접수행	98	98	98	98	98	490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	'17	'18	'19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	5	5	5	5

[2-4-2]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② 한아세안 위생협력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박규나 사무관, T.043-719-3220)

1. 과제내용

- 아세안 식품 안전관리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우수성 소개 및 개도국 전파
 - * 한-ASEAN FTA협정 발효('07.6)에 따른 경제협력 일환으로 '08년부터 『축산물 위생분야 협력사업』 실시
- 참가국의 위생관리 제도 및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수출 희망기업 견학 및 홍보를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

2. 추진계획

- '16년 아시아 농축산물 안전관리 현지훈련 개최 계획 수립('16. 3월)
 - 개최일정, 프로그램 등 계획 수립(2월) 및 위탁사업 공고(3월)
 - 초청 대상 국가 서한 발송 및 참가자 추천 요청 등
- '16년 아시아 농축산물 안전관리 현지훈련 개최('16. 9월)
 - 농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와 토론회 및 영업장 견학 등

3. 예산사항

사업명 : 한아세안 위생협력(ODA) 사업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7	77	85	91	97	427
◦ 국고	소 계	77	77	85	91	97	427
	직접수행	77	77	85	91	97	427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2-4-3]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①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이동호 연구관, T.043-719-2020
축산물위생안전과 송성옥 서기관, T.043-719-3245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오운한 사무관 T.043-719-2459)

1. 과제내용

□ FTA 확대에 의한 무역자유화로 식품의 비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위생기준, 통관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져 식품수출의 장애요인 발생

○ 식품기준의 부조화, 통관절차의 상이함 등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 증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수출국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실사 강화 등 해외시설에 대한 실사 확대에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식품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제정에 따른 수출업체 실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가축 질병 및 축산물 위생 분야 평가 후 허용된 품목에 한해 수출이 가능

*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위생체계 구축 및 수출작업장 점검 관리 필요

2. 추진계획

□ 수출국 기준규격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연중)

○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출국 안전정보, 정책변화 등의 정보 제공

○ 제외국 할랄식품 인증 및 관리에 대한 정책동향 정보 제공

□ 수출 품목(김치, 삼계탕, 쇠고기 등)에 대한 유형별, 수준별 사전 위생·시설 점검 지원 및 외국 정부의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연중)

○ 수출업체 등록·사후관리를 위한 상대국의 현지실사 대응 및 사전지도

* (삼계탕, 유제품) 작업장 현지실사, 검증자료 제공 등 지원(對중국, 미국, EU)

** (對미국) 저산성식품, 주스,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하여 HACCP 수준의 실사지원

- 대미 수출업체 실사 대비 설명회 개최 및 실사 대응 자료제공
- 실사 대상업체 중 현장 수검 희망업체에 대하여 통역 등 지원(연중)

□ 수출업계와 소통강화를 통해 국가, 품목별 맞춤형 애로사항 해결

- 국가·품목별 수출위생지원 절차·지침 마련 및 업계 공유
 - * 유제품 중국 수출, 삼계탕 미국 수출, 쇠고기 홍콩 수출 등
- 수출업체 및 유관협회 등과 수출 간담회 및 설명회 실시(2회/년)
 - * 가금육제품, 유제품 등의 수출절차 관련 규정 및 업계 수출 애로사항 수렴

□ 축산물 수출작업장 상대국 정부 등록 지속 확대 및 수입허용요청 추진

- 신규 국가 및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상대국에 수입허용절차 진행요청
 - * (EU 삼계탕) 국가 잔류물질프로그램 등록자료 제출, 수출희망작업장 명단 제공, (미국 식육가공품) 삼계탕 외 닭죽, 너겟, 햄 등
- 대중국 유제품 신규 수출업체(품목) 등록 지속 추진(분기별)
 - * 우유, 발효유 등 수출품목 및 업체 등록 확대를 위해 중국정부와 지속적 협의 및 대응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축산식품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11	111	111	111	111	555
○ 국고	소 계	111	111	111	111	111	555
	직접수행	111	111	111	111	111	555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수출정보* 제공 건수	69	60	70	80

* 수출국의 법령, 기준규격, 표시 및 부적합 등에 관한 자료 제공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①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이호진 서기관 T.054-429-4132)

1. 과제내용

생산단계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실시로 부적합품 농산물의 유통 사전 차단

* 잔류농약(245성분 이상), 중금속(Pb, Cd), 곰팡이독소(아플리톡신 등 8종), 방사능(¹³¹I 등 2종)

중금속 등 오염우려지역 농경지 조사로 안전농산물 생산 환경 기반 조성

2. 추진계획

생산단계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37,000건) 추진계획 수립시행(1~12월)

○ 다소비·부적합 다발 품목(100품목) 위주로 잔류농약 조사 7,000건

○ 공동브랜드 계약농가 및 로컬푸드 등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 8,000건

○ 직불제·친환경 인증품 등 정책지원 대상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 9,300건

○ 학교급식 식자재·수출 농산물·인삼류에 대한 잔류농약조사 9,500건

○ 휴·폐금속 광산 주변 농경지 생산 농산물 대상 중금속 조사 3,000건

* 공단 인근, 쓰레기처리장, 고속도로 및 휴게소 주변 농산물 오염현황 실태조사 ('16~'17) 결과를 감안하여 중금속 안전성조사 조대대상지역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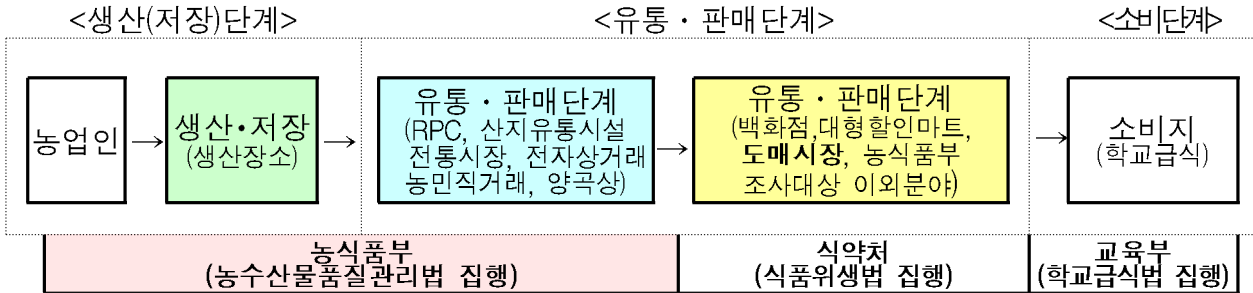
○ 생산농가 영농법인 등 생산하여 보관(저장)하는 농산물 곰팡이독소 조사 200건

○ 휴·폐금속 광산 및 광원 하류부 농경지 6,500건 중금속 조사

□ 생산과 밀접한 유통단계* 농산물 14,100건 안전성 조사(3~12월)

* 총리실에서 지정한 장소로써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APC), 재래시장, 양곡상, 직거래판매점, 농민·영농법인·생산자 단체가 직접·개설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

<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



- 급식 식재료 우수관리업체·공동브랜드·로컬푸드·친환경 등 인증품에 대한 잔류농약(13,600건) 및 곰팡이독소(500건) 조사

□ 조사분석 결과 공개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

-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정보에 대해 인터넷 실시간 공개*(4월~)

* 품목, 재배양식(일반/친환경), 생산자, 생산지, 유해물질, 분석결과 등을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내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www.safed.go.kr)에 공개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농산물 안전성조사(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2,268	2,268	2,268	2,268	2,268	9,072
○ 국고	소 계	2,268	2,268	2,268	2,268	9,072
	직접수행	2,268	2,268	2,268	2,268	9,072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생산단계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율(%)	1.62%	1.72	1.82	1.92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② 농산물 재배환경 안전관리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손병철 사무관 T.054-429-4135)

1. 과제내용

-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과 재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모니터링

2. 추진계획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3~12월)
 -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등 13,900건 잔류실태조사
 - 농지·용수·자재·농산물에 대해 항생물질, 병원성 미생물, 방사능 유기오염물질, 방사선 등 유해물질 3,500건 잔류실태조사
- ※ 품목별 평균 부적합률, 시·도별 인구비율 등 각종 통계를 감안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도매시장과 대형·중소형 마트를 중심으로 조사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농산물 안전성조사(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 국고	소 계	1,400	1,400	1,400	1,400	7,000
	직접수행	1,400	1,400	1,400	1,400	7,000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국가잔류조사 안전성 부적합률(%)	2.8	2.7	2.6	2.5

* 성과지표 변경사유: 현재 성과지표(실태조사 단성분 수)는 잔류농약 분석력에 대한 지표로 농산물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독소류 등 포함) 잔류실태 조사 과제에 적절하지 못해 국내산 농산물 안전성 개선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 수정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③ 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이호진 서기관 T.054-429-4132)

1. 과제내용

□ 국내 농산물 안전성 조사

- 국내 농산물 방사능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방사능측정소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

2. 추진계획

□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1~12월)

-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계획 수립(1월)
 - 조사물량 : 노지재배 채소류 위주로 500건
 - * '12년 이후 방사능 물질 검출 사례가 없어 '16년부터는 모니터링(일본 원전사고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되, 원전사고 등 위험요인 발생 시 조사물량 확대 운영
 - 조사기간 : 2 ~ 12월(약 10개월)
 - 조사지역 :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지방방사능측정소 15개소, 원전주변 4개소) 설치 지역 주변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농산물 안전성조사(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150	150	100	100	100	600	
○ 국고	소 계	150	150	100	100	100	600
	직접수행	150	150	100	100	100	600
	보조·출연						
	용 자						

4. 주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방사능조사 실적(건)	1,811	500	300	300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④ 가축사육환경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서재호 서기관, T.044-201-2336)

1. 과제내용

□ 한·미 FTA, 영연방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필요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2. 추진계획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가축사육환경 개선(2~12월)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도별 자금배정, 집행(연중)
 - 사업대상자 선정시, HACCP 지정 및 컨설팅 여부 반영 평가
- 축종별, 시도별 축사시설 신·개축, 시설개선 등 사업 추진(1~12월)
- 사업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 추진(3~11월)
 - 축종별 사업비 집행상황, 의무사항 준수여부 점검, 사업대상자 생산성 현황조사, 농가만족도 조사 등 실시
- '1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12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FTA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30,306	214,918	202,991	201,215	200,315	953,442
°국고	소 계	192,373	177,509	165,269	163,493	162,623	764,875
	직접수행						
	보조·출연	57,989	38,409	38,722	38,722	38,722	212,564
	융 자	96,392	101,691	88,825	87,049	86,179	363,744
°자부담		37,992	37,409	37,722	37,722	37,722	188,567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두)	18.2	18.3	18.4	18.4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⑤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장재홍 서기관, T. 044-201-2281)

1. 과제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식육·식용란)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로 국내 축산물 안전성 제고

2. 추진계획

□ '16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1월~12월)

- 식육 잔류물질 검사 : 143종 물질, 120천건 검사 계획
 - 전체 물량 중 규제검사 비율 조정(규제검사 '15년 28% → '16년 29%로 증가(1,000건))
-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 : 51종 물질, 6천건 검사 계획
- 미생물 검사 : 식육 2종(일반세균수 및 대장균수), 96천건, 식용란 3종(이물질, 변질·부패란, 살모넬라균) 8천건 검사 계획
 - 황색 포도상구균 및 살모넬라 등 16종의 식중독균에 대한 탐색 조사를 통해 4,350건 검사 계획

3. 예산사항

□ 도축검사운영(축발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20,404	24,912	24,912	24,912	24,912	120,052	
°국고	소 계	11,630	14,130	14,130	14,130	14,130	68,150
	직접수행	1,236	1,273	1,273	1,273	1,273	6,328
	보조·출연	10,394	12,857	12,857	12,857	12,857	61,822
°지방비	8,774	10,782	10,782	10,782	10,782	51,902	

* '16년부터 도축검사원운영(축발)과 축산물검사(농특)를 도축검사원운영(축발)으로 통합하고 사업명을 도축검사운영으로 변경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축산물 부적합지수(%)	0.23	0.21	0.20	0.20

* '15년도 성과지표인 농축산물 안전성 부적합률을 과제에 맞게 축산물 부적합지수로 변경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⑥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등 안전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백길태 사무관 T.043-719-3272)

1. 과제내용

□ 폐금속광산, 가축매몰지 등 인근 오염우려 지역에서 생산되는
위해 농산물 유통·판매 사전차단

- 부적합 위해 농산물 출하연기 및 폐기 등 조치

2. 추진계획

□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확대 강화 및 위해 농산물
유통 차단

-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및 농경지 등 중금속 오염실태조사(연중, 11,000건)
 - 폐금속광산(431개소) 주변 및 가축매몰지(477개소) 등 오염우려지역
생산 농산물 등
- 잔류농약 등 부적합이력 농산물 안전성조사(연중, 20,000건)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94개 품목 등
- 로컬푸드 등 직거래,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연중, 9,000건)
 - 로컬푸드매장(100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36개소) 농산물 등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과제: 해당사항 없음

[3-1-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⑦ 축산물 유통 전(前)단계 안전성 검사 지속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송성옥 서기관, T.043-719-3245)

1. 과제내용

- 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위해를 사전 차단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 연간 국내 축산물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시행
 - 축산물 안전성 검사방향 설정 및 결과 분석·평가

2. 추진계획

□ '15년 검사실적 분석 및 '16년 계획 수립 및 시행(1월)

- 생산단계 안전성검사 계획(농식품부)을 포함한 축산물 안전성검사 종합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시달
 - 전년 대비 축종별 도축장 수 및 도축두수를 감안하여 검사
- * 식육 중 미생물 검사 101,618건,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120,000건(규제검사 : '15년도 28,000건 → '16년도 29,000건), 식용란 미생물검사 7,960건, 식용란의 잔류물질검사 7,960건 등

□ 관계부처 간 상호협력을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

- 축산물안전성 조사·검사 협력을 위한 시도 워크숍 실시(12월)
 - '16년도 업무평가, '17년도 검사 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등 안전성 검사 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관계부처 실무자 간 실무 협의회 운영(반기1회)
 - 축산물 안전성 검사 규정 및 개선방안 등 논의
 - 분기별로 검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①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종섭 사무관, T.044-200-5620)

1. 과제내용

□ 식탁까지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어장에서부터 강화

- 유해물질 등에 따른 식품안전 사고 문제의 지속적 발생으로부터 선제적·예방적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 * ('11) 일본 원전사고 관련 방사능 → ('14) 양식 메기 말라카이트 그린
- 수산식품 안전관리 여건 등 환경변화에 효율적·적극적인 대응

2. 추진계획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1월)

- 다소비 품종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지속 강화(11,170건→11,900)
 - * (다소비 등) 갈치·고등어 등 중점검사(9,000건), 부적합 이력품종 연1회 이상 검사
 - * (방사능)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25개 품종, 850건 → 30개 품종, 1,200건)
 - * (패류독소) 진주담치 등 생산해역 97개 정점 검사(1,700건)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실태 지도·점검(6월)

□ 검사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개최(12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안전성조사,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527	1,527	5,896	6,120	6,344	21,414	
○ 수산물안전성조사	직접수행	327	327	496	520	544	2,214
○ 수산물안전검사	소계	1,200	1,200	5,400	5,600	5,800	19,200
체계구축(지특)	국고	600	600	2,700	2,800	2,900	9,600
	지방비	600	600	2,700	2,800	2,900	9,60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수산물 안전기준 적합율(%)	98.3	98.35	98.40	98.45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② 수산물 생산해역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경정 주무관, T.044-200-5618)

1. 과제내용

□ 어장에서부터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안전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육·해상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및 지정해역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조성

2. 추진계획

□ 패류 생산해역 수질, 병원성세균 등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71개소)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수행 대학교 선정 추진('16.2)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추진 상황 점검('16.9)
 - * 위생조사 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 보고('16.12)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적수행	2,144	2,210	2,690	2,690	2,690	12,424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③ 국내 생산 천일염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수정 사무관, T.044-200-5449)

1. 과제내용

천일염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토양 등의 위해요소 차단

- 천일염 생산해역 조사 등을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 및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효율적 생산체계 구축

- 낙후된 염전시설을 식품위생기준에 걸맞은 소재로 교체하여 고품질 천일염 생산 기반 마련

2. 추진계획

천일염산업 안전성조사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16.2~'16.3)

- *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함유여부 조사

염전시설 및 기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개선(연중)

- * 소금창고, 해주(海宙)의 지붕 등을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로 교체

천일염 품질검사 관련 법령기준안 마련 및 관련법령 개정(~'16.12)

천일염 인증관련 법령정비안 마련 및 개정작업(~'16.12)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천일염품질관리, 염전시설개선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계	3,872	1,276	1,571	1,914	2,257	10,890
◦ 천일염품질관리						
직접수행	961	747	1,000	1,200	1,400	5,308
소계	2,911	529	571	714	857	5,582
◦ 염전시설개선(용자)						
국고	2,038	370	400	500	600	3,908
자부담	873	159	171	214	257	1,674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생산환경 안전성 검증대상 염전 (개소)	80	84	88	92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천일염 생산환경 안전관리를 위해 10개 천일염 생산해역에 위치한 염전 일부를 대상으로 시설, 자재, 토양, 생산천일염 등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매년 조사대상 염전 수를 5%씩 증가시켜 안전관리 강화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④ 수산물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태환 사무관, T.044-200-5443)

1. 과제내용

- 위판장 시설현대화 등 위생시설 기반 확충 및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산지 수산물유통시설 위생관리 수준 제고
 - 위판장 시설개선 및 신축, 위생관리형 위판장 전환, 신규FPC 건립 등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
 - 산지 유통시설 위생관리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반영하여 위해 인자, 관리자와 작업자의 의무 등 위판장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2. 추진계획

- 위판장 및 도매시장 위생시설 현대화('16.12)
 - 산지위판장 시설 현대화 사업(위판장 시설개선 및 건립), 신규 산지 거점유통센터(FPC) 및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건립 추진
 -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위생관리시설 개선 추진
-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위생관리 현황 조사('16.10)
 - 위판장, 유통물류센터 등 산지유통시설 위생관리실태 조사
-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가이드라인) 마련('16.12)
 - 위생시설 및 관리기준, 위해요소 허용치, 관리자와 작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위생관리기준 설정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유통시설건립(위판장 시설개선 및 건립)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11,913	14,075	12,327	12,327	12,327	62,969
◦ 국고	4,765	5,630	4,931	4,931	4,931	25,188
◦ 지방비	3,574	4,222	3,698	3,698	3,698	18,890
◦ 자부담	3,574	4,223	3,698	3,698	3,698	18,891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수산물 계통출하율(%)	55.5	55.9	56.4	56.9

[3-1-2]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⑤ 수산물 안전성 조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윤재호 사무관 T.043-719-3273)

1. 과제내용

□ 국내 생산·유통되는 오염우려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강화로 유해 수산물의 유통판매 사전 차단

-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 부적합 빈발 등 특별관리 및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2. 추진계획

□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연중)

- 굴, 바지락, 진주담치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안전관리(3~6월)
- 여름·가을철 수산물(붕장어, 전어, 꽃게 등) 비브리오패혈증, 중금속 등 안전관리(6월~10월)
- 생식용 굴, 김 등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안전관리(11월~익년 2월)
-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 부적합 빈발 등 특별관리대상 및 위생관리취약 수산물 안전관리

- 넙치, 뱀장어 등 특별관리대상 16품목 및 조피볼락, 참돔 등 다소비 수산물 60품목의 항생물질,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3-1-3]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① 위생취약분야 선제적 지도·점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 사무관, T.043-719-2054
축산물위생안전과 김성일 사무관, T. 043-719-3242)

1. 과제내용

- **선택과 집중으로 식품안전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
 - 소비자 체감도가 큰 분야(다중이용시설, 위생취약분야) 집중 위생관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지도·점검의 효율화 도모
- **소비자 기만행위, 위생취약시기 부정축산물 특별점검**
 - 인터넷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절기 위생취약시기 특별점검 추진

2. 추진계획

- **시기별, 대상별 위생관리를 위한 선제적 지도·점검**
 - 설·추석 등 명절, 김장철 등 성수식품, 하절기 위생취약시설, 성탄절 다소비식품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전국 합동단속(연5회)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효율적 감시와 위해정보교류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연3회)
 - 산후조리원 및 노인요양원 등 위생 취약계층 이용 시설 중점점검(연2회)
 - 청소년 등이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햄버거, 피자 등) 점검(10월)
-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부정축산물 지도·점검**
 - 인터넷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등 중점단속(연2회)
 - 축산물 운반업 대상 식육의 비위생적 취급·운반, 보존 및 유통기준 미준수 행위 등 특별위생점검(6월)
 - 위생적인 계란 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3월)

- 식용 부산물 표시기준 적용 의무화 및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부산물 세척·포장 의무 규정 마련
 - 부산물 판매업자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표시의무 및 전용위생 용기 사용 등 의무부여
- 하절기 전국 축산물영업장 특별점검 및 취약제품 일제수거 실시(6~7월)
- 식육가공업·알가공업 위생상태 및 부정 원료알 사용여부 중점 점검(연4회)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및 수출부적합 제품 관리 강화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및 수출부적합 제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상시)

□ 위생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 최근 3년간('13~'15) 미점검 업체* 대상 위생 지도·점검 실시(상반기)

* 최근 미점검 업체 :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체 약 8,100여개소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1,485	1,485	1,485	1,485	1,485	7,425
○ 국고	소 계	1,082	1,082	1,082	1,082	1,082	5,410
	직접수행	679	679	679	679	679	3,395
	보조·출연	403	403	403	403	403	2,015
○ 지방비		403	403	403	403	403	2,01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재위반율(%)	11	10	8	7

* 재위반율(%) = (재적발업체수/적발업체수) × 100(%)

[3-1-3]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② 단순가공 농·수산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위생수준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백길태, 운재호 사무관 T.043-719-3272)

1. 과제내용

위생관리 취약분야 농수산물식품 안전관리 강화

* 곳감 등 농산물가공품, 마른멸치, 마른김, 과메기 등 수산물가공품

2. 추진계획

단순가공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 단순가공업 현황 실태조사(3월,4월) 및 지도·점검(연2회) 실시

○ 단순가공 농수산물 위생관리기준서 제작·배포(9월)

○ 단순가공 농수산물 업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유도(연중)

* 농협·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농수산물 단순가공업체를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수준)	'16	'17	'18
지도점검 업체 수	648개소	500개소	600개소	700개소

(3-1-4) 제조단계 이물 등 위생관리 강화

① 제조단계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 지원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임현진사무관, T.043-719-2052
식품관리총괄과 성준현연구관, T.043-719-2055)

1. 과제내용

- 이물 저감화를 위한 업계 지원을 통해 업계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
 - 이물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체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

2. 추진계획

-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협의체) 활성화 추진
 - 식품제조업체의 이물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멘토-멘티로 구성한 네트워크 확대 운영(지속)
 - 6개 지방청 중심으로 멘토-멘티를 선정하여 분기별 운영
 - 식품제조업체에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성과를 반영한 '이물 관리 우수사례집' 제작·보급(9월)
- 식품제조·가공 관련 동업자조합의 자율적 위생관리 지원 및 관리
 - 자율지도원에 식품위생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지속)
 - 자율지도원 운영·감시 매뉴얼 제작 보급(12월)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참여업체 수	109	150	160	160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①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 및 교육 강화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한상균 사무관, T. 063-238-0830)

1. 과제내용

□ 부정·불량 농약 유통점검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

- 부정·불량 농약 단속 및 교육 강화로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 확대
 - * 법적 근거: 농약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유통농약의 검사계획 수립, 품질 검사 수행)
- 농약의 안전사용 교육을 통한 농약의 오·남용 방지 효과 제고

2. 추진계획

□ 불법 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다각적 유통단속 체계 구축

- 양질의 농약 공급을 위한 품질 검사(320점/년간): 연중
 - 검사 내용 : 주성분, 물리성(수화성, 분말도, 유화성 등) 등 품질 확인
 - 결과 조치 : 불량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 부정·불량 농약 유통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시점검: 연중
 - 점검 내용 : 밀수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규정위반 여부 등
 - * 특별사법경찰권(11명), 명예지도원(141명) 활용 불법농약 유통 근절
 - 결과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 농약판매관리인(농협, 시판상, 농약업체) 안전사용 교육: 매년
- 농업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 매년 1~3월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홍보: 연중
 -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사용 기준준수 등 홍보: 신문기고, 팜플릿 등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수준)	'16	'17	'18
농약의 품질검사 건수	315	320	320	320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② 농약직권등록 및 직권그룹화 적용방안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중 사무관, T. 063-238-0824)

1. 과제내용

-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 등록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
 - 농약의 약효·약해, 작물잔류성, 그룹화 연구 등 시험 연구

2. 추진계획

- 2015년도 농약직권등록 시험결과 우수 약제 등록(4월)
 - 2015년도 농약직권등록 시험결과에 따른 농약 등록
 - * 직권등록 실적 : 79작물 852 적용병해충 대상농약 240품목 등록(누계)
- 2016년도 농약직권등록 시험 수행(1~12월)
 - 2016년도 농약직권등록시험 약제선정 설계협의회: 1월
 - 2016년 소면적농약 등 직권등록을 위한 시험 추진: 2~12월
 - 시험 결과 선발된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 추진: '17.4월
-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작물군별 약효·약해 등록기준 마련(9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소면적작물 농약 직권등록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000	3,000	3,000	3,000		12,000
°국고	소 계	3,000	3,000	3,000	3,000	12,000
	직접수행	3,000	3,000	3,000	3,000	12,00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농약 직권등록(품목)	49	50	50	50

[3-1-5] 농약 안전관리 강화

③ 농약 위해성 재평가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사무관, T. 063-238-0824)

1. 과제내용

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

-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준 설정
- 유효기간 만료('16) 농약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

2. 추진계획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연중)

- 농약 원제, 품목 및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500여건)
-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사용·취급제한기준 설정

유효기간 만료('16) 농약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12월)

- 평가대상 : 359품목
- 평가항목 : 인축독성·생태독성·작물 및 토양잔류성 등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농약 위해성 재평가 건수	91	359	104	168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정윤구 사무관 T: 031-467-4304)

1. 과제내용

□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실시

- 최신의 과학 수준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

□ 신약 등 재심사 실시

- 재심사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판 후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 재심사

2. 추진계획

□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5~12월)

: 설파제 및 아미노글리코시드계 항균제제, 생물학적제제(총 16제제 351품목)

- 2015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5월)
- 2017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안) 의견조회(7월)
- 2017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9월)
- 2018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제제 품목예시(12월)

□ 신약 등 재심사 실시(연중)

- '16년 재심사 품목: 생물학적 제제 등 38품목(예상)

- '16년 재심사 실시

* 품목수는 허가 취소 등으로 변경 가능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율*(%)	70	70	70	70
신약 등 재심사 실시율(%)	100	100	100	100

* 재평가 대상 품목 중 자진취하 및 수출전용 전환 평균 30% 고려하여 설정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② 우수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돈환 사무관 T: 031-467-4302)

1. 과제내용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GMP) 사후관리 지속 추진

- 제조 및 품질관리(GMP)에 대한 점검으로 동물용의약품 품질 향상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실시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보급

2. 추진계획

동물용의약품 수입업체 간담회 추진(5월)

- 자율점검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로 자율점검 홍보 및 참여 독려

제조 및 품질관리우수업체(GMP) 사후관리 추진(5~6월)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점검

- 사후관리 점검 계획 수립(5월)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24개소 사후관리 실시(6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실시(7~12월)

-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 실시(230개소, 7~9월)
- 자율점검 실시 우수업체 평가(11월) 및 시상식(12월)

3. 예산사항: 해당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율(%)	60	62	63	65

[3-1-6]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③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권문경 연구관, T.051-720-3040)

1. 과제내용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및 신약 등 재심사 실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신약 시판 후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 재심사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실사 및 수거·검정 실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지도 및 관리 체계 구축
 - 출하전 양식어류의 수산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식품 안전성 조사

2. 추진계획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제·개정
 - 차별화된 개념정립 마련으로 관련 제도 제·개정(16)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16)
 - 수산용 백신 재심사 실시
 - 수산용 항생·항균제 등 재평가 공고(16) 및 실시(17)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 수산용의약품 검색 모바일웹 개설
 - 어종별 의약품 사용기준을 위한 '수산용의약품 안전관리 연구'(16) 수행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수거·검정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산물위생관리(동물약품감시)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적수행	150	150	300	300	300	1,20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584	600	620	620
수거·검정횟수	77	85	87	87

- * 성과지표 변경 사유: 제조(수입)업체의 제품개발 물량에 따라 품목허가 물량이 변동됨
- *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 관한규정'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 감소(213톤 →145톤)로 신규·변경 제조품목 허가 물량 감소

[3-1-7] 사료안전관리 강화

① 사료 품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 성 사무관, T.044-201-2342)

1. 과제내용

-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검정
- 완전배합사료(TMR) 업체의 HACCP 지정 확대

2. 추진계획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검정 확대(연중)

- 연간 사료 검사·검정 계획 수립·시달(2월)
- 사료 제조·유통단계에서의 검사·검정 실시(연중)
- HACCP 지정업체 전체에 대한 정기심사 실시(연중)

* 대상 배합사료 및 TMR HACCP 지정업체

TMR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연중)

-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중 TMR 가공업체 지원 신규 지원대상 선정시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도 선정 대상에 포함 지원('16년 국고145억원) 하여 TMR HACCP 지정업체 확대

* TMR 업체 HACCP 지정(누계): ('14) 52개소 → ('15) 66 → ('16) 80 → ('18) 110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조사료기반시설 확충사업(축발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400	250	210	210	210	1,280	
◦ 국고	소 계	190	145	133	133	133	734
	직접수행						
	보조·출연	90	45	33	33	33	234
	용 자	100	100	100	100	100	500
◦ 지방비	90	45	33	33	33	234	
◦ 자부담	120	60	44	44	44	312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TMR 사료공장 HACCP지정(개소)	66	80	95	110

[3-1-7] 사료 안전관리 강화

② 친환경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품질관리 연구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료연구센터 한현섭 센터장, T.054-230-3600)

1. 과제내용

□ 고품질의 안전한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사료의 등록성분과 안전성 성분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

- 사료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매년 분기별 검사

2. 추진계획

□ 배합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사료성분 검정

- 연간 배합사료 검정 계획 수립(1월)
- 시·도별 분기별 검사의뢰 시료 등록성분 및 안전성 성분검정(2~12월)
- 배합사료 검정관련 보도자료 배포(1건)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고품질 배합사료 공급기반 구축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 국고	직접수행	200	200	200	200	200	1,00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사료검정 물량(횟수)	200	210	220	250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 ① 분석항목 증가 : '15년부터 분석 항목이 47항목에서 87항목으로 추가 변경되면서 분석 능력의 한계 도달
- ② 검정인력 부재 : 검정 전문 담당 인력이 없고, 연구사 1명이 검정 업무를 겸무하고 있어서 검정물량 확대가 매우 곤란함(현원 연구사 3명)
- ③ 분석공간의 협소 : 현재는 별도의 검정시설이 없고, 연구개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우 협소한 실정(863㎡)이고, 현재 신축 중인 연구개발동이 완공되는 2017년부터는 검정물량을 약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검정 물량을 확대해서 배합사료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정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3-1-8]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① 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

(담당자 : 환경부 수도정책과 김경록 사무관, T.044-201-7112)

1. 과제내용

인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 실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수질감시항목 지속 확대

2. 추진계획

수돗물 원·정수 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연중)

- 조사항목(63종) : 먹는물 중 우선관리대상물질(23종), 수질모니터링 후보항목(13종), 과불화물 및 의약품 등 신규 관심물질(27종)
- 조사대상 정수장(70개소) : 지역분포, 시설규모, 처리공법 고려
- 조사주기(3회/년) : 저수기, 갈수기, 풍수기 포함

신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 확대 검토(12월)

- 위해도, 검출농도 및 빈도에 따라 수질기준 또는 감시항목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국내 측정분석 수준과 처리기술을 고려하여 기준치 설정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먹는물 중 유해물질관리체계 구축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계	500	440	500	500	500	2,440	
◦ 국고	소계	500	440	500	500	500	2,440
	직접수행	500	440	500	500	500	2,440
	보조·출연						
	용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조사대상 정수장 수	70	70	70	70

[3-1-8]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②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감시

(담당자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고휘석 사무관, T.044-201-7183)

1. 과제내용

지하수오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사고 예방

- 갈수기 급수취약시설 대상으로 먹는물(지하수)의 병원성미생물 감시
-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감시망 상시 운영

2. 추진계획

갈수기 취약급수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소규모수도시설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3월~12월)

- (갈수기) 소규모수도시설(200~300톤/일) 중 노후시설 조사(50개소, '16.3~'16.5)
- (감시망) 소규모수도시설(100~200톤/일) 중 개량실적이 없는 노후시설 조사(50개소, '16.6~'16.11)

* 매년 약 50개씩 5년간 감시망 운영 계획

- 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시 권역별* 비상연락 및 신속한 사고대응 시스템 운영

* 전국 5개 권역을 과학원(본원) 및 4대강 물환경연구소 등 5개 기관이 분담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12월)

- 오염자료, 지하수 이용 및 수질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미생물학적 지하수 오염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60개소)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48	220	250	300	400	1,418
° 국고	소 계	248	220	250	300	400	1,418
	직접수행	248	220	250	300	400	1,418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감시지점 수	181	160	180	200

[3-1-8]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③ 먹는 샘물 수질 안전성 강화

(담당자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이광용 사무관, T.044-201-7188)

1. 과제내용

□ 먹는샘물 중 미량 유해물질 함량조사 등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2. 추진계획

□ 먹는샘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6월, 12월)

-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제품수 및 취수공별(원수) 조사(약 53개소)
- 지질기원 및 제조·보관과정에서 생성 우려 물질 등 총 30항목

□ 신규 먹는샘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 확대 검토(12월)

- 위해도, 검출농도 및 빈도, 주요 선진국의 수질기준 설정현황, 물질별 특성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질기준 또는 감시항목 확대 여부를 결정

* 현재 감시항목(2): 포름알데히드, 안티몬 → 검토중인 항목(3): 바륨, 니켈, 몰리브덴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먹는샘물 미량물질 함량조사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계	418	158	158	158	158	1,050	
°국고	소계	418	158	158	158	158	1,050
	직접수행	418	158	158	158	158	1,050

* '15년 : 우라늄검사장비 구입비용(270백만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먹는샘물 수질감시 항목수	3	2	4	4

*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사유: 우라늄 항목이 수질기준으로 추가되어 감시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항목수 하향 조정, '16년 미량물질 함량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감시항목 추가 검토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3-2-1)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식약처)

① 유통단계 가공식품 및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성준현 연구관, T.043-719-2055

축산물위생안전과 김성일 사무관, T. 043-719-3243)

1. 과제내용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민 다소비 가공식품 및 불량 축산식품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 건수 위주의 검사를 지양하고, 통계를 활용한 위해우려식품 집중 수거·검사

2. 추진계획

- 유통단계 가공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가공식품) 국민 다소비 가공식품,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 위해정보 동향 등 선택과 집중의 수거·검사 실시(62,200건)
 - (축산물) 조제유류 등 분기별 정기 특별검사 및 하절기 등 취약 축산물 집중 수거 검사(12,000건)
- 시기별·테마별 수거·검사 실시
 - 계절별 봄·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여름철 다소비 식품 위생점검(6-7월), 연말연시(12월) 등 지도·점검시 위생취약 식품 수거검사 실시
 - 유가공업 우유류(3월), 알가공업 알가공품(4,11월), 식육가공업 훈제 제품(5,10월) 등
 - * 훈제식육가공품 리스테리아 오염, 알가공품 및 우유류제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중점검사 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축산식품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2,883	3,388	3,444	3,500	3,556	16,771
° 국고	직접수행	2,883	3,388	3,444	3,500	3,556	16,771
	보조·출연	2,753	2,838	2,877	2,916	2,955	14,339
	용 자	130	550	567	584	601	2,432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	126,073	62,200	62,200	62,200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14,468	12,000	12,000	12,000

*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 사유: 일상적인 건수 위주의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부적합 이력, 소비 트렌드, 위해우려 항목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수거·검사 체계로 전환하여 성과 목표치 조정

[3-2-1] 유통 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② 농수산물식품 선제적 안전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백길태, 운재호 사무관 T.043-719-3278)

1. 과제내용

□ 신선 과일·채소류 및 수산물은 특성상 유통·소비시간이 짧아 통상적인 유통식품 수거·검사로는 위해 농수산물의 폐기 등 차단이 불가능함

○ 계절별, 지역특화 농수산물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 위해 농수산물의 유통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중 판매 前단계인 도매시장 등 신속 수거·검사체계 구축

*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현재 16개 현장검사소 설치·운영

2. 추진계획

□ 신속검사로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16개 현장검사소의 상시 신속 수거·검사 강화로 부적합품 현장폐기조치(연중)

*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신속검사(24,000건)

○ 현장검사소 미설치 시·도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 신속 수거·검사 강화(매2주마다 10건 이상)

○ 농수산물 주산지·품목별·계절별 안전관리(연중)

- 지역특화 품목 및 계절별 주요품목 선제적 안전관리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장염비브리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 수산물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및 예방 홍보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15	'16	'17	'18	'19	계
계	5,600	-	-	-	-	-
◦ 국고보조	2,800	-	-	-	-	-
◦ 지방비	2,800	-	-	-	-	-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농산물 수거검사 건수	55,154	56,000	57,000	58,000
수산물 수거검사 건수	8,842	9,000	9,500	10,000

[3-2-1]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③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남혜선 연구관, T.043-719-3274)

1. 과제내용

□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

-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의 검사계획을 수립(식약처)하고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및 시·도 협업을 통한 검사 추진

□ 방사능 검사결과 투명 정보 공개 및 교육·홍보 실시

- 방사능 검사결과 및 관련정보 공개 및 소비자(단체) 등 교육·홍보 강화로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제고

2. 추진계획

□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

- 부처협업을 통한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계획 수립 및 검사 추진
-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소비자 우려 식품 등 중점관리(연중)
 - * 중점관리대상 : 150 품목(국산 80, 수입산 70), 8,300건
 - * 식약처 4,500건, 농식품부 500건, 해수부 900건, 지자체 2,400건
-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연2회)

□ 방사능 검사결과 투명 정보 공개 및 교육·홍보

-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및 관련정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공개(연중)
- 식품 방사능 검사기관 방사능 검사법 전문 기술교육 훈련(연3회)
- 학교급식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홍보(6회 6월~11월)
- 소비자 맞춤형 교육용 동영상 제작·보급(6월~)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11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585	1,927	1,198	1,198	1,198	6,345
° 국고	소 계	1,585	1,927	1,198	1,198	1,198	6,345
	직접수행	1,585	1,927	1,198	1,198	1,198	6,345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건수	4,752건	4,500건	4,500건	4,500건

[3-2-2]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①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사무관, T.043-719-2054)

1. 과제내용

□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및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 피해사례 증가

2. 추진계획

□ 식약처,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단속

-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전담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홈쇼핑, 케이블 방송, 일간지 대상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 지방신문, 지역 케이블방송,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 대상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 식품통신판매업 신설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16.6)

□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대한노인회(시니어감시단), 소비자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사전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간담회 개최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예방 교육 및 홍보(4회)
-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위반사항 홈페이지 공개
 -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운영으로 불법 광고 내용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려 소비자 피해 예방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운영,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69	540	563	589	610	2,671
◦ 국고	직접수행	177	348	365	385	400	1,675
	보조·출연	192	192	198	204	210	996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	552	400	360	340

* 연간 위반 건수 : '11년 1,079건 '12년 754건 '13년 567건 '14년 505건 '15년 552건

[3-2-3] 위해식품 회수체계 강화

① 위해식품 회수제도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성준현 연구관, T.043-719-2055)

1. 과제내용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해식품 회수체계 강화
 - 회수대상 식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수체계 선진화를 통해 위해 발생식품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회수로 소비자 피해 예방

2. 추진계획

- 소비자 안전 및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
 - 회수대상 위해식품 온라인 판매여부 모니터링(연중)
 - * (사)온라인쇼핑협회에 회수식품 정보를 제공하여 위해식품 판매 차단
 - 위해식품 회수 실적 관련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 정보포털에 공개(2월)
- 회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지자체 및 검사기관 교육 강화(연3회)
 - 지자체 수거·검사 시 유통 초기제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 다빈도 부적합사례, 기준·규격 오적용 사례 방지 등 교육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가공식품 회수효율성 평가(%)	81.6	82	84	86

* 회수 효율성 평가기준(8개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의 비율(%)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①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오금순 연구관, T.043-719-2153)

1. 과제내용

-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강화
 - 국가·품목·유해물질 검출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
 - 국내·외 부적합항목을 검토하여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 선정
 -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을 무작위표본검사에 확대적용 및 개선 추진

2. 추진계획

-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1월) 및 반기별 계획 수립(1월, 7월)
 - 최근 3년간('13~'15) 수입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기준항목(국가 품목 중심) 설정, 부적합현황을 가중치 두어 선정
 - OPERA 분석결과(일반/주의/집중), '집중'에 대해서는 무작위표본 검사에 활용
 - 최초수입식품의 중점검사항목 선정(1월)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중점검사항목 선정(1월, 7월)
 - 최근 5년간('11~'15) 부적합 항목과 기준·규격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중심의 검사항목 선정
-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OPERA)' 운영
 - OPERA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과의 영업등록 정보 및 코드 연계(2월)

-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 개선(8월)
 - '16년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시 예측정확률 및 속도 개선
- 지방청 수입식품담당공무원 대상 시스템 운용 재교육(9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입식품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547	4,405	3,650	3,650	3,650	17,902
◦ 국고	소 계	2,547	4,405	3,650	3,650	3,650	17,902
	직접수행	2,547	4,405	3,650	3,650	3,650	17,902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무작위표본검사 부적합율 대비 「사전예측수입검사 시스템(OPERA)」 적용 검사 부적합률(%)	225%	236%	248%	260%

-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당초) 수입식품검사 부적합률 → (변경) 무작위표본검사 대비 사전예측수입검사 시스템 적용 검사 부적합률(%)
- 현재 성과지표는 단순히 전체 수입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를 산출하여 매년 '수입식품검사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본 과제는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등 각종 정보를 반영하여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부적합식품)을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제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을 적용한 검사 부적합률'로 변경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②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축수산물 정밀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강성필사무관, T.043-719-2223

송상길사무관, T.043-719-2230)

1. 과제내용

□ 수입 물량 증가 및 다변화에 따라 위해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전(前) 검사 강화

- 관능검사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사전 조치 기능 강화
-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과 니트로푸란 등 위해잔류물질 등의 정밀검사 실시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에 따른 수산물 정밀검사 강화

-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내용에 대한 통관단계의 신속한 검사 강화로 유해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
- 국가·품목·유해물질별 위해도를 분석하고 위해정도에 따른 정밀 검사 비율 차등 적용

2. 추진계획

□ 축산물 통관 단계에서 3단계 검사 철저(연중)

- (서류검사) 한글표시사항, 부적합 이력 및 기준규격 부합여부 확인
- (관능검사) 3년 이내 부적합 이력 제품, 정밀검사 대상 축산물
 - * 식육 신고수량의 1% 관능검사 실시, 300상자 이하인 경우 3상자 실시
-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성분 규격 검사
 - (대상) 최초 수입축산물, 유통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국내외 문제 축산물 등

□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내용에 대한 신속한 검사 강화로 위해 우려 축산물의 국내수입 차단(연중)**

- (정보입수) 국내외 위생정보 수집기관, 언론, 인터넷 등
- (정보분석) 수입실적 확인, 위해여부 및 조치사항 결정
- (긴급조치) 수입건별 연속 5회 정밀검사, 유통 중 제품 수거검사

□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정보검사(연중) 강화 및 부적합 빈발수산물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운영(반기별)**

- 국내외 유해물질 검출로 문제가 제기된 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 확대 등 수입 통관단계의 검사 강화

* 위해정보검사 : ('15) 15개 유해물질 → ('16) 말라카이트그린 등 17개 유해물질

-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부적합이 발생한 위해 우려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 ('16년 상반기) 6개국 18개 품목에 대해 매건 유해물질(14개) 정밀검사 실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대비 행정규칙 정비**

-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 및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16.2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수입축산물 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800	3,794	4,082	5,960	5,901	23,537
° 국고	소 계	3,800	3,794	4,082	5,960	5,901	23,537
	직접수행	3,800	3,794	4,082	5,960	5,901	23,537
	보조·출연						
	용 자						

□ 사업명(재원) : 수입수산물 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571	3,659	3,571	3,571	3,571	17,943
° 국고	소 계	3,571	3,659	3,571	3,571	3,571	17,943
	직접수행	3,571	3,659	3,571	3,571	3,571	17,943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수입축산물검사 부적합률(%)	0.22	0.29	0.28	0.27
수입수산물검사 부적합률(%)	0.11	0.26	0.26	0.24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③ 해외 원전사고에 의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오재준 사무관, T.043-719-2160)

검사실사과 강성필사무관, T.043-719-2223

검사실사과 송상길사무관, T.043-719-2230)

1. 과제내용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일본산 수입식품의 철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 관련 국가(44개국) 오염우려 품목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추가 실시

2. 추진계획

□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연중)

-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 * 태평양산 수산물(6개 어종 : 명태, 고등어, 가자미, 다랑어, 상어, 꽁치)은 주 2회, 러시아산(3개 어종 : 명태, 대구류, 가자미류)은 주 5회 검사

□ 체르노빌 원전 사고 관련 방사능 검사 추가 실시(연중)

- (가공식품) 최초 및 무작위 검사시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사 실시
 - * 5개 품목군 : 건조과실류, 견과류, 버섯류, 천연향신식물, 천연향식료
- (축산물) 러시아 등 32개국, 연간계획 100건 수준으로 품목 유형별 1.35~7.0% 수준으로 시스템 상에서 검사대상 자동 선정(연중)

□ 방사능 검사결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공개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연중)

- (후쿠시마 원전사고) 홈페이지 및 보도참고자료에 검사 및 검출 현황 공개
- (체르노빌 원전사고) 홈페이지 검출 현황 공개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방사능안전관리 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82	379	379	379	379	1,898	
◦ 국고	소 계	382	379	379	379	379	1,898
	직접수행	382	379	379	379	379	1,898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④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조태용연구관, T.043-719-2159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사무관, T.043-719-2054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이삼룡사무관, T.043-719-2497)

축산물위생안전과 김성일사무관, T.043-719-3243

검사실사과 강성필사무관, T.043-719-2223)

1. 과제내용

□ 해외 인터넷을 통해 국내 반입(해외직구)되는 식품 안전관리

-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의무화 품목 확대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설

* 국내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유해물질 함유제품 등 불법식품 유통차단

2. 추진계획

□ 축산물가공품(분유 등) 구매대행 수입신고 의무화 및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설(2월)

-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시스템 개선(3월)
- 수입식품특별법에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설을 통해 영업자로서 관리 대상화 교육 및 홍보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대상 간담회 실시(3월)

□ 관세청과 업무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확대추진

- '15년 특송화물 일부에 한정하여 시행한 시범사업을 국제항공 우편물로도 확대하여 차단 체계 실효성 강화

□ 해외 인터넷사이트 판매제품 수거검사(800건)

- 성기능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표방제품, 젤라틴캡슐 제품 등

□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모니터링·차단(연중)

- 허위·과대광고, 유해물질 함유제품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세청에 통관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건강기능식품 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8	55	70	70	70	313
° 국고	소 계	48	55	70	70	70	313
	직접수행	48	55	70	70	70	313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⑤ 수입물품검사강화로 불법식품류 반입차단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윤동주 사무관, T.042-481-7851)

1. 과제내용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분석·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성분 함유 부적합 식품에 대해 긴급통관보류 강화
- 수입물품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수입물품 검사강화로 불법 식품류 반입차단

2. 추진계획

- 중점감시 수입식품 확대 지정* 및 검사율 상향**
 - * 127개 품목 → 150개 품목, ** 15.5% → 16.0%
- 수입식품에 대한 식약처와의 협업 검사 확대(현행: 특송화물→우편물)
- 식품의약품안전청·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강화
 -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위해 식의약품 반입방지를 위해 EDA*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관심사 및 검사 기능 강화
 - * EDA(Event Driven Architecture) : 여러영역의 Data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선별기법으로 '모델규격'사항 등 비정형항목(text)에 대하여 적용 가능
- 위해성분 함유·성분미기재 식품 등에 대한 분석·검사강화 (연중)
-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불시 일제검사」 및 「집중 검사강화기간」 운영 등으로 불법물품 차단
 - 설, 대보름, 추석, 김장철 등 특정물품 과수요 시기에 맞추어 유관 기관 합동 해당물품 집중검사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수준)	'16	'17	'18
중점관리대상 수입식품검사율	15.7%	16.0%	16.5%	16.5%

[3-2-4]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⑥ 수입식품의 원산지 조작행위 차단

(담당자 : 관세청 기획심사팀 김보성사무관, T.042-481-7892)

1. 과제내용

□ 고위험·사회관심 품목에 원산지표시 단속역량 집중

단속구분	목 적
특별단속	▶ 설·추석 명절, 김장철 등 취약시기 민생안정을 위해 위반행위 사전 대응
수시기획단속	▶ 언론보도 등 수시 발생이슈에 적극 대응 ▶ 민원제보, 정보분석 결과 등 고위험 품목을 발굴하여 신속 대응
테마단속	▶ 단속 사각지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불법 수입식품 연중 집중단속

- 특정시기 및 품목에 국한되지 않는 권역별(본부세관·지원) 상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단속성과 제고
- 기관간 단속정보, 제재내역 등 원산지표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후 소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합동단속 강화
 - * 관세청 ↔ 식약처(통합식품안전정보망) ← 농관원 + 수품원 + 지자체
- 민간전문가(35개단체, 104명)와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
-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전시회, 전통시장 현수막,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등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 확대

- 불법·불량 수입먹거리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관의 역할이 관세국경에서 국내 유통단계까지 확대
- 국민건강과 직결된 수입식품류 등을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통관 후 불법 용도전환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

2. 추진계획

□ 설·추석·휴가철·김장철 등 특별단속 및 농수산물 테마단속 실시

□ 범정부 단속기관 및 민관 정보·인력교류를 통한 협업 활성화(상시)

-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개최(4월, 10월)
- 원산지표시 민관협의회 개최(6월)

□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연중)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 재조정(연1~2회)

□ 유통이력신고실태 집중 점검 실시('16년 중 4회)

- 명절(설날, 추석), 휴가철, 김장철 등 특정물품 과수요 시기에 맞추어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통이력신고실태 합동 점검기간 설정 운영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유통이력 대상품목수	31	32	33	33

3-3. 불량식품 근절

(3-3-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지속 강화

①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담당자 :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사무관 신용주, T.043-719-1904)

1. 과제내용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 불량식품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 추진활동의 효율성 제고

2. 추진계획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운영(연중)

- 불량식품 근절 범정부 고위급·실무급 협의체 회의 개최(4회)
 - * 부처별 업무, 단계별 위해요소에 대한 추진 구체화 방안 논의, 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실적 점검 등

불량식품 발생정보 수집 다각화와 부처 간 정보 공유

- 불량식품 단속 사례·민원 정보 등 분석결과, 불량식품 단속 실적 등 관계부처(29개) 간 공유
 - * 불량식품 정보 분석 보고서(매월),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계획(매주)
- 식품관련 수사사건 보도자료 배포 전 사전 협의(수시)
 - *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전 식약처와 사전 협의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불량식품근절추진체계 운영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167	206	212	218	225	1,028	
◦ 국고	소 계	167	206	212	218	225	1,028
	직접수행	167	206	212	218	225	1,028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협 수준)	'16	'17	'18
범정부 협의체 회의개최 건수	5건	4건	4건	4건

[3-3-2]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①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담당자 :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사무관 신용주, T.043-719-1904)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불량식품 발생원인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 단속활동 추진
- 불량식품 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2. 추진계획

□ 불량식품 뿌리뽑기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실시(년 4회)

- 주된 불량식품의 발생경로를 추적, 부처협업 계통감시·영업자 교육 등 선제적·집중관리를 통해 실질적 근절 추진
 - (대상 품목·일정) 안전관리 시급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 4종 선정

구분	관계부처	추진시기
○ 불량건고추 범정부 합동단속	농식품부, 경찰청, 지자체	8~10월
○ 불량 계란 범정부 합동단속(1차)	농식품부, 경찰청, 지자체	3월
○ 불량 계란 범정부 합동단속(2차)	농식품부, 경찰청, 지자체	8월 이후
○ 불량 젓갈 범정부 합동단속	해수부, 경찰청, 지자체, 관세청	5~7월
○ 찢다방 단속(1차)	경찰청, 지자체	4~5월
○ 찢다방 단속(2차)	경찰청, 지자체	10~11월

- (기획감시 추진방식 개선)

기 존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업소 단위 one-point 단속 ■ 불법행위 빈발 지점(농·어장, 수집상 등) 관리 미흡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자 위주의 교육·단속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발생 길목을 반복·계통 단속 ■ 관리대상별 교육 또는 단속으로 빈틈없는 감시망 구축 * 재배·양식단계 지도·교육 (농식품부·해수부) * 제도권 밖은 수사력 동원 단속(경찰청)

□ 불량식품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연중)

- 불량식품 발생 시발점(단계)과 발생원인을 포착하여 체계적 단속 실시 후, 기획 감시 결과를 토대로 대상별 발생원인, 해결방법 등을 검토·분석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상습·반복적 위반업체 관리 강화(년 2회)

- 상습·반복적 위반업체(3년간 2회 이상 위반)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점검 실시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불량식품근절추진체계 운영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971	1,011	1,041	1,072	1,104	5,199
° 국고	소 계	971	1,011	1,041	1,072	1,104	5,199
	직접수행	971	1,011	1,041	1,072	1,104	5,199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수	9건	6건	6건	6건
기획감시 건수	13건	12건	12건	12건

[3-3-3]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

① 불량식품 과학적 감시체계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최장덕 연구관, T.043-719-4455

첨가물포장과 이근영 연구관, T.043-719-4352

첨단분석팀 박성관 연구관, T.043-719-5303)

1. 과제내용

□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

- 동물성(축·수산물) 및 식물성 식품의 유전자를 탐색하고 원료의 가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법 개발
- 원료를 특징할 수 있는 지표물질 탐색 및 분석법 개발
- 국내 미지정 식품첨가물의 식품 중 분석법 개발

2. 추진계획

□ 부정·불량식품의 과학적 시험검사에 근거한 식품관리지원

-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및 검증(11월)
- 이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부정원료 진위 및 혼입여부 판별법 개발(11월)
 - * 속단 원료 판별법 개발 및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등 실태조사
- 불법 혼입 의약품 성분 및 식용불가 원료의 지표성분 분석법 개발(11월)
 - 불법 혼입 가능 당뇨병 치료제 20여종 동시분석법 개발
 -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 및 원료 중 지표성분 10종 분석법 개발
- 국내 미지정 첨가물의 식품 중 분석법 개발(11월)
 - 미지정 착색료(Brilliant black BN) 및 과산화수소 분석법 연구
 - 미지정 보존료(n-Heptyl p-hydroxybenoate) 및 차아브롬산수 분석법 연구
 - 첨가물의 천연유래 함유량 조사 및 Brominated vegetable oil 실태조사
- 시험분석 담당 공무원 및 관련업체 대상 교육 실시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 등 안전관리(R&D), 안전성평가개발연구(R&D)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090	2,870	2,460	2,556	2,661	13,637
° 국고	소 계	3,090	2,870	2,460	2,556	2,661	13,637
	직접수행	3,090	2,870	2,460	2,556	2,661	13,637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건수	45	50	50	50

[3-3-4]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

① 식품 위해사범 단속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박성준 사무관, T.043-719-130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팀 조수열 연구관, T.043-719-5302)

1. 과제내용

□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적발, 처벌 강화

- 지방청, 지차체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 등 협력을 통해 적발, 처벌의 시너지 효과 창출

2. 추진계획

□ 암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 허위·과대 광고 등 기획수사(연중)

- 암,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 효능·효과 표방 식품 단속
- 의약품 성분 또는 식품 사용불가 성분 함유 식품 단속

□ 식품위해사범 적발, 처벌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9월)

-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및 수사기법,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 적용사례 등 교육 실시

□ 범죄정보, 수사기법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5,10월)

- 인터폴 불량식품 단속 프로젝트(OPSON) 등에 참여, 위조·불량식품 단속사례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첨단 분석기법 논의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반복적 위해사범 기획수사 건수	24건	30건	32건	35건

[3-3-4] 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

② 식품위해사범 단속

(담당자 :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혁, T.02-2110-3544)

1. 과제내용

□ 위해식품 등 집중 단속 통한 부정식품 근절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수사력 집중
- 범죄동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

2. 추진계획

□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속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과 전국 '부정식품 합동단속반' 중심으로 부정식품사범 지속 단속('16. 연중)
- 식품특사경과 합동으로 식품 원재료 등 유통실태 집중점검('16. 4.)
- 범죄수익 환수 조치, 불량식품·원재료 몰수·폐기, 인허가 취소 행정 처분 및 국세청 탈세 통보 등 적극 실시('16. 연중)

□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

- 부정식품사범 근절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워크숍 개최('16. 6.)

□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16. 연중)

- 법무연수원, 검찰청 특사경 대상 직무교육 확대 및 지속 실시
- 특사경 기관 자체교육 지원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불량식품 관련 회의 개최실적	12회	14회	16회	16회
수사 전문화 교육실적	24회	26회	30회	30회

3-4. 식습관 반영 기준 · 규격 재평가

(3-4-1) 농약 · 중금속 · 미생물 · 첨가물 등 기준 · 규격 재평가

① 농약 · 첨가물 등 기준 · 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 T.043-719-2416,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 T.043-719-3852,
첨가물기준과 박성국 연구관, T.043-719-250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장문익 연구관, T.043-719-4204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043-719-4353)

1. 과제내용

□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수입식품에 대해 기준 설정 신청 시 잔류허용기준 설정
- (국내식품) 신규 등록(농산물 적용확대 포함)에 따른 농약 잔류 허용기준 설정 및 '00년 이전에 외국기준을 준용한 농약 20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국내 미등록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 주요 수입국에서 허가되어 수입식품 중 잔류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준설정 필요
- (국내식품)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 국내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설정 100% 완료 필요

□ 식품첨가물의 국내외 기준·규격 조사, 사용실태 조사, 섭취량 평가 등을 통한 품목별 기준·규격 재평가

- * '62년 식품첨가물 217품목 신규지정 이래로 모든 품목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성 및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 체계적 재평가 필요

2. 추진계획

□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수출국의 합법한 규정에 따라 사용한 농약들에 대해 독성, 잔류성 자료 등의 검토를 통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 살균제 마이클로뷰타닐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안) 행정예고(1, 7, 12월)
- 국내 농산물에 신규 사용·등록되는 농약에 대한 독성, 잔류성 자료 등의 검토를 통한 안전성 평가
 - * 신규 등록 농약 옥사티아피프롤린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안) 행정예고(1, 7, 12월)
- 과거 외국기준을 준용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 * 살충제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등 40종 농약 잔류허용기준(안) 행정예고(7, 12월)
 - * 재평가 계획 : '15(40종) → '16(40종) → '17(40종) → '18(40종) → '19(42종)

□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국내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중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6월)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티사졸 등 20종)에 대한 시험법 마련 및 기준(안) 행정예고(12월)
 - * 국내 판매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 100% 완료
- 주요 수입국에서 허가되어 수입식품 중 잔류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설정 우선순위 마련, 시험법 마련 및 기준(안) 행정예고(12월)
 - * 주요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설정 : 10종('16) → 10종('17) → 10종('18)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

- 대상품목별 안전관리 자료 및 사용현황 조사(2월~10월)
- 안전성 검토 및 섭취량 평가를 통한 대상품목 기준규격 재평가(11월)
-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준·규격 개정(안) 마련(12월)
 - * 대상품목 : 보존료 및 알루미늄함유 식품첨가물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식품 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 지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002	926	926	926	926	4,706
° 국고	소 계	1,002	926	926	926	926	4,706
	직접수행	1,002	926	926	926	926	4,706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개정 건수	40종	40종	40종	40종
동물용의약품 기준 개정 건수	20종	26종	30종	10종
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품목수	6	16	21	21

*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사유

(동물용의약품 기준 개정 건수) 당초 국내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29종을 목표로 하였으나,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사항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20종으로 목표를 조정하고 수입식품 중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10종을 포함하여 최종 목표를 30종으로 조정함

[3-4-1] 농약 · 오염물질 · 미생물 · 첨가물 등 기준 · 규격 재평가

② 오염물질 · 미생물 기준 · 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엄미옥, 박종석 연구관, T.043-719-2416,
축산물기준과 조병훈 연구관, T.043-719-385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김혜정 연구관, T.043-719-4252
미생물과 김순한 연구관, T.043-719-4303)

1. 과제내용

□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 환경오염, 기후변화,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행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 식품위생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관련 법적근거 마련

□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 미생물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적 개념의 기준·규격(시료수 및 허용치) 도입에 필요한 식품·축산물 유형별 합리적·과학적 재평가

* 미생물 특성상 오염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시료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함

2. 추진계획

□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 곰팡이독소 8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12월)

* ('15) 중금속 6종 → ('16) 곰팡이독소 8종 → ('17) 다이옥신, PCBs

- 수산물 등에 대한 중금속 6종 총식이조사(12월)

- 식품 중 곰팡이독소(8종), 벤조피렌(4종), 3-MCPD, 다이옥신, PCBs 오염도 조사(12월)

□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 미생물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8월)

- 젓갈 등 70개 식품유형 및 수산물의 위생지표균 73개 규격 및 식중독균 9개 규격
- 유크림류 등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38건 규격 개정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2,900	3,389	3,389	3,389	3,389	16,456	
° 국고	소 계	2,900	3,389	3,389	3,389	3,389	16,456
	직접수행	2,900	3,389	3,389	3,389	3,389	16,456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기준·규격 재평가(중금속 등)	중금속 6종	곰팡이독소 8종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위생지표균 규격 제·개정 건수	125	77	-	-
식중독균 규격 제·개정 건수	19	9	5	5

*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사유

- (위생지표균) 당초 총 202건을 3개년('15년 103건, '16년 89건, '17년 10건)에 걸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15년에 125건을 완료하여 '16~'17년에 추진할 22건을 앞당겨 개정하였기 때문에 '16년에는 남은 77건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 조정
- (식중독균) 당초 계획된 25건 중 9건은 '16년에 제·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15년에 사전 유통식품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위해평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16년 이후 지속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

[3-4-2]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①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최용훈사무관, T.043-719-2502,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043-719-4353)

1. 과제내용

기구·용기·포장 이행가능 물질에 대한 사용실태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성 평가 및 기준·규격 적정성 재평가

2. 추진계획

기구·용기·포장 유래 인쇄잉크성분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 국내 유통 기구·용기·포장에서 유래되는 인쇄잉크성분 모니터링 조사(10월)

* 대상 인쇄잉크성분 : 톨루엔, 벤조페논, 아민류(유사물질 포함)

○ 모니터링 결과, 기존의 평가방법 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11월)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 인쇄잉크성분 유래물질의 노출량이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기준·규격 적정성 등 평가(12월)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90	190	190	190	190	950
◦ 국고	소 계	190	190	190	190	190	950
	직접수행	190	190	190	190	190	950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원료유래 이행물질(중)	2	3	2	2

[3-4-3] 인체모니터링 기반 통합 위해평가

① 유해물질 노출 수준 확인 및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043-719-4505)

1. 과제내용

□ 인체 중심의 통합위해평가 기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 유해물질의 인체노출량 산출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체바이오 모니터링에 근거한 통합위해평가 수행

2. 추진계획

□ 인체바이오모니터링 기반 통합위해평가 수행

- 국내 인체바이오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17~21년) 로드맵 마련(~6월)
- 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한 우리 국민의 유해물질 노출평가 수행(~12월)
 - 인체 시료(혈액, 소변 등) 중 유해물질(환경성페놀류 등) 분석법 표준화 및 모니터링 수행
 - 주요 유해물질 4개군에 대한 외적 노출량 산출 기법(PBPK²⁾) 마련
 - * 과불화합물, PBDEs, 환경성 페놀류, 프탈레이트류
- 유해물질 모니터링 자료 통합관리시스템(MIMS/MAP³⁾) 운영(상시)
 - 식품 중 잔류농약 등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확보 및 식이섭취량,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노출현황 등 정보 제공
- 유해물질 다매체·다경로 노출 고려 복합노출 위해평가기법 확립(~12월)
 - 국내외 사례연구 조사·분석을 통한 대상물질 우선순위 결정
 - 선정된 물질의 사례 적용을 통한 MIMS/MAP자료 활용 복합노출 위해평가 수행 → 복합노출 위해평가기법 지침서 개정

2)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 Modelling

3) 유해물질통합관리시스템: Monitor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Monitoring Data Assessment Program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12월)
 - 아황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20종 및 PCBs 등 유해물질 3종에 대한 인체노출안전기준 (재)평가

* 후보물질 선정, 평가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산·학·연 등 전문가 회의(인체노출안전기준위원회) 운영(3회)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등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192	800	900	1,000	1,200	5,092
° 국고	소 계	1,192	800	900	1,000	1,200	5,092
	직접수행	1,192	800	900	1,000	1,200	5,092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정책제안 건수	45	30	35	37
가이드라인 제안 및 시험법마련	18	8	10	12

[3-4-4]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연구

①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공전 간 조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김신희 연구관, T.043-719-4252

미생물과 김순한 연구관 T.043-719-4303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043-719-4353)

1. 과제내용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확립 및 개선

- 미생물 유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미생물 시험법 개선
- 유해물질 첨가, 혼입, 오염 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기술 개발
- 기준규격 관리 및 사전예방적 차단을 위한 식품 중 식품첨가물 분석법 개발
-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기구·용기·포장 원료물질 분석법 개발
- 수입·유통 전(全)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잔류농약 시험법 개발
-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해오염물질 시험법 개발

2. 추진계획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식품공전 오염물질 시험법 개선(12월)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해양독소, 자연독소, 중금속 시험법 마련(12월)

- 수산물(패류, 피낭류) 중 마비성패독 기기분석 시험법 마련(12월)
- 식품 중 아트로핀 및 스코폴라민 시험법(12월)
- 해조류 및 과일음료류 중 무기비소 시험법 마련(12월)

□ 공인 미생물 시험법 개선

- 위생지표세균 시험법 개선 및 개정안 마련(12월)

□ 최신 분석기술을 적용한 식중독균 신속검출법 개선

-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개정(10월)
 - * 여시니아 슈도튜버클로시스, 톡소포자충(*Toxoplasma gondii*)
- 식중독균 신속 검출법 개선(12월)

□ 식품 중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중 이행물질 분석법 개발(12월)

- * 식품 중 식품첨가물(안정제) 분석법 마련('16.12)
-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중 자외선흡수제 분석법 마련('16.12)

□ 잔류농약 신속 스크리닝(다중농약다성분) 시험법 450종 확립(12월)

- * ('14) 343종 → ('15) 400종 → ('16) 450종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품등 안전관리(R&D)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958	1,420	1,000	1,200	1,200	5,778
° 국고	소 계	958	1,420	1,000	1,200	1,200	5,778
	직접수행	958	1,420	1,000	1,200	1,200	5,778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시험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건)	120	58	10	10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본 과제에 포함되어 있던 ①미생물 및 오염물질, 기구용기포장 이행물질, ②잔류농약, ③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선 중 ②, ③ 과제내용 조정에 따른 실적 감소분을 목표치에 반영하여 조정

- ② 잔류농약 신속스크리닝 시험법은 '16년 목표달성으로 종료예정
- ③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등은 [2-2-1-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과제로 옮겨 추진

4. 건강한 식생활 환경확충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4-1-1]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식품 관리

①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이해영 연구관, T.043-719-2259)

1. 과제내용

□ 식품섭취가이드 등 개인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 가공육 및 붉은 고기 섭취량이 자동 계산되는 스마트폰 앱 개발
- 임산부·수유부에 맞는 특화된 식품영양정보 제공
- 칼슘 등 영양 밸런스를 위한 올바른 식품섭취가이드 마련

2. 추진계획

□ 칼로리 코디 기능 개선을 통한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증대

- 개인의 식사 내역을 입력하면 가공육 및 붉은 고기 섭취량이 자동 계산되는 스마트폰 앱 개발(12월), 학회·협회 등을 통해 홍보(12월)

□ 임산부·수유부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 임산부·수유부의 특성(건강, 영양요구량, 식습관 등) 및 관심·요구 사항 등에 맞는 특화된 식품영양정보 개발·제공(6월~)
 - * 금기·권장 식품, 철분·엽산 보충제 섭취요령·주의사항, 질환을 가진 경우 식품선택 요령, 임신 주기(초·중·말기)별 권장량 및 식생활 가이드 등
- 예비맘, 건강한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식생활 실천가이드 보급(9월)

□ 「부족은 늘리고, 과잉은 줄이고!」 영양 밸런스 사업 추진

- 칼슘 등 한국인 결핍 영양성분에 대한 「올바른 식품섭취 가이드」 개발·제공(10월)
 - * 금원식품, 보충제 섭취요령, 영양성분 간 또는 의약품 등과 상호작용 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국민영양 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50	190	200	230	270	1,140
° 국고	소 계	250	190	200	230	270	1,140
	직접수행	250	190	200	230	270	1,140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영양프로그램(스마트뉴트리코 디, PerNIS)	-	개발	개발	개발

[4-1-1]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환자용 영양식품 관리

②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개발·보급 기반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이해영 연구관, T.043-719-2259)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이강봉 연구관, T.043-719-2414)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김동규 연구관, T.043-719-2504)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전대훈 연구관, T.043-719-2853)

1. 과제내용

□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개발 및 보급기반 마련

-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 유형 확대, 첨가물 사용기준 개선,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추진계획

□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유형 확대 및 첨가물 사용기준 개선

-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 유형 고시('16.5월)
- 첨가물 사용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행정예고('16.12월)

□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 현 법령체계에서 질환별 특성에 맞게 섭취대상, 섭취용도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작·배포('16.6)

□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개발 지원 및 섭취가이드 마련

- 영양성분 가감이 필요한 특수질환자의 식품선택을 돕도록 영양 성분 강조 표시기준 마련('16.6월)
 -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를 위한 쌀밥 등에 '저단백' 표시(현행은 표시불가)
- 저작·연하곤란 노인의 식품 섭취가이드 개발·제공('16.12월)
 - * 환자가 아닌 노인도 섭취할 수 있는 의료용도식품 등에 대한 섭취요령 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국민영양 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50	150	500	600	700	2,200
° 국고	소 계	250	150	500	600	700	2,200
	직접수행	250	150	500	600	700	2,200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의료용도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	마련	보급	보급 확대

* 성과지표 변경사유

- (당초) 환자용 영양식품 가이드라인 개발 건수 ⇒ (변경) 의료용도식품 표시가이드라인마련
 - 규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정 재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환자용영양식품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이 없어짐
 - 따라서, 현 법령체계에서 질환별 특성에 맞게 섭취대상, 섭취용도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포지티브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과제, '16.2.17)

[4-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

(담당자 :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황선순 사무관, T.043-719-2310)

1. 과제내용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급식소 및 원장이 조리원을 겸하는 가정어린이집(20명 이하)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및 내실화

2. 추진계획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연중)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규모 확대를 통하여 20명 이하의 어린이집 등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위생이 취약한 가정어린이집(20명 이하)의 지원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 가정어린이집 지원율(%) : ('15) 6,300개소(27%) → ('16) 10,000개소(43%)
 - * 센터 설치 및 어린이 수혜율(%) : ('15) 190개소(50%) → ('16) 193개소(55%)
- 미설치 지역 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배포(4월)
-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추진
 - * 시·도별 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 및 가정어린이집 지원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안전관리 상향 표준화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2월~)
 - 질 높은 수준의 식단 제공을 위한 '식단 작성 프로그램' 개발(12월)
 -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표준화된 식단 일괄 제공 가능
 - 표준레시피, 식단, 교육 교재·교구 개발 및 정보제공
 - * 신규레시피(3건 이상), 표준식단(5종 이상), 특수식단(3종 이상) 제작 보급 및 표준레시피 DB 관리
 - 급식소 지원 수준이 미흡한 지역센터를 선정하여 급식소 현장

동행 방문을 통한 **위생·영양지원 기술 지도**(5회 이상)

- 우수 지역센터 현장 방문 프로그램 운영(3월,7월)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4,6,8,10,12월)

○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 품질기준(안) 제작·배포**(3월)

- 전국 어린이집에서 활용하도록 '16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게재

□ 급식소 및 지역센터 지원체계 관리 강화

○ 식약처,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센터 등록 급식소(가정어린이집 포함)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점검** 실시(6월, 10월)

* (위생관리) 개인위생, 시설위생, 보관관리 등 / (영양관리) 식단사용, 급·간식 적정 제공 등

○ 식약처, 지자체 합동으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4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63,225	73,017	75,207	77,464	79,788	368,701
°국고	소 계	30,848	35,935	37,013	38,124	39,268	181,188
	직접수행	599	927	955	984	1,014	4,479
	보조·출연	30,249	35,008	36,058	37,140	38,254	176,709
	용 자	-	-	-	-	-	-
°지방비		32,377	37,082	38,194	39,340	40,520	187,513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 지원율(%)	27	43	60	80

* **성과지표 변경 사유** : 위생 취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명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우선과제로 추진하여 성과지표 변경

* 센터 지원 가정 어린이집 수 : ('15) 5,335개소 → ('16)10,000개소 / 23,318개소

[4-1-3]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① 영양표시 확대·개선 및 교육·홍보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이해영 연구관, T.043-719-2259)

1. 과제내용

□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및 표시기준 개선

- (가공식품) 영양표시 대상식품 확대 및 소비자 중심 정보 제공
- (외식) 자율영양표시 확대 및 표시도안 보급

□ 영양표시 교육·홍보 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 확산

- 산업체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TV광고 등 대국민 홍보, 소비자 인식 조사, '영양표시 읽기' 캠페인 등

2. 추진계획

□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및 표시기준 개선

- (가공식품) 영양표시 대상식품 확대 및 표시 도안 개선
 - 시리얼, 즉석섭취식품 등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추진('16.11.)
 - 표시방법 개선(1회제공량당 → 총 내용량당) 및 영양표시 도안 변경
- (외식) 자율영양표시 확대 및 표시도안 보급
 - 피자·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영양정보를 소비자가 구매시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표시도안 개발·배포('16.6)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및 치킨전문점의 조리식품, 커피전문점의 디저트 메뉴까지 자율영양표시 확대(연중)

* ('14~'15) 어린이 기호식품 → ('16~'17) 조리식품 위주

□ 영양표시 교육·홍보 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 확산

- 산업체를 위한 영양표시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연 2회)
- 영양표시 활용 인식 확산을 위한 TV광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16년 상반기) 및 소비자 인식 조사(9~10월)

* 영양표시 활용도 : ('15) 64.8% → ('16) 66% 목표

○ 국민참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영양표시 읽기' 캠페인(연중)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식품안전의 날, 청소년박람회, 어린이 날 등) 시
식품안전·영양 정책 홍보관 운영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국민영양 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988	901	901	901	901	4,592
◦ 국고	소 계	988	901	901	901	901	4,592
	직접수행	988	901	901	901	901	4,592
	보조·출연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 타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영양표시 소비자 활용도(%)	66.4	68.0	70.0	72

[4-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환경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김성희 사무관, T.043-719-2302)

1. 과제내용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보장을 위한 관리 강화

- 학교주변 판매 식품에 대한 국민 안심체감도 향상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및 정책 홍보 강화

2. 추진계획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 관리 강화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유가공업 등 기존 의무화 품목을 포함한 차질 없는 HACCP 인증 확대 추진(연중)
 - * 어육소사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통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 특정일 대비 및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강화(연중)
 - *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1월), 저가 제조업소(연중)
- 어린이 기호식품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및 수입단계 정밀검사 강화(연중)
 - * 어린이 기호식품 무작위(정밀)검사 비율 30% 이상 (일반 수입식품 5%)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제공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제도 활성화(연중)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

-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합동 위생 점검 실시(3,8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상시 지도·점검 확대
 - * ('15) 업소당 10회 이상 → ('16)업소당 12회 이상
-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시범 지정·운영

- * 학원가 등 시·도별 1곳 이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운영
-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
- *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범위 확대(2월) : 지정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

□ 어린이-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Zero」 캠페인 전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 운영 및 건강한 식생활 공동 실천 캠페인 실시
-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 1,300여명 구성, 어린이 관련 단체(한국스카우트 연맹)와 업무협약을 체결(3월)

□ 학교주변 판매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 고객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연중)

- * (홍보) 어린이 홍보·체험관 운영, 라디오 방송 및 대형마트 등 정책 홍보
- (교육) 영업자 현장 맞춤형 교육, 초·중·고등학생 식생활안전관리 교육 등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

-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교육」 과정 운영(3월, 8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 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795	2,157	2,221	2,288	2,357	10,818
° 국고	소 계	939	1,117	1,150	1,185	1,221	5,612
	직접수행	83	77	79	82	85	406
	보조·출연	856	1,040	1,071	1,103	1,136	5,206
	용 자						
° 지방비		856	1,040	1,071	1,103	1,136	5,206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51.5	55	60	65

- *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사유 : (당초) '16년 80% ⇒ (변경) '16년 55%
 - 체감도는 매년 상승 추세에 있으나 국민의 인식 변화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학교주변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나, “체감도”라는 지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목표치로 재설정 필요
- * 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 ('12)52.0→('13)43.0→('14)49.7→('15)51.5

[4-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② 초·중·고등학생 대상별 식생활 안전·영양 교육 지원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반경녀 연구관, T.043-719-2305)

1. 과제내용

- 초등학교 등 대상으로 지속적인 식생활 안전·영양 교육 지원 확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 및 실천 유도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영양표시' 등 식품안전·영양 교육을 위한 중·고등학교 대상 교육지원 확대
 - 초·중·고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교사용지침서 보급

2. 추진계획

- 초·중·고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확대
 -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참여학교 수요조사(1~2월)
 - 영양·식생활, 식품안전·영양 교육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교육교재(1·2학년, 3·4학년, 5·6학년용, 중·고등학생) 및 교사용지침서 배포(3월)
 - * ('15년) 14만1천명(5.2%) → ('16년) 17만명(6.0%)
 - ** ('15년) 2만6천명 → ('16년) 4만명
 - 참여학교 담당 영양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2~3월)
 - * 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법 강의 및 우수교육사례 소개 등
 - 영양교사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개설(7~8월)
 - * 영양교육 교수설계, 교육자료 제작방법,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
 - 식품안전·영양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 활성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10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50	219	226	233	240	968
° 국고	소 계	50	219	226	233	240	968
	직접수행	50	219	226	233	240	968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초등학교 교육참여 학생비율(%)	5.2	6.0	7.0	8.0

[4-1-5]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기성 사무관, T.044-201-2272)

1. 과제내용

- 정책수혜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사회적 비용(의료비 등) 절감
 - 식생활·건강이 취약한 고령자 대상에 대해 사전 예방적 식생활관리·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확대
 -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강화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 저변 확대

2. 추진계획

- (어린이집) 텃밭(상자)을 활용한 과일·채소 재배·요리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편식 예방 쌀 중심 식습관 교육 및 식생활 관련 교구·교재 제공(3월~)
- (학교)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운영*을 통해 쌀 소비 촉진과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 및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을 통해 농업·농촌 가치 제고(3월~)
 - * 교육교재를 활용한 쌀의 생산·유통 교육, 급식에 쌀 가공식품 지원 및 쌀로 만드는 요리체험
- (대학생) 전국 교육대학교(11개) 중심으로 식생활교육 학과목을 신설·운영 및 관련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으로 청년층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도모(3월~)
- (도시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 문화센터에 식생활교육 강좌를 확대 개설하여 도시 소비자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유도(3~5월)
 - * 문화센터 식생활 교육강좌 : ('15년) 3사 40개소 → ('16년) 4사 50개소
- (기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활성화(연중)
 - 학교, 직장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 등에 식생활교육 강사단을 파견하여 쌀 중심 식습관, 채소·과일 고른 섭취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5,350	5,229	7,843	8,235	8,646	35,303
° 국고	소 계	3,712	3,529	4,443	4,835	5,246	21,765
	직접수행						
	보조·출연	3,712	3,529	4,443	4,835	5,246	21,765
	용 자						
° 지방비		1,638	1,700	3,400	3,400	3,400	13,538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체험공간 지정(개소)	167	180	200	210
교육기관 지정(개소)	55	60	70	80
초등 텃밭가꾸기(개소)	60	90	120	130
어린이집 텃밭(개소)	100	150	200	220

[4-1-6]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①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사무관, 강행화주무관 T.044-203-6546)

1. 과제내용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체계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반영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급식시스템을 연계하여 최신 영양정보 및 식품안전 정보 반영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

- 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교육 실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급식시스템에 나트륨 섭취량 산출 기능을 추가하여 식단작성 시부터 저염식단 구성·제공

2. 추진계획

□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지침 시달(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16.1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제한 등 영양관리 강화 등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체계화('16년 상반기, '17년 적용)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인 건강교육 범주에 영양·식생활교육 관련 내용 반영(교육과정 해설서 개정 예정)

□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급식메뉴 사진 등 정보 제공

- 학생에 제공되는 실제 급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 급식 만족도 제고

* 학교급식 운영 평가 항목에 ‘학교급식 사진 게시 등 정보 공개 정도’를 반영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정)

○ 학교급식 현장의 급식메뉴 사진 등 정보제공 및 위생·안전, 식생활교육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 보급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교급식시스템 기능 개선('16년 하반기)**

○ 농촌진흥청의 개정 식품성분표와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하여 최신 영양정보 등 반영, 나트륨 섭취량 산출기능 추가 등

□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등 추진상황 점검('16.12월)**

○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현황,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및 나트륨 저감화 추진실적 점검·평가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율 (영양교사 배치교 중 월2회이상 교육실시)	66.8%	80%	90%	92%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4-2-1]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①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정정순 사무관, T.043-719-2104)

1. 과제내용

□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을 통한 식중독예방 대책 수립·추진
-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우려 시설 집중 지도·점검

2. 추진계획

□ 식약처 주관,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연 3회)

* 식약처,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32개 기관 참여

□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 전국 학교 지도·점검 및 조리음식 등 수거·검사(3, 8월)
 - * 학교급식소 점검 및 조리음식, 식재료 등 건전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사용 중 또는 사용목적으로 보관 중인 식용유,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실시
- 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지도·점검(3, 8월)
 - * 농산물·가공식품 취급 학교급식지원센터(전국 50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 전국 교장·영양사 대상 개학철 식중독예방 교육(1~3월, 7~9월)
 - * 학교급식 식재료, 보관 관리사항, 발생 사례별 주의 및 예방법 등 교육

□ 청소년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우려시설 집중 지도·점검

-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시락제조업체 등 지도·점검(4월)
-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실시(연중)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092	1,544	3,321	3,421	3,421	12,799
° 국고	소 계	1,092	1,544	3,321	3,421	3,421	12,799
	직접수행	1,092	1,544	3,321	3,421	3,421	12,799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 (십만명당)	32명	43.5명	42.9명	42.3명

[4-2-1] 식중독 사전예측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②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황진희 연구관, T.043-719-2105)

1. 과제내용

- 계절, 식중독 원인균 등 식중독 발생 원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홍보 실시

2. 추진계획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식중독 업무 담당자 대상 식중독 원인조사과정 및 전문강사 양성 과정 교육 실시(1~8월)
-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5~7월)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 (동영상) 봄가을(피프린젠스), 여름철(병원성대장균, 캄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겨울철(노로바이러스) 등 맞춤형(시기별·원인균별) 제작(1~5월)
- TV(지상파 등), 라디오,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기별 송출 및 홍보물 제작(연중)
- 식품안전의 날 등 홍보부스 운영(5월), 시기별 이슈맞춤형 보도자료 배포(연중)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133	1,133	1,167	1,202	1,238	5,873
○ 국고	소 계	1,133	1,133	1,167	1,202	1,238	5,873
	직접수행	1,133	1,133	1,167	1,202	1,238	5,873
	보조·출연	-	-	-	-	-	-
	용 자	-	-	-	-	-	-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4-2-1] 식중독 사전예측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③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황진희 연구관, T.043-719-2105)

1. 과제내용

-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 저감화

2. 추진계획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집중관리
 - 노로바이러스 검사 및 검출업체 개선조치(연중)
 - * 조사건수 : 총 680건(평가원 및 지방청 360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20건)
 - 채수 장비 및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위한 장치 보급 확대(자자체 총 16대)
- 학교 등 비영리 급식시설의 살균·소독장치 이전설치 등 사후관리
 - '12~'13년 설치한 지하수 살균(염소 및 복합살균)·소독장치, 반납(철거) 및 이전설치 된 장치에 대한 유지보수(연중)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918	929	944	972	1,002	4,765	
°국고	소 계	655	665	674	694	715	3,404
	직접수행	392	402	404	416	428	2,043
	보조·출연	263	263	270	278	287	1,361
	용 자						
°지방비	263	263	270	278	287	1,361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4-2-1] 식중독 사전예측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④ 식중독균 추적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황진희 연구관, T.043-719-2105)

1. 과제내용

□ 신속한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식중독균 유전자형(PFGE) 분석, 유전정보 DB 운영 및 전국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수입·유통식품 및 농·축·수산물에서 분리된 식중독균 유전자형을 비교 분석하고 DB 관리로 원인규명 및 오염원 추적관리

2. 추진계획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 등의 식중독균 실태조사(연중)

- 농·축·수산물 등의 식중독균 오염여부 모니터링 강화
- 식중독균 분리균주의 유전자형(PFGE) 분석 및 DB화(연중)

□ 식중독균 통합 정보망(KIPIN) 시스템 운영(연중)

- 식중독균의 다양한 생물·화학적 특성정보 등 DB 구축
 - * 식중독균 검출정보, 항생제 내성 정보, 혈청형(분류특성) 정보, 상동성 정보,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유전자지문 정보, 유전체정보 등
 - * 식중독균 DB(누적) : ('15) 2,100건 → ('16) 3,100건 → 매년 1,000건씩 DB화

□ 신속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대상균종 및 유전자 확대(~12월)

- 식중독 원인조사 대상균종(30종 → 32종) 및 신속검사 대상 유전자 확대(17종 35유전자 → 45유전자)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3,274	1,866	1,837	1,897	1,957	10,742
° 국고	소 계	2,626	1,298	1,249	1,289	1,329	7,702
	직접수행	1,978	730	661	681	701	4,662
	보조·출연	648	568	588	608	628	3,040
	용 자						
° 지방비		648	568	588	608	628	3,04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통합 DB 콘텐츠 확보 건수	2,100	1,600	1,600	1,600

[4-2-2]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① 주방문화 개선

(담당자 : 식품영양안전국 식중독예방과 박용춘 연구관, T.043-719-2115)

1. 과제내용

- 개방형 주방문화 확산 및 주방문화 개선 대국민 공감대 형성
 - 개방형 주방 만들기, 위생모 착용 등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및 홍보
 - 표준설계도 보급,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한 업체 참여 유도

2. 추진계획

-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지자체와 협력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사업 추진(1~12월)
 - * 모범음식점, 관광특구 및 특화거리 내 일반음식점 등 대상으로 실시
 - 개방형 주방, 위생모·위생복·위생화 착용 등 주방위생 개선 자발적 참여확산을 위한 개방형 청결주방 시범업소 선정(4월) 및 운영
 - * 소규모 영세업체 지원을 위하여 100㎡ 이내의 영업장 위주로 선정
- 주방문화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 대국민 홍보 광고 제작(3월) 및 송출(5~10월)
 -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포스터·우수사례 공모전 등 국민 참여 확대
 -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주방문화 개선 협의체' 운영(연3회)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00	400	412	424	437	2,073
° 국고	소 계	400	400	412	424	437	2,073
	직접수행	400	400	412	424	437	2,073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	'16	'17	'18
개방형주방참여업소(개소)	11,000	12,000	14,000	15,000

[4-2-3] 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

① 나트륨 저감 실천 확산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윤은경 연구관, T.043-719-2262)

1. 과제내용

□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한 소비자 실천 환경 조성

- 실생활에서의 저감 실천이 가능하도록, 정보전달력 향상, 저감 제품 개발 확대, 저감화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

2. 추진계획

□ 2020년까지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500mg으로 저감

- 나트륨 저감화 정책 2차 추진 계획 수립(2월)
 - 1차 저감화 정책 목표('17년까지 나트륨 섭취량 3,900mg)가 조기 달성됨('14년 3,890mg)에 따라 저감화 정책의 내실화, 체계화
 - * 나트륨 1일 섭취량 : ('10) 4,831mg → ('12) 4,583mg → ('14) 3,890mg → ('20) 3,500mg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하위법령(안) 마련 등 추진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비교표시 대상 품목 선정 및 기준설정 방법

□ 실생활에서의 나트륨 줄이기 실천 방법 홍보

- 현장학습 교육 프로그램인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을 증차(1대→2대)하여 지역 및 대상 확대
 - 수도권에서는 대상을 미취학 어린이까지 확대, 지방에서는 소외 지역 위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11월)
 - * ('14년146회, 3,549명 → ('15년216회 5,316명 → ('16년(수도권) 270회, 6,500명, (지방)200회, 4,000명
- 지역 보건소 등에 저감실천 방법 교육·전파
 - 가정에서의 나트륨 줄이는 조리 방법 등을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에서 지역민 대상 교육에 활용(연중)

□ 가공식품 및 외식·급식분야 나트륨 줄이기 확대

- 저감화 기술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현행화(11월) 및 저감 실태조사(12월)
 - 나트륨 섭취 주요 원인 식품의 기술적 저감 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업체설명회(교육)를 통해 보급
- 삼삼급식소 및 실천음식점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3월), 지자체 자율운영 및 식약처 지원(4~11월), 지정(12월)
 - * 삼삼급식소 : ('15) 148개소 지속 운영(49개소 지정, 지정율 33%)
→ ('16) 300개소 지속 운영(120개소 지정, 지정율 40%)
 - * 실천음식점 : ('15) 165개소 지속 운영(95개소 지정, 지정율 58%)
→ ('16) 365개소 지속 운영(248개소 지정, 지정율 68%)

□ 관련 부처, 협회 등의 나트륨 저감화 지원

- 국방부, 교육부에 맞춤형 나트륨 저감화 교육 지원
 - 영양교육 용 교육 시안 및 강의 자료(교육부, 3~11월), 조리병 및 일반병 대상 교육용 동영상(국방부, 5월) 등 제공
- 영양사, 조리사 대상 정규 교육과정에 나트륨 저감화 교육 실시
 - 영양사 보수교육 및 외식업자 위생교육에 과목 운영(3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098	3,102	3,098	3,098	3,098	15,494
○ 국고	소 계	3,098	3,102	3,098	3,098	3,098	15,494
	직접수행	3,098	3,102	3,098	3,098	3,098	15,494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나트륨 저감화 가공식품의 증가율(%)	17.4	17	20	22

[4-2-3] 나트륨 및 당류 과잉 섭취 저감화

② 당류 섭취 저감화 추진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윤은경 연구관, T.043-719-2262)

1. 과제내용

□ 국민의 당류 걱정 섭취를 위하여 저감 기술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 확대

2. 추진계획

□ 당류 저감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당류 섭취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당류 저감대상 식품 선정과 단계적 관리방안 등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수립·추진(3월)
 - * 저감목표(1일 열량의 10% 미만), 저감대상 식품 선정 및 표시·기술지원·교육 홍보, 유관부처·산업체·소비자단체 등 협의체 구축·운영 등 포함
-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설정(6월) 및 시리얼류 등 당류 영양 표시 의무대상 확대 추진(11월)

□ 산업체 대상 기술 지원

- 음료류 등 주요 당류섭취 주요급원 식품별로 연도별 목표 저감을 설정 및 단계적 저감전략 등 저감모델 개발(6월)
 - * 음료류·과자 등의 저감 가이드라인 마련(12월)

□ 당류 섭취 줄이기 국민 인식개선 교육·홍보 확대 및 실천문화 확산

- 어린이·청소년 당류 저감 교육과정 및 청소년박람회 등 연계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초등학교 영양교육 중 당류 저감화 과정(3~11월)
 - * 청소년박람회 등 홍보부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아용 당류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 보급(190개소)
 - * 그림동화, 플래시동화(달콩이와 맑음이), 체험활동, 가정통신문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국민영양안전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5	305	400	500	600	1,830
° 국고	소 계	25	305	400	500	600	1,830
	직접수행	25	305	400	500	600	1,830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비율	8.9%	10% 미만유지	10% 미만유지	10% 미만유지

[4-2-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① 학교급식 점검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사무관, 강행화주무관 T.044-203-6546)

1. 과제내용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체계 개선(계속)

- 학교급식소 연2회 정기점검, 학부모 등 민간인 참여제 운영 등

□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 유해·하자 식재료 납품한 업체 등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대상 교육 실시 등 관리 강화

- 유병학생 조사, 영양상담 및 교육 등 특별관리, 교육자료 보급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개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용하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공간 구획 등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2. 추진계획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지침 시달(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16.1월)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학부모 참여제 도입 등),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특별관리 등

□ 개학 대비 학교 급식시설 자체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16.1월)

- 학교에서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미흡한 부분 개선), 교육청 및 교육부 특별점검 실시

□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16.1월)

-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 입찰참가 제한 기간 : (현행) 3개월 → (개선) 6개월

- 불량 식재료가 납품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 대상 식품위생 및 건전성 교육 실시

□ 식품 알레르기 교육자료 보급('16.2월)

- 초·중·고등학교 수준별 식품 알레르기 예방 관리방법 등

□ 노후 급식시설 실태조사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계획 수립을 위한 국립학교 예산현황, 노후화 수준 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

□ 학교급식 점검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 추진상황 점검('16.12월)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등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지방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20,784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20,784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용 자					
°지방비	220,784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20,784
°자부담						
°기 타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수	509	500	500	500

[4-2-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② 식재료 납품전 안전성 조사체계 강화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이호진 서기관, T.054-429-4132)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김경동 사무관, T.054-429-4156)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서문교 서기관, T.054-429-4121)

1. 과제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원산지 표시 등으로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 공급

2. 추진계획

- 학교급식 납품계약 농가 생산단계 잔류농약 분석지원(3~12월)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된 재배농가의 생산단계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품은 출하연기, 폐기 등을 통해 납품을 선제적으로 차단
 - 조사물량 : 3,500건(납품계약 농가 대상)
- 학교급식 공급업체 원산지 등 점검·단속(4월)
 - 학교급식용 농산물 납품업체 원산지표시 정기 단속
 - 단속기간 : 16.4.4.~4.20., 단속품목 : 축산물, 쌀, 배추김치, 채소류 등
 -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과 연계된 aT, 조달청 학교급식납품업체 연중 상시 단속 추진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취급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1~12월)
 - 조사대상 및 물량 : 친환경인증 농산물, 1,500건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153	1,043	1,043	1,043	1,043	5,325
◦ 국고	소 계	1,153	1,043	1,043	1,043	1,043	5,325
	직접수행	1,153	1,043	1,043	1,043	1,043	5,325
	보조·출연						
	용 자						

□ 사업명(재원)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잔류농약 분석지원(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55	366	366	366	366	1,919
◦ 국고	소 계	455	366	366	366	366	1,919
	직접수행	455	366	366	366	366	1,919
	보조·출연						
	용 자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건)	6,700	3,500	3,500	3,500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건)	1,980	1,500	1,500	1,500

*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사유

- 학교급식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건수 : 교육부·식약처·농식품부 관계부처 업무조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3,5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출하전 안전성조사 실시(1농가당 연1회 불시 조사)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잔류농약분석 지원건수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15: 102개소)의 위생·안전 관리 실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과도한 조사물량(1업체당 19.4건)을 하향 조정하되, 부적합 다발 분야·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4-2-5]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①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사무관, 강행화주무관 T.044-203-6546)

1. 과제내용

식중독 감시 및 신속 보고체계 강화(계속)

-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
- 식중독 의심환자 2인 이상 발생 시 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에 보고

초동단계 신속대응 및 원인조사 협조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관계기관 협업, 환자치료와 급식 대책 마련 등 혼란 방지 및 학사일정 차질 최소화
- 원인규명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2. 추진계획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지침 시달(2016년 학생건강 증진 기본방향, '16.1월)

- 상시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
- 신속보고 체계 확립, 초동단계 신속 대응 및 원인조사 협조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16.4월, 8월)

-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철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철저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회 개최('16.6월)

- 식중독 예방 관리 등 학교급식 정책방향 설명 및 당부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식약처 협업)

- 식중독 관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식중독 원인조사 과정 및 식중독 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운영

□ 범정부 협업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식약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부정행위 단속 강화 및 식중독 원인조사 등 공동 대응

3.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성과지표: 해당사항 없음

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4-3-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①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담당자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오운환 사무관, T.043-719-2459)

1. 과제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규정 마련

-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세부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의무화 제도 마련
- 식품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이력추적관리 제도 의무화 마련

□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확대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능성 원료 추가 등재 기준에 적합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으로 등재

2. 추진계획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규정 마련

-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16.7월)
- 새로운 과학적 사실 확인, 이상사례 급증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 우선순위 결정('16.7월) 및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16.12월)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및 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위한 제도 마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로 고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마련 및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 마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6.12월)

□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확대

- 고시 추가 등재 기준에 적합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단계적으로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추가 등재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16.12월)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건강기능식품 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접수행	641	1,884	1,500	1,500	1,600	7,12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법률, 고시 개정	법률, 고시 개정	법률, 고시 개정	법률, 고시 개정

[4-3-1]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②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담당자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오운환 사무관, T.043-719-2459)

1. 과제내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술지원

- GMP 미지정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GMP 조기정착 기반 마련

□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외국 제도 등 체계적 정보 교류 및 상호품질 인정 등 협력체계 마련

2. 추진계획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 GMP 희망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연중)
 - * GMP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1.5억원)
- 신규 제조업체를 위한 GMP 기준 매뉴얼 마련 및 교육('16.6월~)

□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한·중 식약총국(CFDA) 건강기능식품 작업반(제도 및 검사분야) 운영 및 MOU 추진('16년~)
-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16.11월)
- 기능성 평가기준 제시를 위한 '기능성별 평가가이드' 마련·제공('16.12월)
- 원료 신청업체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모듬토의) 및 개별상담(연중)
 - * 모듬토의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전·후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등'을 모두 토의하는 제도
- 건강기능식품 정책 정책 설명회 및 전략세미나 개최(2회)

3.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건강기능식품 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 국고	직접수행	641	1,884	1,500	1,500	1,600	7,12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GMP 컨설팅 업체수	-	30	50	60

* 성과지표 변경사유: (당초) 기능성 원료 인정 건수 ⇒ (변경) GMP 컨설팅 업체수

- 국내·외 산업 경쟁력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GMP가 의무화('16.2.3)됨에 따라,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조속한 GMP 정착을 우선 목표로 설정
- 또한, '기능성원료인정 건수'는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산업환경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과제의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4-3-2]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① 「기능성평가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이수한 사무관, T.044-201-2182)
김태형 사무관, T.044-201-2187)

1. 과제내용

-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완공을 통한 본격적인 기업 기술지원 사업 추진
 - '16년 7월말 국가식품클러스터내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완공으로 입주 및 예정기업의 기술지원 사업 추진

2. 추진계획

- 국가식품클러스터내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완공('16.7.)
-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코디네이터 기능 구축
-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3. 예산사항

사업명(재원)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농특회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합 계	14,908	23,799	51,393	33,549	43,587	167,236	
◦ 국고	소 계	10,016	16,660	34,262	22,366	29,058	112,362
	직접수행	-	-	-	-	-	-
	보조·출연	10,016	16,660	34,262	22,366	29,058	112,362
	용 자	-	-	-	-	-	-
◦ 지방비	4,892	7,139	17,131	11,183	14,529	54,874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5(현 수준)	'16	'17	'18
건축공사 공정율(%)	72.1	100	-	-